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
남북한, 중·러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에 실린 글의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8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

남북한, 중·러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최근 동아시아에서 해양, 대륙 세력 간의 경합이 현재화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가파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회는 분단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견인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은 정책결정자나 일반 국민들이 위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지적인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역사상의 전환기에 대한 재단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민주화·정보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면서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경의 투과성이 증대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민사관과 대국주의적인 사관이 집요하게 생성하고 유포해온 이른바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도 탈근대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더불어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역할공간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은 자국의 지정학적 공간에 대한 설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구상이나 진주 목걸이 전략, 일본의 집요하고 끝없는 역사왜곡은 자국의 생존공간을 확보하려는 국가전략과 표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만주·시

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까지 시야에 넣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이나 통합 에너지망 사업 등을 통해 이런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방중기간 중 한반도 통일이 중국, 특히 동북 3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깊은 함의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미래 공간에 대한 전략적 안목을 갖기 위한 지적인 노력이 배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등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역사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변경지역은 우리가 통일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뿐 아니라 분단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동아시아 협력을 앞장서서 추동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각 국민이 자국의 지정학적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구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세계사의 진운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개방적인 역사관을 공감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력한 방법이요 전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없이 남과 북이 해양과 대륙세력의 이분적 대치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지식사회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역사적 기억을 시대정신에 맞게 재구성하고, 평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제시해 나갈 책무를 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평화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역사갈등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통일된 한반도를 설계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동아시아 평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과 철학을 세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재단의 연구와 사업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머리에	13
------	----

●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 홍면기
‘평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중심으로

I. 문제의 제기	21
II.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역할	22
1. ‘제국 사이의 한국’: 역사와 현실	22
2. 새로운 동아시아론에 대한 기대	25
III. 북한의 장래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의미	28
1. 한반도: 실패한 ‘체제’와 실패한 ‘국가’	28
2. 한반도의 통일과 중국의 이익	31
IV.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 ‘평화를 위한 기획’과 그 조건	34
1. 변경·과경민족의 ‘탄생’과 ‘평화를 위한 기획’	34
2.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념적 전환’	39
V. 맺음말: 요약과 결론	44

● **베스트팔렌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로** 탄성우

I. 머리말: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과 도전	51
II. 제1차 세계화: 민족국가(nation-state)체제로서의 동아시아	53
III. 유럽통합과 포스트 베스트팔렌 시대의 서광	56
IV. 중국의 ‘평화적 발전’, ‘조화세계’의 외교전략과 동아시아의 미래	61

● **변계지역 국제협력과 변연문화구역의 전략적 가치** 김강일

중조변계지역의 동북아 국제협력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I. 머리말	77
II. 분석의 이론적 틀	79
III. 변연협력의 전략적 가치	84
IV. 변연문화구역의 국제협력에서의 위치	92
V. 맺음말	100

● **중국 변강이론의 진화와 ‘공동이익 변강’ 개념의 발전** 박장배

I. 머리말	105
II. 현대 동아시아의 지역구조와 변경문제	110
III.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등장과 변경지역 협력	116
IV. 맺음말	121

● **동북아시아 공동체론과 변경, 그리고 과경민족의 역할** 와다 하루키

I. 동북아 공동체론의 흐름	127
II.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등장	129
III. 동북아시아 평화와 6자회담	131
IV.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충돌	133
V. 동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동시 추구	135
VI. 동북아시아의 복잡성과 다양성	137
VII. ‘공동의 집’을 이끄는 힘	138

● **동북아 경제 · 물류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연변 지역** 김석주
역사적 고찰과 현재적 의미

I. 머리말	145
II. 중 · 북 · 러 접경지역의 고대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	147
III. 발해 시기 교통로와 동북아 중심지의 중요성	151
1. 조공도(朝貢道)	151
2. 영주도(營州道)	152
3. 거란도(契丹道)	153
4. 일본도(日本道)	154
5. 신라도	155
6. 말갈도	156
IV. 발해 시기 일본도의 현대적 의미	159
V. 청조 시기 군사요충지와 무역중심지로서의 연변 지역	164
VI. 민국 · 만주국 시기 무역중심지로서의 연변	169
VII. 연변 지역의 물류거점 가능성	172

● **중국 초국경 협력의 현황과 과제** 이동률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I. 머리말	181
II.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의미와 특징	184
III.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현황	190
1. 서북지역 초국경 소지역 협력	190
2. 서남지역 초국경 소지역 협력	193
3. 동북지역 초국경 소지역 협력	196
IV.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조건과 과제	200

• 유럽의 지역협력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지역협력 가능성	이규영
I. 머리말	209
II. 유럽 지역협력의 특징	211
III. 유럽 지역협력의 사례연구	218
1.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219
2. 중부유럽이니셔티브(Central Europe Initiative: CEI)	226
3. 발틱해 국가위원회(The 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CBSS)	231
4. 흑해경제협력(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237
IV. 동아시아 지역협력 환경과 변화	243
1. 지역협력의 필요성	243
2. 지역협력의 장애요인	245
3. 지역협력의 긍정적 요인	253
V. 맺음말	256

• 초국경 협력에서의 녹색성장과 기업의 역할	추원서
중국 동북3성 지역을 중심으로	
I. 문제의 제기	265
II. 초국경 협력과 동북3성의 위상	268
1. 동북아에서의 초국경 협력 현황과 비전	268
2. 동북3성 지역 개황과 초국경 협력여건	271
III. 초국경 협력 토대로서의 한·중 경제협력	276
1. 한·중 경제협력 개황	276
2. 동북3성 지역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278
IV. 초국경 협력 '어젠다'로서의 녹색성장	280
1. 녹색성장의 의미와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배경	280
2. 중국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과 녹색산업의 현주소	285

V. 새 동북아 평화비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협력 전략	291
1. 협력 아이템으로서의 녹색성장	291
2. 추진전략	296

• **공동의 기억, 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국 동북지역 답사 프로그램 설계** 김주용

I. 머리말	305
II.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독립운동	307
III. 각 지역별 사적지 현황	312
1. 길림성 지역	312
2. 요령성 지역	318
3. 흑룡강성 지역	321
IV. 지역별 답사 설계와 기억의 공유	324
V. 맺음말	329

•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변화, 협력을 위한 중국의 역할** 김경일

I.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333
II. 북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	338
III. 중국 역할론의 의미	342
IV. 맺음말	351

•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과 조선족의 역할	이바오중	
I. '계획요강'의 주요 내용과 의의		357
II. 조선족이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		362
III. 두만강 개발에서 조선족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366
IV. 두만강 개발계획과 조선족 역할에 대한 전망		369
•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한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임을출	
I. 머리말		377
II. 가스관 건설 관련 남·북·러 간 협력 현황		379
1. 한국·러시아 간 협력		379
2. 북한·러시아 간 협력		381
3. 남북 간 협의		384
4. 남·북·러 삼각협력		384
III. 쟁점과 전망		385
1. 북한 통과 리스크와 가스 도입가격의 협상문제		386
2. 전망: 가스관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들		387
IV. 기대효과		389
V. 가스관 인프라 건설과 북한 개발협력		391
VI. 결론과 과제		394
찾아보기		397

I

동북아역사재단은 2009년부터 중국, 일본 학자들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에 관한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¹⁾ 이 책은 이들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중에서 몇 편을 가려 묶은 것이다. 재단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가와 국경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인식되고, 그것이 현실 국가전략뿐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인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논자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야말로 한국사의 향방을 결정해 온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국민들의 사고 속에도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반도 분단과 대치구조가 근원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밀접한 관련

1) 2009년 이래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의 명칭은 약간씩 달랐다. 「국제화시대의 변경, 과경민족과 동아시아 협력」(2009. 7. 28, 연변),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2009. 11. 26~27, 서울),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2010. 12. 17~18, 서울), 「한반도 지정학과 동북아에서의 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2012. 12. 13, 서울) 등이 그것이다. 2013년 회의는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주최하였고, 발표논문은 『항해에서의 초국경 협력과 평화』(2013, 인천발전연구원)에 실렸다.

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정보화·민주화가 보편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국가와 국경의 의미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민족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베스트팔렌체제도 본질적인 변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계사적 전환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설계해 볼 수 있는 전략적 상상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DMZ 평화지대안을 비롯하여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자원, 교통망 연결 구상, 그리고 북·중, 북·러 국경지역 및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 구상 등은 모두 이런 변화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협력이 주목되면서 국경이 폐쇄와 오지로부터 소통과 공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II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중국도 최근 변경의 의미를 새로이 해석하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웃국가와 국경문제를 잇달아 타결지으면서 변경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14개국과 2만 2천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으며 변경의 안정적 관리가 국가 흥망의 관건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북중 변경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지역은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핵심지대(heartland)로 일컬어져 온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향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풍향을 가늠할 전략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해양세력의 북진을 완충하면서 북한을 통해 출해구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로서도 북중 변경지역과 그 배후지는 휴전선에 호응하는 또 하나의 전략 축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과의 협력을 촉진하며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2의 전진기지로써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돌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과 그 이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이 지역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II

이와 같은 인식의 토대 위에 북중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의 평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논지이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북공정이 한 예다. 많은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단순한 역사공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 만들기'는 변경 내지 주변지역에 대한 그들의 국가전략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 학술회의는 이런 문제의식에 유념하면서 북·중·러 변경 지역에서 한·중 협력, 궁극적으로 역내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발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초국경 협력의 의미와 변경에 대한 이론적인 변화를 정리하고, 초국경 협력이 역내 공동체 논의와 과경민족의 역할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섯 편의 글을 실었다.

위의 글들을 이론편이라고 같음한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초국경 협력과

관련한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먼저 역사적·현실적 시각에서 연변지역의 역할을 조감할 수 있는 글과 중국과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국경 협력 문제를 다룬 세 편의 글을 실었다. 초국경 협력에 있어서 녹색성장의 문제를 다룬 글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변경협력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네 편의 글을 선별하였다. 한·중 양국의 젊은이들이 양국 간 우호협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답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북·중 경제협력이 동아시아 평화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두만강 개발 계획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등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한 두 편의 글은 초국경 협력을 동아시아 평화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역사는 취약하고 안정적이지 못한(weak and turbulent) 한반도가 주변세력의 개입을 유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외세의 개입이 거의 모든 경우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권력정치적 책략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위와 같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불안정은 언제든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비극을 재현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고 있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강대국 간 충돌과 대치 공간에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초국경 협력이야말로 북한 내부사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역내국가가 평화를 위한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개념이며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유력한 방법론이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변경·협력·평화와 통일을 초국경 협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의 필자로 참여한 와다 하루키 교수 등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한인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기고 있는 남북한 갈등의 궤적은 주변 어느 나라도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구조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경과 변경의 의미와 기능이 새로이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발상과 전략적 시야를 가지고 북한의 변화와 통일, 그리고 공생적인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공간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안팎에서 사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런 논쟁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과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또한 우리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진취적이고 실천적 대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 단재 신채호나 안중근 같은 선각자들이 세웠던 동양 평화에의 소망, 그리고 이 책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와다 하루키 교수 등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

는 귀중한 지적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염원을 구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초국경 협력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의 역할을 탐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이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 학술회의를 지지하고 도와 주셨다. 그럼에도 책의 체제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글 중 일부 밖에 실을 수 없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삼 책의 구성상 많은 옥고를 소개할 수 없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필자들이 최종 편집과정에서 자신의 글을 손보기는 하였지만 발표 당시의 맥락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수정에 그치도록 하였음을 적어 둔다.

동아시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가주의적 역사관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고양된 이상으로 수렴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의 성과를 우선 한 권의 책으로 내놓는다. 이 책이 우리의 역사적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미래 한국의 전략을 설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2013년 11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 면 기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

'평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흥면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문제의 제기
- II.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역할
- III. 북한의 장래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의미
- IV.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 '평화를 위한 기획'과 그 조건
- V. 맺음말: 요약과 결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면기(洪冕基)

국제관계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영토적 상상력과 통일의 지정학』(2006,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¹⁾

‘평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홍면기

I. 문제의 제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제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²⁾ 한반도의 정세가 격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북한 내·외부의 긴장과 불안정한 정세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위기 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의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런 역사적 계기를 어떻게 평화적 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 1) 이 글은 한국 정부나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변경·변강을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접한 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김정일 1년밖에 못살 듯”, 《문화일보》(2009. 7. 10)

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래와 그 양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³⁾ 북한의 미래야말로 한중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질서의 향방에 결정적인 단초(端初)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변경에 대한 개념 전환과 현실을 반영하여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을 통해 복잡하게 착중(錯綜)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적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역할

1. '제국 사이의 한국'⁴⁾: 역사와 현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여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역사는 대륙과 해양,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치선상에서 외세의 강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외부 규정력과 국내정치의 다이내미즘(Dynamism) 속에서 매우 독특한 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 더 정확히는 상당한 시기에

3)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많은 논의와 대비책이 논의되어 왔지만 '있을지도 모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방지하고 평화적인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평화를 위한 정치학'에 대한 관심과 대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이러한 입장이 이상주의적·규범적 입장에 경도했다는 약점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상에 의해 추동되지 않는 국제정치는 과연 흡식적 자연상태와 얼마나 멀어질 수 있을까?

4) Andre Schmid 저, 정여울 역(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Humanist)에서 따온 표현이다. 이 책의 원제는 *Korea between Empires*다.

걸친 비극적 역사의 궤적(軌跡)을 그려왔다. 제2차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반도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는 제국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통받으면서 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긍정적 작용이 없을 경우 동아시아 평화가 담보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⁵⁾

이호재(李昊宰)는 역사적·이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국제정치체제의 유형을 (중국 혹은 일본) 일국 지배체제, (미·소 혹은 중·일) 양극체제, (중·일·러) 3국의 불안전 경합체제, 4강 경합하의 남북한 평화공존체제(한반도의 중립화), 완전경합 세력균형체제, 동북아 5개국체제, 동북아시아 연방체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⁶⁾ 그는 남북한이 4강 경합하의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실현하고 통일로 나갈 수 있으며, 주변국이 한반도에서 독점(패권)정책보다는 평화공존적인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국제정치에서 하위정치(low

- 5) 현실주의의 거장 H. J. Morgenthau도 한국 정치의 특성을 이러한 지정학적 입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McGraw-Hill college.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거론한다. 지금의 한반도 분단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분열과 혼란에 취약한 한반도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항상 불안정했으며 전쟁이라는 역사적 충돌과 모순을 초래해왔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대 한반도를 단순히 지정학적 완충지, 권력정치의 객체로 관념하는 소극적 사고와 정책은 미래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에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7년 전쟁(임진왜란)과 6·25전쟁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시각에서의 문제 제기는 洪冕基(2000), 『中國對韓半島地緣戰略與新東北亞秩序的探索』, 북경 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 6) 李昊宰(1997),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와 그 조건」,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87~197쪽; 이호재(1997), 『통일 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 和平社 등 참조.

politic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⁷⁾

카플란(M. Kaplan)의 국제체제 분류를 인용한 그의 주장은 20세기 말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국제사회 변화와 중국의 급격한 세력 신장 등으로 이론적 시의성에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호재 교수의 주장은 해양과 대륙의 지정학적 대립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원충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때, 동북아의 평화가 깨졌다는 역사의 교훈을 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며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동북아 질서를 전망해나가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유용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한국의 지식사회에서조차 한반도 통일이 왜 동아시아 평화에 관건적인지,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 없이 동아시아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역사적·현실적 논리는 무엇인지, 통일된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아이덴티티의 내용과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지 않은 만큼 한국인의 입장에서 분단의 역사적·현실정치적 의미에 대한 고뇌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국 사이의 한국'의 방향이 학문적인 수준에서도 종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⁸⁾ 전 세계적인

7)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패권정책 포기가 실패한 체제로서의 분단체제의 적극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의 분할지배나 현상유지의 수구적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8) 姜萬吉이 제시한 역사학이 분단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분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분단사학론'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역사학의 현재성 문제의 시비를 떠나 우리가 안고 있는 분단현실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촉구한 그의

차원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과 가치는 과거와 판이하게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변용과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극복해 나가야 할 학문적 과제다. 다음에서 이를 좀 더 부연하기로 한다.

2. 새로운 동아시아론에 대한 기대

새로운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및 논의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제정치 이론 측면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등 기존의 주류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 분화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구성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⁹⁾ 특히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규범성을 강조해온 영국학파(English School)¹⁰⁾와 이른바 '새로운 중세론'¹¹⁾ 등의

주장은 아직도 경청할 만하다. 강만길(1979),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9)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2009),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 논형 등 참조. 필자는 중국의 大同思想 등 동아시아의 전통적 정치사상과 다기하게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구상,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和諧사회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 정치사상의 주 대상은 대동주의 색채를 띤 '천하'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세 유럽의 '세계제국'과 유사한 것으로 근대 '민족국가'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張鉉根 편저(1997), 『중국정치사상입문』, 知永社, 161쪽; 고대 중국의 대동사상에 관해서는 陳正焱·林其鏞(1988), 『中國古代大同思想研究』, 中華書局(香港分局)).

10) Wight, Bull, Watson 등 영국학파의 국제이론은 역사적 이해, 사상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당대의 요구와 관련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Hedemi Suganami(2002), 『The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Reconsidered』 Vol. 2, No. 1, *International Relation of the Asia-Pacific*, pp. 1~28 참조. 영국학파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는 許嘉 등(2008), 『英國學派國

주장과 전망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세계는 시장과 초국가적 연계망의 발달 등을 매개로 역전할 수 없는 보편적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아시아인의 입장에서 세계적 차원의 과제로 등장한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핵확산 위험 등 초미의 실천적 과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대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그대로다.¹²⁾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을 모색하기 전부터 북한에서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체 동아시아가 다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포함한 관계국들에게도 엄청난 정치·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분단과 북한의 '실패'로 말미암아 국제사회가 갖고있는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세계는 인간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가고 있으며, 현실

『國際關係理論研究』, 시사출판사]

- 11) 田中明彦, 李雄賢 역(2000), 『새로운 중세: 21세기의 세계 시스템』, 지정. 다나카 아키히코는 현재 세계정치의 전환과정이 과거 유럽의 중세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진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특징으로 국제정치 주체의 다양화,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보편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Hedley Bull(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許嘉 등의 앞의 책 참조.
- 12) 여기에 관한 초보적인 문제 제기는 홍면기(2009), 「통일논의의 지형변화와 시장적 접근의 문제 - 동북아 경제협력의 시각에서」, 『동북아경제협력과 남북한』(한국 동북아 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참조.

생활의 장에서 대중문화, 인터넷 등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북한 위기의 본질은 바로 북한이 표방하는 가치와 현실이 이러한 국제사회 진화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데 있는 것이며, 또한 북한 체제의 파국이 그 인류사회의 진보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일군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태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의식과 그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중의 하나는 '생활' 속에서 배양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와 네트워크에서 동아시아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이론과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동아시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평소 이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나는 이들이 주장하는 동아시아론이 풀뿌리 수준에서의 '생활'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분단 한국을 사는 지식인의 입장에서-현실정치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는 점인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수많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담론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할 만한 고민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동아시아론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북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달리 말하면 병인(病因)을 다스리지 않고 대중적 요법으로 외곽을 에두르는 공소한 지적 담론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의 지적인 노력에 절박한, 지역 평화의 관건이 되는 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실의 문제의식이 투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실사구시적인 학문적 노력을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의 차원에서 제도로 수렴해나가려는 관계국 리더십의 관심과 조응없이 이들이 주장하고 소망하는 동아시아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

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를 상위정치 틀 속에, 동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의 미래 비전 속에 반영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지식인 사회의 노력이 보다 적극화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¹³⁾

III. 북한의 장래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의미

1. 한반도: 실패한 ‘체제’와 실패한 ‘국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국제정치학의 영원한 화두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실험 혹은 경험되었던 다양한 국제정치 시스템의 하나였으며, 분단 60년을 지내오면서 그 모순과 위험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¹⁴⁾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의 백낙청 교수 등 진

13)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네트워크와 2008년 5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한 한중 전문가연구위원회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양국이 변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된 이번 회의 또한 이런 의미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4)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는 발상과 해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며, 이 글의 핵심적 논지임을 다시 확인해두고자 한다. 위의 이호재 교수의 분류에서 보듯 한반도가 경험해 온 체제는 모두 한반도를 단순한 권력정치의 객체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할 수 없다. 시각의 전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홍면기(2000), 앞의 논문 참조.

보적인 지식인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필자 또한 분단체제가 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국제정치이론적 시각에서 해석한 바 있다.¹⁵⁾ 이들은 냉전질서 속에서 외부 규정력에 따라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평화가 냉전질서의 해체,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와 세계체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괴리가 커지면서 분단체제가 '본질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단체제의 '본질적 동요'는 한반도에서의 분단체제가 국제정치의 하부체제로서 안정과 평화를 획득할 수 없는, 실패한 체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가장 큰 내부 동인은 남북한 간의 국력이 역전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체제로서의 분단의 안정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면 분단된 상태에서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의 열망과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분단체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000만 남북 주민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향한 의지를 버리는 것은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정처럼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분단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딜레마는 한반도가 통일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의 불안정은 북한의 국가로서의 실패로 말미암은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러한 기능과 자기 수정 능력을 상실한 북한은 결국 실패한 국가라는 낙인을 면할 수

15)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5~7쪽, 15~61쪽; 홍면기(2000), 위의 논문 참조.

없을 것이다. 북한의 유일한 출로인 개혁·개방도 남한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취해온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에 내장된 근본적인 한계에 더하여 북한은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애정 어린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이라는 카드로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고,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국가로서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고 분단체제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될 수 없음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들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실한 현실 이익을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이라는 ‘뇌관’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가 긴급한 공동의 이익으로 부각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국가로서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 위험성을 제어하고 한반도에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한반도 이해 당사국, 특히 중국은 피할 수 없는 이익의 교집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환언하건대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된 두 정치적인 실체를 물리적으로 합하는 것이 아닌, “왜곡되고 실패한 체제로서의 분단을 정돈하고, 동북아에서 지금까지 실험해보지 않았던 평화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심원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졌을 때 중국의 평화도 위협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 그리고 북한발 사태가 야기할지도 모를 파멸적 사태를 상정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시급한 공동의 과제임은 분명할 것이다.

2. 한반도의 통일과 중국의 이익

여기서 다시 범위를 좁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유지(You Ji)는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두 가지 장기 전략목표, 즉 통일한국이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으며, 비친일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 첫째, 목표를 위해 통일된 한국이 거대한 중국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은 오랜 기간 한국을 지배한 적이 있다. 둘째, 비친일적 자세를 유도하자면 중국은 한국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혐오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두 목표가 달성되면 중국을 봉쇄하려는 서방의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게 된다. ……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구상에 여러 면에서 득이 된다.¹⁶⁾

16) You Ji(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Vol. 10,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p. 396; 朴洞中(2005),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통일연구원, 54~55쪽에서 재인용. 문제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히 짚고 있는 이 글은 또한 양국 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미래 공존의 질서 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중 간의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등의 구성도 그런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부연하겠지만 '관점의 갈등'이 현존하는 '이익의 충돌'로 악화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2004년 양국 정부 당국이 합의한 정신이기도 하다. 역사문제를 전문가의 학문적 영역에 맡겨두는 한편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모색하는 또 다른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두 트랙(two track, 二軌道) 방식이다. 양국 간에는 지금도 다양한 협의

이 글도 결국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잘못된 경로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¹⁷⁾ 통일문제를 한국인이 당면해야 할 현실적 문제로 좀 더 분명히 인식할 때 통일 한국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¹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핵문제와 북한에 대한 입장은 단순히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본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이 당장 선호하는 것은 중국에 유리하게 개선된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라고 분석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목표는 현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가 베이징에 유리하지 않다는 부실한 두 개의 가정 위에 성립해 있다.¹⁹⁾

이와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우선 전자의 가정은 이 글에서 강조하다시피 분단체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실패한 체제라는 주장과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 이 글은 만약 중국에 불리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가 존재하거나 설정되어 있다면 한중 양국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한중 양국이 상호 괴멸적인 사태를 평화적으로 관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양국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미래의 문제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활동을 시작한 한중 전문가 연구위원회도 그런 의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17) 동북아역사재단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사상'을 그려나가는 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그 설립 취지로 宣明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동아시아사의 구성과 역사인식의 공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18) 이러한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는 홍면기(2009), 앞의 논문 참조.
- 19) 박형중(2005), 앞의 책, 53~54쪽 참조.

리하고 전환해나가야만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논의를 한국 통일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세계체제론의 권위자 월러스타인 교수의 지적은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²⁰⁾

중국문제를 보는 관건은 중국이 '외로운 거인'이라는 인식이 아닌가 한다. 누구도 중국을 반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존중하기는 하지만…… 한국이 제3의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경우 한국은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한 보루가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나는 한국의 통일이 긍정적인 사태이고, 한중일 3국이 보조를 맞춰나갈 확률을 높여 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제3의 방식에 따른 통일을 원하는 유일한 당국은 중국인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력을 동아시아에서 내보낼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리라고 본다. 중국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다.

요컨대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전략적인 선택이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한 도덕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이 자신의 존재 의의와 현실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0) I. Wallerstein과 백낙청 교수의 대담, 「21세기의 경험과 역사적 선택: 세계체제, 동아시아와 한반도」, 『창작과비평』 제103호(1999년 여름호), 62~103쪽

IV.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 ‘평화를 위한 기획’과 그 조건

1. 변경·과경민족의 ‘탄생’과 ‘평화를 위한 기획’

그러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동북변강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떠한 맥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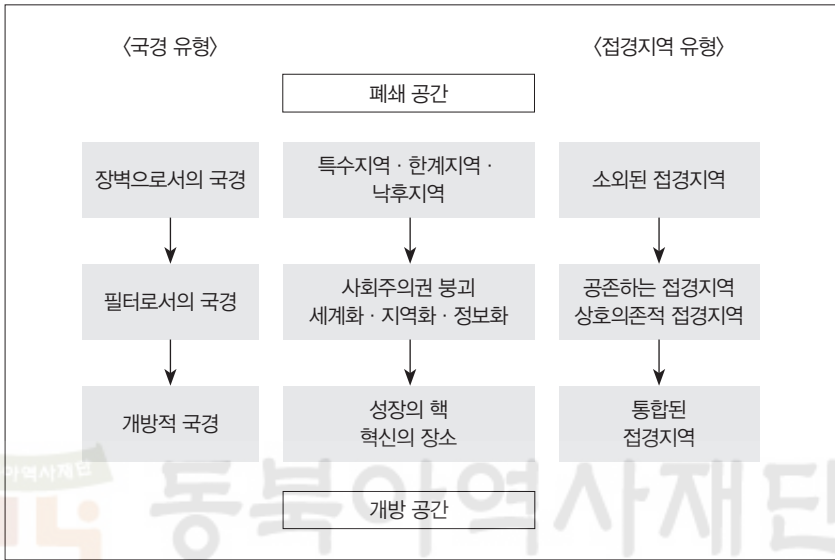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역대 어느 왕조를 막론하고 변경의 안녕이라는 문제에 예민한 관심을 가져왔고,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국가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변경정책을 제정하고 변경 경략활동을 전개하였다.²¹⁾ 중국의 동북변강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며, 오랜 역사를 굳이 소급할 필요도 없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갈등,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능성 등 오늘날 한중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이 지역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²²⁾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변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면서, 변경(국경지역)이 과거의 폐쇄적이고 낙후되고 소외된 격리의 공간에서 개방적이고 통합된 가능성의 공간으로 새로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²³⁾ 특히 유럽의 경우는

21) 馬大正(2004), 「中國邊疆的形成與發展」, 『中國邊疆史地研究』第14卷 第3期, 7쪽

22) 이와 관련하여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를 한국과 중국이 교류하고 갈등하고 융합해온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일부 학자의 견해를 소개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한규 교수는 역사상 요동이 중국의 ‘변방’도 한국의 ‘일부’도 아닌 제3의 독립된 개념을 내포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역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金翰奎(2004), 『遼東史』, 문학과지성사).

23) 이와 관련된 소략한 소개는 홍면기(2006), 『영토적 상상력과 통일의 지정학』, 삼성경제연구소, 24~26쪽; 南鍾雨(2005),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한 서부 접경지역에서

국경에 관한 기존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이 진척되고 있다.²⁴⁾



국경 및 접경지역의 유형과 진화

이러한 사정은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중국에서도 변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일단'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⁵⁾ 예

의 월경적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7~11쪽 참조; 표는 남중우 글에서 재인용.

24) 특히 한중 간 변경 협력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베트남 접경에서의 일련의 협력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중·중월 관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매우 많은 점에서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로는 古小松·龍裕偉 主編(2008), 『泛北部灣合作發展報告』,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등 참조.

25) 중국에서 변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楊成(2003), 「利益邊疆－國家主權的發展內含」,

컨대 양성(楊成)은 이익변강의 개념을 횡적으로 핵심 이익변강, 경제 이익변강, 가치 이익변강으로 나누고, 종적으로 핵심 이익변강, 중요 이익변강, 일반 이익변강, 변연(邊緣) 이익변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주요 임무는 국가의 핵심 이익변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중요 이익변강과 일반 이익변강을 보호하며, 변연 이익변강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⁶⁾ 이런 일련의 흐름은 변강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변화와 중국에서의 새로운 해석에 유념하고 여기에 호응할 수 있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변경협력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변강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존재하는 과경민족(跨境民族)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동북변강의 경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하고 있는, 한중 수교 이후 격심한 사회변동을 겪으며 이산(離散)과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역할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조선족의 문제를 자세하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과경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존재와 역할²⁷⁾이 한중 양

『現代國際關係』 제11기, 19~21쪽; 吳楚克(2003), 「建設當代中國邊疆政治學應有的理論思考」, 『中央民族大學學報』 제6기, 철학사회과학판, 15쪽; 于沛(2005), 「從地理邊疆到利益邊疆－冷戰結束以來西方邊疆理論的演變」, 『中國邊疆史地研究』 제15권 제2기, 31~38쪽

26) 楊成(2003), 위의 글 참조; 김태국(2009), 「중국의 변강정책에서 본 연길과 동북-신정(新政)시기를 중심으로」, 『동북아국제관계와 변경문제』(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34쪽에서 재인용.

27)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조선족 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족 사회는 중국 여타 지역의 과경민족과 마찬가지로 교류와 협력의 매개자로서 한중 간·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나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 사회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김강일 교수의 변연문화론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서 주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동의 자산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개념과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두기로 한다.

위에서 변강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일별하였거니와 북중 변경에서의 협력이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불가측한 행로와 관계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지정학적 실험이 임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동북지방은 과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반복되었던 역사적 혼란을 예비하는 비극의 진원지가 아닌, 북한에서의 폭발적 위험을 완충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어나가는 평화의 발신지라는 전략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동아시아 평화의 관건적 요소였고,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함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필자는 단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서의 불행한 사태를 완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중국의 동북지방이며, 장기적으로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공간 또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보았듯 한국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동아시아 평화를 설계하고 실천해나갈 주요한 행위자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역내국가가 북한의 장래에 지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북한의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뿐”이라는 주장²⁸⁾이 강세를

28) 陸定修, “북핵의 약발”, 《동아일보》(2009. 7. 11). 한국의 소위 일부 보수 언론과 식자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시간’은 북한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시간’은 북한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쥐고 있는 모험의 시계를 평화의 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결코 한국 편이 아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이 역사다.

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한 행위자인 중국의 입장과 이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주의적 사고는 ‘가능성의 예술’로서의 정치학적 상상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중국의 변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반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획’이 가능할 것이고, 절실한 동시에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며, 북중 변경에서 그 담대한 기획을 시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이 안고 있는 이른바 ‘변강’의 문제²⁹⁾를 한국 측에서 보완·지지하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을 중국이 지지하면서 미래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해가는 전략적 교환을 통해 상생적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등 비이성적 행태와 있을지도 모를 북한 사회의 격동(그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은 동북아, 특히 한중 양국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기획’이 절실하다. 변경의 안전과 경제발전이라는 중국의 수요와 북한의 안정화와 통일의 촉진이라는 한국 측의 이익이 양국의 전략적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분모이며, 이러한 평화를 위한 기획

29) 중국이 주변 변강과의 통합성을 확고히 하고 외부세력의 포위와 침투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정학적 과제와 딜레마를 안고 있음은 달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30) 여기에 한중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역사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결국 ‘과거’의 안경을 쓰고 ‘미래’를 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기획의 쉼’을 열어나갈 관용의 미덕과 용기를 공유하지 못한 채 한중관계에서 있었던 역사적 착오와 실패를 되풀이할 개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거둬되었던 지정학적 파국을 막는 길,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의 모든 행위자가 패자가 되는 우매한 게임을 피하는 길이다. 이러한 구상에 '이익변강론' 등 변강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위 '월경적 협력(transborder cooperation)'³¹⁾의 개념과 협력 경험을 차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경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사회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을 통해 한중 양국은 미래를 위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며 북중 변경에서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념적 전환'

위에서 설명한 한중 양국 간의 이른바 전략적 교환 내지 전략적 공조가 규범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를 안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한계의 핵심은 결국 한중 양국 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 장애'에 관해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보는 편견의 '색안경'³²⁾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1) 홍면기(2006), 앞의 책, 119~120쪽

32) 한 국가의 자국 혹은 타국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에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하게 된다. 한중 간 상호인식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양국의 국제질서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경험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상호인식의 기제와 내용을 밝혀보는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과 정책 설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이미지 형성에 관해서는 William A. Scott (1965),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In Herbert C. Kelman 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Emanuele Castano, Simona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식전환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우선 한중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보는 역사적 경험과 이념적인 색안경, 그리고 일부 민족주의적 시각의 왜곡된 주장을 전체 국민의 인식으로 간주해버리는 '과도한 일반화'의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같이 해왔다. 그러다 보니 친숙한 만큼 적지 않은 오해를 쌓아온 것도 사실이며, 그릇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³³⁾

놀라운 사실은 한중 양 국민 간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20세기 전반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29년에 출판된 황염배(黃炎培)의 『조선(朝鮮)』은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긍정하는 등 한국사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 심지어 심각한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³⁴⁾ 반면 조선인의 동북지방에 대한 '조선연장론(朝鮮延長論)' 등 불필요한 감정적 언설이 소위 민생단사건(民生團事件, 1932)이라는 한중 양 국민 간 참담한 충돌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⁵⁾ 그런데 이 두 가지 계기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

Sacchi, Peter H. Gries(2003), "The perception of the Oth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Evidence for the Polarizing Effect of Entitativity,"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3; Robert Jervis(1968), "Hypotheses on misperception," *World Politics*, Vol. 20, No. 3; Peter H. Gries, "Identity and Conflict in International Affair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3) "과거에 대한 공포가 과거를 망각하게 한다"는 루소의 언명은 한중 양 국민이 과거 역사 속에서 형성된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함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경우다. 루소, 『사회계약론』 제2편 8장

34) 권혁수(2007), 「근대이래 중한 양국의 상호인식-黃炎培의 『朝鮮』과 李始榮의 『感時灣語』를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제38집 1호(봄호) 참조.

금 한중 양 국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시선은 얼마나 진전되고 성숙하였을까? 역사학자가 아닌 필자가 역사문제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한 그것이 이 글의 취지도 아니므로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은 한국과 중국은 자국 내지 지역사에 대한 비대칭적인, 독특한 시공간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⁶⁾ 요컨대 한국인과 중국인은 서로를 가장 잘 안다면서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국과 지역에 대한 독특한 경험의 기억과 역사에 거의 무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이런 상호이해의 심화가 양국 관계개선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사회 환경과 시대정신은 상대방과 지역을 보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identity)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낯은 인식과 관행을 버리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삼성의 최근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성은 현존 패권국가와의 동맹에 '모든 것'을 거는 한국인의 사유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이웃나라와 맺어온 오랜 역사를 새로운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³⁷⁾

35) 민생단과 한중 양 국민의 상호인식에 관해서는 홍면기, 「1930년대 연변지역 한인 사회주의 운동과 민생단 사건 - 조중 공산당의 협력과 갈등의 변주를 중심으로」(미발표 논문) 참조.

36) 이 점에 대해서는 남상수(2004),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 한반도 인식의 지정학적 기원과 중국」, 『세계정치』 제25집 1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75~211쪽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37) 이삼성은 예컨대, 소위 중국 위협론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이 1,200여 년 존속되어 온 중화제국과의 평화의 기억을 잊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공책봉 관계도 중국대륙에 존재했던 초강대국의 '전략적 절제'와 주변국의 '형식적 종속'과 '내용적 자율'이라는 성격을 배합한 위계적인 안보레짐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할

오늘날 유럽은 국경을 넘은 협력과 연계망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자신이 '유럽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면서 평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유럽통합을 이끌어낸 것은 시대적 변화를 통찰한 선각자들의 혜안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이 지역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과 동아시아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왔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발전이 동아시아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온 한중 간의 협력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믿는다.³⁸⁾

나아가 오늘날 동아시아 모순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 문제도 이러한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에서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장들이 과거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⁹⁾ 이런 문제도 결국 역사적 경험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사의 진운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반도 분단이 기본적으로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한반도 통일문제는 지역적 시각에서 그 의미를 새로이 평가하고 역내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이삼성(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한길사; 이런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는 홍면기(2000), 앞의 논문 참조].

- 38)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仇怨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먼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부산과 후쿠오카시 간에 전개되고 있는 두 도시 일대를 포괄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양국 간 협력이 상호 간 이익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과 이를 추진해나가는 양국 지식인 그룹의 추진력이 가세한 결과일 것이다.
- 39) 이러한 지적 혼선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보수화를 초래한 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력의 연계망을 구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력이 모아져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시대를 앞서 가는 평화의 개념을 정립할 수 없고, 이러한 장애를 없애나가는데 무엇보다 지식인의 역할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⁴⁰⁾ 협애한 민족주의를 넘어 '기회의 창'을 통해 미래를 볼 것인가, 기억의 미로에서 다시 과거의 실패한 반평화의 경험을 반복할 것인가?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가격(加擊)하라는 경구는 오늘날 한중 지식인들에게 과거의 사고 틀을 버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념⁴¹⁾을 창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담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듯하다.

기능주의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미트라니(Mitrany)는 국제관계에서의 관심의 초점을 논쟁적·정치적 이슈에서 비논쟁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이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를 형성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⁴²⁾ 한중 간의 갈등이 '이익'의 충돌 아닌 '관념'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유의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능히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다시 개념과 방법론적 전환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0) 그런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구성·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식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으로는 Peter M. Hass(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Vol. 46, No.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참조.

41) '개념'의 문제에 관해서는 河英善(2004), 「변화하는 세계와 개념사」, 『세계정치』 제 25집 2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3~13쪽; Richard Ned Lebow & Thomas Risse-Kappen, eds.(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3

42) David Mitrany(1948),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Vol. 24, Issue 3, *International Affairs*, p. 359

V. 맺음말: 요약과 결론

오늘날 동아시아는 제2차세계대전 후 한반도에서 '실험'된 분단체제가 동아시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 확인하고 있고, 더욱이 북한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순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 것인지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불가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체제의 변동 요인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한반도에서 미증유의 거대한 '지정학적 실험'을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지정학적 실험'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장엄한' 선택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상 반복되었던 '장렬한' 지정학적 파국과 비극을 재현할 것인가가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⁴³⁾

중국의 주은래 총리는 1963년 6월 28일 북한 사회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우리 중국의 전선으로, 나아가서는 전반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초소로 간주하고 있다. 당신들도 중국을 자신의 후방으로, 특히 동북을 당신들의 가장 가까운 후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화법은 냉전의 와해와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 특히 북한의 실패로 말미암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동북을 당신들의(북한의) 가장 가까운 후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은래 총리의 어법을 빌려 동북을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변영의 전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43) 홍면기(2009), 앞의 글 참조.

44) 「周恩來總理談中朝關係」, 『外事工作通報』, 1963年 第10期 참조.

견인해나갈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정치군사적·지정학적으로 양국 공동의 이익공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연구하고 견인해나갈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⁴⁵⁾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개념의 전환을 어떻게 리더십의 의지로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발상 전환과 정책화의 의지가 없다면 학자들 간의 논의는 공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예일 대학의 추아(Chua) 교수는 『제국의 미래』에서 강대국의 조건으로 '관용(tolerance)'의 미덕을 들고 있다. 이런 규범적 맥락에서, 그리고 앞서 설명한 임박한 현실적 이익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한국인은 책임있는 국가로서,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09년 7월, 제1차회의 기초발제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5)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1998)',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를 거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 5, 한중 정상회담)'로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관계뿐 아니라 정치·경제·군사·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의 이면에서 양 국민 간 오해와 착오적 편견이 널리 유포되면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중관계의 상반된 흐름에 유념하면서, 이런 문제가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러한 오해가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양국 지식인과 정부가 협력을 위한 공동의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국민과 지식사회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1979),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 김한규(2004), 『遼東史』, 문학과지성사
- 남종우(2005),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한 서부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중(2005),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통일연구원
-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2009),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 논형
- 이삼성(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한길사
- 이호재(1997), 『통일 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 和平社
- 장현근 편저(1997), 『중국정치사상입문』, 知永社
- 홍면기(2000), 『中國對韓半島地緣戰略與新東北亞秩序的探索』,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면기(2006), 『영토적 상상력과 통일의 지정학』, 삼성경제연구소
- Andre Schmid 저, 정여울 역(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Humanist)
- 하영선(2004), 「변화하는 세계와 개념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제25집 2호
- 홍면기(2009), 「통일논의의 지형변화와 시장적 접근의 문제 - 동북아 경제협력의 시각에서」, 『동북아경제협력과 남북한』,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홍면기, 「1930년대 연변지역 한인 사회주의 운동과 민생단 사건 - 조중 공산당의 협력과 갈등의 변주를 중심으로」(미발표 논문)
- 육정수(2009. 7. 11), “북핵의 약발”, 《동아일보》
- “김정일 1년밖에 못살 듯”, 《문화일보》(2009. 7. 10)

- 권혁수(2007), 「근대이래 중한 양국의 상호인식 - 黃炎培의 『朝鮮』과 李始榮의 『感時灣語』를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제38집 1호(봄호)
- 김태국(2009), 「중국의 변경정책에서 본 연길과 동북-신정(新政)시기를 중심으로」, 『동북아국제관계와 변경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남상수(2004),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 한반도 인식의 지정학적 기원과 중국」,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제25집 1호
- 이호재(1997), 「한반도 통일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와 그 조건」,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 許嘉 등(2008), 『英國學派國際關係理論研究』, 시사출판사
- 陳正焱·林其鏞(1988), 『中國古代大同思想研究』, 中華書局(香港分局)
- 古小松·龍裕偉 主編(2008), 『泛北部灣合作發展報告』,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馬大正(2004), 「中國邊疆的形成與發展」, 『中國邊疆史地研究』 第14卷 第3期
- 楊成(2003), 「利益邊疆 - 國家主權的發展內含」, 『現代國際關係』, 2003년 제11기
- 吳楚克(2003), 「建設當代中國邊疆政治學應有的理論思考」, 『中央民族大學學報』(철학사회과학판), 2003년 제6기
- 李沛(2005), 「從地理邊疆到利益邊疆 - 冷戰結束以來西方邊疆理論的演變」, 『中國邊疆史地研究』 제15권 제2기

- Bull, Hedley(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 Lebow, Richard Ned & Risse-Kappen, Thomas, eds.(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stano, Emanuele, Sacchi, Simona & Gries, Peter H.(2003), "The perception of Oth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Evidence for the Polarizing Effect of Entitativity,"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3
- Gries, Peter H., "Identity and Conflict in International Affair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Hass, Peter M.(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 Hedemi Suganami(2002), “The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Reconsidered,” *International Relation of the Asia-Pacific*, Vol. 2, No. 1
- Jervis, Robert(1968), “Hypotheses on misperception,” *World Politics*, Vol. 20, No. 3
- Mitrany, David(1948),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24, Issue 3
- Scott, William A.(1965),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In Herbert C. Kelman 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You Ji(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베스트팔렌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로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판싱우

I. 머리말: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과 도전

II. 제1차 세계화: 민족국가(nation-state)체제로서의 동아시아

III. 유럽통합과 포스트 베스트팔렌 시대의 서광

IV. 중국의 '평화적 발전', '조화세계'의 외교전략과 동아시아의 미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싱우[但興悟]

정치철학 및 중국정치 전공,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부연구원
대표논저로는 『中國國際關係研究 40年』(공저, 2008, 中央編譯出版社) 등이 있다.

베스트팔렌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로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탄상우

I. 머리말: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과 도전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강대국이었던 구소련의 해체와 새로운 세계경제 중심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 부흥이 바로 그것이다.¹⁾ 구소련 해체는 냉전종식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아시아 부흥은 그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동아시아의 부상은 '권력의 이동(power shift)'으로 불릴 만큼 21세기 전 세계 정치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

195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새로운 역량

-
- 1) Giovanni Arrighi, Takeshi Hamashita & Mark Selden, eds.(2003),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2) 권력이동(power shift)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것[James F. Hoge(2004), "A Global Power Shift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July/August; David L. Shambaugh, ed.(2005),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으로 세계정치무대에 등장하였다. 일본이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한국·싱가포르·대만·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이 연이어 부상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오늘날까지 30여 년간 줄곧 평균 9%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측면에서 이미 일본을 대신해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 발전에서 가장 활력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부상과 함께 우리는 동 지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이 지역통합을 거쳐 점차 탈민족국가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은 아직 민족국가 건설의 정점에 처해 있으며, 전통적 민족국가들 간 경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서아시아에서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각축,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도·파키스탄 갈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반도 대치상태와 핵위기, 중국·일본·한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도서와 영해분할을 둘러싼 분쟁 등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 갈등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활력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안보 딜레마'에 빠져 현재까지 짙은 냉전적 여운이 감도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일 간은 조어도(釣魚島)와 해상분계선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문제, 남사군도 분쟁, 한·일 독도분쟁, 북핵위기, 한·중·일 역사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분쟁, 한·중 간 역사분쟁 등 수많은 문제들은 동아시아 협력과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³⁾ 동아시아는 어디로 갈 것인가. 베스트팔렌체제의 민족국가 논리를 초월하여 동북아 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바로 위와 같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제1차 세계화: 민족국가(nation-state)체제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적 국제관계는 근대 서양 자본주의체제의 대외확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구국가들이 세계적 범위 내에서 대외확장 정책을 전개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국제관계체제도 세계 곳곳에 파급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보급되면서 세계적 범위 내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베스트팔렌 국가체제(근대 민족국가체제)를 수립하여 세계 각 국가들을 이 체제 내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유럽에 존재했던 국제체제 및 그 원칙들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국제사회의 전통국가 또는 소규모 정치체제마저 민족국가의 대열에 편입되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국제체제는 바로 이러한 체제적 연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베스트팔렌체제는 세계적 범위를 아우르는 최초의 국제체제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일한 국제체제는 아니었다.⁴⁾ 서구국가들이 전 세계로 확장하

3) 2005년 9월 21일 미국 부국무장관 Robert B. Zoellick는 National Committee on U.S. China Relations 에서 중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라는 주제로 중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미국 정부의 대중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의 화평굴기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보다 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Barry Buzan and Richard Little(2000), *International Systems in World History*:

기 이전 국제관계는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지역적인 국제체제가 존재했다. 고대 동아시아 세계⁵⁾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고대 국제체제 - 조공체제(朝貢體系, tributary system)가⁶⁾ 존재했는데 학자들은 이를 '화이체계(華夷體系)', '중화질서', '천조예치질서(天朝禮治秩序)' 등으로 불러왔다.⁷⁾ 하나의 국제관계체제로서의 조공체제는 사실상 중국 유가사상의 대외적 연장이었으며 중국 내 '차서구조[差序結構]'의 국제적 투

Remaking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민족국가가 주체가 되는 근대 국제체제는 유일한 국제체제가 아니다. 또한 민족국가도 유일한 국가형태는 아니다. 국가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민족국가의 역사는 수백 년에 불과하다. 고대 국가도 국가이며, 고대 국제체제도 국제체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 동아시아적 개념으로 조공체제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짓는 것은 서술적 관습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조공체제가 존재한 대부분의 역사적 단계에서 구분이 선명한 핵심영역, 주변영역, 개입영역이 각각 존재하였으며, 이 세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전근대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했다. 중국 왕조는 이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했으며 주변국가와 정권(한반도, 동남아반도, 남아시아 일부지역과 아시아 북부 유목부락 등)은 중국 중원왕조 쇠락 과정에서 개입자 역할을 했다. 또한 중원왕조 강성기에는 중원왕조가 이들 지역을 느슨하게 포위하는 형세가 되었다. 이 시기에 바다 건너 태평양 섬나라들은(일본과 동남아 각국은 포함되지 않음) 대부분 역사적 단계에서 주변부에 자리해 있었다. 요컨대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체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자율적인 체제였다.
- 6) 조공체제의 개념은 미국의 저명한 중국학 학자 페어뱅크의 이름과 연결된다. 그의 창조적 연구는 조공체제 이론 연구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John K. Fairbank and S. Y. Teng(1941),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6, No. 2, Jun; John K. Fairbank(1953),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1854*,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John K. Fairbank, ed.(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7)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何芳川(1998), 「“華夷秩序”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年 第6期; 黃枝連(1994),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영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런 국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화이지변(華夷之辨)’과 조선, 일본, 안남 등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던 ‘소중화(小中華)’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공체제는 구조적 또는 상호작용의 규칙 등 차원에서 자신의 독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실질적으로 국내정치의 외연적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애초부터 확연히 대립되는 ‘안과 밖’의 구분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관계 형식은 근대인들에게 익숙한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의 위계적 모습을 띠고 있었다. 중국의 천자(天子)는 이러한 체제 내에서 가장 신분으로 존재했고, 예치(禮治)질서를 ‘천하’로 확장시켰다. 조공체제가 원심을 향한 위로부터 아래로의 질서를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근대 국제체제는 수평적인 횡적 질서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조공체제는 동아시아에서 1천여 년간 지속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주변국가들과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해왔다. 또한 이 지역의 평화와 정치·경제·문화적 교류를 위해 일정한 촉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체제가 갖고 있는 위계적 특성은 근대 국제체제가 주장하는 주권국가의 평등(적어도 형식상의 평등)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으므로 궁극적으로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새로운 국제체제-베스트팔렌 국제체제가 서양의 확장과 함께 몰려오면서 두 체제는 격렬한 갈등을 빚었다. 그 뒤로 중국과 서양사회가 충돌하는 가운데 조공체제는 해체의 길로 나갔고 중국은 점차 근대 국가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은 새로운 체제 속에서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위주체의 지위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적 함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근대국가 이념, 주권이념, 정부체제(외교체제), 국가 영토제도 등 네 가지 측면들

이 포함되었다. 이는 또한 중국이 자신을 하나의 민족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천하'로서의 중국이 실패하면서 근대 민족국가로서의 새로운 중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비서방국가들에게 민족국가라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제1차 세계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국가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국가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형태를 취하면 거대한 역사관성이 발생한다. 근대 이전의 중국은 주권평등의식이 전무했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에서 주권의식이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 한 예다.

III. 유럽통합과 포스트 베스트팔렌 시대의 서광

유럽은 근대 국제체제의 발상지이며 근·현대 국제관계의 기본 형태와 규칙은 모두 유럽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⁸⁾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관계는 유럽 강국들의 대외확장의 역사이자 전쟁사였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간의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을 둘러싸고 진행된 반복적인 쟁탈 및 전쟁의 과정이었다. 더욱이 민족국가들 간의 '생존본능'과 '안보 딜레마'를 반영하는 생생한 모습들이기도 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결 이후 반식민주의 운동의 흐름에 따라 독립주권을 되찾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하기

8) 일반적으로 근대 국제관계사는 1640년 베스트팔렌조약을 그 시점으로 하고 있다. 동회이는 근대 민족국가체제 탄생의 표징이 된다.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개도국들이 민족국가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국가들은 민족국가로서의 정치적 실천을 초월하여 유럽공동체 건설에 주력하였다. 이는 국제정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통합의 결과 초국가적 조직, 즉 유럽연합체가 구축되었다. 유럽연합은 단일한 주권국가가 아니라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연합 내 가입국들은 공동 목표를 위하여 정치·경제·사법 등 영역의 일부 주권을 초국가기구에 양보했으며, 공동주권 이행 방식으로 공통된 정책의 결정과 실행을 약속했다. 이리하여 기존 단일국가에 속해 있던 주권은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행사되고 있다. 초국가적 차원에서 유럽연합은 국가헌법상 규정된 연맹조약과 유사하며 가입국들이 양도하여 형성된 집합적 주권을 갖고 있다. 이는 비록 단일한 국가체계와는 다르지만 국가성격과 유사한 체제구조를 갖고 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삼권분리 원칙에 기반하여 유럽연합이사회·유럽연합위원회·유럽의회·유럽법원 등에서 관장함으로써 화폐발행 등 주권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일반적으로 국제조직으로 보고 있지만 그 형식과 함의는 일반적인 국제조직들과는 다소 다르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입국들은 여전히 국가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주권 전부를 초국가적 조직에 양보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직으로, 유럽연합의 통합주권은 가입국들의 주권 양보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국제조직과 국가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국제적 행위주체다.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국가주권이 있지만, 부분 주권은 유럽연합에 양보함으로써 국가의 신분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위탁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즉 유럽연합 가입국들도 이중적 성격을 띠는데 독립적 주권국가와 초국가적 조

직의 구성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가입국 주권의 전통적 특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행위주체의 특징도 변화시켰다. 따라서 국제체제 내 행위주체의 수준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즉 국제체제의 행위주체 수준에서 그 행위체가 하나의 국가일 수도 있고 또한 국가들의 통합체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오로지 국가만이 유일한 주권실체라는 전통적 관념이 깨지고 초국가적 조직도 집합주권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국제체제 내에서 새로운 행위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새로운 국제체제의 단위이며 국제관계 구조에 관한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연합은 국제조직으로서 성원국들에게는 일종의 구조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국제체제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국제체제의 하위체제가 된다.

유럽연합의 형성은 체제 내 행위주체의 성격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국가 간 행위방식과 규칙을 변화시킴으로써 국제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통합은 유럽 국가 간의 주권, 국경 등 기존 전통 민족국가들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국가 간 장벽의 타파를 의미한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도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 지속되어왔던 안보 딜레마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전통 현실주의 시각에서 볼 때 베스트팔렌조약의 주권원칙은 국제사회의 이른바 무정부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이기적 행위자로서 국가 간 쟁탈, 폭력과 전쟁은 보편적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유럽 각 국가들은 초국가적 연합을 통해 상호불신의 적대관계를 불식시켰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60년 동안 서구국가들 내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베스트팔렌조약 체결 이후 유럽사상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3백여 년간 유럽대륙은 줄곧 전쟁의 세례를

받아왔다. 하지만 유럽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간 전쟁이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유럽연합 가입국은 이미 민족국가 단계를 벗어나 포스트 베스트팔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세계정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례와 경로를 시사해주고 있다.

국제정치에는 영구적 충돌 논리가 존재하는가? 이는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학파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위의 질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국제정치의 본질적 속성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실주의의 대표주자인 모겐소, 월츠, 길핀 등은 모두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월츠는 국가는 무정부상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가는 마치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고대 그리스 비극 속에 나타나는 영웅과 같다고 주장한다. 무정부상태는 국가행위의 범주를 확정지어주며 국가는 오로지 자조(自助, self help)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합중 또는 연횡의 선택을 불문하고 자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정부상태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근원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이다.⁹⁾

코헨을 대표로 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정부상태라는 가설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국제협력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제도는 협력의 강화를 통해 무정부상태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구성주의자들의 관점은 가장 혁명적 색채를 띠고 있다. 웬

9) Kenneth Waltz(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 Co.

10) R. O. Keohane(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트는 구조는 '관념의 배분'이며 단위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떠나면 구조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정부상태는 국가가 만들어낸 것'이며, 국가는 홉스식의 세계, 로크식 내지는 칸트식의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조는 국가가 회피할 수 없는 숙명적 선택이 아니며, 국제정치에도 영구불변의 갈등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세 학파들의 국제갈등 논리에 대한 상이한 견해는 모두 무정부상태에 대한 성격, 행위자와 구조(agent-structure) 간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인식들에서 출발한다.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면 이는 철학적 문제로 귀결된다. 즉 행위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역사를 창조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복잡한 국제정치에 직면하여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역사적 필연성' 문제다. '머지않아 도래할 충돌'이라는 신념에 쉽사리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은 늘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왔다. 왜냐하면 사건의 발전과정에서 인간에게는 항상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항상 예정된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항상 선택의 과정을 통해 움직인다. 이른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위장된 선택방식에 불과하다. 결국 갈등은 인위적인 힘을 통해 빚어지는 것이다. 비록 인간의 행위가 항상 외부적 힘의 구속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시종 자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지극히 가능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뜻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관념은 오히려 쉽사리 갈등을 빚어내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역사자체는

11) Alexander Wendt(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바로 인류 선택의 결과이며, 역사는 오로지 한 갈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 시기에는 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택의 여지가 축소될수록 갈등 발생의 확률이 높다. 결정적 순간에 인간의 선택은 역사를 돌이킬 수 없게 한다. 만약 일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택의 여지는 확대될 수 있다. 사람이 역사를 창조한 것이지 법칙이 역사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면 어떤 시점에서나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IV. 중국의 ‘평화적 발전’, ‘조화세계’의 외교전략과 동아시아의 미래

동아시아 지역 부상과 함께 중국의 역할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질서와 협력을 수호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의 평화적 발전과 동아시아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중국·동아시아 안보구조 간의 선순환적 관계의 수립 여부는 이 지역의 안보와 협력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전략 추진방향은 자연히 세계 각국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30여 년간의 급속한 성장을 거쳐 중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동시에 군비지출 또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재평가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여타 국가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모두 중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들의 심리적 활동 또한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예컨대 진

심으로 중국의 발전을 기뻐해주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중국 위협론과 같이 중국에 적대감을 품고 있는 시각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의 기존 국제체계에 대한 태도와 대외전략 변천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는 것은 중국 대외관계 변화에 내재한 동력과 발전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중국의 국제체계에 대한 인식태도와 정책은 대략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하였다.

첫 번째 단계(1949~1980)는 기존 국제체제 반대자였던 시기다. 중국혁명(1921~1949) 승리 위에 건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지속적인 혁명 추진의 역량을 받아 동·서방 대결의 냉전시대 속에서 이미 장기간 기존 서방주도의 국제체제 밖에 동떨어져 있었다. 대외관계에서 중국은 세계혁명을 임무로 삼고 '국가독립, 민족해방, 인민혁명'의 신념을 북돋우며,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체제에 대해 철저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 인류의 해방을 자신들의 최종 목표로 삼는 혁명당 중공은 비록 현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갔지만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의 외교는 기존 국제체제에 편입되는 것(기존 국제체제의 가치와 규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중국의 눈에 기존 국제체제는 착취와 압박, 노예화를 제3세계로 확대시키는 자본주의체제로서 철저하게 전복되어야 하는 체제였다. 국제관계이론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면 중국의 국제체제에 대한 태도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수정주의(revisionism)였다.¹²⁾

12)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용어와 서방국제관계이론의 용어 가운데 '수정주의(revisionism)'는 확연히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수정주의를 마르크스주의 핵심원리에서의 이탈과 배반이라고 일컬었으며, 반혁명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서방국제관계이론에서는 수정주의를 국제관계의 현황에 대한

두 번째 단계(1980~2000)는 기존 국제체제 수용을 유보하는 이용자 단계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은 급진적 혁명당에서 점차 집정당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중국 대외전략의 근본적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주제’임을 명확히 제시하며, 중국과 국제체제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경제건설이 계급투쟁을 대신하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이익이 중국 대외관계 목표 가운데 급속하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 국제체제의 철저한 전복이라는 태도에서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시장, 자금 및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경제건설의 책무로 삼았다. 중국은 이전의 점진주의적 입장을 바꿔 광범위하게 각종 국제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등 중국 경제는 점차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었다. 다자체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은 다자체제와 그 운영규율에 대해 점차 전반적 인식을 갖게 되었고,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에 점차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 질서의 비판자에서 기존 질서의 수용을 유보하는 동의자, 건설적인 편입자로 변화하였다. ‘평화공존 5원칙을 기초로 한 독립자주의 평화외교’는 중국 건국 이래 중국 정부의 외교에 대한 전통적인 요점이다. 엄격히 말하면 ‘평화외교’는 1980년대 중국 외교전략 대조정 이후 비로소 현실화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 중국의 기존 국제체제에 대한 실제수용과 주관적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격렬한 혁명을 통해 기존 국제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모택동 시기의 인식은 포기하였지만 기존 국제체제가 불합리하다는 기본인식에는 결코 변함이 없었다. 때문에 등소평 시대와 강

불만과 현재상황을 바꾸려는 요구로서 혁명자는 모두 국제관계의 ‘수정주의’라고 일컬었다.

택민 시기에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중국 이론계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 시기 중국은 국제체제를 더 많이 이용했을 뿐 가치관에서의 근본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단계(2000~)는 기존 국제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단계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중국이 국제체제를 대하는 태도와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단계의 변화는 두 번째 단계처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중국의 자아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국제적 책임감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향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또한 세계를 향해 자신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도 있다. 이는 중국 위협론을 반격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며, 또한 비록 중국에 대해 적대감이 없지만 심각한 곤혹을 느끼는 국가와 인사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굴기(中國崛起)’라는 주제가 국제사회에서만 논란이 되기보다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굴기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굴기는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평화적 굴기’, ‘평화적 발전’, ‘조화세계 건설’ 등 명제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제기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환경의 시각에서 현재 중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세계화다. 세계화의 추진 및 세계화 속에서 중국이 처한 상황은 중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즉 세계화로 인해 “공통된 목표는 우리들을 함께 연결해 주었으며,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은 우리들로 하여금 단결하고 조화세계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¹³⁾ 중국이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중국의 기존 국제체제에 대한 태도가 ‘이용’에서

‘수호’로 바뀌는 중대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0년 이후 출간 ‘국제정치경제 신질서 건립’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국 이론계의 주장이 사라졌고, 그것을 대신해 중국의 지도자는 중국이 기존 국제체계의 수호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오늘날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 및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국의 현실은 중국과 기존 국제관계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세계 간의 상호의존성이 한 단계 더 심화되었다. 첫째, 중국의 대외무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대외무역 총액은 1978년의 206억 달러에서 2012년 38,667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무역대국이 되었고, 연평균 16%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의존도는 세계 여타 국가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중국의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민감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둘째, 중국 경제의 세계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석유수입량은 2.84억 톤에 달하여 석유의 대외의존도는 58%까지 상승했으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석유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은 에너지원과 원자재 소비에서도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연자원에 대한 지정학적 정치구조에서 중대한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세계화는 세계경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리스크를 날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 리스크를 방지, 해소하는 것이 중국과 세계 각국 공동의 책임이 되었다. 넷째, 환경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화는 생산력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며, 세계 각국의 운명을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세계화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13) 胡錦濤(2005), 「努力建設持久和平, 共同繁榮的和諧世界」, 2005年9月15日 在聯合國成立60周年首腦會議上演講

도전이다. 마치 하나의 시험장과도 같이 상이한 국가들은 각자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화라는 큰 시험에서 성공한 소수에 속한다. 중국은 세계화가 장단점이 있다는 일반론을 말해서는 안 되며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는 상당수준 중국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또한 중국이 여타 개도국들에 비해 세계화에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국제체제 간 관계는 심각한 전환을 가져왔다. 현재 중국과 세계경제는 '상호의존'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날로 운명을 함께하는 공생관계, 이른바 '휴戚여공(休戚與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단 세계경제가 쇠퇴하면 중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 홀로 독주하며 발전하는[一枝獨秀] 상황도 역사가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히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과 세계는 이미 진정으로 한몸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형세에 맞추어 우리는 중국과 세계경제 관계의 인식을 1980년대 이래의 '이용'과 '보충' 관계에서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자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역설적으로 중국의 발전은 세계 평화와 공동발전에도 유리하다.

요컨대, 세계화와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을 수호해야만 강대국들도 자신의 번영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과정에서의 중국의 성공적 경험은 중국이 현행 국제체제

속에서의 수의자가 되게 하였으며, 따라서 현행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이 강화되었다.

‘조화세계’의 제시는 중국 정부가 세계에 대한 기본태도와 미래의 노력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물론 현재 국제관계 현실과 ‘조화세계’의 이상향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각국 인민들의 기본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적 흐름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조화세계’ 외교사상은 중국 정부의 세계와 국제정치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외교철학 이념을 표명한 것으로, 책임있는 대국의 이상과 추구를 반영한 것이다. ‘조화세계’는 중국 정부의 외교이념상 냉전적 사고를 철저히 타파하고 경쟁 속에서 협력하고, 협력과정에서 윈윈(win-win) 구조를 수립하고자 하는 발전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를 어떠한 미래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바로 세계 인민들의 근본이익과 중대한 문제를 담은 사고와 탐색이다. 이는 기존의 서양 중심 국제관계 실천의 이념과는 다른 것이며 중국 정부가 이미 기존의 권력투쟁을 핵심으로 했던 국제관계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흥대국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여 년간 중국은 ‘평화적 발전’과 ‘조화사회’의 외교이념과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동아시아 지역 국제형세의 발전은 오히려 순조롭지 못했고 우려스러운 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조정과 그 영향 탓이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동아시아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미관계의 발전양상은 동아시아 미래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분쟁은 미국과 연관되어 있거나 최소한 미국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의 근원을 역추적해보면 그것이 모두 냉전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냉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동·서방의 대결은 동아시아 일부 민족국가의 인위적인 분열을 야기했는데 중국대륙과 대만, 한국과 북한의 분리와 대치는 모두 냉전의 산물이다. 이외에 아시아·태평양의 도서와 주권분쟁도 미국의 냉전정책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록 역사적 뿌리가 있지만 냉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양자관계 범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냉전 후 미국의 대일정책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 억제에서 일본의 발전 지원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냉전의 틀에 묶어두기 위해 도서분쟁에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의 편을 드는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1951년 미국의 조종 하에 일부 국가들과 일본이 서명한, 편파적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이 주도한 이 조약은 중국의 국가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승인하지 않은 불평등조약이었다. 미국은 동서방대결의 냉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본래 양자관계에 속하는 영토와 주권분쟁 문제를 다자간의 문제로 변화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독도 주권 귀속문제에 관해서도 미국 정부는 당초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는 데 동의했으나 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조어도 문제와 관련, 냉전의 촉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오키나와 섬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연해 도서 방위체계 내로 편입시키게 하였다. 미국은 1971년 일본에게 오키나와 관할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중일 양국 분쟁지역으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어도 역시 관할권 이양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남해도서 문제에서 미국은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래 남해의 특정 도서인 스프래틀리 섬(Spratly Island)이 모든 남해의 도서를 포함하는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라 지칭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스프래틀리 제도에서의 분쟁

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의 그림자에서 어떻게 철저히 빠져나올 것이냐는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¹⁴⁾

근래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아시아로의 복귀(pivot)', 후에 개칭한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의 선포다.¹⁵⁾ 이 전략은 정치·군사·경제 세 분야를 포함하는데 정치부문에서 '전방위적 외교', '다자외교', '가치관 외교' 등을 전개하고 군사부문에서 "옛 동맹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다." 경제부문에서는 '범태평양전략동반자관계협정'의 구축을 주도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균형' 전략의 최종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행위와 규칙을 만들어서 국제법과 관례를 존중하고, 상업과 항행의 자유가 위배되지 않으며, 위협과 협박에 의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 신흥대국 및 이웃국가 사이에 신뢰를 수립한다는 것"이다.¹⁶⁾ 하지만 실제로 남해문제를 격화시켜 동아시아 지역의 분열현상은 가중되었고 중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이미 오래된 정책인 '양면하주(兩面下注, hedge off)'의 대중국전략을 연장한 것으로, 그 이론적 기초는 중국이 '전략의 갈림길'에 놓

14) 단순히 미국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에서 국공내전과 일변도정책이 없었다면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전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만해협 분열, 항미원조, 조어도 분쟁, 남사군도 분쟁 등이 발생하지도 문제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중국·한국·북한은 모두 냉전의 피해자고, 일본은 냉전의 수혜자다.

15) pivot을 복귀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단어는 농구경기에서의 리바운드의 의미로 공격적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후에 '재균형(rebalance)'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

16) Tom Donilon(2011), "America Is Back in the Pacific and Will Uphold the Rules," *Financial Times*, November 27

여 있으나, 미래에 나가야 할 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두 측면으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끊임없이 중국의 평화를 동요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은 거듭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재균형' 전략은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미중관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21세기에 만들어 질 것',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말까지 사용하고 '부부싸움' 등의 비유를 들어 중미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비록 외교적 언사 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자세이고 태도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 즉, '정면하주(正面下注)'다.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은 '말을 살피고 행동을 관찰하라(察其言, 觀其行)'다. 미국의 '복귀' 혹은 '재균형' 전략의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이 아시아 도서주권 분쟁에서 제3의 당사자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부도 주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최대한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완전하게 반제국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동시에 민간의 반미정서도 이로 인해 만연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역으로 중국 대외정책에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 글은 이 모든 문제를 미국의 탓으로 돌릴 의도가 결코 없으며 총체적으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보다 많다고 본다.

사실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낱이 성장하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다. 이것이 아마도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유럽(최소한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이미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있으나 현재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뼈아픈 침략을 경험한 국가다. 민족주의는 독립을 쟁취하고 해방된 역사에서 응집된 민족의 역량으로 외국의 침략과 억압을 막아내고 식민통치를 전복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전형적인 양면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민족주의가 만연하도록 방임하여 둔다면 강한 배타성과 비이성적 요소로 인해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동, 발칸, 체첸, 아프리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충돌은 모두 민족주의가 촉발시킨 것들이다. 냉전 종식 후 양극구조는 해체되었지만 민족주의는 쇠퇴할 징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는 기세다. 현재 동아시아를 위태롭게 하는 진정한 위협은 중미 양국의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내부의 민족주의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 정서가 만연한 가운데 영토문제는 신성화·신앙화되고 심각하게 악화되어 논쟁을 고조시키며 외교적 중재의 여지를 위축시키고 정치해결 방안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부활한 아시아'는 아마도 민족주의 과열로 향하게 될 것이고, 영토와 자원의 쟁취를 위해 20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충돌 양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¹⁷⁾

오늘날 동아시아는 민족국가 충돌의 베스트팔렌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베스트팔렌체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냉전 종식 후 평화와 발전은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세계화의 가속화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날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주시하게 하고, 협조와 협력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17) 布熱津斯基(2013), 「亞洲的民族主義狂熱」, 『中國企業家』2013年 第5期

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였다. 세계화는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정치'를 형성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의 각종 비정부단체의 정책입안 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인류활동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어 세계적 차원의 조직과 조화를 갖게 되었다. 각국의 국내활동은 한 단계 더 국제화되고 국제질서와 민족국가의 상호관계는 나날이 세계공동체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간섭과 국가주권의 상호관계에 대한 쟁론과 국제사회의 국제조직에 대한 정의와 기능에 대한 사고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는 동아시아 발전에 많은 기회를 주는 동시에 세계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자각을 통해서든 아니면 강압을 통해서든 모두 평화와 발전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게 하였다. 이것은 무력 혹은 무력에 의한 위협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를 억압하는 것은 이미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계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전은 국가의 재배치이고, 이것은 주권의 한계 및 행사방식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 이성적으로 고찰해보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쩌면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시기에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노력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스트팔렌체제의 민족국가 충돌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11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 참고문헌

- 黃枝連(1994), 『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卷), 北京: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 何芳川(1998), 「華夷秩序」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年 第6期
- 布熱津斯基(2013), 「亞洲的民族主義狂熱」, 『中國企業家』 2013年 第5期
- Arrighi, Giovanni, Takeshi Hamashita & Selden, Mark, eds.(2003), *The Resurgence of East Asia: 500, 150 and 50 Year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uzan, Barry and Little, Richard(2000), *International Systems in World History: Remaking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irbank, John K.(1953),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1854*,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Fairbank, John K., ed.(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Keohane, R. O.(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 L., ed.(2005),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ltz, Kenneth(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 Co.
- Wendt, Alexander(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nilon, Tom(2011), "America Is Back in the Pacific and Will Uphold the Rules," *Financial Times*, November 27
- Fairbank, John K. and Teng, S. Y.(1941),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6, No. 2, Jun
- Hoge, James F.(2004), "A Global Power Shift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July/August



변계지역 국제협력과 변연문화구역의 전략적 가치

중조변계지역의 동북아 국제협력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김강일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분석의 이론적 틀
- III. 변연협력의 전략적 가치
- IV. 변연문화구역의 국제협력에서의 위치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강일(金强一)

국제정치 전공,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주임

대표논문으로는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70여 편의 논문이 있다.

변계지역 국제협력과 변연문화구역의 전략적 가치

중조변계지역의 동북아 국제협력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김강일

I. 머리말

변연지역이 일반적인 사회계통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자는 「개방사회(開放社會)의 변연효응(邊界效應)」이라는 논문에서 변연효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이 제반 계통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면, 변연이 없으면 계통도 없다는 결론도 가능한 바, 변연이 그 제반 계통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자들이건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들이건 모두 변연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기에 많은 이론적인 연구에서 변연의 작용과 의미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에게 변연이란 근근이 국가 간의 계선 혹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변연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론적으로 변연을 다루는 이론은 계통론과 경제학에서 나타나곤 한다. 계통론에서는 변연을 계통 간 교류의 통로로 간주하며 따라서 다른 계통들의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기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계통론도 변연이

계통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실지로 변연이 계통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 있으므로 변연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가 없는 계통론이란 완벽한 이론으로 간주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변연을 통해 형성된 개방도가 일정한 개방계통의 생명선이라는 점에서 계통론도 상당한 연구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변연이란 중심지역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변연(邊緣)부분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들은 경제의 중심지역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변연지역의 경제체계에서의 역할을 발전전략의 높은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리쇠감원리(距離衰減原理)는 변연지역의 경제적인 낙후성은 중심지역의 그에 대한 흡인력의 부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변연지역이 중심지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들로 인해 전통적인 이론들은 모두 변연을 낙후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다.

변연지역에서의 국제협력력을 논의하려면 우선 변연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과 그 기능에 대한 이론적인 증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연지역과 국제협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조변계지역이 훌륭한 모델로 될 수 있다. 하기에 필자는 중조변계지역을 이론분석의 특례로 선택하였으며 나아가서 중조변경지역에서의 국제협력력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 변연지역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다.

몇 년 전 필자는 중국의 동북3성(東北3省)이 개혁개방의 흐름 속에서 점차 그 공업기지라는 중요한 위치를 상실한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중심·변연'라는 개방사회의 발전모식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변연이 사실상 한 개 계통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본문은 이러한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던 변연효응

이론을 기반으로 변연지역의 국제협력이 국가발전에 끼치고 있는 지대한 영향을 지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변연문화구역의 의미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국제협력에서 변연문화구역의 중요성은 변연문화이론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문은 조선족사회와 같은 전형적인 변연문화구역을 특례로 일반적으로 변연지역에서 형성된 변연문화구역의 전략적인 의미를 분석하려 한다. 변연과 변연문화구역의 의미와 전략적인 가치는 상관된 문제이므로 될수록 포괄적인 논술을 시도하려 한다.

II. 분석의 이론적 틀

필자는 다년간의 조선족문제 연구에서 변연효응이론과 변연문화이론을 그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왔다. 실지로 변연지역의 국제협력에서 이러한 이론은 더 없이 좋은 이론적 분석의 틀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기에 여기에서 우선 변연효응이론, 변연문화와 변연문화 구역이론을 소개하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분석의 틀로 본문에서의 주제들을 논증하려 한다. 변연효응이론이란 변연이 계통 제반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계통은 개방계통과 봉폐(封閉)계통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 상태는 계통의 변연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봉폐상태의 경우 그 변연은 물질, 에너지, 정보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차단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제반 계통은 그것의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 에너지와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통은 엔트로피의 증대로 와해될 수밖에 없다. 즉 봉폐계통은 특징적으로 자이와해(自我瓦解)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계통이란 그 계통의 변연에서 물질, 에너지, 정보의 교류가 진행되는 동시에 계통 자체 발전의 동력을 형성하는

계통이다. 이러한 계통은 자체의 에너지에만 의존하여 그 생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물질과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그 발전의 동력을 형성한다. 봉폐계통과 개방계통에 대한 고찰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계통이건 간에 모두 변연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依存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감한 의뢰성이 바로 변연효응이다.

계통의 변연효응은 두 개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변연의 부효응(負效應)이다. 변연의 부효응은 계통의 변연이 봉폐상태(零開放度)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계통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을 가리킨다. 한 개 계통이 봉폐상태에 처해 있다면 변연은 다른 계통의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여과효과(濾過效果)로 계통 간의 관계를 차단한다. 이러한 변연은 사변연(死邊界)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의 변연이란 곧바로 그 계통의 죽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정효응(正效應)이다. 개방계통은 특징적으로 변연지역에서의 다른 계통과의 물질, 에너지, 정보의 교류로 자조직과정(自組織過程)으로 진입하며 따라서 제반 계통의 층차약천(層次躍遷)을 이룩한다. 계통의 이러한 변화과정의 상태는 변연에서 진행되는 물질, 에너지, 정보 교류의 상태와 관련된다. 변연의 이러한 제반 계통의 약천(躍遷), 비약적 변화를 유발하는 작용을 정효응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요약하여 말하면, 계통의 자아외해(自我瓦解)의 추세는 변연의 부효응과 관련되며, 계통의 자조직과정의 형성과 강화는 변연의 정효응과 관련된다.

변연효응이론으로 사회계통을 분석한다면 그 변연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깊이 인식할 수 있다. 한 개 개방된 사회계통은 반드시 변연지역의 의의돌현점(意義突現點)을 형성해야 하며 또 그것을 기점으로 중심·변연의 역동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그 발전에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부산과 서울, 중국의 연해지역과 중심지역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중심·변연의 역동적인 체계인 것이다. 만일 한 개 사회계통이 이러한 효율적인

계통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에 필수적인 강력한 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이론의 틀로 중국 동북3성의 발전이 기타 지역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동북3성은 원래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로써 중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동북3성은 제반 경제체계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세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그 중요한 원인이 변연지역에서 제반 경제체계에 막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의돌현점(意義突現點)을 형성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하였었다. 중국 동북3성의 현 상태를 분석해보면 주요하게 요령성(遼寧省)의 대련(大連)과 영구(營口)라는 항구로 의의돌현점을 형성하였을 뿐 다른 지역에는 그렇다고 할 만한 변연의 의의돌현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조변경지역과 중리변경지역은 사실상 반붕폐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의 미개방상태와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중국의 동북3성은 사실상 그 발전에 필수적인 개방도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심·변연 역동관계라는 발전의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북3성의 변연지역이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의 변연의 부효응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붕폐상태에 처해 있는 계통은 그 죽음의 변연으로 인해 자아와해의 추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계통에서는 자조직(自組織)체계를 형성할 수 없을 뿐더러 발전의 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동북3성이 직면한 핵심문제라고 인정된다. 본문에서 토론해야 할 중조변연지역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문의 분석에 필요한 변연문화와 변연문화 구역이론을 소개하도록 한다.

몇 년 전 필자는 조선족사회의 문화기능에 대한 분석에서 변연문화이론을

제기하였고 따라서 조선족사회와 같은 특수한 변연문화구역의 전략적인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였었다. 본문에서 이러한 이론들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설정한 것은 중조 변연지역과 중몽 변연지역과 같은 특수한 지역들에 상당히 풍부한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향후 발전의 막강한 발전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변연문화(邊緣文化)의 개념의 해석에 앞서 변연(邊緣)이라는 개념을 우선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변연'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세 가지 의미에서 쓰여 지고 있다. a.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 b. 계통 계선의 부근, c. 두 개 이상 계통의 교차부분 등이다. 상식적으로 변연이라는 개념은 a와 b의 함의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미약, 낙후, 미발달, 변두리 등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현대 자연과학과 과학철학에서는 흔히 변연이라는 개념을 c의 함의에서 쓰고 있는데 교차상태를 이룬 두 개 계통의 교차부분을 가리킨다. 계통론(system theory)에서도 계통내부의 질서유지에 커다란 작용을 일으키는 동시에 외부의 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을 '변연계통'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대뇌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변연이라는 개념은 c의 함의에서 쓰여지고 두 개 이상의 계통을 연계하고 그들의 교차상태를 형성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변연문화란 바로 두 개 이상의 문화계통이 교차상태를 이룬 부분을 가리킨다. 현재 자연과학과 과학철학에서는 변연과학(邊緣科學) 혹은 변연학과(邊緣學科) 등의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리화학, 생물화학 등이 바로 그것들인 것이다. 필자는 자연계통뿐 아니라 인류사회에도 이러한 두 개 계통을 연계하고 교차상태에 처해 있는 문화계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되기에 두 개 이상의 문화계통을 연계하고 또 문화역(文化域)의 교차점에 처해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변연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족사회는 중국문화와 조선반도문화의 교차점에서 형성한 특수한 문화집단이기에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에서 변연이라는 개념을 필수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변연문화란 두 개 이상의 문화계통의 특징을 융합하여 특수한 문화역을 형성한 문화체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체계는 두 개 이상의 문화환경 속에서 장기간의 진화과정을 거친 문화융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문화역 혹은 문화교차점(文化交叉點)의 형태로 그 특징을 나타낸다. 범문화(泛文化)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개인에서 사회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으로 문화의 교차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하여 변연문화란 문화집단 간의 교류에서 개개인의 문화교류까지 흔히 나타나는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변연문화의 현상은 두 개 이상의 문화체계에 대해 보다 익숙한 개개인 혹은 문화집단에서 형성되는데 언어, 생활습관, 사유방식, 가치관념 등 측면에서의 부동한 문화체계의 융합으로 그 특질을 이룬다.

변연문화구역(邊緣文化區域)이란 지정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변연문화계통이라고 볼 수 있다. 변연문화의 특수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필자는 문화의 자연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보다 강한 변연문화의 특징을 형성하였고 또 지정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화계통을 변연문화구역이라고 규정하였다. 변연문화구역은 문화적인 교차상태와 지리적인 인접상태를 동시에 나타내는 문화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계통의 지리적인 특징은 변연문화의 모체문화(母體文化)와 피의부문화(被依附文化)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깊게하고 있으며 또 문화의 초국경작용(超國境作用)으로 두 개 이상의 문화계통의 교류를 더욱 강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변연문화구역은 경제, 정치, 문화의 흐름으로 형성되었기에 상당한 규모의 문화군체(文化群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문화권의 교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

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한수교 과정과 이후의 중한교류에서 조선족사회는 그 변연문화구역의 문화기능을 과시하였고 많은 기여를 하였다. 물론 중국의 13억이나 되는 인구에 비교하면 조선족사회는 몇 방울의 물로도 비유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닌 변연문화구역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문화철학 의미에서의 분석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문의 변연문화와 변연문화구역에 대한 분석은 주요 변연지역의 국제협력에서 그것들의 증대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다.

III. 변연협력의 전략적 가치

변연효응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필자는 “개방된 사회체계는 변연효응에 상당히 민감한 의존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변연의 상태 혹은 개방의 정도가 사실상 계통정체(系統整體, 계통 전체의 의미)의 운영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적인 사회계통의 발전의 주요 경로는 강대한 중심과 변연의 역동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계통전체의 층차약천(層次躍遷)을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본문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변연협력의 전략적인 의미를 논증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변연지역의 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계통 혹은 국가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는 이러한 변연지역의 국제협력을 변연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인식 틀에 국한하여 이해한다. 사실 이러한 인식도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변연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가 제반 계통에 대한 영향을 흘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방상태에 진입한 계통의 변연의 작용을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해

야 할까? 두 개의 개방계통에서의 변연의 작용을 그림 1로 해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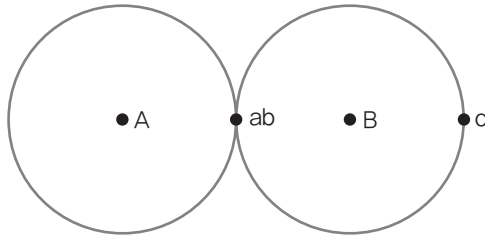


그림 1_ 개방계통 간 변연의 작용

A와 B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계통이다. ab는 이 두 개 계통이 서로 연결되는 변연의 교차점이다. A와 B는 ab를 통해 A와 ab, B와 ab라는 역동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A와 B의 역동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관계를 통해 두 개 계통은 그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동력을 확보하며 제반 계통의 증차약전을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ab는 A와 B에서의 의의돌현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b의 의미는 c와의 비교에서 나타난다. c는 다른 계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변연점으로서 그 계통중심인 B에 미약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담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거리쇠감원리란 c와 B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c는 B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B의 흡인력은 c가 멀면 멀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변연 지역이 왜 경제적으로 낙후한가 하는 답안은 여기에서 나온다. 계통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c는 죽음의 변연(死邊緣)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리쇠감원리는 ab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ab는 A와 B의 연결고리로서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또 A와 B의 관계에서 더욱 막강한 흡인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연해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ab와 같은 의의돌현점을 형성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변연이 활성화되면 A와 B도 따라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변연이 위축되면 A와 B도 따라서 침차약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변연효응이란 변연이 다른 계통과의 연계에서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그 의미가 크면 클수록 제반 계통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는 점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물론 한 개 계통이 변연효응이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전제는 그것의 개방상태이다.

그러면 변연은 그 제반 계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필자는 한 개 개방계통의 침차약전이란 중심·변연의 역동관계에서 형성되는 바 변연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본다. 이론적으로 소위 침차약전이란 간단한 계통구조에서 복잡하고 더욱 큰 기능을 지닌 계통구조로 전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중국의 연해지역에서 시작된 대외개방이 제반 사회 경제구도를 전통적인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곧바로 중국 제반 사회의 침차약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차약전 과정에서 변연이 제반 계통에 끼치는 영향은 그 중심부위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즘 과학철학에서는 용현(湧現, emergence)이라는 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변연이 제반 계통의 침차약전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용현 효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과학철학의 의미에서 용현은 계통의 각종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체(整體)적인 효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 개 계통의 정체는 그 부분의 집합보다 크다는 계통이론의 발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용현은 이론적으로 계통의 요소들의 조합으로 인해 계통의 침차약전을 이루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실례로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 원인은 물론 경직된 경제체제와 미개방상태에 있었다. 즉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원활한 경제체제와 개방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

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기에 등소평은 개혁개방으로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주입한 것이다. 결국 중국은 20여 년간의 발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성공에는 시장조절·산업구도·대외개방이라는 새로운 조합방식만이 거대한 사회적 정체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과학철학적인 원리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진 발전이 곧바로 증차약천이며 용현인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어떠한 상태일까? 혹은 개방만 하고 개혁은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어떠한 상태일까? 혹은 개혁은 하고 개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어떠한 상태일까? 물론 이러한 가설에 대한 정확한 해법은 있을 수 없겠지만 모두 중국의 거대한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이란 그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의 조합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어느 요소가 결핍하여도 발전이라는 정체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이다. 요즘 중국의 학계에서는 과월식발전(跨越式發展,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느 사회이든 간에 발전의 단계를 초월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 가능하다면 사회 구성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으로 새로운 정체적인 용현효과를 나타낼 뿐이다. 여기에는 한 개 사회계통에 그것이 원래 없었던 새로운 요소를 주입하여도 용현현상을 나타 낼 수 있다는 도리도 내포되어 있다.

개방된 사회계통의 발전은 중심지역과 변연지역 간의 역동관계, 그리고 변연지역을 통한 개방도의 증대로 인한 제반 계통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 즉 용현효과로 이룩된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동북3성 경제진흥 문제를 한 개 실례로 변연이 계통의 용현효과를 형성하는 역할을 분석

하도록 한다.

개혁개방 이전 동북3성은 중국의 중공업기지로서 제반 중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 동북3성의 경제는 기타 지역경제에 비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중공업기지로서의 중추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동북3성의 경제적 지위 상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 그 원인을 각종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혹은 동북3성의 산업구조의 문제점 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동북3성 경제지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도 동북3성 경제지위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정부 정책 등의 문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혹시 동북3성에 그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미 중국의 거대한 발전은 시장조절·산업구조·대외개방이라는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융현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 동북3성은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졌을까? 만일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한 조합을 이루었다면 동북3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해질 이유가 없을 것이며 거꾸로 그것들의 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북지역은 낙후해지지 않을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의 상황을 되새겨보면 시장조절 문제와 산업구조의 문제는 중국의 제반 경제계통에 보편적으로 존재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상해와 같은 공업기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간 반면 동북3성은 왜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까? 중국 연해지역의 발전에서 우리는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발전의 기관차라는 식의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연해지역은 대외개방으로 인해 원활한 시장조절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구조의 구축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기존 산업구조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즉 연해지역의 대외개방은 시장과 경제의 활성화,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에 적응한 산업구조)를 가져왔기에 그 발전에서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 동북3성의 대외개방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조절·산업구조·대외개방이라는 발전에 필수적인 조합에서 대외개방이라는 요소가 결핍하다는 것이다. 아래에 도표에서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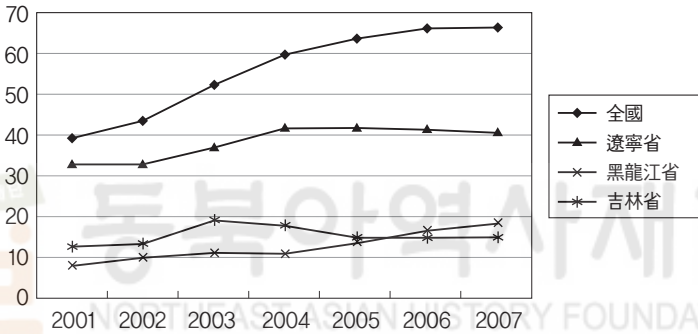


그림 2_ 전국과 동북3성의 대외무역의존도(%) 대비(2001~2007)

資料來源: 根據2002~2008年度《中國統計年鑒》(中國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出版社) 計算整理而繪制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중국 제반 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66.30%인데 비해 흑룡강성(黑龍江省)은 18.61%이고 길림성(吉林省)은 14.81%이며 요녕성은 41.01%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동북3성 지역의 대외개방도 상태를 그것의 대외무역의존도로만 분석한다면 무리일 수 있으나 대외무역의존도가 그 개방도를 나타내는 한 개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는 견지에서 보면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도 가능해진다. 대외개방도의 부족은 동북3성의 경제체계가 합리적인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

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용현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간단하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 만일 개방도가 부족한 동북3성에 충분한 개방도(적어도 전국의 평균 수준)를 주입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동북3성이 충분한 개방도를 확보한다면 아마 그것으로 인한 산업체의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체의 형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각종 경제체들이 더욱 복잡한 비선성(非線性)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방도의 증대는 동북3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 동북3성은 왜 광활한 변연을 지니고 있음에도 개방도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 필자는 그 원인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북한의 미개방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경우 그 전략적인 발전의 중점지역을 유럽에 두고 있고, 또 극동지역 대규모 개발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흑룡강성에 필요한 개방도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북한 또한 미개방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길림성과 요령성에 필요한 개방도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3성은 그 변연의 붕괴적인 상태로 인해 반붕괴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개방도의 부족이란 그 계통의 변연지역이 죽음의 변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한 계통은 변연과 중심지역 간의 역동관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반계통의 용현현상으로서의 층차약천을 이룰 수 없다. 동북3성의 경제가 왜 침체상태에 처해 있는가 하는 답안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가 왜 침체상태에 처해 있는가 하는 답안도 역시 여기에서 나온다.

개방도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변연을 형성할 것이며 또 변연지역의 구역가치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게 된다. 변연지역의 구역가치

하락은 제반 계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중심·변연의 역동관계의 틀을 형성할 수 없게 한다. 일반적으로 구역가치란 한 개 지역이 지니고 있는 흡인력을 가리킨다. 북경과 서울은 정치·경제적인 흡인력을 지니고 있기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중심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흡인력은 인구의 유동은 물론 투자경쟁까지 유발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발달된 양상을 띠게 된다. 부산과 상해의 경우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세계 각국을 연계하는 고리로서의 흡인력을 지니고 있어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구역가치란 곧바로 지역적인 흡인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흡인력을 기반으로 한 구역가치의 증대는 중심·변연 역동관계의 기반이다. 왜냐하면 변연지역의 구역가치의 증대는 투자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투자경쟁은 또한 변연지역의 규모경제체계의 구축, 물류증대 등 효과를 통해 중심지역과 제반계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동북3성처럼 죽음의 변연을 형성한 사회계통은 구역가치의 하락, 흡인력 부족 등 문제점으로 인해 투자경쟁을 유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제반 사회의 융현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의 동북3성 진흥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변연지역의 협력, 그리고 사회계통 개방도의 중요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또한 변연지역 국제협력의 전략적인 의미에 대한 논증이기도 하다. 간단한 상상을 해 보도록 한다. 만일 중러·중조 변경지역의 경제교류가 대폭 확장된다면 동북3성은 상당한 흡인력을 조성할 수 있을 뿐더러 그 흡인력으로 중국 내지와 외국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교류는 동북3성의 원래 지니고 있었던 우세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구도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변연지역의 경제교류의 확장은 상응한 산업체의 증대, 서비스업체의 구축, 새로운 산업체 형성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흡인력의 조성은 동북3성의 투자경쟁을 유발하여 지금 골칫거리로 된 기술과 인재의 결핍이라는 문제들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형성되는 용현효과는 동북3성 진흥에서 거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변연효응이론은 중조변연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국과 조선의 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조변경의 활성화는 장춘, 심양 나아가서는 북경과 같은 중심지역의 경제에 커다란 탄력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북3성의 경제진흥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는 물론 북한에도 마찬가지다.

IV. 변연문화구역의 국제협력에서의 위치

변연문화구역의 국제협력에서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변연지역 국제협력에서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경우 변연지역이란 곧바로 두 개 문화계통의 계선(界線)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계선은 또한 문화계통 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장애를 형성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교류에는 항상 문화적 차이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결핍으로 인해 문화 오독(誤讀)과 같은 교류에서의 장애를 형성한다. 이러한 장애는 두 개 문화계통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의 교류에 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하기에 이러한 문화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문화권 간의 교류를 확장하기 위해 각 문화집단은 통역기구, 전문연구기구, 전문적인 언어학과 등을 설치한다. 물론 이러한 전문기구들을 통해 문화권 간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한

양상을 띠 수 있으나 또한 인력과 시간상의 제한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은 외국문화의 습득으로 그 문화행위 영역의 확장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문화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각 분야의 교류를 시도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변연문화현상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변연문화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를 확장하는 현 시대의 보편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인위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변연문화체계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 인력의 제한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바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필자가 변연문화구역이라는 특정된 문화현상과 문화집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화체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화되어 왔으며 또 막강한 집단적인 문화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의 조선족사회와 몽골족사회 등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우선 중국의 조선족사회를 중요한 참고계(參考系)로 설정하고 변연문화구역의 한 개 중요한 기능부터 논의하도록 한다. 중한 수교 이후 중국과 한국의 경제·문화 교류는 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중국과 한국 간의 교역액이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가 급속한 확장을 이룬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답안은 복합적일 것이다. 여기에 중국 조선족사회와 관련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특수한 변연문화체계와 구역을 지니고 있는 조선족사회의 존재이다.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에서의 조선족의 역할을 과장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조선족이 이러한 교류에서 문화의 중개, 전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조선족사회의 매개역할이 흔히 나타나는 문화의 오독과 교류의 장애를 손쉽게 극복하고 또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케 한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조선족사회의 이러한 역할에서 필자는 두 개의

분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200만도 안 되는 조선족사회가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것이 200만에 달하는 전문적인 통역기구와 맞먹는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전문적인 문화중개 일군(예를 들면 통역)을 배양한다는 것은 장장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만큼 200만이라는 방대한 중개계통이 지니고 있는 문화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선족사회와 같은 변연문화체계는 거대한 문화자원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런 풍부한 문화자원을 소유한 조선족사회가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철학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한반도 같은 부동한 문화체계의 교류는 문화적인 이질성을 극복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화권 사이에 변연문화구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함은 교류에서의 문화적인 장애를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특징적으로 변연문화구역이란 조선족, 몽골족과 같은 과경민족 군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화현상인데 그것들이 두 개 이상의 문화권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돌현점(意義突現點)을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위의 변연문화구역의 문화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국제협력에서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필자는 변연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변연문화구역의 역할에 대해 문화중개, 문화정보의 전환, 문화집단 간 교류에서의 전략적인 의의돌현점 형성 등으로 나누어 논술하였었다. 문화 중개와 전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변연문화구역의 변연효응 효과의 증대와 사회계통의 구역가치의 증대에 끼치는 영향, 전략적인 문화지점(文化支點)의 구축이 상관 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인 의미를 논증하려 한다.

첫째, 변연문화구역은 변연효응 효과를 대폭 증대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변연문화구역이 변연지역 국제협력에 필수적인 문화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한 국제협력이 한층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더 많은 논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기능은 변연지역에서의 변연효응 효과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변연은 중심부위와의 역동관계로 그 변연효응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만일 제반 계통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의돌현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몽골, 러시아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변연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들에서 아직까지 중국의 제반 경제 시스템에 증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의돌현점은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변연의 상당부분이 다른 계통과의 계선이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을 뿐 제반 계통의 발전에 그렇다 할 만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개방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모식인 중심·변연이라는 역동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중국의 북부·동북부 지역이 연해지역과 같은 막강한 발전의 동력을 형성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변연지역의 변연효응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중심·변연의 역동관계에서 비롯되는 막강한 발전동력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몽변연과 중러변경의 경우 몽골의 시장규모, 러시아의 변연지역에 대한 관심부족 등 문제들로 인해 소위 의의돌현점 구축이란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여기에서 중조변연지역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지경학적으로 중조변경지역은 동북아 지역 협력의 요충지에 처해 있다. 만일 이 지역의 변연효응 효과가 증대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즉 동북아 지역 전체적인 용

현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경학적인 의미와 조선족사회가 지니고 있는 변연문화의 우위를 더한다면 용현효과는 더 크게 더 빨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중조변경지역의 이러한 용현효과 형성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요충지에 처해 있고 또 지경학적인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스스로 봉쇄상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분석의 편리를 위해 북한이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설이 현실이라면 북한, 중국 그리고 동북아 기타 국가들의 발전은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며 동북아 지역의 국제협력도 현실성을 띠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변연지역 용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win-win)구도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구도가 형성되면 조선족사회는 그 변연문화체계와 변연문화구역의 우세(優勢)로 자신들의 위치를 중조관계라는 틀 속에 설정하며 중조변연지역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조선족사회가 지니고 있는 변연문화란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문화자원인 만큼 중국과 한반도의 협력에서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의 변연지역의 개방을 전제로 국제협력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조선족사회의 문화자원과 지경학적인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은 조선족사회를 이용한 두 나라의 발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흡인자(吸引子) 구역의 구축도 구상할 수 있다. 흡인자구역이란 몇 개의 흡인자를 묶어 한 개 막강한 흡인력을 지닌 구역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조선의 칠보산과 중국 경내의 백두산 지역은 모두 일정한 흡인력을 지닌 관광지인데 이들을 한 개 관광 흡인구역으로 조성한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많은 중국 내지의 관광객들이 백두산 하나를 구경하려고 몇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이러한 관광길에 칠보산과 같은 색다른 관광지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나진항·청진항·무산철광·신의주와 중국의 단둥·훈춘·백두산 등 흡인자들을 묶어 한 개 커다란 흡인지구역을 형성한다면 그 의미는 대폭 증대될 것이며,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동북지역과 조선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개방도를 제공해 줄 것이다. 조선족사회의 역할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략적인 시각에서 조선족사회의 문화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상상 밖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위의 문제와 연관된 변연문화구역의 제반 계통에 일으킬 수 있는 구역가치 증대효과다. 구역가치란 한 구역의 제반 계통에서의 위치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한 구역이 제반 계통에서 별로 필요치 않은 부분으로 간주된다면 그 구역가치는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반면 높은 구역가치란 그 구역이 제반 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 개 지역의 낙후성은 그 지역가치의 하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개 실례를 들기로 한다. 요즘 중국의 지방정부에는 초상인자국(招商引資局)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이다. 연변지역도 이러한 기구들이 일찍이 설치되었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애간장을 태웠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자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구역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구역가치만 형성된다면 투자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변지역과 같은 지경학적인 의미가 큰 지역들에서 충분한 개방도만 확보한다면 막강한 구역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하기에 필자는 투자유치 작업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중조변연지역의 경제협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연변지역 구역가치의 증대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는 역시 북한의 개방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개방을 거부한다면 우리들이 연변지역 구역가치의 증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필자는 다른 질문을 제기하려 한다. 만일 우리들이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더라면 중조경제협력에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고 중조경제협력은 60억 달러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즉 연변지역과 같은 변연지역이 왜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루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북한의 미개방상태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여부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중조변연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룩한다면 연변지역의 구역가치는 물론 제반 동북3성도 충분한 개방도의 확보로 구역가치의 증대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즉 마치 요녕성의 구역가치 형성에서 대련항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과 마찬가지로 연변지역은 동북3성 제반체계에서 홀시할 수 없는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중조변연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발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변연문화자원과 변연문화구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연문화구역의 존재는 중국과 한반도 간 교류의 대폭적인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간단하게 상상해 보자. 만일 200만이라는 문화군체가 전문적인 통역기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두 개 문화권의 교류에 끼치는 영향은 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또한 연변지역 구역가치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연변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밝힌 북한의 미개방상태로 이어지는 이 지역의 낮은 구역가치에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연문화라는 문화자원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로 큰 의미를 나

타낼 수 없다. 반대로 그 문화자원이 충분한 개방도를 확보한다면 그 문화기능의 신속한 확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역가치의 신속한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즉 변연문화는 연변지역 같은 특수지역의 구역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는 나타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변연문화구역은 변연지역의 의의돌현점 구축의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꼽힐 수 있다. 여기에서 밝혀야 할 것은 변연효응원리가 마치 일체 변연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변연효응이론은 변연효응 효과 모든 변연에서 형성될 수 있으나 그 작용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어떤 변연은 죽음의 변연으로서 제반 계통이 자연적으로 와해되는 추세를 나타나게 하는 반면 어떤 변연은 중심지역과의 역동관계를 발생함으로써 발전에서의 소위 의의돌현점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개방계통은 모두 이러한 의의돌현점을 통해 다른 계통과의 물질, 에너지, 정보를 교류하게 되며 따라서 자조직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의의돌현점의 형성이 한 개 계통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돌현점의 구축에는 많은 여건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변연은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이러한 의의돌현점은 특정된 몇 개 지역에서만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제반 계통의 개방도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이러한 의의돌현점 형성에는 많은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몽변연의 경우 많은 지역들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불모지로서 그곳에 소위 의의돌현점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중조변연지역은 자본·기술·자원·노동력이 밀집한 동북아 지역의 요충지에 처해 있으므로 변연지역의 의의돌현점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요충지의 변연문화체계는 또한 의의돌현점 구축에 더욱 큰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변연효응원리로 변연지역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중요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중조변경지역과 중몽변경지역 같은 변연지역의 협력이 제반 사회계통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변연이 활성화되어야 제반 사회계통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본문의 핵심적인 관점이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중국의 동북3성을 모델로 변연과 중심지역 간의 역동 관계를 논증하였고 북한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설명해야 할 것은 동북3성이 개방도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함은 곧바로 북한의 개방도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의 분석은 북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점이다. 한마디 더 언급할 것은 중국과 북한은 원원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중조 간의 원원구도가 형성된다면 중국과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협력체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많은 논점들은 이론적인 서술 실천의 근거를 제공할 뿐 그것들로 실천을 대체할 수는 없다. 중조변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려면 많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바 이런 점들은 다른 연구에서 다루려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또 그 결과로 러시아의 주의력이 극동지역으로 쏠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중조변연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이란 추상적인 차원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게끔 하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한반도의 지경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 만일 한반도가 완전한 개방상태에로 진입한다면 동북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이 글에서 언급한 변연문화구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형성한다. 따라서 의미가 깊은 전략적인 의의돌현점의 구축도 가능해진다. 때문에 중국이건 한반도이건 모두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변연지역의 발전에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의 경제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경학적인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중조변경지역의 경제적인 협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중조변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에는 물론 한반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전략적인 시각 전환이 필수적이다.



(2009년 7월, 제1차회의 기초발제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金强一(2002), 『邊緣文化的 文化功能과 中國朝鮮族社會의 文化優勢』, 東疆學刊
- 金强一(2004), 『中國朝鮮族社會의 文化資源과 發展의 文化戰略』, 東疆學刊
- 김강일(2008), 『개방사회의 변계효응』, 東疆學刊
- 묘동승(2007), 『계통과학대학강고』, 중국인민대학출판사
- 沈小峰(1983), 『自組織哲學』, 中央黨學校 출판사
- 沈小峰(2008), 『혼돈초개: 자조직리론적철학탐색』, 북경사범대학출판사
- 劉仲林(1998), 『現代交叉科學』, 浙江教育出版社
- 李小剛 主編(1999), 『主流와 邊緣』, 生活－讀書－新知3聯書店
- 中國社會科學語言研究所 編, 『現代漢語 辭典』, 『新華辭典』
- John Holland(2006), *EMERGENCE-From Chaos Order*, 상해세기출판집단
- 金强一(2007. 6), 「區域發展戰略의 新視野: 戰略的 邊緣文化支店區域의 구축－延邊 地域發展의 戰略을 特例로」, 『연변대학학보』
- 陶連生(1999. 2), 「文化誤讀과 行爲失范」, 『福建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중국 변강이론의 진화와 '공동이익 변강' 개념의 발전

동북아역사재단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II. 현대 동아시아의 지역구조와 변경문제

III.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등장과 변경지역 협력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장배(朴章培)

중국근현대사(민족관계)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역대 '중국'의 판도(版圖) 형성과 '변강' 지배』(공저, 2008, 한신대학교출판부) 등이 있다.

중국 변강이론의 진화와 '공동이익 변강' 개념의 발전

동북아역사재단 박장배

I. 머리말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간공동체가 존속하였다. 이들 공동체 사이에는 갈등과 경쟁, 공생과 협력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협력의 이종주였고, 어쩌면 양자 사이에 위태로운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파괴적인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크게 보면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발전은 공생과 협력의 힘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측면에서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이익의 문제는 일종의 '공유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1968년 미국의 생물학자 개럿 하딘(Garrett Hardin)은 『사이언스(Science)』에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딜레마를 소개했다. 논리적으로 그것은 만일 동아시아 각국 정부와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공기와 바다 같은 공유지와 공유자원을 남용한다면, 모두에 중요한 공유지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009년에는 엘리너 오스

트롬(당시 76세)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녀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명성을 얻었다.¹⁾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이라는 공유재가 거의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동아시아인들은 비교적 훌륭하게 그 공유지를 관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평화롭고 대등한 관계였던 것은 아니지만, “2천여 년이나 이어온 한중관계의 역사는 정치적 동행과 문화적 공유의 긴 과정이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 한중관계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도 기본적으로 ‘정치적 동행과 문화적 공유의 긴 과정’이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의 특정 패턴은 중국이 주도한 화이(華夷)질서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중화제국 질서는 중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지배종속의 위계관계가 아니었고, 근대세계에 출현한 제국주의적 지배관계와는 더 거리가 먼 다원적·관용적 질서였다.”³⁾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협력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한중일공동역사편찬위원회가 지은 『미래를 여는 역사』도 그러한 흐름의 일단을 보여준다.⁴⁾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이후 동아시아 사회는 표면상 매우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해왔고, 특히 경제협력과 교류는 역사상 어떤 시기보다도 긴밀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
- 1) “오스트롬은 고전 경제학의 가설인 ‘공유지의 비극’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 실증과 게임이론 모델 등을 통해 증명했다.” 高在鶴(2009. 10. 14), “공유지의 비극”, 《한국일보》, 38면
 - 2)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2008), 『于湖 全海宗 先生 九旬紀念 韓中關係史 論叢: 韓中關係 2000년 -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5쪽
 - 3) 白永瑞 外 著(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創批, 12~13쪽
 - 4)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한겨레신문사

것이다. 장기적인 협력의 교류와 협력의 경험은 동아시아 협력과 평화 논리를 가다듬고 항구적인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데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평화체제는 유럽공동체라는 새로운 실험과 견주어보면 거리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19세기 후반 이래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의 현재 협력 수준을 평가할 때 '서구 제국주의'라는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 못지않게 동아시아 내부적 요인의 중요성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동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 지역 외부의 세력에 대응하고 역내의 세력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민족국가체제를 구축하였다. 근대국가체제를 구축하는 데 선두주자였던 일본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동양 평화'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 이래의 팽창·갈등 지향적인 논리를 구사해왔다.

동아시아 각국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경험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협력과 공생의 수사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협력과 공생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선동적이고 추상적이었다. 심지어 말과 행동이 상반되어 조지 오웰의 '1984년' 식의 언어, 즉 증오를 사랑이라고 하고 전쟁을 평화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야마무로 신이치는 “공식적 성명서만 본다면 근대 일본의 대외활동이 오로지 동양 내지 동아의 안정과 평화 확보를 과제로 삼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듯한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글자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했다.⁵⁾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사례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林焚澤(2009), 『문명의식과 실학-한국 지성사를 읽다』, 돌베개, 100쪽, 재인용

물론 전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갈등의 시대에 등장한 연대와 협력의 논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미래 기획에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열렬한 아시아 연대론의 주창자였던 아나키스트들의 혁명론과 아시아 연대론도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크로포트킨류의 호조론(互助論)의 영향을 받은 아나키스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동양평화론’과 다른 쑨원(孫文)의 혁명론과 국공합작론, 한국의 여운형(呂運亨)의 ‘동양평화론’⁶⁾ 등 생각보다 많은 협력과 평화의 이론적 유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의 경우도 양면성을 갖는 역사적 유산을 안고 있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계의 경우에도 민족주의 내지는 국가주의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특히 동아시아에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가 출현한 이후,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귀속감이 놀라울 정도로 강화되어,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해야 할 역사학자들조차 학문연구를 통해 자기가 소속된 국가나 민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⁷⁾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 전체 차원의 평화와 생태가 그러하듯이 변경지대도 일종의 공유지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동아시아 각국

6) “여운형이 주장했던 동양평화론을 살펴보면 필자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다. 그중의 하나는 강자에 대한 경고인데 세력이 강할수록 교만과 야욕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또 한편 동양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외의 주변국가들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껴진다. 즉 강대국 주변의 국가들이 지나치게 허약할 경우에는 저기압지대가 생기게 마련이고 풍파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무능한 통치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지만 무능한 통치자들은 세계평화를 해치기도 한다.”
李庭植(2008), 『呂運亨: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 서울대학교출판부, 262쪽

7)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2008), 앞의 책, 6쪽

8) 세계문화유산의 논리는 문화재의 소재지는 개별 국가에 있지만 그것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이중 소유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논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각기 '변경' 이론과 '공동이익'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국경선 길이가 특별히 긴 중국 학계가 더욱 정교한 이론체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중국 학계는 근대 민족 개념을 수용하여 천하국가에서 '근대 민족국가'로 이행하였는데, 대체로 중화민국 시기(1912~1949)에는 동화주의적인 '중화민족'론이 강세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지향하여 '민족 구역자치' 제도가 시행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56개 국정 민족을 포괄하는 '중화민족' 개념이 부쩍 강조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문분야에서도 '민족학'에서 '변강학'으로 강조점이 이행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변강연구'는 19세기 말엽, 1930년대,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 등의 시기에 특히 고조되었다. 이 시기는 대략 중국의 변경 위기가 고조된 시기와 맞물린다. 이때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지역과 청 제국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변경지역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전략적 변경지대에 속했던 조공국 내지는 번속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청 제국의 일부로서 한족문화와는 매우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나 청 제국에 포괄되었던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하에서는 시론적이고 개괄적인 것이지만,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동아시아 차원의 변경 개념과 개별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이익 변경' 개념을 음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물론 동아시아적 차원과 개별국가 차원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은 편의적인 것이다.

II. 현대 동아시아의 지역구조와 변경문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중국은 '동아시아의 병자' 취급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 독일 황제는 '황화론(黃禍論)'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이 얼마나 무력한 나라로 전락했는지 광저우에 주재하던 영국의 부영사는 중국을 "젓이 풍부하게 나오면서 살코기도 많은 큼직한 암소"에 비유하기도 했다.⁹⁾ '천하'에서 현대 민족국가로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일본 지식인들만큼 열의를 보이지는 않았다. 민국시대에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비추기도 했고,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은 1940년대 초반 국제회의에서 세계 거두들과 전후질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동아시아'와 관련한 논의가 꽤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양권(楊軍)·장나이하(張乃和)가 쓴 『선사에서 20세기말까지 동아시아』는 중국 학계에서 최초로 내놓은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개설서일 것이다.¹⁰⁾ 이 책이 중국 학계의 동아시아사 연구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 학계의 동아시아사 인식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 책의 필자들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광의의 동아시아 개념을 채택하여 15개 국가와 1개 지역을 동아시아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몽골,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아시아 부분의 러시아이다. 이

9) 김학준(2013), 『혁명가들: 마르크스에서 시진핑까지, 세계공산주의자들의 삶과 죽음』, (주)문화과지성사, 390쪽

10) 楊軍·張乃和(2006), 『東亞史』, 長春: 長春出版社

들 지역은 크게 중화문명의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들은 동아시아의 자연지세가 고원지대인 청장고원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부채꼴의 내환은 2급 대지 지역이고, 중환 지역은 3급 대지 지역이며, 외환 지역은 도서지역이다. 자연지리 구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역사지리적인 분석에서 효용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거대한 고원과 사막은 동아시아를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과 격리시켰다. 동아시아 지역은 자연지리 환경에 따라 7개의 대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황하유역, 장강유역, 몽골초원, 청장고원, 천산남북, 동북아, 동남아 등이 그것이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7개 지역의 국가와 연결된다. 문화적으로 핵심·외연의 이중환상구조다. 7개 대구역 가운데 황하유역과 장강유역, 동북아시아 세 구역은 동아시아 문화권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핵심지대이고, 다른 4개 지역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핵심지구와 다른 문화권의 접촉지대로 분류하였다.

필자들은 신석기시대에 형성된 '조각달형' 발달지대가 현재의 경제합작 중심지대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으로는 한반도 북부, 남으로 자바 그리고 중국 동부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는 '보름달' 지대는 농경지대로서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추 지역이었고, 현재도 인구 밀집지역으로 동아시아의 중추지역이다. 동아시아의 지역구조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겠고, 실효성 있는 지경학적인 대구역 구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필자들처럼 광의의 동아시아를 설정할 경우 그것이 역사적·현실적 실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각국은 상호히 소원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기술수준의 제약도 있고 또 일부 관계

를 빼고는 교류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7개의 대구역 상위에 자연지리적 차원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리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1만 8천 년 전 빙하기의 극성기에는 황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시기는 1만 2천 년 전에서 1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지리적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은 후기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름달'형 발달 지대도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 지리구조의 형성과 함께 출현했다. 신석기 시대에 여러 신석기 문화권이 병존하였고, 크게 유목지대와 농경지대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해역(海域)지대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는 지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유목요소와 농경요소, 해양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 역사의 큰 흐름과도 관계가 있다. 10세기 이전에 해양요소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양요소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여 원 제국시기를 거쳐 정화(鄭和)의 남해(南海) 원정이 있었던 시기 이후에는 유목요소의 역할이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해양요소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과장하자면, 동아시아의 고대는 유목요소와 농경요소의 길항과정이었다면, 근대는 농경요소와 해양요소의 길항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가설 수준도 안 되는 피상적인 개괄이기 때문에 유목권의 중심과 주변 등 지리구조를 설정하려면 실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리구조를 파악하고자 할 때, 거시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자연지리적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¹¹⁾ 양권은 국제

11) 자연지리적 측면은 국가지리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전근대시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는 잘 발달된 관료제를 갖추고 있었고, 국가의 중요성은 다른 문명권의 국가들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서부대개발을 통해 중국 서부의 각 성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하나의 경제무역구로 만들고, 동북의 오래된 공업기지를 진흥시켜 동북아에 또 다른 경제무역구를 세우며, 발달한 동남 연해지역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동남부 각 성과 동남아 각국에 제3의 경제무역구를 설치하여 광대한 중국 영토와 자원을 이용해 이 3개의 경제무역구를 연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상호작용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기한 바가 있다.¹²⁾ 양견의 구상은 동아시아에서 농경요소가 퇴조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편 『선사에서 20세기말까지 동아시아』의 필자들은 광의의 동아시아 역사의 시대구분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시 기	시작시점	종결시점	시작시점의 기준사건
1	초기 동아시아 세계	상고	전3세기 말	
2	지역구조 형성시기	기원전 3세기 말	8세기 말	흉노제국의 성립
3	다민족다국가 발전경쟁시기	8세기 말	13세기 말	안사의 난
4	조공체제시기	13세기 말	1870년대	원이 남송 멸망 중국 통일
5	조약체제시기	1874년	1945년	프랑스 베트남 장악, 일본 대만 점령
6	냉전시기	1945년	1992년	제2차세계대전 종결
7	냉전후시기	1992년		냉전종결

이 글에서는 냉전시기와 냉전후시기를 아우른 현대 동아시아 지역구조에

12) 徐秀麗(2009. 11),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론」,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I)』, 동아시아사연구포럼·동북아역사재단, 394쪽

주목하고 있다. 현대 동아시아 지역구조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중심지대와 변경지대의 설정이 달라진다. 7개의 대구역으로 현대 동아시아 지역구조를 파악할 경우, 현재의 '냉전후시기'의 활발한 경제관계와 문화교류의 시대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냉전시기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단층선에 따라 변경지대가 형성되었다.

『선사에서 20세기말까지 동아시아』의 지역구조 논의는 나름대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현재의 중심부와 변경 등 지역구조를 설명하는 데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일차적으로 냉전의 지정학이 이 시기의 변강 인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공동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원자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냉전시기에도 냉전의 어느 한 진영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들이 있었다.

1950년대에 중국에서 합작 개념은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강조되었다. 1950~1953년 사이에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대결하게 된 중국은 1950년대 말까지 소련 일변도 외교정책을 견지하였다. 당시에 저우언라이 총리는 외교부장을 겸임하면서 외교문제에서도 중책을 수행했다. 그는 이 직책을 사임하고 난 뒤에도 계속 외교를 챙겼다. 특히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아프리카·아시아 회의에서 아시아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제의했다. 이때 저우언라이가 제시한 '평화공존 5원칙'은 1954년 8월 1일 중국과 인도 정부가 티베트 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석상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1955년 저우언라이 총리는 상호 영토와 주권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원칙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로 가지고 갔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통과된 평화공존 10원

칙은 평화공존 5개 원칙에 대한 확장이었다. 평화공존 5개 원칙에 따라 중국은 변경문제를 해결해나갔다.¹³⁾ 이때 중국에서 ‘합작’이 아니라 ‘호혜평등’이 강조된 것은 평화공존이 목표였지 협력과 공동발전의 적극적인 단계로 교류를 진행하기 못하던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우언라이는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협력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이 유럽통합을 꿈꾸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자국의 안전과 평화에 만족하는 상황이었다. 백영서는 100년간의 동아시아 각국을 유혹을 받아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에 비유했다. ‘빨간 구두’는 바로 ‘강대국의 꿈’이다.¹⁴⁾ 부국강병은 거의 모든 나라의 욕망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기에 빨간 구두의 꿈을 이룬 나라는 전쟁 책임이 있는 일본이었고, 동아시아의 여타 나라들은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은 분단체제에 결박되어 있었지만,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다. 중국은 1970년대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냉전의 유산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지만,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수습하는데는 시간이 걸렸다. 아무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1960년대의 일본의 발전, 1970년대의 한국의 발전, 1980년대의 중국의 발전은 동아시아의 모습과 국제적 지위를 크게 변화시켰다. 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13) 楊軍·張乃和(2007), 『선사에서 20세기말까지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435쪽

14) 白永瑞(1999), 「世紀之交再思東亞」, 『讀書』 1999年 第8期, 3·6쪽

III.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등장과 변경지역 협력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동아시아에는 지정학적 접근 논리보다는 지정학적인 접근 논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냉전체제의 이완과 붕괴로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8월 수교 이후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1998)',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 5. 한·중 정상회담)'를 선언하였다. 이제 양국은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한·중 양국의 급속도의 관계 개선은 전쟁의 기억을 압도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에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는 없거나 빈약한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200만에 달하는 조선족의 존재였다. 조선족은 한·중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 동북지역 개방도의 제한으로 변연(邊緣)의 주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지위를 크게 하락시켰다. 경제발전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중심지와 주변부, 경계지역이 새롭게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주변부와 경계지역은 경제발전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불균등한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의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화문명은 현재 기존의 농경문명, 반(半)공업문명에서 현대공업문명과 정보문명으로 전방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중화민족은 최종적으로 백

년의 굴욕에 이별을 고하고 위대한 민족부흥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일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산업구조의 심각한 불균형, 경제와 사회 발전의 불균형, 경제와 문화의 불균형 등과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금융 위기, 농업위기, 에너지위기, 자원 특히 수자원위기, 생태환경위기 등의 도전을 말한다. 경제발전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면서, 물욕과 사리사욕이 무한하게 팽창하고 의리와 정의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¹⁵⁾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발전을 바라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제2차세계 대전 이후의 경제발전은 서구사회에 30년 호황을 가져왔다. 이것을 흔히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의 용어에 따라 ‘풍요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서구지역 사람들은 풍요의 시대에 들어서기도 전에 공업화의 부작용을 선진공업국보다 더욱 거세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불균등성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은 동아시아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떤 논자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¹⁶⁾ 동아시아에는 20세기에 거센 민족주의 바람이 불었고, 그런 상황은 현재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제시되어 유럽

15) 姜義華(2009, 11), 「60년래 상이한 역사 관점 하의 중국과 동아시아 세계」, 앞의 『국제학술회의 자료집(I):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I)』, 동아시아사연구포럼·동북아역사재단, 101쪽

16) 공동체 구축에는 ‘지리적 장벽’, ‘역사적 장벽’, ‘정체성 장벽’이라는 3대 장벽이 있으나 현재는 이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하고 있다[進藤榮一·平川均編(2006), 『東アジア共同體を設計する』,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과 유사한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수상도 '동아시아 공동체'를 역설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 격제지감을 느낄 정도로 중일관계가 악화되어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자체가 실종된 지경이다. 이것은 역사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경쟁과 갈등이 역사문제의 행태로 표출된다는 측면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의 가해자였던 독일이 과거와 철저한 단절을 도모했던 것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죄와 화해 노력에도 동아시아 여러 지역 사람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또 한국 사회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역설하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그것은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인들의 고민을 보여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에서는 동아시아론보다는 중화문명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과 공업화에 착수하면서 중국 정부와 학계는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동반 추진을 강조하였다. 1989년 6·3 천안문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발전의 부작용이 크게 드러났을 때,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이 함께 강조되었고, 나중에는 또 거기에 생태문명과 정보문명 등이 보충되었다.

중국 사회에서의 '중화문명론' 강조는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 나온 후에 더욱 강조되었으나,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경제발전의 놀라운 성공과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내부적인 요인을 더 고려한 논리라는 지적도 있다. 위에서 장나이허는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금융위기, 농업위기, 에너지위기, 수자원위기, 생태환경위기"를 지적했다. 냉전후시대에는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차원, 세계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대부

분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다양성 보존', '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의 개념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여전히 미흡하더라도 그런 개념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협력이 있든 없든 '협력'의 목표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東亞經濟合作]', '동아시아 지역협력[東亞區域合作]', '동아시아화폐협력[東亞貨幣合作]' 등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담론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협력'의 논리는 동아시아 차원이 아닌 동아시아 대구역 차원에서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경우, 변계지역의 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계통 혹은 국가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중국과 조선 변계지역은 용현(湧現) 효과를 극대화하여 '승승[雙贏]'의 국면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¹⁷⁾ 두만강 지역 개발 항목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중국 학자들이 제기하였고, 한때 활발히 논의되었다. 2005년 9월 '두만강 지역 개발[圖們江地區開發]'을 '두만강 지역 협력[圖們江地區合作]'으로 바꿨다.¹⁸⁾ 그것은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문제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협력[合作]' 개념의 등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변경지역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이 국제협력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경협력은 거시적 지정학 전략의 문제와는 다소 어감의 차이가 있다.¹⁹⁾ '승승'

-
- 17) 金強一(2009), 「邊界地區的國際合作和邊緣文化區域的戰略價值—以中朝邊界地區對東北亞國際合作的意義為特例」, 『“國際化時代的邊境, 跨境民族及東亞合作”國際學術會議論文集』, 延邊大學東北亞研究院·韓國東北亞歷史財團, 37·44쪽
- 18) 李鐘林(2009), 「新一輪圖們江地區開發戰略研究」, 『“國際化時代的邊境, 跨境民族及東亞合作”國際學術會議論文集』, 延邊大學東北亞研究院·韓國東北亞歷史財團, 213쪽
- 19) sinergism은 system과 energy의 복합어로 독립적인 각 구성단위가 갖는 효과의 합

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때 국제협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중국 언론에 ‘승승’과 같은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승승(win-win, 雙贏)’의 출처가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의 자기계발서라고 생각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 한국에서는 1995년 인기서적 중의 하나였고 그 후로도 꾸준히 독자의 인기를 끌었다.²⁰⁾ 이 책은 ‘승승’적 사고와 상호의존[互賴] 같은 용어를 부각시켰다. 이 시기에는 ‘무한경쟁’과 같은 용어도 많이 사용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승승’과 같은 신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1990년대에 동아시아 차원이나 세계적 차원에서도 일방적인 이익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협력’ 개념의 부상은 ‘이익변강론’과 같은 ‘변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등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지리변강을 이익변강 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기도 하였다.²¹⁾ 양청[楊成]은 이익변강의 개념을 횡적으로 핵심 이익변강·경제 이익변강·가치 이익변강으로 나누고, 종적으로 핵심 이익변강·중요 이익변강·변연(邊緣) 이익변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²²⁾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변강 연구 열풍에서 변강 개념도 확장되고

보다도 전체 효과를 크게 하는 구성단위들의 협동적 행동을 말한다.

20) 이 책은 1990년 8월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1994년 4월에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중국의 최근 번역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史蒂芬·柯維 著, 王亦兵等 譯(2008), 『高效能人士的七个習慣』, 中國青年出版社. 다른 번역본의 제목으로는 『高效人羣的七種習慣』도 있다.

21) 于沛(2005), 「從地理邊疆到“利益邊疆”－冷戰結束以來西方邊疆理論的演變」, 『中國邊疆史地研究』 15-2, 32쪽

22) 楊成(2003), 「利益邊疆－國家主權的發展內含」, 『現代國際關係』 제11기, 19~21쪽

있는데 세계화 시대는 '다변강 시대'라는²³⁾ 규정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영토변강과 함께 이익변강과 전략변강 개념도 강조되었고, 영토가 전통적인 유형의 지리적 강역에서 무형의 '정보강역'으로 확장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조화외교'에 이어 '중국의 꿈'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의 귀결이 중국의 급부상에 힘입은 대국적 힘의 투사에 가깝다고 한다면, 동아시아 각국의 갈등과 반목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현재 중국의 '변강' 개념의 핵심에는 영토변강과 함께 '이익변강'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호 간의 '승승' 협력 개념의 존재, 황사문제 등 다국 간 협력사례의 증대 등에 힘입어 '이익변강'은 공동이익변강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변강 개념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하는 개념의 향배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사항일 것이다.²⁴⁾

IV. 맺음말

동아시아는 국가 간의 불균등과 민족주의 강세 등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나 국제협력이 유럽보다 미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평화라든가 공기등과 같은 생태자원은 일종의 국제사회의 '공유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침략을 추진하면서도 말만 좋은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운 일본 군국주의의 사례

23) 馬大正·劉瀟 지음, 조세현 옮김(2007), 「서론」,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4) 중국학계의 최근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일부 참고할 수 있다. 「專家研究探討構建新邊疆觀」 http://news.gmw.cn/2013-12/content_9783865.htm (검색일: 2013. 12. 14)

와는 달리, 현재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책임 있는 주권국가들로 보인다.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와 현실을 보는 눈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절대화하는 ‘근본주의적 인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인 간의 관계든 국가 간의 관계든 부정적인 측면을 들춰내자면 한도 끝도 없다. 거기에는 일본 군국주의 문제 등에 대한 독일식 해법에 준하는 해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국경을 넘는 심각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존재하고 또한 동아시아의 한 구역 차원에서도 ‘협력’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경우도 그러한 점을 보여준다. 이런 협력의 노력과 경험은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도 장나이하가 말한 ‘의리와 정의’가 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같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추진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현재 국제학계에 제시된 ‘이익변강’ 개념은 중국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된 바가 있다. 이것은 ‘승승’ 협력 개념이나 유럽공동체와 같은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과 결합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 권역의 ‘초국경 협력’의 증대와 발전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국경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으로 가는 디딤돌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중국의 변강이론 동향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2009년 11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 참고문헌

- 김학준(2013), 『혁명가들: 마르크스에서 시진핑까지, 세계공산주의자들의 삶과 죽음』, (주)문학과지성사
- 백영서 외 저(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創批
-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2008), 『于湖 全海宗 先生 九旬紀念 韓中關係史 論叢: 韓中關係 2000년-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 이정식(2008), 『呂運亨: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영택(2009), 『문명의식과 실학-한국 지성사를 읽다』, 돌베개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한겨레신문사
- 楊軍·張乃和(2007), 『선사에서 20세기말까지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 楊軍·張乃和(2006), 『東亞史』, 長春: 長春出版社
- 進藤榮一·平川均 編(2006), 『東アジア共同體を設計する』,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史蒂芬·柯維 著, 王亦兵 等 譯(2008), 『高效能人士的七个習慣』, 中國青年出版社
- 徐秀麗(2009. 11),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론」,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I)』, 동아시아사연구포럼·동북아역사재단
- 金強一(2009), 「邊界地區的國際合作和邊緣文化區域的戰略價值-以中朝邊界地區對東北亞國際合作的意義爲特例」, 『“國際化時代的邊境, 跨境民族及東亞合作”國際學術會議論文集』, 延邊大學東北亞研究院·韓國東北亞歷史財團
- 馬大正·劉遜 지음, 조세현 옮김(2007), 「서론」,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白永瑞(1999), 「世紀之交再思東亞」, 『讀書』 1999年 第8期
- 于沛(2005), 「從地理邊疆到“利益邊疆”-冷戰結束以來西方邊疆理論的演變」, 『中國邊疆史地研究』 15-2



동북아시아 공동체론과 변경, 그리고 과경민족의 역할

도쿄대학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동북아 공동체론의 흐름
- II.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등장
- III. 동북아시아 평화와 6자회담
- IV.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충돌
- V. 동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동시 추구
- VI. 동북아시아의 복잡성과 다양성
- VII. '공동의 집'을 이끄는 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서양사학 전공, 도쿄대학 명예교수

대표논저로는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1992, 창작과비평사),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2002, 돌베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2004, 일조각) 등이 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론과 변경, 그리고 과경민족의 역할

도쿄대학 와다 하루키

I. 동북아 공동체론의 흐름

동북아 지역협력이 제기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였다. 그 계기를 살펴보면 하나는 한국이 1987년에 민주화를 실현했다는 것, 또 하나는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했다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 ‘환동해(원문은 환일본해)’ 경제협력의 조짐이 나타난 것과 거의 동시에 중국 길림성 길림대학에서 동북아연구중심이 설립되었다. 1990년에는 니가타(新潟) 시가 ‘북동아시아 지역경제권의 형성’ 연구를 목표로 북동아 경제회의를 설치했다. ‘환동해’라는 보편성이 없는 용어를 빠르게 정착시킨 후, 그 대체 개념으로 일본의 자치체 관계자는 북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을 도입하여 자국 나름의 개념으로 만들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동북아(東北亞)’라 표기하고 있음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북동아시아(北東アジア)’라는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여왔다.

이는 1958년부터 일본 외무성의 북동아시아과에서 쓰던 호칭을 따른 것으

로 생각된다. 일본에는 ‘동남아시아’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 외무성은 동남아시아과를 설립하였다. 두 과의 명칭은 영어 ‘Northeast Asia’와 ‘Southeast Asia’를 직역한 것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북동아시아’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1990년 7월 《동아일보》가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되었을 때 ‘동북아시아 인류 공생의 집’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인은 일찍이 ‘동아협동체’ 혹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비참한 패배·패전을 계기로 다시 태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이 지역주의적 제안을 할 때, 과거의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과는 완전히 결별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고르바초프와 같이 ‘공생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 당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동북아시아의 소련 극동지역, 중국, 남북한, 일본, 미국을 새롭게 이어가는데는 더욱 다양한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고 인류가 공생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간다면 전 세계도 이처럼 되어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시아가 지향하는 것은 인류의 공생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남북한의 접근과 융합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에만 전력을 기울여왔다. 지금은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인류 공생의 집 구축사업에 일본이 할 수 있는 공헌을 해나갈 시기라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일원은 미국과 소련을 넣어 6개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환동해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권’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넣지 않고 몽골을 넣는 것과 엇갈림이 있다. 북한의 백과사전에서는 ‘동북아시아’라는 것은 ‘우리나라’, 중국 동북, 러시아 연해주, 일본 등 4국 5방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안보와 평화를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미국을 당연히 동북아시아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몽골을 넣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부터 이 ‘공생의 집’의 중심은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한국이 중심적 엔진이 되기를 기대했다.

자치체 연합의 움직임은 1993년에 니가타 시 등 8개 현이 참가하여 ‘환동해(원문은 환일본해)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Northeast Asia: ERINA)를 설립하는 데서 나타났다. 그리고 1996년이 되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의 29개 자치체가 동북아시아 자치체 연합, 동북아시아 자치체 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을 발족했다.

필자는 그간 1995년 서울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한반도’ (1995, 『창작과 비평』 87호)를 제목으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때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 지역의 각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가 ‘공동의 집’ 구축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1996년 도호쿠대학에 동북아시아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는데 필자는 2001년부터 객원교수로 초빙되었다.

II.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등장

이렇게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제기되고 자치체 차원의 행동이 시작되었을 때, 또 하나의 공동체 구상이 이 지역에 나타났다. 바로 동아시아 공동체

(East Asian Community)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이고 런던대학 명예교수인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가 1995년에 '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하고 1997년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했다. 또한 2001년에는 『일본이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한다』라는 저서를 발표해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대만을 구성원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현실의 움직임은 학자들의 상상력을 초월했다. 1997년 동남아국가 연합은 한·중·일 삼국 정상에게 요청하여 아세안+3 정상회의를 발족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제2차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교류 목적으로 민간인사로 구성된 포럼(동아시아 경제협력 비전 그룹)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구체화되어 1999년에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 가동되었다. 이 그룹은 2001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회 아세안+3 정상회의에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지역의 평화, 번영, 진보의 지역(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두를 시작한다.

우리 동아시아 시민(the people of East Asia)은 지역 내의 모든 국민의 전면적인 발전에 기초한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희망한다.

꿈처럼 보였던 이 제안이 동남아시아 정상들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졌고 그리하여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역목표로 부상했다.

III. 동북아시아 평화와 6자회담

그러나 동시에 북핵문제가 동북아 평화문제의 초점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현실적인 정치적 과제로 떠올랐다.

2002년 9월 17일 북일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의 제4항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확인한다. 양국은 이 지역 관계국 간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계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역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을 정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여기에서 명확한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구상의 실마리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6자협약에 의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동의를 얻었다. 6자협약은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협의다.

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의 ‘번영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라는 목표를 새 정부의 정책구상의 첫 번째로 제기했다.

우리 앞에 동북아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던 동북아시아가 지금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 요인으로 부상했다. ……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과거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리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21세기는 동북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동북아 시대는 경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번영의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는 것이 나의 오랜 꿈이다. 이로써 동북아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날이 오게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위의 연설은 북한과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이전의 목표로서 동북아 공동체의 창설이라는 구상을 제기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중심은 한반도이며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내에 동북아시아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길을 모색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출발로 하여 같은 해 8월에 한·미·북·중·러·일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제2차, 같은 해 6월에 제3차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그럴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 무기한 참가중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핵무기 보유까지 선언했다. 여기에 이른 것이 관계국들이 신중한 대응을 보인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해 7월 26일에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는 협의가 진전을 가져왔고, 9월 19일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고, 미국은 핵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확인하였으며 북미 간의 평화공존과 국교정상화 조치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북일 양국은 과거문제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국교정상화 조치를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6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

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결의안이 발표된 직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되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6자회담 재개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결의안의 의의는 없어지지 않았다.

IV.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충돌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나타났다. 2004년 5월 일본은 국내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협의회(CEAC)를 구성하였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수상이 회장을, 이토 겐이치 일본 국제포럼 이사장이 의장을 맡았고 외무성도 적극 참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2005년 1월 20일 정기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경제번영을 공유하는 개방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다음 날 각 신문은 그의 연설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일어나 일본을 뒤흔들었다. 결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방중이 무산되었다. 중국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하는 아세안 각국은 여기에 미국을 포함시킬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은 그럴 생각이 확실히 없었다. 이에 당연히 미국은 2005년 봄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일본에서는 3월 27일 《요미우리신문》에 JR도카이 회장 가사이 요시유키(葛西敬之)가 「공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글을 발표하여, “중국의 목적이 미국을 배제한 공동체 구상에 일본을 끌어들이어 양호한 미일관계에 쐐기를 박는 것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동아시아 공동체협의회 논의에서도 미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밖에서의 반발이 강하여 이 조직도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시아 공동체협의회는 2005년 봄에 정책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도쿄대학 교수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가 기초한 정책문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현상, 배경과 일본의 국가 전략」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어려웠다. 겨우 미국을 넣지 않는 형태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내용으로 정리된 문서는 8월이 되어 나카소네 야스히로 회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의장 이하 56명이 서명해 발표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가 이 발표도 신문에서는 거의 기사화하지 않았다.

격돌은 2005년 12월에 일어났다. 먼저 쿠알라룸푸르에서 12월 12일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 번영 및 진보의 유지에 공헌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장기적 목표로 실현해가는 공동의 결의를 재차 표명하고, 아세안+3 프로세스는 계속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아세안이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선언을 채택했다.

이어서 12월 14일, 아세안 각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최초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이 지역에서의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한다”는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성원을 아세안 플러스 중국·일본·한국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의 생각과 인도·호주·뉴질랜드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장래에는 미국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충돌했다.

이 총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후 움직임은 정체되었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다츠오[福田達夫], 아소 다로[麻生太郎]로 이어지는 단명 내각이 계속되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퇴임했다. 6자협회는 2007년 2월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지만 2008년에 정체상태에 빠지고, 2009년에는 북한이 6자협회의 탈퇴를 표명하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위기가 발생했다.

V. 동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동시 추구

2009년 일본에서 정권교체라는 작은 혁명이 실현되었다. 과거 반세기 이상 계속된 자민당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의 하토야마[鳩山] 정권이 탄생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와의 제휴를 강화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동아시아 공동체론에는 새로운 뉘앙스가 더해졌다. 미국은 확실히 신경질적이 되었다. 11월 15일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의 일원'이라고 선언했지만, 이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내쫓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제안도 지금까지가 쌓아올린 논의를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닌 다분히 즉흥적인 발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라는 세 개의 지역개념의 구조화다. 아세안은 이미 스스로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선

언했다. 2003년 10월 발리 섬에서 열린 제9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제2의 아세안 협약(ASEAN Concord)을 채택했다. 그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안전 보장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라는 세 영역에서의 노력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서약이었다. 아세안 각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전제로 하여 우선 아세안 자체를 공동체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동아시아 공동체로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세안 공동체는 호주·뉴질랜드와의 관계를 구축해 동남아시아 공동체로 확대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도 6자협의를 기초로 지역안보협력기구 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6자협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정상화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다른 분야, 예를 들어 환경보호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러시아의 원유·천연가스의 공동체로도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부흥이라는 문제도 있는 이상 경제협력도 불가결하다.

동남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 병존하면 다른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 위에 덮어씌우는 것이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공동체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원을 합친 것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상에 따라서 결정해도 상관없다. 이와 같이 중층적으로 접근하며 각각의 공동체를 개방적인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VI. 동북아시아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비교해서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먼저, 미국, 중국, 러시아는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삼국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로 이 지역은 매우 개방적인 지역이 된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이곳엔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에서 자유로운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류의 화해를 향해서 제언을 해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이 지역은 전쟁과 지배의 역사 때문에 원한이 가득하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청일전쟁~1945년까지 50년간의 일본사는 전쟁의 50년이였다. 그리고 그다음 1945년부터 국공내전이 시작되어 한국전쟁, 인도차이나전쟁, 베트남전쟁이 계속되었다. 냉전은 없었다. 인도차이나전쟁, 베트남전쟁은 지역 밖이지만, 한국군이 출병했고 미군은 오키나와로부터 출격했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지역과 관계가 깊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2차세계대전 후 1975년까지 30년간 이 지역에서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따라서 원한이 이렇게 깊은 곳도 없다. 네 번째, 이곳은 혁명과 체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으로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의 결과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지금에 와서 소련은 사회주의를 포기해버렸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관리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되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사수를 외치고 있다. 다섯 번째, 이곳에는 3개의 핵 대국이 있다. 핵병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폭을 당한 두 민족이 있다. 일본 민족과 한국 민족이다. 게다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 여섯 번째,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남북한 두 개의 분단국가가 이 지역에 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영토문제가 있다. 모두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다.

어쨌든 문제투성이, 대립투성이, 원한투성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상황을 역전해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협력체가 생긴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동일한 문화를 기초로 하는 유럽연합이 특수한 것으로, 이쪽은 오히려 보편성이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다양하고 대립적이므로 공동의 집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인류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VII. ‘공동의 집’을 이끄는 힘

공동의 집을 이끈다는 것은 대단한 프로세스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공동의 의지를 가다듬고 대화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 호령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경을 넘는 노력을 행하는 것이므로 국경을 넘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각국에 이주해 있는 한민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민족은 불행한 역사의 결과 디아스포라가 되어 이 지역 각국에 퍼져 있다. 미국에 200만여 명 정도, 중국에는 약 190만 명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 100만여 명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에는 약 50만 명 정도다. 중앙아시아에도 많이 있다. 이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동남아시아는 화교의 세계여서 화교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화교에 해당하는 것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한교(韓橋)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조정해가는 화해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과 사명을 한민족에게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38도선에는 조선인민군이 7개 사단 있었지만, 그중에서 3개 사단 9개 연대가 중국에서 온 중국 조선족 부대였다. 그리고 제1연대가 제4사단에 들어갔다. 따라서 전선에 있던 21개 연대 중 중국 조선족 부대가 10개 연대였던 것이다. 즉, 반은 중국 조선족의 부대였다는 것이 된다. 한국전쟁은 중국 조선족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남한을 공격해 무력통일을 실현하려고 한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역사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중국 조선족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원한을 푸는 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 조선족은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한다. 동북아시아인이라고 하면 세 개의 언어를 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 조선족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해 말하고 싶다. 100만 명 정도가 한국 국적, 조선 국적, 일본 국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떤 의미로 매우 괴로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많은 중국 조선족이 조선 북부 출신자이며, 재일한국인·조선인은 조선 남부 출신자들이다. 따라서 조상의 무덤은 전부 한국에 있고, 오래된 친척도 전부 한국에 있다. 이들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지배자였던 나라라는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아직껏 민족차별적이고, 국적을 부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본이 아이들의 고향이 되어간다. 고향과 자신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가족의 일부가 1950년대에 북한에 갔다.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물자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화해와 통일에 대한 가장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재일한국·조선인, 특히 재일조선인이라고 생각한다.

재일한국인에서 최근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은 '강상중 현상'이다. 구마모토현 출신의 재일 2세로 정치사상을 전공하고 도쿄대학 교수가 된 강상중은 논단을 넘어 일종의 종합적인 슈퍼스타가 되었다. 일본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들어가 제안한 것이 그였다. 『북일관계의 극복-왜 국교정상화 교섭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책도 그의 데뷔작이었다. 그가 재일한국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그런 그가 일본은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건너온 뉴커머(new comer)라 할 수 있는 이종원 교수는 북한 관련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적 수준을 유지하며 미디어계에서도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강씨와 이씨는 일본에서 과경민족의 지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좋은 실례이다.

대중적 측면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프로 야구선수 중에 왕정치, 가네다 마사이치[金田正一], 장훈 등 위대한 선수들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도 실명으로 활약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프로 축구계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 중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선수가 있는 한편 재일 한국인 선수들도 실명으로 활약하고 있다. 북한 국가대표 축구팀의 핵심적 선수이자 한때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테일의 에이스 스트라이커였던 정대세 같은 선수도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인의 단일민족적 사고가 더 이상 계속 이어지기 어려워지게 된 것에는 이들 선수의 공헌이 적지 않았다.

한민족의 이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 탈북자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도망하여 그 후 제3국으로 건너가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국에 적응하는 이들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이 시대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인에게는 악몽과 같은 납치사건 피해자 문제가 있다. 중학생 때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는 한국에서 납치된 김영남과 평양에서 결혼하여 운경을 낳았다. 메구미가 사망했다는 북한 정부의 발표로 운경도 김영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메구미의 부모는 북한의 사망통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운경은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후 일하고 있다. 그녀는 북한의 충실한 애국소녀로 살고 있다. 그녀는 일본과 북한을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납북자 중 5명의 생존자가 귀국했고 그들의 아들딸들도 일본에 왔다. 납치되었던 연지훈은 북한에서 배운 언어로 현재 한국의 소설 번역 등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납치자 아들딸들의 친구들은 북한에 있고 소년소녀 시대의 기억들 전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의 기억이다. 그들도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을 이을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눈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갈라놓은 인생을 되찾는 길은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왕래, 교류,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화해를 위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명확한 반성사죄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09년 11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 참고문헌

- 강상중(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姜尙中(2007), 『朝日關係の克服』, 東京: 集英社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원덕 옮김(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와다 하루키(和田春樹)(1995),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한반도」, 『창작과비평』 87호
East Asia Vision Group(2001·2002),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IRI리뷰』,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
계연구원, 6권 1호(2001년 겨울/2002년 봄호)
葛西敬之(2005. 3. 27), “東アジア共同體”, 《讀書新聞》





동북아 경제·물류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연변 지역

역사적 고찰과 현재적 의미

연변대학 김석주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중·북·러 접경지역의 고대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
- III. 발해 시기 교통로와 동북아 중심지의 중요성
- IV. 발해 시기 일본도의 현대적 의미
- V. 청조 시기 군사요충지와 무역중심지로서의 연변 지역
- VI. 민국·만주국 시기 무역중심지로서의 연변
- VII. 연변 지역의 물류거점 가능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석주(金石柱)

지리학 전공, 연변대학 교수

대표논저로는 『중국산업지리』(공저, 2007, 한국 백산출판사), 『연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공저, 2003, 연변대학출판사) 등이 있다.

동북아 경제 · 물류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연변 지역

역사적 고찰과 현재적 의미

연변대학 김석주

I. 머리말

근대에 들어서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전쟁과 긴장의 기운이 한시도 떠나지 않던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최근에 와서 경제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동북아 지역에서 동해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표와 맞물려 그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한 중국의 동북지역, 특히 중·북·러 접경지역과 한반도가 경제와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최근에 와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당

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의 노후공업기지를 지지하고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지역 후속산업의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5일에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국무원의 동북지구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전략 실시에 관한 몇 가지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中發[2003]11號)을 발표하여 동북노후공업기지지흥책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창지투개발개방책: 2009년 8월 30일 중국 국무원에서 ‘중국 두만강 구역 합작개발 기획 강요-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為開發開放先導區)’를 승인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전망계획요강’ 원문이 발표됨에 따라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그리하여 두만강 지역은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요령성 발해연안 개발대: 2009년 7월 1일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는 ‘랴오닝 연해경제대 발전계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을 통과시킴으로써 요녕성의 연해경제개발개방은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승격되었다.

흑룡강성 중러 접경지역 개발: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양국의 협작을 위하여 ‘중국인민공화국 동북지구와 러시아연방 원동 및 동서 시베리아 지구 합작 기획 강요(中華人民共和國東北地區與俄羅斯聯邦遠東及東西伯利亞地區合作規劃綱要(2009-2018年))’를 체결했다.

두만강 구역 국제합작시범구(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範區): 2012년 4월 13일 국무원에서는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연변(沿邊) 지역의 개발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두만강 구역(琿春) 국제합작 시범구 건설 지원에 관한 몇가지 의견(關於支持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範區建設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으며, 길림성 훈춘시에 ‘중국 두만강 구역 국제합작 시범구(中

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範區)’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중대한 정책은 동북지역이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진흥을 위해서는 동해로 통하는 물류통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필연적으로 동북아 중심지인 중·북·러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시각에서 이 지역의 대외교류의 과정을 살펴보고 동북지역과 중·북·러 접경지역인 연변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북·러 접경지역의 고대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

중·북·러 접경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중국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백산말갈(白山靺鞨), 속말말갈(粟末靺鞨), 고려(高麗), 한(漢), 거란(契丹), 해(奚), 부여(夫餘), 옥저(沃沮), 예맥(濊貊) 등 여러 민족¹⁾의 삶이 영위되어 온 지역으로서 예로부터 여타 지역과 밀접한 교류를 하였다.

1963년 길림성 안도현 명월진 동쪽으로 2.5km 떨어진 석문산(石門山)에서 ‘안도인’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감정결과 석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굴포리에서 발견된 ‘굴포리인’들이 사용한 석기와 유사하였다.²⁾

1) 魏國忠·朱國忱·郝慶雲(2006),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18~219쪽
2) 鄭永振·嚴長棻(2000), 『延邊古代簡史』, 延邊大學出版社

이로부터 석기시대부터 양 지역의 고인류는 서로 교류하였다고 추적할 수 있다.

숙신인들이 생활하던 시기에는 중국의 중원과 고구려가 교류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죽서기년(竹書紀年)>에는 “주무왕(周武王) 15년에 숙신에서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³⁾ 『삼국사기』에는 “사신이 와서 자주색 여우가죽 옷과 흰 매, 흰 말을 바쳤다. 왕이 잔치를 열어 그를 위로해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⁴⁾

이 지역에서 숙신 다음으로 등장하는 민족은 옥저다. 옥저는 함경북도 북부에서 두만강유역 일대에 걸쳐 있었던 고대 종족과 읍락집단이다. 이 지역은 전후로 고조선, 한, 후한,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 우월한 자연조건으로 오곡이 생산되고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조건⁵⁾으로 말미암아 상기 지배국들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에는 “동옥저의 사신이 와서 좋은 말 20필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⁶⁾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태조왕(太祖王) 4년 추(秋) 7월 동옥저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국경을 넓혀 동쪽으로는 창해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살수까지 이르렀다”⁷⁾고 기록되어 기원 40년에 이 지역이 고구려에 복속

3) “(周武王)十五年, 肅慎來貢”, 『竹書紀年』 卷9, 周紀一

4) “肅慎使來獻紫狐裘及白鷹白馬王宴勞以遣之”, 『三國史記』 卷第十五 高句麗本紀 第三

5) 『三國志』 卷030, 『魏書』 30 東夷傳 第030에는 “其土地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동옥저의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五穀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이라는 기록이 있다.

6) “五十三年 東沃沮使者來獻良馬二十”,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7)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拓境東至滄海 南至薩水”, 『三國史記』 卷第十五 高句麗本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영토를 급속히 확장하여 최전성기에는 현재 중국 동북의 대부분 지역과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포함하였다. 고구려는 건립된 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과 마찰을 빚었으나 교류도 매우 빈번하였다. 그중 중원과 일본의 교류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후한서(後漢書)』에는 동한(東漢) 시기인 “건무(建武) 8년(A.D. 32; 고구려 대무신왕 15년)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므로, 광무제가 그 왕호를 회복해 주었다”고 하였다.⁸⁾

『송서(宋書)』에는 남북조 시기인 “소제(少帝) 경평(景平) 2년(A.D. 424; 高句麗 長壽王 12)에 연(高璉)이 장사(長史) 마루(馬婁) 등을 송(宋)의 왕궁으로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기원 432년경 북위(北魏)가 북연(北燕)을 멸한 후 고구려가 북연의 국주(國主) 풍홍(馮弘)의 망명을 받아들이면서 북위와 고구려의 관계는 긴장상태에 있었다. 2년 후, 풍홍이 살해되면서 북위와 고구려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북위가 멸망(기원 557년)할 때까지 양측은 선린관계를 유지하였다.¹⁰⁾

『구당서(舊唐書)(1)』에는 “무덕(武德) 2년(A.D. 619; 高句麗 榮留王 2)에 사신을 보내와 조근(朝覲)하였다. 무덕 4년(A.D. 621; 高句麗 榮留王 4)에 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이상의 사실에서 고구려는 중원의 여러 왕조와

第三

- 8) “建武八年(32), 高句驪遣使朝貢, 光武復其王號”, 『後漢書』卷085 東夷列傳 第075
- 9) “少帝 景平二年(424), 璉遣長史馬婁等詣闕獻方物, 遣使慰勞之”, 『宋書』卷097 夷蠻列傳 第057
- 10) 李凭(2002), 「魏燕戰爭前後北魏與高句麗的交往」,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1(6)
- 11) “武德二年(619), 遣使來朝. 四年, 又遣使朝貢”, 『舊唐書』卷199 東夷列傳 第149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일본과도 교류가 있었다. 일찍이 『일본서기』에는 “540년 8월 고구려·백제·신라·임나(任那)가 함께 사신을 보내고, 아울러 공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또한 “630년 3월 병인(丙寅) 초하루 고구려의 대사(大使) 연자발(宴子拔), 소사(小使) 약덕(若德)과 백제의 대사 은솔소자(恩率素子), 소사 덕술 무덕(德率武德)이 함께 조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2012년 10월 17일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의 기도라고분에서 600여 개의 별과 34종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별자리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일본 학계에서는 이것이 평양 하늘의 별자리와 일치한 것으로서 일본이 고구려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¹⁴⁾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일본과 일정한 교류가 있었지만 그다지 밀접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일본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응신천황(應神天皇) 7년(276)부터 고구려가 멸망한 천지천황(天智天皇) 8년(668)까지의 400여 년 간 일본은 고구려에 4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고구려는 일본에 20여차 사신을 파견하여 평균 20년에 한차례 교류하였다. 심지어 368~515년 사이의 140여 년간 고구려는 일본에 한 차례도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¹⁵⁾ 이로써 양측은 교류가 그다지 밀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여러 역사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동북지역이 오랜 역사시기를 걸쳐 주변 여러 지역들과 꾸준한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540年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竝遣使獻 竝脩貢職”, 『日本書紀』卷19 天國排開廣庭天皇 欽明天皇

13) “630年 3月丙寅朔 高麗大使宴子拔·小使若德 百濟大使恩率素子·小使德率武德 共朝貢”, 『日本書紀』卷23 息長足日廣額天皇 舒明天皇

14) 조선중앙통신, 2012. 10. 17, “고구려 사람들이 일본에 남긴 별자리 그림”

15) 朱旻暎(1995), 「高句麗與日本的交往」, 『社會科學戰線』第5期

III. 발해 시기 교통로와 동북아 중심지의 중요성

고구려 이후의 발해 또한 동북지역을 중요한 무대로 하는 경제와 문화가 번창한 국가의 하나로서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발해는 기원 698년에서 926년까지의 존속기간 내내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진행하여 경제와 문화의 번영을 이루었다. 발해 시기의 빈번한 교류를 증명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곧 주변과 통하는 여러 통로이다. 즉, 조공도, 거란도, 신라도, 영주도, 일본도, 말갈도 등이다.

1. 조공도(朝貢道)

압록조공도(鴨綠朝貢道)라고도 부른다. 이 교통로는 발해에서 당나라 장안으로 통하는 수륙 교통도이다. 육로부분은 상경에서 출발하여 중경(中京)을 걸쳐 서경(西京)인 임강(臨江)에 이른 다음 압록강 수로를 따라 바다에 이른다. 그다음 바다를 건너 산둥반도의 등주(登州)에 이르고 나서 다시 육로를 걸쳐 장안에 이른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229년의 존속기간 동안 당나라에 사신을 110여차 파견하였고 당나라는 발해에 사신을 19차 파견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계는 주로 조공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조공도의 주요한 경유지는 다음과 같다.

등주(현재의 산둥성 蓬萊市), 압록강어구(현재 평안북도 용천군 용암포읍), 박작구(白灼口, 요령성 단둥시 寬甸縣 虎山鄉), 환도성(丸都城, 길림성 集安市), 신주(神州, 길림성 臨江市), 현주(顯州, 길림성 화룡시 頭道鎮), 상경(上京, 흑룡강성 영안현 발해진).

조공도는 발해와 당나라 사이의 교류에서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서쪽의 인도와 서역 각 국가들, 동쪽의 일본과 교류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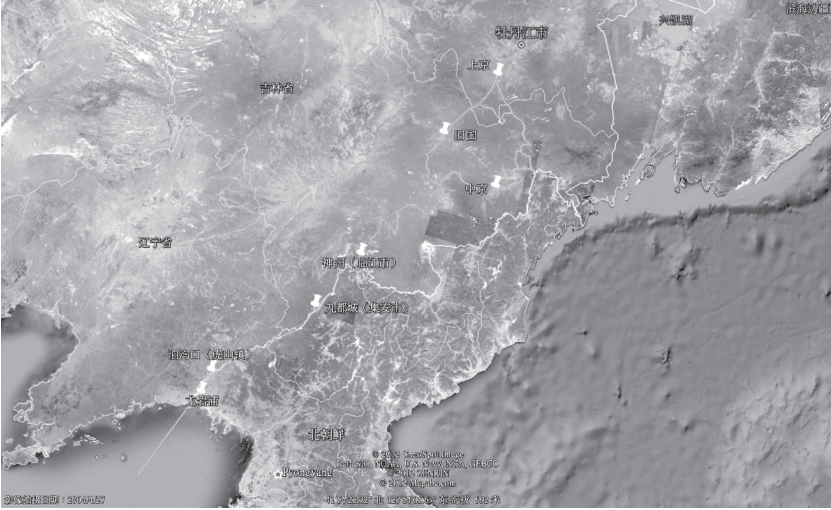


그림 1_ 발해 조공도의 노선도

작용을 하여 동북아 중세사에 있어서의 발해 ‘실크로드’라고도 불린다.¹⁶⁾

2. 영주도(營州道)

장령도(長嶺道)라고도 부른다. 발해의 주요 도시에서 육로를 통하여 당나라 장안에 이르는 교통로이다. 영주도는 발해와 당나라 사이의 경제와 문화교류를 밀접히 하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영주(요령성 朝陽市) 지역에서 활동하던 말갈인과 고려인들 사이의 관계를 밀접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주도의 여러 지선들은 발해 교통도로망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영주도는 또한 조공도와 함께 발해의 또 하나의 ‘실크로드’로서 동북아 각 국

16) 鄭泳振·李東輝·尹鉉哲(2011), 『渤海史論』, 吉林出版集團·吉林文史出版社, 248~253쪽



그림 2_ 발해 영주도의 노선도

가 사이의 교류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3. 거란도[契丹道]

부여도라고도 부른다. 이 교통로는 발해와 서쪽의 여러 부족들과 왕래하는 주요한 통로이다. 발해의 도성에서 출발하여 장광재령을 넘어 서부의 중요한 도시인 부여부(扶余府, 현재 길림성 農安)에 이른 다음 다시 서남쪽으로 꺾어들어 거란에 이른다. 이 노선은 발해가 실위(室韋), 오라후(烏羅侯), 달말루(達末樓) 등의 부족들과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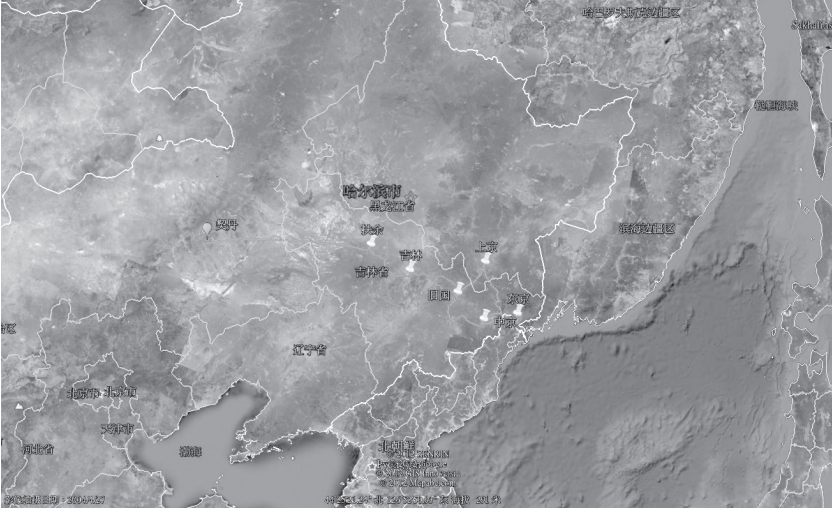


그림 3_ 발해 거란도의 노선도

4. 일본도(日本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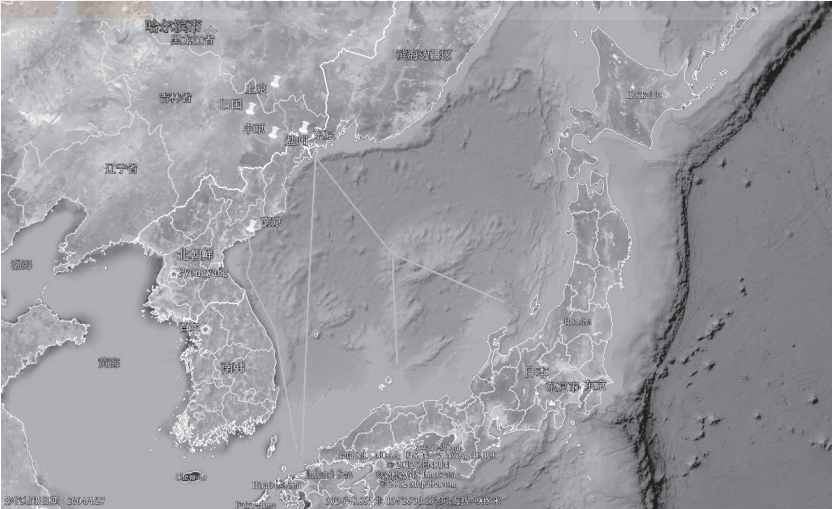


그림 4_ 발해 일본도의 노선도

발해에서 일본으로 통하는 일본도는 발해가 일본과 경제와 문화교류를 하는 주요한 통로로서 발해와 일본의 문화를 풍부히 하는데에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당나라 사이의 교량역할도 하였다. 일본도는 발해의 중심에서 동경(東京)에 이르는 다음 염주(鹽州)까지 이른다. 이 구간은 육로이다. 염주에서 일본까지 이르는 해로는 스쿠시선과 북선 2갈래가 있다.

5. 신라도

신라도는 남해도(南海道)라고도 부른다. 신라도는 상경에서 출발하여 동경을 걸쳐 신라의 수도에 이르는 노선이다. 신라도와 일본도는 상경에서 동경에 이르는 구간은 동일하다. 그러나 동경에서부터 갈라져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신라에 이른다. 이 노선은 발해와 신라의 왕래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와 신라의 교류에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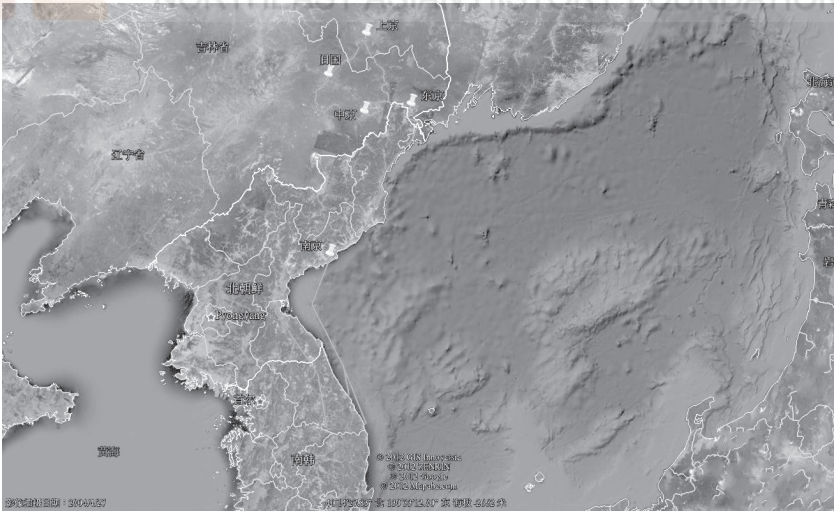


그림 5_ 발해 신라도의 노선도

6. 말갈도

흑수말갈도(黑水靺鞨道)라고도 부른다. 이 통로는 발해가 말갈과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수로와 육로로 나뉜다. 수로는 흑룡강에서 송화강을 따라 거슬러오다가 의란(依蘭)에 이른 다음 다시 목단강(牡丹江)을 거슬러오다가 상경(上京)에 이른다. 겨울철에 하천이 결빙되면 말과 썰매로 왕래하였다. 육로는 상경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목단강, 해림(海林), 임구(林口), 발리(勃利)를 걸쳐 의란현 경내의 덕리진(德理鎮)에 이른 다음 배를 타고 송화강과 흑룡강을 걸쳐 현재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 이르렀다.¹⁷⁾

상기 통로들의 공통점은 모두 상경을 비롯한 구국, 중경과 동경 등 발해의 중심지에서 출발하여 주변국들과 교류한다는 것이다. 발해의 교통망은 발해



그림 6_ 발해 말갈도의 노선도

17) 鄭永振·李東輝·尹鉉哲(2011), 앞의 책, 261~2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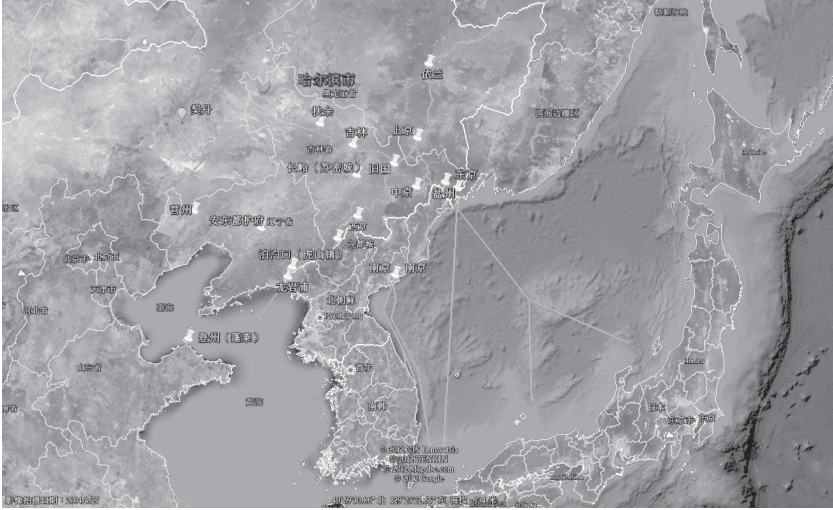


그림 7_ 발해의 교통도

가 주변국과 교류하는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 제기한 ‘담비의 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샤브쿠노프(E. V. Shavkunov, 1997)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인과 발해인의 교류에 대해 연구하다가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을 통해서 ‘담비의 길(貂皮路)’을 주장하였다.¹⁸⁾ ‘담비의 길’은 세미레체(현재 카자흐스탄 동남부와 키르기스탄 북부)에서 시작하여 알타이 산지, 남시베리아, 몽골 서부, 세렌가강, 술폰강 상류, 오논강이나 케루리엔강 상류, 실카강이나 아르구나강,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을 걸쳐 동북아 내륙으로 이어지는 루트¹⁹⁾로서 실크로드를 거치지 않

18) 에.뵈.샤브쿠노프 엮음, 송기호·정석배 옮김(1996),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234쪽; 김은국(2006), 「8~10세기 동아시아 속의 발해 교통로」, 『한국사학보』 제24호, 380쪽에서 재인용

19) E. V. 夏富庫諾夫(샤브쿠노프)(1998), 「東北亞 民族歷史上的粟特人與黑貂之路」, 『東亞의古代文化』 第96號, 大和書房, 140쪽

고 북아시아를 경유하여 중앙아시아와 동북아 지역을 연결시킨다. 그는 중앙아시아, 이란, 동돌궐, 남시베리아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담비의 길을 통하여 발해, 신라, 일본과 교류하였으며 여기서 발해는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⁰⁾ ‘담비의 길’은 아직 문헌상에 기재되지 않은 루트로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 왕소보(王小甫)는 샤브쿠노프가 제시한 ‘담비의 길’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면서 고대 교통과 유물이 증명하다시피 흑룡강 및 우수리강 유역과 증원지역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증원에서 동북아로 통하는 조공도와 영주도 등이 고대 동서양 교류의 중요한 통로였다면 소그드인들도 당연히 이 루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¹⁾ 소그드인들이 ‘담비의 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 발해와 교류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와 동북아 지역은 상이한 루트를 통해 교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서역의 이란, 동돌궐, 남시베리아의 여러 나라들과 발해, 신라, 일본의 교류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과 신라가 서역과 교류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개통된 신라도와 일본도를 통해 발해를 걸쳐야 한다. 따라서 당시 발해는 서역과 동북아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동북지역이 동북아,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 및 일본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지로 부상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상기 여러 통로들 중에서 현재에도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이 곧 육로와 해상 항로를 겸비한 일본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일본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 希佛庫諾夫(샤브쿠노프) 著, 楊振福福 譯(2003), 「索格狄亞那人的貂皮之路」, 『北方文物』 第1期, 109~112쪽

21) 王小甫(2001), 「“黑貂之路”質疑」, 『歷史研究』 第1期, 85쪽

IV. 발해 시기 일본도의 현대적 의미

일찍이 '해동성국'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발해 시기에 연변 지역은 발해의 주요한 물류거점 역할을 하였다.

기원 698년에 설립된 발해는 국세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차 주변지역과 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내왕이 잦아지게 되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무왕시기(719~737)인 727~919년에 이르기까지 발해는 도합 34차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주로 소위 '일본도'를 통하여 실현되었다.

대흙무(문왕) 시기(737~793)에 발해의 국세가 발전함에 따라 당조는 발해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발해 주변의 국가와 부족들을 이용하여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리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취하였고,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른 발해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일본은 발해와 연합하여 신라를 징벌하기 위하여 발해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대흙무 시기에 발해는 일본에 사신을 11번 파견하였고 일본은 9번 파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발해와 일본 사이의 '밀월시기'라고 한다.²²⁾ 이와 같은 국제 정세는 발해와 일본이 빈번히 교류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당시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은 북선, 스쿠시선, 남해부선 등 3갈래가 있었다. 북선은 현재의 러시아 포시에트만에 위치한 발해 시기 주요 항구인 염주(현재의 크라스키노)에서 출발하여 동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일본 혼슈(本州)의 서남쪽 해안에 이른다. 스쿠시선은 역시 염주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일본의 스쿠시(築柴, 현재의 규수를 가리킴)에 이르는 선이다. 남해부선은

22) 張韜(2007), 「試析渤海大欽茂時期與唐·日之間的交往」, 『北方文物』(4), 58~59쪽

남해부(현재의 북한 함경북도 북청군 청해리)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역시 일본의 스쿠시에 도착한다(〈그림 4〉 참조). 이 세 갈래의 바닷길 중 스쿠시선과 남해부선은 각각 한 번씩 이용했을 뿐이고 나머지 32차는 모두 북선을 이용했다.²³⁾ 이로부터 우리는 당시 발해가 일본과 거래하는 데 북선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고 염주가 일본으로 통하는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포시에트만에서는 이미 발해 시기 주요 항구 도시인 염주로 비정²⁴⁾되고 있는 크라스키노 고성을 발견하였다. 20세기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당시 소련의 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성은 점차 외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크라스키노의 중국어 지명은 모구외(毛口巖)라고 불렀다. 기록에 따르면 “훈춘에서 동쪽으로 백 리 상거한 모구외는 원래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길림성 반 이상의 지역이 바다로 통하는 문호였다”고 적고 있다.²⁵⁾ 이 고성은 면적이 13ha에 달하는 규모가 비교적 큰 성으로서 남쪽은 장방형이고 북쪽은 반원형이며 성벽은 흙과 돌을 섞어서 쌓았다. 남·동·서 3개의 문이 있는데 모두 웅성이 있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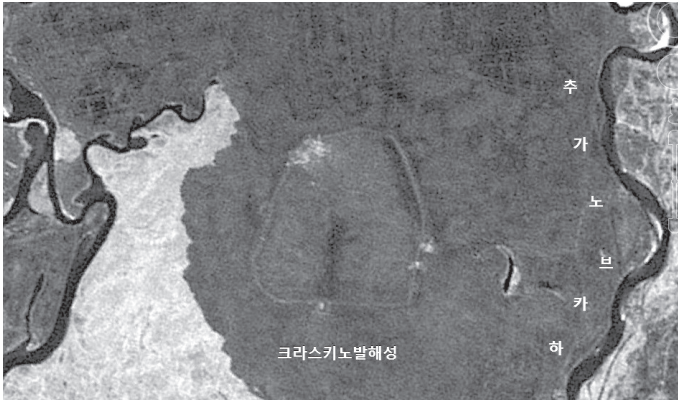
당시 염주는 일본과 무역하는 중요한 항구였던 동시에 발해의 용제항(龍濟港)과 토호포항(吐號浦港) 등 한반도 동해안의 주요 항구와 현재 러시아 연해주의 나훗카, 올가, 와니노, 누르칸 등의 항구와도 해상운수를 했으므로²⁶⁾ 발해의 중심지에서 염주에 이르는 필수 경유지인 훈춘은 일본과의 무역 이외에도 국

23) 魏存成(2007), 「渤海政權의對外交通及其遺蹟發現」, 『中國邊疆史地研究』 17(3), 72~87쪽

24) 張博泉·魏存成(1997),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406쪽

25) 1935년에 출판된 『琿春郷土志』에는 “距琿春迤東百里之毛口巖, 原系我國領土, 爲吉林省半壁入海之門戶”라고 적고 있다[張博泉·魏存成(1997), 위의 책, 406쪽].

26) 尹鉉哲(2008), 「渤海國港口考」, 『北方文物』 (1), 69~72쪽



출처: Google Earth 홈페이지

그림 8_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크라스키노 발해성

내 여타 지역과의 무역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대흠무가 기원 785년에 수도를 상경성에서 동경인 팔련성(八連城)으로 옮기면서 이 지역은 9년간 발해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었다. 대흠무는 57년이나 재위하였으며 재위기간에 발해를 '해동성국'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발해 시기에 현재의 훈춘 지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훈춘 지역이 당시의 물류거점으로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발해의 중심에서 염주에 이르는 육상도로는 어떠했을까? 앞에서 727년에 처음으로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926년까지 발해의 주요한 도시는 차례로 현재의 둔화(敦化), 화룡현의 서고성(西古城), 흑룡강성 영안현(寧安縣)의 상경성(上京城), 훈춘시의 팔련성(八連城)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일본으로 통하는 크라스키노 발해성에 이르는 육상통로도 여러 갈래였다.

발해의 시국처로 비정되는 둔화에서 출발하는 일본도는 동쪽으로 할바령

[哈爾巴嶺]을 넘어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에 이른 후, 이 강을 따라 연길에 이른다. 연길에서 동쪽으로 성자산(城子山)산성과 하룽(河龍)고성을 지나 부르하통하를 따라 내려오다가 가야하(嘎呀河)와 합하는 곳에 이른 다음 양수(涼水)와 밀강(密江)을 지나 팔련성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출발하여 주요한 역참인 석두하자고성(石頭河子古城)을 거쳐 장령자를 지나 크라스키노항에 이른다.²⁷⁾ 후에 다른 연구자들은 돈화에서 동쪽으로 사하(沙河) 지류를 따라 역행하다가 할바령과 목단령(牡丹嶺)이 만나는 재를 넘어서 안도현 내의 복흥하(福興河) 지류를 따라 내려오다가 도흥(島興) 발해유적을 지나 동남쪽으로 가다가 복수둔(福壽屯) 발해유적에 이른다. 그다음 영액령(英額嶺)을 넘어 장인강(長仁江)을 따라 가다가 해란강(海蘭江)에 이른 다음 부르하통하와 만나는 곳의 하룽고성에 이른다. 그다음 첫 번째 노선과 만난다.²⁸⁾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인 서고성에서 출발하는 일본도도 해란강을 따라 부르하통하와 만나는 하룽고성에 이른 다음 첫 번째 노선과 만난다. 756년에 수도를 서고성에서 상경용천부(上京龍天府)인 동경성으로 이주한 후에는 동경성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노야령(老爺嶺)을 넘어 홍운(紅雲)에 이른 다음 가야하에 이르고 이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첫 번째 노선과 만난다.²⁹⁾ (〈그림 9〉 참조).

상기 노선들의 공통점은 모두 발해의 각 수도들에서 떠나 모두 훈춘의 온특혁부성(溫特赫部城)과 동경용원부(東京龍源府)인 팔련성에 이르고나서 여기서 석두하자고성을 지나 장령자(長嶺子)고개를 넘어서 러시아에 들어선 다음 염주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훈춘이 당시 발해에서 가장 큰 항구의 하

-
- 27) 延邊博物館《延邊文物簡編》編寫組(1988),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92쪽; 崔錫昇(1990), 「渤海時期的“日本道”」, 『琿春文史資料』第3輯, 34~35쪽
 28) 侯莉閩·李強(1994), 「渤海初期通往日本陸路部分的研討」, 『北方文物』(4), 32~39쪽
 29) 魏存成(2007), 앞의 논문, 72~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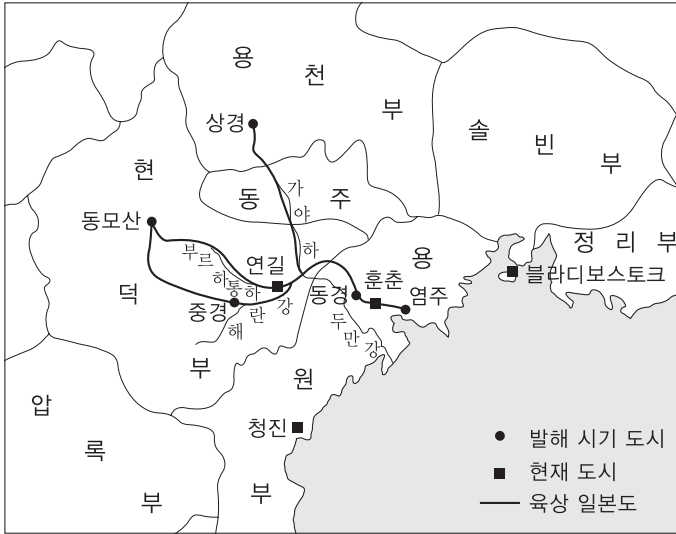


그림 9_ 발해의 육상 일본도

나인 염주를 이용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류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훈춘 지역이 당시 발해에서의 역사적 지위와 작용에 대해 평가하였다. 러시아 역사학자 샤프쿠노프는 “발해가 염주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이 지역은 행정중심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구와 수공업중심으로 되었다”고 하였다.³⁰⁾ 왕협(王俠, 1982)은 “동경용원부 소속의 염주는 발해에서 일본으로 통하는 문호로서 중일관계사와 중외교통사 및 발해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고 하였다.³¹⁾ 최순자(崔順子, 1997)는 “발해가 동경용원부를 수도로 정한 다음 훈춘과 두만강하류는 점차 발해의 정치,

30) [俄]3·B·沙弗庫諾夫 著, 宋玉彬 譯(1997), 『渤海國及俄羅斯遠東部落』, 東北師範大學出版社, 70쪽

31) 王俠(1982), 「毛口崙在唐代渤海與日本友好交往中的地位和作用」, 『博物館研究』 創刊號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서 이 지역 성읍(城邑)의 건설과 경제 및 상업의 대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였다.³²⁾ 양우서·장용(楊雨舒·蔣戎, 2008)은 “발해가 동경용원부로 수도를 옮긴 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의 발전과 번영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³³⁾ 이로부터 우리는 발해 시기 훈춘 지역은 발해에서 물류를 바탕으로 경제가 비교적 발전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천여 년 전에 발해에서 일본으로 통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이었던 석두하자고성 부근에 현재 훈춘에서 러시아로 통하는 중요 관문인 장령자 세관이 건설된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역사의 필연이라 하겠다.

V. 청조 시기 군사요충지와 무역중심지로서의 연변 지역

기원 926년에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후 발해고토에 동단국(東丹國)을 설립하였다. 928년에 동단국이 수도를 동경(東京, 현재의 요녕성 遼陽市)으로 옮긴 다음 발해 유민들을 요양 일대로 이주시키면서 발해와 일본 사이의 왕래가 중단되었다.³⁴⁾ 그리하여 연변 지역은 요·금 시기, 동하국(東夏國) 시기, 원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인적이 드문 주변부로 전락하였다.

1635년에 황태극(皇太極, 청태종)이 여진을 만주로 개칭하고 이듬해에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바꾸었다. 1644년에 만주의 주 세력이 북경에 진출하여 청 왕조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조상의 발원지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요령성 신빈

32) 崔順子(1997), 「唐代渤海時期“日本道”和琿春地區的開發」

33) 楊雨舒·蔣戎(2008), 『唐代渤海五京研究』, 亞洲出版社, 139~144쪽

34) 葛秀風(1990), 「琿春早期對外貿易」, 『琿春文史資料』第3輯, 14쪽

(新賓) 동쪽, 길림성 이통(伊通) 남쪽, 두만강 이북의 광활한 지역을 약 200여 년 간 봉금구(封禁區)로 지정하면서 연변 지역은 여전히 미개척지였다.

연변 지역은 당시 영고탑(寧古塔) 장군의 관할범위에 속했다. 누르하치는 1610년에 명조의 세력이 쇠락하는 틈을 타서 현재 흑룡강성 영안시(寧安市)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고탑 지역을 통일하여 확실히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주변의 여러 부락들을 복속시키면서 명조의 누르칸도사의 관할범위를 모두 청조의 세력권에 넣었다. 이때부터 1676년에 영고탑 장군이 길림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영고탑은 목단강유역, 송화강유역, 우수리강 동쪽, 흑룡강유역, 외흥안령, 연해주, 사할린도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였다.³⁵⁾

1714년 청조는 변경 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춘에 협령(協領)³⁶⁾을 파견하여 영고탑 부도통³⁷⁾에 예속시켰다. 그리하여 훈춘에는 처음으로 이 지역의 군사와 행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설치되게 되었다. 당시 훈춘협령의 관할범위는 동북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 시호테알린(Sichote Alin)산맥과 영고탑이 만나는 곳까지,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데 수분하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사이의 해안과 도서, 서쪽은 현재 화룡시(和龍市) 숭선진(崇善鎮)에서 두만강 하구까지, 서북쪽은 할바령까지, 북쪽은 현재 흑룡강성 영안시까지 이르는 광활한 범위였다.³⁸⁾ 이로부터 당시 훈춘은 현재의 연변 지역보다도 훨씬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군사요충인 동시에 행정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조는 왜 훈춘에 군사와 행정중심을 설치하였을까? 그 원인은

35) 김석주(2010), 「영고탑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22(3), 98쪽

36) 청조시기 각 성에 주재한 장군의 屬官 官職이며 八旗의 각 期에 설치한 직무로서 正三品이다. 副都統 이하, 佐領 이상이다.

37) 청조시기 관직명으로서 당시 길림에는 寧古塔副都統, 伯都訥副都統, 三姓副都統, 吉林副都統, 阿勒楚喀副都統, 拉林副都統, 琿春副都統 등이 있었다.

38)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2000), 『琿春市志』, 吉林人民出版社, 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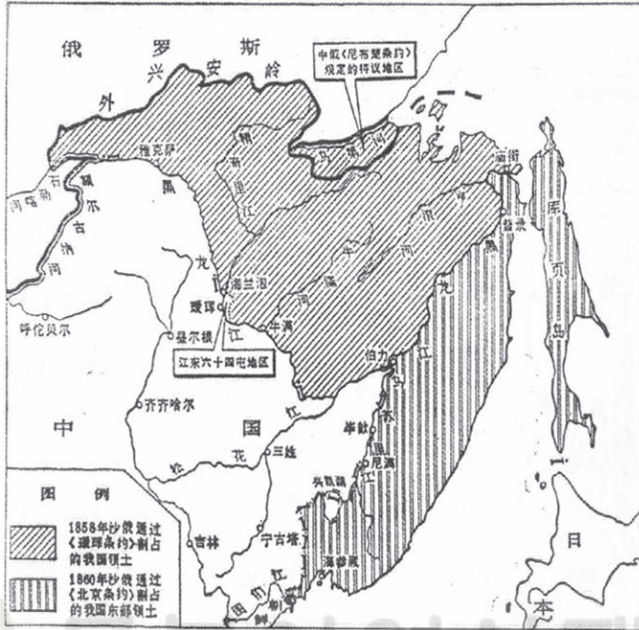
훈춘이 위치한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인 ‘용흥지지(龍興之地)’로 인식하여 이 지역의 신성함을 보존하고자 외부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군사와 행정중심을 설치하였다.³⁹⁾

1859년에 훈춘협령은 부도통급 협령으로 승격되었다. 그 원인은 러시아의 남침과 갈라놓을 수 없다. 19세기에 들어와 쇠락할 대로 쇠락한 청조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러시아도 편승하게 되었다. 1858년에 러시아는 청조를 협박하여 ‘아이훈조약[璦琿條約]’을 체결하여 흑룡강 이북의 60여만 km²의 영토를 빼앗았고, 훈춘협령의 일부가 포함된 지역을 ‘공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동년 6월에는 ‘중러 텐진조약[中俄天津條約]’을 체결하여 러시아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청조는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훈춘협령을 부도통급 협령으로 승격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듬해인 1860년에 청조와 러시아는 다시 ‘베이징조약[北京條約]’을 체결하여 흑룡강과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와 사할린도를 포함한 40여만 km²의 광활한 ‘공동관리지역’ 영토가 정식으로 러시아에 할양되었다. 이때부터 훈춘은 청·조 2개국 간 접경지역에서 청·조·러 3개국이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되었다(〈그림 10〉 참조).

청조는 러시아의 재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훈춘에 군사 증가, 봉금 폐지, 이민 장려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민간무역을 윤택하였다. 그리하여 훈춘의 업무량이 급증하여 기구 확장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870년에 청조는 훈춘의 부도통급 협령을 부도통으로 승격⁴⁰⁾시켜 연변 전역을 관장하였다. 훈춘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1881년에 훈춘의 부도통으로 임명된

39) 顧松潔(2007), 『清代琿春八旗駐防初探』,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1~4쪽

40) 琿春市人民政府(1990. 9), 『琿春縣地名志』에서는 1881년에 부도통을 설치하였다고 함.



출처: <http://shzq.org/ahyxy/dt.htm>

그림 10_중·러 '북경조약' 이후 러시아에 할양된 중국 영토

이커탕아(依克唐阿)는 훈춘에 둘레 길이가 7리⁴¹⁾ 이고 4개의 성문(동문은 靖邊, 서문은 鎮定, 남문은 撫綏, 북문은 得勝)을 가진 성을 쌓았다. 같은 해에는 이민을 받아들여 변경을 공고히 하는 이민실변(移民實邊)을 위하여 초간총국(招墾總局)을 설치하였다.

인구가 증가⁴²⁾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변경무역도 점차 활발해지면서 이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청조는 훈춘 지역을 더욱 중요시하게

41) 청조 시기의 1리는 180丈이고 1丈은 3.333m로서 당시의 7리는 약 4,200m에 달한다.

42)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2000), 앞의 책, 116쪽에 따르면 청조시기 인구통계가 가능했던 만주족의 인구는 1861년의 약 6,000명에서 1911년의 19,260명으로 증가되었다.

되었다. 1883년에 청조와 조선은 '길림조선 상민무역지방장정(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을 체결하고 서보강(西步江, 현재의 훈춘시 古城村)에 통상지국⁴³⁾을 설치하여 경원과의 무역을 관리하였다. 1905년 청조는 일본과 '동북삼성사의조약(東北三省事宜條約)'을 체결하여 훈춘을 비롯한 동북의 18개 도시를 일본에 개방하였다. 1909년에는 훈춘에 길림성의 첫 번째 해관인 훈춘총관(훈춘해관 총관)을 설치하였다. 이듬해에는 용정에 분관을 설치하였다. 당시 훈춘총관의 관할범위는 훈춘, 연길, 왕청(汪淸), 화룡, 안도(安圖), 둔화(敦化), 액목(額穆), 화전(樺甸) 등 8개 시⁴⁴⁾로서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중심지였다.

1909년에서民国 초기에 이르러 훈춘에는 500여 호의 상호가 있었다. 훈춘은 조선의 경원과 중성 등과 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크라스키노[당시 청조는 모구위(毛口崴)로 불렀음], 블라디보스토크[당시 청조는 해삼위(海參崴)로 불렀음]와도 해상무역을 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훈춘에서 매년 많은 화물이 두만강 하구를 거쳐 수출되었다.⁴⁵⁾ 게다가 중국의 산둥과 상해 등지의 상품도 훈춘으로 유입된 후 다시 용정(龍井), 왕청(汪淸), 영안(寧安), 둔화(敦化), 액목(額穆), 길림 등지로 수송되었다. 반대로 길림성의 농산물은 훈춘에 이른 후 다시 크라스키노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걸쳐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일본 및 산둥과 상해 등지로 수송되어 발달된 상업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⁴⁶⁾(〈그림 11〉 참조). 그리하여 훈춘 지역은 중국, 조선, 러시아 3국의 교통 중심인 동시에 무역의 집산지가 되었으며 길림성의 주요한 상업도시로 발돋움하였다. 따라서 훈춘은 청조의 군사요충지에서 점차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43) 중국은 화룡육(和龍峪, 현재의 용정시 지신진(智信鎭))에 설치했다.

44) 李昌元·朴相周(1990), 『琿春海關概要』, 『琿春文史資料』 第3輯, 23쪽

45)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2000), 앞의 책, 455쪽

46) 李昌元·朴相周(1990), 앞의 논문,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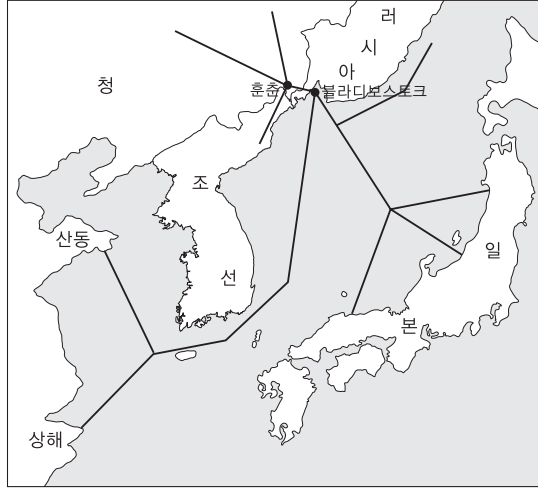


그림 11_ 청조 말기 훈춘의 무역망

VI. 민국·만주국 시기 무역중심지로서의 연변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민국 시기에 연변의 훈춘총관과 용정분관을 통한 대외무역은 주로 조선, 일본, 러시아와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인도 등이었다.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여 국내 물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일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대러시아 무역이 급감하였다. 게다가 1917년에 소련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 일본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라스키노 항구 및 중국과 조선의 국경도 봉쇄하였다. 결국 훈춘의 대외무역은 조선의 웅기와 청진항으로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훈춘의 무역 대상국이 주로 러시아, 조선, 일본에서 조선과 일본으로 한정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1905년 한·일 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09년 청·일 간에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와 연변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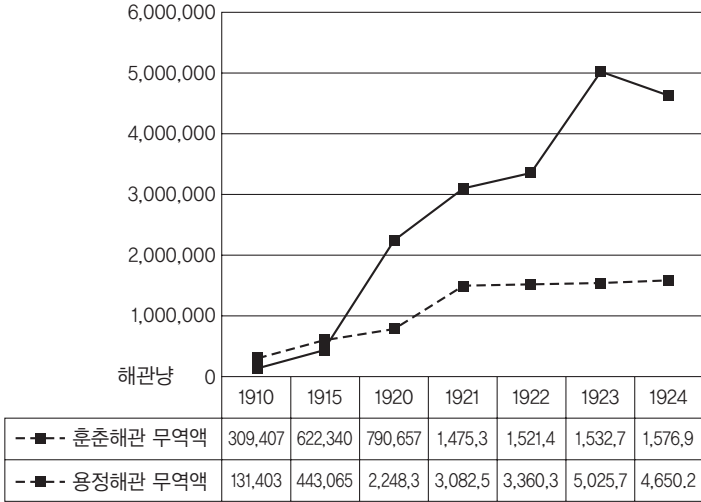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연변 지역은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으며 그 주변부로 전락하였다.⁴⁷⁾ 일제는 용정, 연길, 도문, 훈춘 등지에 영사관을 두고 막대한 양의 삼림과 광물자원 및 농산물을 수탈해갔다. 특히 러일전쟁 후 청조가 이곳을 일본의 통상지로 개방하면서 훈춘은 일본인 상공업자가 모여들어 약탈적인 상품거래의 거점이 되었다.

1905년에 일본이 청진에서 회령에 이르는 경편철도(經便鐵道)를 건설하고, 1909년에 청일 간에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 용정촌, 국자가(局子街, 현재의 연길),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등을 상부지(商埠地)로 지정하고 개방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 연변 지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대부분 훈춘을 거치지 않고 상기 상부지들과의 접근이 용이한 청진항을 거쳐 회령에 이르는 경편철도를 이용하였다. 회령에 이른 화물은 다시 용정으로 운송된 후 여기서 길림성의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용정이 연변 지역의 새로운 무역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910년에 훈춘총관은 용정에 분관을 설치하였다. 1924년에는 천보산(天寶山)에서 용정을 걸쳐 개산툰에 이르는 천도경 편철도가 개통되면서 청진과의 내왕이 더욱 편리해졌다. 따라서 청진에서 용정까지는 용정-삼합-청진, 용정-개산툰-청진 두 갈래 루트가 개통되었다.⁴⁸⁾ 그리하여 연변 지역의 무역은 청진-회령 체제에 편입되면서 용정이 훈춘을 대신하여 무역중심으로 부상하였다(그림 12 참조). 결국 1924년에 원래의 용정분관은 용정총관으로, 원래의 훈춘총관은 분관으로 지위가 역전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동북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각 해관도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1932년에 일본은 용정과 훈춘 해관을 장악하고 세관으

47) 김석주(2004),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8~51쪽

48) 崔吉雄(1994), 「龍井通海走廊與圖們江地區開發」, 『東北亞論壇』(2), 31~33쪽



출처: 李昌元·林相周(1990), 앞의 논문, 28쪽

그림 12_ 훈춘과 용정해관 수출입 무역액

로 명칭을 바꾸었다. 1932년부터 일제는 선후로 돈도철도(敦圖鐵道, 敦化-圖們), 도녕철도(圖寧鐵道, 도문-목단강)를 개통하고 천도경편철도 중 조양천(朝陽川)에서 개산툰에 이르는 조개철도(朝開鐵道)를 개축하여 조선 북부의 철도망과 연결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로 도문은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에서 일약 동북, 조선·일본 간 무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일제는 도문을 통하여 연변과 동북 각 지역에서 약탈한 자원을 조선과 일본으로 수송하면서 연변 지역에서 가장 큰 세관이 되었다. 청진에서 회령, 나진에서 남양, 청진에서 남양에 이르는 철도는 모두 일본과 무역하는 주요 간선철도로서 이런 철도와 연결된 용정과 도문은 길림, 목단강, 수분하, 액목 등의 넓은 지역을 배후지로 하며 무역액이 급증하였다.

1934~1940년 사이 훈춘 지역의 두만강에 조선으로 통하는 권하(圈河), 사타자(沙坨子), 솔만자(甩灣子), 양수(涼水) 등에 다리를 건설하였으며 훈춘에서 훈

용에 이르는 경편철도도 개통하였다. 그러나 훈춘과 인접한 지역은 주요 간선철도가 경유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훈춘세관의 물동량은 갈수록 감소하여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당시에 이르러 훈춘 지역의 상호점 수는 118개로 급감하였다.⁴⁹⁾

이로부터 근대에 이르러 훈춘 무역의 전성기는 청조 광서 시기(1875~1908)에서民国 초기까지(1920년대 초)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무역이 중단되고 일제 시기에 이르러서는 대조선과 대일 무역의 주요 루트가 용정과 도문으로 이전되면서 용정과 도문의 지리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VII. 연변 지역의 물류거점 가능성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오랫동안 소련과 긴장관계에 처하면서 소련과 인접한 연변 지역, 특히 훈춘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자루 밑바닥'으로 전략하였다. 따라서 연변 지역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는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점차 경제발전을 적극 도모하면서 대외개발에도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연변 지역은 '자루 밑바닥'에서 '자루 입구'로 인식되었다.⁵⁰⁾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연변 지역, 특히 훈춘의 유리한 대외개방 여건을 인식하고 이 지역을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는 물류거점을 건

49) 葛秀風(1990), 앞의 논문, 19쪽

50) '자루 밑바닥'을 중국어로 '口袋底'라고 부르고 '자루입구'는 중국어로 '口袋口'라고 부른다[高福平(1996), 「推進延邊州對外經貿事業持續發展的宏觀思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2), 61~63쪽].

설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하여 연변 지역은 현재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 “소수민족정책”, “장길도개발개방정책”, “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등 여러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변 지역은 중·북·러 3개국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아 경제권과 두만강지역합작개발의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국경선의 총 길이는 755.2km(북한과의 국경선은 522.5km, 러시아와의 국경선은 232.7km)이고 11개의 세관이 북한과 러시아와 통한다. 특히 훈춘은 동북지역에서 동해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중국 영토로서 블라디보스토크와 180km, 크라스키노와 46km, 나진항과 93km, 청진항과 171km밖에 안 되는,⁵¹⁾ 동해로 진출하는 교두보다. 연변은 길림, 흑룡강, 요령성의 광활한 배후지를 갖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이고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육해수송 네트워크 중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연변 지역은 이미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를 통하여 동해로 진출하는 루트를 형성하였으며 국제물류업을 발전시킬 뚜렷한 우세를 갖고 기반시설 건설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중·북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나선경제무역구가 정식으로 가동되었고, 북한의 원정리에서 나진항에 이르는 도로는 2012년 10월 16일에 이미 개통되었다. 훈춘의 권하세관과 북한 원정리세관을 잇는 신두만강대교도 계획 중에 있다. 나진항을 이용한 내무과경(內貿跨境)수송(국경을 넘나들며 국내무역을 진행)항선도 이미 개통되었다. 그리고 훈춘에서 러시아 카메소야와(卡梅紹瓦亞) 역에 이르는 철도도 곧 다시 운영을 회복하며 “천만톤 국제철도환승역 공정도” 실시단계에 들어섰으며, 훈춘-자르비노-

51)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2000), 앞의 책, 59쪽

속초와 훈춘-자르비노-니이가타 육해 연운항선도 이미 개통되었다. 그리고 동북아의 광활한 내륙을 연결하는 장춘-훈춘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되었고 장춘-훈춘 고속철도는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의 국경연선과 중·북국경 연선을 따라 연결되는 동변도철도(흑룡강성 묵단강시 수분하에서 요령성 대련시까지의 1,380km) 건설도 일부 구간은 이미 개통되고 일부 구간은 한창 시공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굽직한 육로 교통로 건설은 연변 지역이 더욱 넓은 배후지를 갖게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도 두만강 지역의 합작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외의 대기업들이 속속 연변에 와서 조사하고 투자를 한다. 한국의 거대기업인 포스코와 현대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훈춘에 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연변은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등과 통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상항선 등 다원화된 교통망이 형성되어 물류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방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지적한 연변 지역은 발해 시기와 청말 민초(清末民初) 시기에 일찌기 물류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은 연변이 앞으로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변은 아직 경제규모가 작고 배후지 경제발전이 낙후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물류거점으로 발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지역 경제발전 의지와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면 연변의 발전은 다시 지난 1990년대 두만강 개발이 성공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 때문에 중국은 지난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 북한 경제의 재건을 적극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북한 투자도 적극 확대하여 북한을 경제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

서 한국의 노력과 협조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특히 중·북경협과 남·북경협의 사업 목적이 비슷한 상황(즉, 모두 북한의 자원개발과 저렴한 노동력 이용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음)에서 양국의 소모적인 경쟁을 극복하고 대북경협에서 상생하려면 밀접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2년 12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舊唐書(1)』卷199 東夷列傳 第149

『東三省政略(卷1)』(1986), 吉林文史出版社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三國史記』, 卷第十五 高句麗本紀 第三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第30

『宋書』卷97 夷蠻列傳 第57

『日本書紀』卷19 天國排開廣庭天皇 欽明天皇

『日本書紀』卷23 息長足日廣額天皇 舒明天皇

『竹書紀年』卷9, 周紀一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김석주(2004),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顧松潔(2007), 『清代琿春八旗駐防初探』,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楊雨舒·蔣戎(2008), 『唐代渤海五京研究』, 亞洲出版社

延邊博物館《延邊文物簡編》編寫組(1988),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延邊州統計局(2010), 『延邊統計年鑒』, 中國國際圖書出版社

魏國忠·朱國忱·郝慶雲(2006),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魏存成(2007), 「渤海政權的對外交通及其遺蹟發現」, 『中國邊疆史地研究』 17(3)

劉青(2007), 『物流中心城市的物流系統規劃研究』, 石油大學 碩士學位論文

尹鉉哲(2006), 『渤海國交通運輸史研究』, 華齡出版社

張博泉·魏存成(1997),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鄭永振·嚴長棻(2000), 『延邊古代簡史』, 延邊大學出版社

鄭永振·李東輝·尹鉉哲(2011), 『渤海史論』, 吉林出版集團·吉林文史出版社

政協吉林省琿春縣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1990), 『琿春文史資料』 第3輯

琿春市人民政府(1990), 『琿春縣地名志』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2000), 『琿春市志』, 吉林人民出版社

[俄]3·B·沙弗庫諾夫 著, 宋玉彬 譯(1997), 『渤海國及俄羅斯遠東部落』, 東北師範大學出版社

김석주(2010), 「영고담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22(3)

김석주(2009), 「창춘-지린-두만강지역 개발개방선도구와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계획」, 『국토』 (12)

김은국(2006), 「8-10세기 동아시아 속의 발해 교통로」, 『한국사학보』 제24호

葛秀風(1990), 「琿春早期對外貿易」, 『琿春文史資料』 第3輯

高福平(1996), 「推進延邊州對外經貿事業持續發展的宏觀思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王小甫(2001), 「“黑貂之路”質疑」, 『歷史研究』 第1期

王雪梅(2005), 「清末民初的琿春城」, 『長春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17(3)

王俠(1982), 「毛口巖在唐代渤海與日本友好交往中的地位和作用」, 『博物館研究』 創刊號

王俠(1982), 「琿春的渤海遺跡與日本道」, 『學習與探索』 (4)

尹鉉哲(2008), 「渤海國港口考」, 『北方文物』 (1)

李凭(2002), 「魏燕戰爭前後北魏與高句麗的交往」,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1(6)

李昌元·朴相周(1990), 「琿春海關概要」, 『琿春文史資料』 第3輯

張韜(2007), 「試析渤海大欽茂時期與唐·日之間的交往」, 『北方文物』 (4)

朱旻暉(1995), 「高句麗與日本的交往」, 『社會科學戰線』 第5期

崔吉雄(1994), 「龍井通海走廊與圖們江地區開發」, 『東北亞論壇』 (2)

崔錫昇(1990), 「渤海時期的“日本道”」, 『琿春文史資料』 第3輯

侯莉閩·李强(1994), 「渤海初期通往日本陸路部分的研討」, 『北方文物』 (4)

E. V. 夏富庫諾夫(샤브쿠노프)(1998), 「東北亞 民族歷史上的粟特人與黑貂之路」, 『東亞的古代文化』 第96號, 大和書房

希佛庫諾夫(샤브쿠노프) 著, 楊振福福 譯(2003), 「索格狄亞那人的貂皮之路」, 『北方文物』 第1期

조선중앙통신(2012. 10. 17), “고구려 사람들이 일본에 남긴 별자리 그림”

《중국일보》(2011. 5. 14)

《黑龍江新聞(한글판)》(2009. 11. 9)

《한국미디어》(2008. 03. 24)

중국뉴스네트워크(www.cnr.cn)(2011. 5. 4)

黑龍江新聞網(2005. 9. 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초국경 협력의 현황과 과제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이동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의미와 특징
- III.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현황
- IV.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조건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동률(李東律)

중국정치외교 전공,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대표논저로는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2011,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2008,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있다.

중국 초국경 협력의 현황과 과제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이동률

I. 머리말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현저한 현상은 중국의 부상과 지역협력 논의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선행적으로 진행되면서 역내 지역협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초국경 소지역 협력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내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전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역동성과 발전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 대국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배후에 두고 있고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지정경제학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각 지역별 소지역 협력의 중심지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바로 미국 중심의 단일 세계경제체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을 입증한 것이므로 각국들이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재인식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¹⁾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소지역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발전 가능성 또한 상당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비약적 부상에 따라서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각 지역별로 전개하고 있는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소지역 협력이 향후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으로 확대 발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접경지역은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고, 경계는 '분리의 선'인 동시에 '접촉의 선'이며 '장벽'인 동시에 '통로' 역할을 한다. 접경지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국경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의 도래 이후 세계화와 지역주의화가 병행하여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접경지역이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이 기존의 대립과 갈등으로 대변되는 분리, '장벽'의 상징에서 점차 접촉을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갈등과 충돌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접경지역이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중국의 주요 소지역 협력을 통해 타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소지역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서북부의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와 남서부지역의 윈난(雲南)·광시(廣西) 지역, 그리고 두만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진일보한 협력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1) 黃征學, 「中國參與國際次區域合作的基本思路」, 중국 전문가 포럼 (csf), http://csf.kiep.go.kr/www/user/trend/column/columnView.jsp?seq_n=253&(검색일: 2010. 11. 30)

자 한다. 이 들 세 지역은 일단 중국 내에서 소지역 협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이미 일정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외형상 다음과 같은 지정학적·지경제학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변강(邊疆)지역이면서 동시에 소수민족 집거지역이다. 그리고 이들 소수민족이 인접국가와 연계된 이른바 과제(課題)민족이어서 기본적으로 중국 민족통합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별로 소수민족 문제 현안의 내용과 정도에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들 지역은 기존의 연해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에서 소외되면서 타 지역과의 발전격차에 따른 지역 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소지역 협력과 더불어 서부개발, 동북진흥 등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서부개발과 동북진흥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낙후된 변강지역 발전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동일하지만 지역의 핵심적 과제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대외전략과 안보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신장자치구와 인접한 중앙아시아는 '분리독립 및 테러세력'의 영향, 미·러 등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송유관 연결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남지역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둘러싼 미국·일본 등 강대국과의 경쟁구도가 상존하고 있으며, 미얀마 등지의 에너지 자원과 수송로 확보 문제가 있다. 동북지역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I.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의미와 특징

중국에서는 소지역 경제협력권이 '성장권(成長圈)', '차지역경제협력권(次地域經濟協力圈)', '성장삼각(成長三角)', 또는 '국부경제권(局部經濟圈)'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²⁾ 그런 논의들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초국경 소지역 협력은 스칼라피노(Scalapino)가 제시한 '자연적 경제지대(Natural Economic Territories)' 개념에 근접하고 있다. 스칼라피노는 '자연적 경제지대'를 서로 인접한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나 지역이 정치적 의미의 국경을 초월하여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무역, 투자 및 기술교류 등 일련의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³⁾ 즉 변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월경적 중개 기능, 지역적 우위와 자원우위를 활용하여 변경지역의 경제적 낙후상태를 극복하려는 경제협력 형식을 일컫고 있다.⁴⁾

중국 변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국경 소지역 협력은 1990년대 탈냉전으로 인한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내 지역발전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다연(多沿)개방전략'이 상호작용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초국경

2) 이상의 논제를 다룬 주요 논문들로는 程超澤(1993), 「中國與周邊國家經濟協作圈的構想—走向21世紀的可由之路」, 『財經研究』 第11期; 湯敏(1995), 「成長三角區在亞太地區的發展及對我國的啓示」, 『太平洋學報』 第2期; 楊曉輝(1992), 「東南亞次區域經濟合作」,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編, 『世界經濟區域集團化與亞太經濟合作』, 北京: 時事出版社

3) Robert A. Scalapino(1991·1992), "The United States and Asia: Future Prospect," *Foreign Affairs*, 70: 5 (Winter), pp. 19~40

4) 李鐵立(2004), 『邊界效應與跨邊界次區域經濟合作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07~110쪽

소지역 협력은 초기단계에서는 두 가지 목표, 즉 낙후한 변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국 국내 지역발전 격차의 해소와 전방위 개방을 통한 경제협력 대상의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협력 위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소지역 경제협력은 이른바 '대외개방과 국내협력의 병행(外開內聯)' 전략과 더불어 각 소지역 협력을 발판으로 지역협력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시켜간다는 장기적인 전략, 이른바 '다층차 협력전략(多層次合作戰略)' 또는 '권층식 개방전략(圈層式開放戰略)'이라는 기본전략을 통해 중국 국경지역의 일부 성(省)과 인접국가 또는 지역 간에 경제협력을 위주로 하면서 점차 개방 지역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⁵⁾ 즉 소지역 경제협력은 협력의 대상이나 지역적 범위가 분명하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소지역 협력을 발판으로 협력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복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지역 경제협력은 근본적으로 배타적이고 제도화된 경제통합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법적인 관계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한 협력관계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자연적인 협력관계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지역에 먼저 실험을 거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가는 점진주의 방식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역내 국가들이 경제발전수준, 정치사회체제가 상이하고 복잡한 정치·안보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거국적 차원에서의 제도화된 경제협력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연적 경제지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지역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

5) 牛仁亮·宋光茂 編(1992), 『圈層開放：擴大開放的新戰略』, 北京：中國財政經濟出版社；張海明(1993), 「我國參與亞太區域經濟合作的「切割式多層次合作」戰略」, 『亞太資料』第3期, 1~7쪽

는 것이 적합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⁶⁾ 아울러 소지역 경제협력을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방과 지방 간의 경제협력의 성격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보다 신축성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유도하고자 경제적 분권화와 전방위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소지역 경제협력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자연적 경제지대’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지역적 차원에서도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역할이나 비중이 확대되었던 시기보다는 분권화의 영향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일정부분이 또 다른 공적 영역인 지방정부로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지역협력을 추진해가고 있다. 그런데 분권화의 결과 이전에 비해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참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외교영역은 중앙정부 고유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독자적인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⁷⁾

특히 ‘자연적 경제지대’는 제한된 인접지역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조건이 자연적으로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에 바탕을 두면서, 국경지역의 협력발전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이라는 요소는 중요시하는

6) Amos A. Jordan and Jane Khanna(1995),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The Emergence of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in the Asia-Pacific,"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Winter), p. 434

7) 蘇長和(2010), 「中國地方政府與次區域合作: 動力, 行爲及機制」, 『世界經濟與政治』 第5期, 4~24쪽

반면에 주권의 의미와 정부의 역할은 부차적이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실제 추진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조건을 결합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관련 각국의 주권 및 정부의 권위와 역할을 오히려 강화시켜가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변강지역은 지역적으로는 편벽한 오지이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소외지역에 불과하지만 개혁기 중국의 정치·안보·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제공하는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변강지역은 소수민족 집거지로서 국내정치적으로는 민족 및 국가 통합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소수민족의 대부분이 과계민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접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대외적으로는 인접국가와의 국경 및 영토분쟁, 안보, 에너지, 환경, 테러 등 대외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역이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는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전면적 실현, 국가와 민족의 통합, 그리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통한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의 실현과 관련하여 중국의 변강지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폐쇄적이고 낙후한 오지라는 정체성에 한정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정학적·지정학적·국내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변강지역을 중국의 발전, 안정, 통합 그리고 국제적 부상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변강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선린관계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통합, 새로운 안보환경의 조성, 그리고 중국 부상의 지역기반 확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전개하고 있는 초국경 소지역 협력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한 변강지역에 연해지역과 같은 대외개방과 교류를 통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경제적 동인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와 민족 통합, 그리고 대외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와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의 소지역 경제협력은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민족적·문화적 유대감과 같은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전략과 국제적 경제협력망의 형성이라는 총체적인 국가전략 구상하에 추진, 활성화되고 있으며, 배타적인 경제통합이 아닌 개방적이며 느슨하고 점진주의적인 경제협력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지역 경제협력 형태는 그 협력의 동인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즉 첫째, 대도시의 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형태, 둘째, 천연자원과 사회간접시설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셋째,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의 공유 또는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협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⁸⁾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소지역 협력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시설과 천연자원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협력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의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협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지역 협력은 현재 큰 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진행과정으로 진화 발전해 오고 있다.

첫째, 탈냉전으로 인한 주변 국제환경의 개선으로 연변(沿邊)개방을 통한 국

8) S. Y. Chia and T. Y. Lee(1994), "Subregional Economic Zones: a New Motive Force in Asia-Pacific Development," In C. F. Bergsten and M. Noland, eds., *Pacific Dynam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Washington DC: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경무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소지역 협력의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둘째, 소지역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인접국가와의 국경문제 등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서북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경협상, '상하이5국'과 '상하이협력기구(SCO)'라는 안보협력 기제가 형성되었고, 서남지역에서는 1994년 중국이 아시아 최초의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 지역 포럼(ARF)에 참여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와 불신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면서 경제협력을 위한 정치외교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셋째, 안보협력기제로 출발한 SCO, ARF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다면적인 지역협력을 전개하고 이러한 협력의 기반을 다각적으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예컨대 SCO 내에 경제협력 기제 설치, 아세안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FTA) 수립 추진 등 보다 제도화된 협력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소지역 협력의 단계적 발전 및 확산 과정은 동북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북중 간의 국경무역 증대, 두만강 유역 개발협력의 추진,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의 확대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소지역 협력의 장애요인들 또한 적지 않다.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북핵문제, 역내국가 간의 역사갈등, 영토분쟁, 역내 강대국 간 세력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III.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현황

1. 서북지역 초국경 소지역 협력

서북지역은 우루무치[烏魯木齊]를 중심으로 신장·칭하이[青海]·간수[甘肅]·산시[陝西]·네이멍구[內蒙古] 서북지역을 배후지로 하고, 카스[喀什]·이닝[伊寧]·보러[博樂]·타칭[塔城]을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창구로 하여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권을 형성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며 장기적으로는 서아시아와 중동지역까지 협력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장은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고, 개방 과정이 두 단계로 진행되어왔다. 우선 1992년 이전까지의 1단계 대외개방의 기본전략은 이른바 '동련서출, 쌍향개방(東聯西出, 雙向開放)'이었다. 즉 여타 내륙지역이나 연해지역의 상품, 자본, 기술을 도입해서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신장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전략으로서 내륙지역과 연해지역에 대한 개방과 서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방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과 시장 개척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6년 신장은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지방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1991년까지 8개의 대외무역기업에 국경무역 경영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치구 내 7개 통상지역을 개방하게 되었다.⁹⁾

2단계로,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직후인 1992년부터 중앙아

9) 陳家勤 編(1995), 『沿邊開放: 跨世紀的戰略』,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200쪽

시아 진출의 중국 교두보로서의 신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른바 ‘양선 개방(兩線開放)’이라는 전방위 개방전략을 전개하게 되었다. ‘양선개방’은 국경선과 더불어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철로를 중심으로 개방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치구 전체에 걸쳐 전방위 개방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단계 개방전략에서는 국경선을 따라서 33개의 현(縣) 또는 시를 개방하였고, 이닝·보러·타칭(이상 국경선 지역)과 우루무치·스허즈(石河子)·쿠이둔(奎屯)(이상 철로 변) 등 6개 개방시에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고, 특히 이닝·보러·타칭·우루무치 4개 도시에는 연해지역의 개방도시와 동등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2단계 개방 과정을 통해 신장은 이제 더 이상 국경지역의 오지가 아니라 중국 서북지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교두보이며 창구로서 그 지위와 역할이 일신하게 되었다. 특히 성도인 우루무치시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992년 이래로 매년 국제박람회(烏洽會: 烏魯木齊對外經濟貿易洽談會)를 개최하면서 서북지역 경제협력의 중추적 국제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은 1996년 8기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9차 5개년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 요강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즉 “변경지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중서부지역의 경제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강은 구체적으로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중점 지원하고 우대하는 6개항의 정책조치들, 즉 자원과 기간설비 건설의 우선 배정, 개혁·개방의 가속화, 그리고 점진적인 재정지원 증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⁰⁾

10) 9차 5개년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 요강의 자세한 내용은 《人民日報》(1996. 3. 20) 참조.

서북 소지역 협력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와 선 안보문제 해결, 후 경제협력, 그리고 이후에는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경제협력과 안보논의가 상호작용하면서 병행 추진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신장과 접경한 지역에 새로이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에 국경확정문제와 국경지역의 군축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후 1996년 중국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상하이 5국’을 결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1년 제6차 ‘상하이 5국’ 정상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공식적 다자안보협력기구로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출범시켰다.

SCO는 협력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3년에는 베이징에서 ‘상하이협력기구회원국 다자경제협력요강’에 서명하면서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2008년 9월에 러시아에 200억~2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긴급 총리회담에서도 회원국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회원국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소지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자연적·점진적인 변경무역 중심의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SCO라는 제도화된 협력기구를 만드는 기능적 배경이 되었고, 다시 SCO는 지역협력의 정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상호촉진작용을 해나가고 있다. 중국에게 상하이협력기구의 주도권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 서부지역의 안정, 안보, 그리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의미를 갖는다.

2. 서남지역 초국경 소지역 협력

중국 서남지역 초국경 협력은 소위 '일축양익(一軸兩翼, one axis two wings)'으로 요약되고 있다. 일축양익은 난닝에서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경제회랑을 축으로 하고 북부만 경제구와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지대를 동서 양 날개로 하여 중국의 서남부지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광서자치구와 북부만 경제구가 연계된 광서북부만 경제지대가 주목되고 있다.

광서북부만 경제지대는 1980년대 주강삼각지대, 1990년대 장강삼각지대, 2010년대 천진 반해신구에 이어 2020년대 중국 경제발전의 성장거점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북부만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와 동북아의 연결고리이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연결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광서북부만 경제구 중심에 광서성의 난닝이 위치해 있다.

메콩강은 중국 윈난성에서 시작하여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을 관통하는 길이 4,200km의 큰 강으로서 주변의 광활한 지역과 인구를 포괄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주된 수자원이면서, 소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천연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은 국제환경의 호전과 경제우선주의 경향 속에 양자 간 협력이 증대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 하에 다양한 협력기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는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하는 '대메콩강 소지역 협력(Greater Mekong Subregion: GMS)', 1995년 UNDP가 지원하는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그리고 아세안이 주창하고 있는

1995년의 '아세안-메콩강유역 개발협력계획(ASEAN-MBDC)'과 중국과 태국이 제기한 '메콩강 성장 사각지대' 등이 있다.¹¹⁾

이러한 다양한 협력 논의 가운데 가장 활발하고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GMS와 ASEAN-MBDC, 그리고 원난성의 일부지역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포함되는 '메콩강 성장 사각지대'의 협력이다. 특히 1992년에 시작된 GMS는 이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을 개선하고 역내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미 6개국의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의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 교통, 에너지, 통신, 환경보호, 여행, 무역과 투자, 인력개발 등 7개 분야에 걸쳐 약 320억 달러를 투자하는 103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¹²⁾

2001년에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에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GMS는 중·아세안 FTA 추진의 주요 협력사업의 하나로 편입되어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실제로 중국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2002~2005년, 2008년까지 3년에 한번씩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이처럼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메콩강 유역의 사회간접시설과 천연자원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협력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³⁾ 2005년부터는 중국 광시자치구의 메콩강 경제협력 참여가 결정됨으

-
- 11) 메콩강 유역의 국제경제협력의 역사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협력기제에 대해서는 Oliver Hensengerth(2009), "Transboundary River Cooperation and the Regional Public Good: The Case of the Mekong River,"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1, No. 2, pp. 326~349; Mya Than(1997),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11-2 (November), pp. 40~57 참조.
- 12) 周雅育(2006), 「關於瀾滄江-湄公河次地域經貿合作的機個問題」, 『國際經濟合作』第1期, 52쪽
- 13) S. Y. Chia and T. Y. Lee(1994), 앞의 논문

로써 메콩강 경제협력의 지역범위가 향후 중국의 경제중심지인 화남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은 메콩강 유역 개발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강대국들, 일본, 인도, 미국 등의 개입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¹⁴⁾ 특히 전통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일본은 최근 중국의 약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메콩강 유역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¹⁵⁾ 일본은 이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매년 1천여 억 달러에 달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는 경제적 동인 못지않은 중국이 서남지역의 소지역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남아와 서남지역의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탈냉전시대 중국에게 동남아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주요한 경제협력상대이면서 동시에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인접지역으로서 중요한 지역안보 협의대상이고, 또한 역내 질서 재편과정의 영향력 확보가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복합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경무역과 메콩강 유역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윈윈성과 광시성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활발한 경제교류와 협력관계 추진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국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과 안정적이고

14) 이러한 중국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논문으로는 何胜·李霞(2008), 「大湄公河次區域經濟合作態勢及面臨問題」, 『亞非縱橫』 第3期, 43~48쪽; 馬燕冰·張學剛(2008), 「湄公河次區域合作中的大國競爭及影響」, 『國際資料信息』 第4期, 15~20쪽

15) 일본은 2003년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회담에서 메콩강 개발협력을 위해 15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한데 이어서 2008년에도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2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의했다. 馬燕冰·張學剛(2008), 위의 논문, 16~20쪽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세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치외교적 함의도 담고 있는 것이다.

3. 동북지역 초국경 소지역 협력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동북의 소지역 협력은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 간의 소지역 협력, 두만강경제협력[圖們江三角帶經濟合作區], 그리고 환황발해경제협력[環黃渤海經濟圈] 세 가지로 집약된다. 중국의 동북3성 가운데서도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의외로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이 아니라 랴오닝성이다. 랴오닝성은 2007년 기준으로 대북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5%와 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중 간의 교역이 회복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02년과 2003년에는 랴오닝성을 통한 대북 수입이 각각 80%와 81%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 개 무역회사 가운데 100여 개 업체가 단동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¹⁶⁾ 이는 북중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북중 간 교역의 중심축이 심양-단동-신의주-평양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¹⁷⁾

그리고 중국의 동북진흥 프로젝트의 핵심인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잇는 대규모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사업은 창춘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단일 경제벨트로

16) 이종운·김은국(2005), 「중국 동북3성의 개발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68쪽

17) 조은희(2008),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교류의 연결망」, 북중관계 전문가 집중토론회(2008. 9. 25, 성균관대학교) 발제문, 167~169쪽

뚝이 2020년까지 선진 물류기지 및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기지를 건설하여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2,800억 위안(약 45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두만강에서 동해로 통하는 뱃길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나진항 개발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만강 경제협력은 1990년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발전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1991년 UNDP에서 정식으로 두만강 삼각주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두만강 유역에 훈춘·헤이허[黑河]·만주리·타분허[綏芬河] 4개 도시를 개방하고 국무원에 두만강개발영도소조를 설립하면서 9차 5개년계획과 2010년 장기계획 속에 두만강 개발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소지역 협력은 2003년 3월 10차 전국인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동북진흥전략이 공식화되고, 이어서 11차 5개년계획(2006~2010)에서 대외개방 확대,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변경무역 발전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면서 보다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린성의 경우에는 훈춘 합작구를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북중 간에 나선 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도로, 항구 등 협력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참여대상 6개국(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몽골, 북한)이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고 정치·경제 제도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여타 복잡한 역사적 난제를 안고 있어서 일시에 6개국이 참여하는 단일한 지역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단계적으로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즉 1단계는 중러·중북·중몽골의 변경도시 간의 변경경제협력구,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 간의 훈춘-하산 변경경제협력구

와 중국과 북한 간의 훈춘-나진·선봉 변경경제협력구를 설립한다. 2단계는 양국 간 변경경제협력구를 통합하여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 소지역 경제기술무역협력구를 설립한다. 이는 자유무역지대(FTA)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두만강 협력구와 환황발해경제협력과 연합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확대시켜간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중국 내 다른 소지역 협력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협력 정도를 심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시켜간다는 전략을 지니고 있다. 동북지역의 경우에도 소지역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즉 동북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의 일환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소지역 협력, 즉 중국·러시아·북한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삼각주 지역의 두만강삼각대경제협력구와 중국의 요녕·하북·산둥·강소성·북경·천진·상해,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서해안 지역, 그리고 일본의 규슈와 서남지역을 포괄하는 환황발해경제권의 활성화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한중일 간의 FTA다. 이를 위해서도 중국은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즉 우선 한중일 삼국 간에 환황발해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를 수립하고 이를 각국의 영토 전체로 확대해 간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삼국 간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공동시장,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일 삼국의 경제공동체를 러시아·몽골·북한으로 확대시켜 간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동북 소지역 협력은 초기의 랴오닝-북한 소지역 협력이나 두만강 경제협력이나 그 공간적 확대의 대상은 어느 경우에도 한국은 자연스럽게

18) 柳清才·高科, 『東北亞地緣政治與中國地緣戰略』, 352~358쪽

게 포괄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¹⁹⁾

동북지역은 서부지역과 비교할 때 중국 정부의 정책지향이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인식과 배경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지역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개발과 동북진흥이라는 대형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부개발이 50년의 장기간을 기획한 상징성이 강한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동북진흥은 WTO 가입 이후 대형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초미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서부개발은 장쩌민 체제의 정책 테마였다면 동북진흥전략은 ‘조화사회’와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후진타오 체제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시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전략이자 체제적 과제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북진흥전략의 이러한 특징은 동북진흥전략이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16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전략추진의 중심기구인 ‘국무원 동북진흥전략영도소조[國務院振興東北等老工業基地領導小組]’가 조장에 원자바오 총리, 부조장에 두 명의 부총리,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관련 27개 국무원 부장과 주임들이 조원으로 참여하는 등 후진타오 정부의 고위 정부책임자들이 망라되고 있는 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²⁰⁾ 그리고 동북진흥전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목적은 동북지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실현하여 민족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동북지역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지역과 동북아 각국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19) 李鐵立(2004), 앞의 책, 218~220쪽

20) 동북진흥전략영도소조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hinaneast.xinhuanet.com/2005-06/13/content_4426841.htm(검색일: 2007. 11. 10) 참조.

IV. 초국경 소지역 협력의 조건과 과제

일반적으로 변경지역은 지리적으로 장벽기능과 중개기능이 병존하고 있다. 변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벽기능을 약화시키고 중개기능을 강화시켜가야 한다.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의 병행 전개가 변경지역의 중개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변경지역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이동가능성(transferability), 그리고 초경계적 지역정체성(trans-boundary regional identity) 형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²¹⁾

즉 어느 두 지역 간에 공간적 흐름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이 두 지역이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지역의 필요한 부분을 다른 지역이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지역 간에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두 지역 간에 교통로가 없다면 두 지역의 교류는 성립되기 힘들다. 이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언어 소통, 그리고 정치적 관계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협력이 궁극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경계적 지역정체성의 형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활발한 초국경적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질적인 자연환경, 의사소통 가능성, 공통의 민족적·문화적 기반이 지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의 상호보완성과 교통지리적 접근성 등은 기능적인 부분으로서 협력

2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부성(2006),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1호, 22~38쪽 참조.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가장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조건은 지역경제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다. 경제적 필요성에 따른 월경적 접촉은 그 빈도가 늘어감에 따라 물론 양국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교류증가가 반드시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내적인 관계 개선이나 공동체 의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협력지역이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전략적 불신관계에 있을 경우 교류의 증가가 오히려 상호 간 편견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상호협력의 물리적 장벽보다는 정신적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과 비교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인식 등 상호인식의 차이이다. 특히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국가의 식과 중화민족주의로 대변되는 국가민족주의 의식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추세는 월경적 경제협력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지역협력을 통해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고려가 있다면 더욱 이러한 상호 간의 인식 차이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부상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 중심의 소지역 협력이 점차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의 중요한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소지역 협력을 통해 협력지역 내의 상호의존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경을 초월하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여 평화와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희망과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인접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높이고 역내에서 미국·일본 등과의 영향력 경쟁을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동북공정으로 초래된 한국과의 갈등은 동북지역의 쌍둥이 정책의 하나인 동북진흥

전략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도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경지역의 소지역 경제협력은 변경 개방과 주변정세의 안정 등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국경지역을 비롯하여 협력대상 국가와 지역 모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²²⁾ 향후 소지역 협력 추진과정에서의 세부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소지역 협력이 추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지역 협력을 추진하는 주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소지역 협력이 국경을 공유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국제적 기구가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다양한 운영 기제가 작동하여 정책 추진의 혼선을 초래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국가들 간의 주도권 경쟁문제까지 개입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서남지역의 메콩강 지역 협력의 경우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 GMS(Greater Mekong Subregion Cooperation), 아세아·메콩강유역개발협력(AMBDC), 메콩강위원회(MRC), 유엔개발계획(UNDP) 등 여러 지역과 국제기구가 개입되면서 통일된 정책결정과 추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지역 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 내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지역 협력이 본래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협력 지대의 조성에서 벗어나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22) 嚴喬(1996), 「中共의邊貿概況與發展策略」, 『中共研究』 30-12, 69쪽

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단지 연해의 발전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지역협력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신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경제협력의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신장의 입장에서 사실상 대외무역보다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풍부한 원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외자유치라고 할 수 있다.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장의 협력 파트너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자의 입장에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장의 경우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또는 서구 선진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김부성(2006),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1호
- 이중운·김은국(2005), 「중국 동북3성의 개발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 조은희(2008),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교류의 연결망」, 북중관계 전문가 집중토론회(2008. 9. 25, 성균관대학교) 발제문
- 牛仁亮·宋光茂 編(1992), 『圈層開放: 擴大開放的新戰略』,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柳清才·高科, 『東北亞地緣政治與中國地緣戰略』
- 李鐵立(2004), 『邊界效應與跨邊界次區域經濟合作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陳家勤 編(1995), 『沿邊開放: 跨世紀的戰略』,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馬燕冰·張學剛(2008), 「湄公河次區域合作中的大國競爭及影響」, 『國際資料信息』 第4期
- 蘇長和(2010), 「中國地方政府與次區域合作: 動力, 行爲及機制」, 『世界經濟與政治』 第5期
- 楊曉輝(1992), 「東南亞次區域經濟合作」,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編, 『世界經濟區域集團化與亞太經濟合作』, 北京: 時事出版社
- 嚴喬(1996), 「中共的邊貿概況與發展策略」, 『中共研究』 30-12
- 張海明(1993), 「我國參與亞太區域經濟合作的'切割式多層次合作'戰略」, 『亞太資料』 第3期
- 程超澤(1993), 「中國與周邊國家經濟協作圈的構想—走向21世紀的可由之路」, 『財經研究』 第11期
- 周雅育(2006), 「關於瀾滄江-湄公河次地域經貿合作的幾個問題」, 『國際經濟合作』 第1期
- 湯敏(1995), 「成長三角區在亞太地區的發展及對我國的啓示」, 『太平洋學報』 第2期
- 何勝·李霞(2008), 「大湄公河次區域經濟合作態勢及面臨問題」, 『亞非縱橫』 第3期

黃征學, 「中國參與國際次區域合作的基本思路」, 중국 전문가 포럼 (csf), http://csf.kiep.go.kr/www/user/trend/column/columnView.jsp?seq_n=253&(검색일: 2010. 11. 30)

《人民日報》(1996. 3. 20)

Chia S. Y. and Lee T. Y.(1994), "Subregional Economic Zones: a New Motive Force in Asia-Pacific Development," In Bergsten, C. F. and Noland, M., eds., *Pacific Dynam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Washington DC: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Hensengerth, Oliver(2009), "Transboundary River Cooperation and the Regional Public Good: The Case of the Mekong River,"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1, No. 2

Jordan, Amos A. and Khanna, Jane(1995),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The Emergence of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in the Asia-Pacific,"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Winter)

Scalapino, Robert A.(1991 · 1992), "The United States and Asia: Future Prospect," *Foreign Affairs*, 70: 5 (Winter)

Than, Mya(1997),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11-2 (November)



유럽의 지역협력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지역협력 가능성

서강대학교 이규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유럽 지역협력의 특징
- III. 유럽 지역협력의 사례연구
- IV. 동아시아 지역협력 환경과 변화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규영(李奎榮)

국제정치 · 유럽정치 전공, 서강대학교 교수

대표논저로는 『유럽통합과정과 지역협력』(2010, 집문당) 등이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지역협력 가능성

서강대학교 이규영

I. 머리말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유럽 지역은 1950년대부터 지역협력의 단계를 거쳐 통합단계로 접어들었다. 지역협력은 향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제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 통합은 분명한 청사진을 마련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지역협력으로 시작하였다. 동시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자 경제 협력으로 시작하여 유럽대륙 내 인접국들이 단계적으로 참여하여 그 범주가 확대되었고, 공동화폐를 도입한 뒤 본격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협력을 통한 유럽 통합작업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세계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공동노력이었다. 동시에 유럽 통합은 국가중심적 시각을 초월하여 유럽 역내 국가들이 응집하고 단결하는 역사적 실험이기도 하다. 나아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력을 함으로써 다른 대륙 및 지역국가에 대한 단일통상협력체로서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위

상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유럽대륙에서 지역협력은 다양한 형태, 초국가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유럽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며,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통합과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끼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회원국과 인접 비회원국 간의 관계 역시 두드러진다. 유럽 지역 협력을 이해하려면 유럽대륙 내의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유럽대륙과 기타 대륙 간 협력유형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즉 기존 대부분 유럽통합 또는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제반 확대과정을 거치면서 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국가와 아직 미가입한 국가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전개되는 것이 주된 경향이었다. 지나친 이분법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 블록과 비회원국 사이에, 즉 중간적 협력형태의 존재와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즉 유럽연합의 확대는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이라는 단순한 지위변동을 거치기보다 유럽연합과 비회원국들 간의 양자간, 다자간 또는 블록형태의 협력과정을 통하여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도 지역 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다른 대륙에서 전개되는 지역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에 대응하려면 지역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자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이러한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극복되어야 하며, 전제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권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주권문제는 한 국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절대로 포기하기 힘든 주권을 유럽연합에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양도하거나

공유하는 형태로 해결하였다.¹⁾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 간 협력보다 경쟁이 더욱 부각되었다. 지역협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대부분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다.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국가들 간 무역과 투자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이전보다 심화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양상에 부합하는 지역협력구도를 실행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다만 1996년 ASEM 출범과 1997년부터 동아시아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경제위기로 역내국가 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은 기대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지역협력과 통합현상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고, 현재 다양한 가능성과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지역협력 사례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하나의 사례일 뿐 그대로 전용될 수 없다. 유럽 지역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소들이 동아시아에서 일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지라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요소들 역시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의 목적은 유럽의 지역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II. 유럽 지역협력의 특징²⁾

유럽대륙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확대양상은 어느 국가도 거

1) 채재병(2006), 「동아시아의 주권의식과 지역협력: 문화적 정체성의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408쪽

2) 이규영(2010), 『유럽통합과정과 지역협력』, 집문당, 56~65쪽 참조.

스를 수 없는 대세로 고착화되었다. 기능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던 경제적 통합은 신기능주의가 주장하는 정치 또는 국가 엘리트들의 주장에 따른 정치적 통합이라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럽대륙에서 지역협력 패턴은 적어도 제4차 확대, 즉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이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제4차 유럽연합의 통합은 기존 서유럽 국가들을 가입대상으로 한 확대였다. 그러나 2004년 제5차 유럽연합 확대부터 2007년 제6차 확대현상은 기존 가입 패턴과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게 되었다(〈표 1〉, 〈표 2〉 참조).

1989년 중부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의 경우 탈사회주의 과정과 국제관계의

〈표 1〉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2001년 기준)

국가명	인구(백만 명)	면적(1,000km ²)	일인당 GDP(달러)	GDP(10억 달러)
영국	59.65	244.8	22,800	1,360
프랑스	59.55	547.0	24,400	1,448
독일	83.03	357.0	23,400	1,936
룩셈부르크	0.44	2.6	36,400	1,590
네덜란드	15.98	41.5	24,400	3,884
벨기에	10.26	30.5	25,300	2,592
덴마크	5.35	43.1	25,500	1,362
아일랜드	3.84	70.3	21,600	819
그리스	10.62	131.9	17,200	1,819
포르투갈	10.07	92.4	15,800	1,590
스페인	40.04	504.8	18,000	7,208
오스트리아	8.15	83.9	25,000	2,030
핀란드	5.18	337.0	22,900	1,183
스웨덴	8.88	450.0	22,200	1,970
이탈리아	57.68	301.2	22,100	1,273
	378.72	3,238.0		

출전: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http://www.tswoam.co.uk/world_data/world_data_2001_gdp_pc.html 참조 (2001년 12월 1일 검색)

〈표 2〉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2013년 기준)

국가명	인구 (백만 명)	면적 (1,000km ²)	일인당 GDP (달러)	GDP (10억 달러)
영국	63.39	243.6	38,510	2,435
프랑스	65.95	643.8	39,770	2,613
독일	81.14	357.0	41,510	3,399
룩셈부르크	0.51	2.6	107,480	57
네덜란드	16.80	41.5	46,050	772
벨기에	10.44	30.5	43,410	483
덴마크	5.55	43.1	56,210	314
아일랜드	4.77	70.3	45,840	210
그리스	10.77	131.9	22,080	249
포르투갈	10.80	92.1	20,180	212
스페인	47.37	505.3	29,200	1,349
오스트리아	8.22	83.9	47,230	399
핀란드	5.26	338.1	46,180	250
스웨덴	9.12	450.0	55,240	525
이탈리아	61.48	301.4	33,050	2,013
헝가리	9.90	93.0	12,620	125
폴란드	38.38	312.6	12,710	489
불가리아	6.98	110.8	6,990	51
체코공화국	10.16	78.8	18,610	196
루마니아	21.76	238.3	7,940	169
슬로바키아	5.88	49.0	16,930	91
슬로베니아	1.99	20.2	22,000	45
에스토니아	1.26	45.2	16,320	22
리투아니아	3.51	65.3	14,100	42
라트비아	2.17	64.5	13,980	28
몰타	0.41	0.3	20,850	9
키프로스	1.15	9.2	26,315	23
크로아티아	4.47	56.5	13,230	56
	378.72	3,238.0		

출전: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참조
(2013년 11월 21일 검색)

〈표 3〉 유럽연합 가입신청국: 중동유럽 및 발칸 국가

(2001년 기준)

국가명	인구(백만 명)	면적(1,000km ²)	일인당 GDP(달러)	GDP(10억 달러)
헝가리	10.11	93.0	11,200	1,139
폴란드	38.63	312.7	8,500	3,275
불가리아	7.71	110.9	6,200	480
체코공화국	10.26	78.9	12,900	1,324
루마니아	22.36	237.5	5,900	1,325
슬로바키아	5.41	48.9	10,200	553
슬로베니아	1.93	20.3	12,000	229
에스토니아	1.42	45.3	10,000	147
리투아니아	3.61	65.2	7,300	264
라트비아	2.39	64.6	7,200	173
몰타	0.39	0.3	14,300	56
키프로스	0.76	9.3	16,000	97
터키	66.49	780.6	6,800	4440
총 계	104.98			

출전: Ibid.

재편구도 속에서 무엇보다 서방 통합구조에 편입하려고 노력했다. 서방 통합 구조로의 편입이란 곧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근대화와 안정화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동·서유럽 국가 간 여러 분야에서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이 지역 국가 내 일부 정치지도자들은 지역협력의 의미를 상이하게 인식하였다. 우선 체제전환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지도자들은 기존 구체제, 예를 들어 코메콘(COMECON) 내 지역협력을 그다지 비중 있게 여기지 않았다. 탈사회주의화와 더불어 자국의 새로운 사회 및 경제체제의 전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체제하에서 지역협력이 아닌 유럽연합 내지 OECD 회원국들과 정치적·경제적 협력뿐이라고 인식되었다. 이들에게 지역협력이란 중부유럽과 남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의 통합구조에 편입되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반면 구체제하에 있던 지배엘

리트들은 동·서유럽 간 현저한 격차로 인하여 부정적 경험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코메콘 시절의 지역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결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³⁾ 이와 같은 상반적 입장이 탈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중부유럽과 남동유럽 지역에 존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자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적어도 중부유럽과 남동유럽 국가권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지역협력 시도가 있었으며, 기존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 통합·확대정책과 맞물려서 ‘지역’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립되었다.

중부유럽과 남동유럽 지역협력에 대한 결정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 유럽연합과 동중유럽·남동유럽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직접 국경을 대하거나 근접해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국경을 공유하거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국가들은 지역협력에 유리하다는 전제가 이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탈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이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구소련 또는 러시아와 국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소는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우선 이 국가들은 현실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쓰라린 경험을 가진 바 있으며, 체제전환 초기단계에서 구체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탈사회주의 및 체제전환 단계에서 경제적 구조전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절대적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자체적 역량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외부의 지원이 연계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자국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

3) Christian Meier(2000), "Regionale Kooperation in Mittel- und Osteuropa: Bestimmungsfaktoren, Modelle, Perspektiven,"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7-2000, p. 1

럽연합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구축이 최우선 목표였다. 체제전환이 성공하려면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결정적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경제체제의 구조전환을 위해 시장, 국제지원기금과 대외자본의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위해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경쟁을 하는 동시에 지역협력기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신규 투자기업들도 이 지역에 자신들의 시장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경제 및 통상활동을 인접 국가들로 확장하는 동시에 서비스 영역까지 연계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⁴⁾ 이러한 정치·경제 체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특정지역 내에서도 실질적 경제관계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양 지역 간의 전략적 고려가 서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 번째로, 탈사회주의 이전에도 행해졌던 유럽연합과 중부유럽·남동유럽 국가들 간 제반 교류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물론 각종 조약들 내용에 지역협력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환경의 전개에 따른 지역협력의 제도화를 용이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조약 중 예를 들어 '원산지조항'은 유럽연합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사례가 되었으며, PHARE 프로그램 등을 위시하여 유럽연합의 재정수단을 통한 지역협력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환경은 매우 유리한 요소였다.⁵⁾

- 4) Ch. Meier(1997), "Transformation der Außenwirtschaftspolitik: Zur Wechselbeziehung von EU-Integration und regionaler Kooperation der Staaten Ostmitteleuropas," *APuZ*, B 30-31 참조.
- 5) Ch. Meier(1995), "Neue Ansätze einer regionalen Zusammenarbeit in Mittel- und Osteuropa," G. Brunner (Hrsg.), *Osteuropa zwischen Nationalstaat und Integration*, Schriftenreihe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Osteuropakunde, Band 33, Berlin: Berlin Verlag 참조.

1993년 유럽연합은 동유럽에서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이 지역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함에 따라 향후 잠재적 신규회원국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The Copenhagen criteria)’을 마련하였다. ‘코펜하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회원국 자격요건을 설정하였다. ① 정치적 기준으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 및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② 경제적 기준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압력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공동체 법규의 채택 및 준수조건으로,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의 목표에 충실할 것을 포함하여 회원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후보국가들은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통합조건을 완성해야 하며, 유럽연합 입법사항이 자국에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가입원칙과 지원조치에 힘입어 신규 가입지원국가들은 유럽연합과 공식적으로 가입기준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동시에 예비가입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주목해야 될 사안은 기존 유럽연합이라는 지역협력들과 병행하여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비회원국가들이 다양한 지역협력력을 추진하는 노력과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규 가입지원국가들은 유럽연합 기구와 국제체제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유럽연합기구 밖에 창설된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을 회원국으로 이끌어들이면서 지역협력력을 추구하였다. 즉 유럽연합 가입전략은 일차적으로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되, 이 국가들은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 지역협력력을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다. 이 지역협력기구들이 일차적으로 유럽연합과 지역 간 협력을 추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과 여러 협력기구들을 중심으로 개별 회원국가들 간 공동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기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III. 유럽 지역협력의 사례연구

유럽연합의 확대와 더불어 '유럽'의 지리적 외연 역시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5차·6차 확대에 대거 중동유럽 국가와 지중해 연안국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또한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무조건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 상당 부분 유럽 단일시장 권역내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연합 가입 이전에 지역 차원에서 형성되었던 협력체제들은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대륙 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협력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표 3 참조). 따라서 전체 유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범유럽적 차원 다음으로 지역협력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유럽연합은 기존 지역협력체와 연대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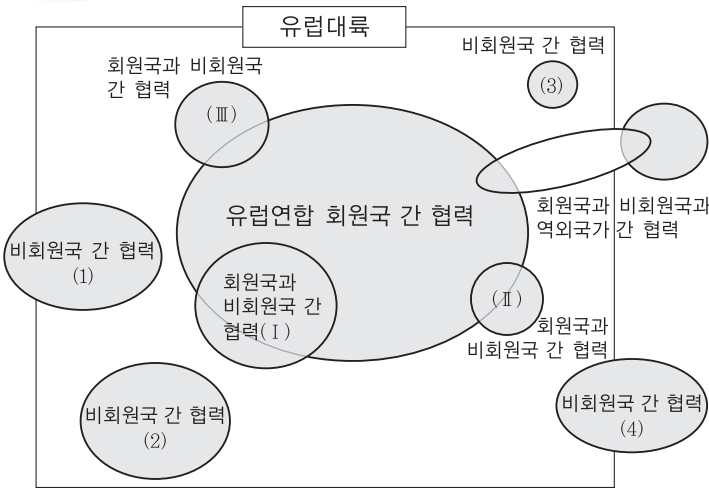


그림 1_ 유럽대륙 내 지역협력 유형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협력체에 대한 협력강화는 국가별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범유럽적 차원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1.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⁶⁾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은 중부와 남동유럽에서 성립한 최초의 지역경제협력체이다. 동시에 이 지역에 위치하는 유럽연합 비회원국들이 자유무역지대를 조직하여 역내 교역을 증진하고, 대서방·대러시아 관계와 같은 대외경제 및 통상현안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기구이다

중부유럽 국가들은 현실사회주의 체제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화결제 및 세계시장가격으로 경제가 운용됨에 따라 대전환이 불가피했다. 각국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코메콘 해체에 따른 국가 간 교역감소 방지와 유럽연합 가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역내 교역을 완전히 자유화시키려는 시도로써 중부유럽자유무역시대가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협력목표를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배경은 이들 국가 내에 발생했던 중대한 변화가 상호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동시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상호 교류시스템, 문화 및 정신사적 유산 나아가 공동의 종교적 전통에 근거한다. 이러한 공통점에 근거하여 각국은 앞서 지적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① 유럽연합 기구들과 협력 또는 접촉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② 시민, 기관, 교회 및 사회단체와 자유로운 접촉을 시도하며, ③ 자유

6) 이규영(2010), 앞의 책, 70~88쪽 참조.

시장에 입각한 경제협력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교역, ④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 ⑤ 생태분야에서 협력 증진, ⑥ 정보, 언론 및 문화 가치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⑦ 소수민족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고자 적절한 조건을 다각적 협력을 통한 합동 추진⁷⁾ 등을 채택하였다.

수차례 정상회담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1992년 4월 23일 중부유럽협력 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1992년 12월 21일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4개국 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993년 3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구소련을 제외하고 중부유럽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 지대가 결성되었다.

중부유럽 4개국은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2004년 유럽연합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때까지 상호 접촉과 관계를 심화·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국가들은 최우선적 목표로 지역협력을 설정하였으며, 서유럽 조직 즉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성공적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그림 1〉, 〈표 4〉 참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 간 관계는 경제적 측면과 정치·외교적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EU 핵심국가들, 즉 독일, 프랑스, 영국은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4개국을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시켜야 하지만, 당시 경제적 관점에서 가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았다.⁸⁾ 하지만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구소련의 영향력

7) 이규영(2010), 위의 책

8) George Kolankiewicz(1994), "Consensus and Competition in the Eastern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70, No. 3, p. 478

〈표 4〉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성립과 변천과정

일시	주요 내용
1990. 04	제1차 정상회담: 상호협력의 필요성 합의
1991. 02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헝가리 3개국 간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한 상호 지원에 합의
1992. 12	폴란드 크라쿠프(Kraków)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헝가리 3개국 중부유럽무역협정 서명
1993. 03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회원국 간 철강제품 수출량의 40%에 대한 관세 철폐
1994. 04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합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① 공산품 관세인하 일정 단축, ② 농산물 관세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인하 일정 단축-무관세 수입품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
1994. 11	폴란드 포즈난(Poznan) 정상회의에서 ① 공산품 관세인하 시한 단축 및 농산물 관세인하 품목 확대에 관한 부칙 1호 채택, ② 자유무역지대 창설 시한을 2001년에서 1998년으로 변경
1995. 01	바르샤바 농업부장관 회의에서 농산물 관세 추가인하 조치 합의
1995. 08	바르샤바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칙 2호 채택
1995. 09	체코 부르노 정상회담에서 ① 자본과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조치 채택, ② 자유무역지대 창설시한을 1998년에서 1997년으로 변경
1995. 12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경제장관 회의에서 부칙 2호의 시행안 채택
1996	슬로베니아 회원국 가입; 전체 철강제품의 80%에 대한 관세 철폐; 농업부문 점차적 관세 인하
1997	일부 '민감한 생산품'(폴란드를 통한 화물자동차 수입)을 제외하고 공산품 수출에 대한 제반 관세 철폐
1997	루마니아 회원국 가입
1998	불가리아 회원국 가입
2002	크로아티아 회원국 가입
2004	폴란드, 체코공화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CEFTA 탈퇴
2006	마케도니아 회원국 가입
200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코소보 회원국 가입; 불가리아, 루마니아-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탈퇴

I: 1992년 기준



II: 2003년 기준



III: 2007년 기준



1992년 기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2003년 기준

슬로베니아 (1996년 가입), 루
마니아 (1997년 가입), 불가리
아 (1999년 가입), 크로아티아
(2002년 가입)

2007년 기준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2004
년 EU 가입과 불가리아 및 루마
니아의 2007년 가입으로 중부
유럽자유무역협정 탈퇴;
마케도니아(2003),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
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
아 등 2006년 가입

* □ 지역이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 지역이 EU 회원국가를 의미함.

그림 2_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변화

〈표 5〉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 현황

(2007년 기준)

국가명	가입일자	인구	면적 (km ²)	GDP in millions (PPP)	GDP per capita (PPP)
알바니아	01.01.2007	3,619,778	28,748	19,920	6,30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01.01.2007	4,590,310	51,209	42,998	10,700
크로아티아	05.12.2002	4,491,543	56,542	68,980	15,500
마케도니아	01.01.2006	2,061,315	25,333	17,350	8,500
몰도바	01.01.2007	4,324,450	33,843	9,821	2,900
몬테네그로	01.01.2007	678,177	14,026	5,918	3,800(2005 통계)
세르비아	01.01.2007	10,159,046	77,474	77,280	10,400
코소보	01.01.2007	2,126,708	10,887	4,000	1,800

〈표 6〉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 현황

(2013년 기준)

국가명	가입일자	인구	면적 (km ²)	GDP in millions (PPP)	GDP per capita (PPP)
알바니아	2007. 1. 1	3,011,405	28,748	26,540	8,20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7. 1. 1	3,875,723	51,197	32,430	8,400
크로아티아	2002. 5. 12	4,475,611	56,594	79,690	18,100
마케도니아	2006. 1. 1	2,087,171	25,713	22,220	10,800
몰도바	2007. 1. 1	3,619,925	33,851	12,360	3,500
몬테네그로	2007. 1. 1	653,474	13,812	7,467	12,000
세르비아	2007. 1. 1	7,243,007	77,474	80,020	10,600
코소보	2007. 1. 1	1,847,708	10,887	13,590	6,274

출전: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참조(2013년 11월 21일 검색)

이 상실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지역을 유럽연합이 빨리 선점함으로써 러시아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EU 국가들과 경제적 격차는 매우 크며,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반이 완전히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가입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EU의 공동 농업정책(CAP)이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국가에까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른 EU 예산의 부담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의 EU 가입은 2000년 이후에야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국가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았다. 즉 유럽연합의 중부유럽 경제지원은 중·동유럽의 경제적 안정이 궁극적으로 유럽 전체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당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의 유럽연합 가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민간경제 발달 정도의 차이 때문에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4개국 공동가입이 아닌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

과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기준에 입각한 적합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⁹⁾ 또한 1995년까지 유럽연합의 회원국 증가는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기존 회원국들이 신규 가입후보국들과 역사적·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기업을 공유하기 때문에 확대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장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드러운 확대와 협력 양상은 적어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웠다. 유럽연합의 기구가 실질적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당시 진행되던 개혁과 더불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통합을 배제한 협력이라는 입장(cooperation without integration)을 취하게 되었다.¹⁰⁾ 이에 대하여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은 당시 상당히 불만을 가졌다. 예를 들어 준회원국 협정은 실질적 경제도움이 되지 못하고, 준회원국 협정으로 인해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국가의 공산품에 대하여 EU의 수입장벽이 제거되었을 뿐 실제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국가의 농산품에 대한 기존 수입장벽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준회원국 협정에도 불구하고 EU시장에 대한 수출확대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에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은 EU 가입일정에 대한 EU측의 구체적 결정을 촉구하고, 동시에 정회원국 가입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2000년까지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EU 가입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에 대한 EU의 입장은 내버려둘 수도 끌어안을

9) *Financial Times*, May 10th, 1995

10) Natalie Lechmanova, "Central European Dilemma: EU or CEFTA Integration?"
<http://www.fatemi.com/CONFERENCES/lechmanova.html>, (2003년 12월 31일 검색)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군사적 요인, 국제정치적 중요성 그리고 러시아의 대중부유럽 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EU 가입은 2004년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¹¹⁾

이와 같이 유럽연합이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바뀐 이후,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고 조세부담과 원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면서,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00년 전후 유럽연합이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취했던 입장은 다음과 같다.¹²⁾

① 유럽연합은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 경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투자와 교역을 촉진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해체할 수 있는 건설적 방법을 찾기 위해 해당 정부 및 관리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 ② 그에 따른 교역 혼란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며,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확대와 교역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③ 유럽연합과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적극 협력한다, ④ 1997년 루마니아 가입과 1999년 불가리아의 회원국 가입을 적극 환영한다, ⑤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의 지리적 확대 및 러시아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권유한다.

11) Martin Dangerfield(2006), "Subregional Integration and EU Enlargement: Where Next for CEFT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44, No. 2, pp. 305~324 참조.

12) "Position Paper on Central European Free Trade(CEFTA) and Intra-Regional Free Trade," <http://www.eucommittee.be/pop/pop1998/Tra/trade16.htm>, (2003년 1월 18일 검색)

2. 중부유럽이니셔티브(Central Europe Initiative: CEI)¹³⁾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중부, 남동부와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서 최초로 수립된 지역협력포럼(Regional Cooperation Forum)이다.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다른 지역협력기구보다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지역에 수립된 지역협력체보다 영향력의 범위가 넓고, 규모도 가장 크다.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출범 당시 유럽에서 안정과 협력을 추구하는 지역 협력포럼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1989년 11월 11일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가 중심이 되어 중부유럽이니셔티브의 기원이 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4개국 협력(Quadrangular Cooperation)’이라 불리는 정치적·경제적·학술적 그리고 문화적 상호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형식으로 조직되었다. 이후 ‘4개국 협력’은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표 5), (표 6) 참조.

2006년 6월 몬테네그로가 유고슬라비아연방, 즉 세르비아와 분리되면서 1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반면 세르비아는 구세르비아-몬테네그로 회원국 자격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로써 현재 회원국은 총 18개국이다(표 5) 참조.

이렇게 볼 때, 중부유럽이니셔티브의 의도는 처음부터 중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노력과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회원국이 1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유럽연합 역외 회원국에 주된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즉 서부 발칸 국가들(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와 코소보를 포함하는 세르비아)과 유럽의 근린외교정책(Neighbourhood Policy)의 대상으로 일부 국가, 다시 말해서 벨라루

13) 이규영(2010), 앞의 책, 102~122쪽 참조.



그림 3_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회원국가

- * 유럽연합 회원국 9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 가입후보국 1개국: 크로아티아
- * 서부 발칸 국가 5개국: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 * 신생 독립국가 3개국: 벨라루스, 몰도비아, 우크라이나

〈표 7〉 중부유럽이니셔티브(CEI) 성립과 변천과정

일 시	주요 내용
1989. 11.	부다페스트 4개국 외무부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협력 합의
1990	체코슬로바키아 가입 (5개국 이니셔티브)
	폴란드 가입 (6개국 이니셔티브)
1991	CEI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합동사무국 설립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연계관계 수립
199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가입 이 조직의 명칭을 중부유럽이니셔티브(Central European Initiative: CEI)로 개칭
1993	마케도니아 및 신생 독립국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각각 개별가입
1995 ~ 1996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가입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행동지침과 절차규정(The CEI Guidelines for Activities and Rules of Procedure)' 합의 오스트리아 트리스트 소재 '중부유럽이니셔티브 정보 및 자료센터, (The CEI Centre fo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CID)' 개설 CEI 협력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기로 합의
1997	'중부유럽이니셔티브 정보 및 자료센터'를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행정사무국(CEI-Executive Secretariat)'으로 변경
2000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가입
2001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협력기금' 창설, '중부유럽이니셔티브 대학' 설립 논의
2006	몬테네그로 가입: 총 회원국 수 18개국

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 대다수 중부유럽이니셔티브 재정자원과 기술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전체 회원국들 또는 일부 회원국들 간 협력(co-operation)과 협의(consultation)를 위한 지역포럼이다.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유엔현장과 헬싱키최종의정서 내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제반 문서원리에 입각하여 활동한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은 이전의 4개국 협력, 5개국 이니셔티브와 6개국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부유럽이니셔티브 정부수반회의와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선언문 및 문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유럽 통합과정의 일부로서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유럽연합기구와 단체들, 특히 유럽연합,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협력이니셔티브들과 상호 공통된 관심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유엔기구, 특히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ECE)뿐만 아니라 E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추구한다.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유럽의 결속(cohesion)을 위한 활동, 즉 궁극적으로 어떠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 유럽을 추구하려 한다. 유럽·대서양 확대전략으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경제수준과 발전 면에서 격차와 불균형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든지 아무튼 궁극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유럽을 건설하고자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유럽대륙의 안정과 안보문제는 새로운 잠재적 위협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뒤떨어진 국가들로 하여금 조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18개 정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부유럽이니셔티브의 기본

목표는 “지역 내 협력을 위한 포럼으로 공헌하며, 중부유럽이니셔티브를 유럽 내 안정과 협력의 요소로 만드는 것”¹⁴⁾이다. 이러한 정의는 아드리아해에서 발틱과 흑해에 이르기까지 지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특수한 관심사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약적인 동시에 응집력을 갖추게 하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중부유럽이니셔티브의 조직과 재정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가피한 것이었다.

중부유럽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협력지향적이고, 안정적이며, 하나되는 유럽을 건설하려는 사라예보선언을 계기로 각국 정부수반들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시 말하여 중부유럽이니셔티브의 전략적 목표로서, 유럽의 경계를 없애면서 통일된 유럽으로 결속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럽대륙 내 모든 국가, 지역, 거주민과 시민을 포함하면서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을 건설하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저발전국가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키며, 조속한 발전과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한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중부유럽이니셔티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되는 활동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의 결집과 연대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고자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14) “The purpose of the CEI is to serve as a forum for co-operation in the region, being this an element of stabil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quoted in http://www.ceinet.org/view/01/01_02.htm, (2003년 12월 30일 검색); “Central European Initiative Guidelines and Rules of Procedure,” quoted in http://www.ceinet.org/view/01/01_02.htm, (2003년 12월 30일 검색) 참조.

즉 ① 전체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② 특별히 유럽 연합과 정치대화를 장려하고, 유럽기준을 최저발전 국가에 전이시킴으로써, 유럽 통합과정에 전체 회원국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③ 체제전환 중에 있는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회원국가들의 경제적·사회적·법적 그리고 기타 전환 작업을 강화한다.

중부유럽이니셔티브가 협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은 국제적 공동체, 특별히 유럽연합과 다른 유럽 및 국제기구들과 함께 '유럽 내 결집과 연대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럽 내 결집과 연대전략'이 중요한 대외적 행동전략으로 채택되는 배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현상, 그리고 역내 경제발전, 인종 간 긴장관계, 소수 민족 문제, 나아가 조직범죄 등 상존하는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에서 하위지역 협력이니셔티브 현상의 확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유럽이니셔티브 전략은 보다 협력지향적이며, 안전하고 안정된 유럽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둔다. 바로 이 점이 회원국 정부수반들이 국제공동체, 유럽연합, 유럽과 국제기구, 지역그룹, 비정부기구들, 사적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조직들로 하여금 중부유럽이니셔티브 전략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요청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총체적으로 중부유럽이니셔티브의 협력분야는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오늘날 중부유럽이니셔티브는 정치문제, 예를 들어 코소보나 마케도니아 지역 분쟁조정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최초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 2개국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7개국이 더 가입하여 현재 9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나머지 9개국은 비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몰다비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공동목표 하에서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회원국들은 중부와 남동 유럽에서 지역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양상은 유럽대륙에서 평화와 안정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발틱해 국가위원회(The 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CBSS)¹⁵⁾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후 동서 간 냉전이 종식되고, 발틱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수십 년간 동서 냉전으로 이 지역이 사실상 분단되었다가 발틱해에 인접한 국가들은 다시 발틱해를 중심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2년 3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코펜하겐에서 이 지역 외무장관들이 회합하여 창설한 지역 간 정부협력을 위한 기구가 발틱해 국가위원회이다. 각국 외무장관들은 발틱해 국가 간 기존 협력패턴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를 위해 발틱 국가 내 협력과 조정의 심화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포괄적 지역포럼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당시 유럽에 발생하였던 급격한 변화현상에 유의하였다. 즉 기존 대결과 분열 양상이 동반자관계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유럽 질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와 세기적 전환양상을 계기로 발틱해 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고, 정치적·경제적 전환을 지원하는 주요 기구로 발전했다. 창설 이후 발틱해 국가위

15) 이규영(2010), 앞의 책, 125~139쪽 참조.

원회는 발틱해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다국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1992년 3월 코펜하겐에서 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라트비아·리투아니아·노르웨이·폴란드·러시아·스웨덴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95년 아이슬란드가 가입하였다. 따라서 현재 11개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9) 참조. 창설 이후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지역정치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역동적으로'¹⁶⁾ 발전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이 위원회는 발틱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을 추구하는 회원국 간 하위국가단위 연계망 그리고 유럽연합과 중재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배경은 회원국이 일단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공유하면서, 이른바 노르딕 국가들과 독일을 포함하여 이 지역 내 유럽연합 가입후보국들과 러시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앞에서 설명하였던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과 중부유럽이니셔티브처럼 유럽연합 회원국, 향후 가입예정국, 비회원국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서방과 동방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보, 협의와 조정을 위한 하위지역협력체로서 발틱해 지역에서 유럽을 평화적으로 '공동성장' 시키려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참여하며, 구소비에트체제가 붕괴되면서 파생된 '경직된' 안보문제(예를 들어 발틱 국가들의 향후 NATO 가입문제 등)는 배제되었다. 따라서 기능과 담당 업무 면에서 '부드러운' 비군사적 문제(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나 국제범죄조직 등) 영역에서 특수한 영역을 다

16) H.-M. Birckenbach & C. Wellmann(2001), "Das Dilemma der EU-Osterweiterung", "Was ist der Ostseerat?", <http://www.infobalt.de/2001/cbsb> 재인용. (2004년 12월 5일 검색)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림 4_ 발틱해 국가위원회 회원국가

루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와 정치적 사안이 배제된 실질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더라도 또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NGOs나 국가들이 상호 교류하고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실질적 장이 마련된다.

또한 발틱해 국가위원회의 특징으로 하위국가 단위, 예를 들어 지역, 도시와 자치단체, 경제기업과 다른 비국가기구들도 각종 활동영역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사회협력행위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북유럽 정치 문화에서 유래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유럽 5개국은 특히 행정구역과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비국가적 기구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 연계망을 집중적으로 구축한 바 있기 때문이다.¹⁷⁾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17) H. Hubel & S. Gänzle(2001), "Chancen," *Das Parlament*, Wochenzeitung (Juni)

국가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협력과정을 계속 조정하고 추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정부 간 협력(intergovernmental cooperation)을 위한 지역 포럼이다. 즉 발틱해에 접하거나 연결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초국가적·국가적·하위국가 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지역협력기구다. 예를 들어 농업, 유아문제, 문화, 경제문제, 교육, 에너지, 재정, 건강, 정보기술, 내부, 사법, 노동, 사회문제, 우주공간계획, 통상과 산업, 교통, 청년문제 등이다. 그리고 발틱해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즉 국경통제, 시민보호, 세관, 일반 법률소추문제, 조세행정 등이 다루어진다.¹⁸⁾ 다만 군사와 방위문제의 경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우선 협력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협력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로 새로운 민주기구에 대한 지원(Assistance to new democratic institutions)이다. 발틱해 인접국가들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 인권존중과 경제성장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 정치체제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특히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기구가 보호되고, 지원받으며,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발틱해 국가위원회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회원국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신생 민주국가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인권에 관련된 제반 문서를 포함한 중요 CSCE 협정들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하였다.

18) "Facts about the CBSS: History," <http://www.cbss.st/about/dbaFile663.htm?1=1&print=true>. (2004년 1월 3일 검색)

따라서 발틱해 국가위원회는 회원국 간 민주적 가치에 관련된 경험을 교환하는 포럼(Forum of experience exchange)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회원국들은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토론하고 비교하는 공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비정부기구들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 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르샤바 등에 위치하는 민주기구와 인권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유럽 이사회 인권활동과 관련된 다른 조직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로 경제·기술지원과 협력(Economic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이다. 발틱해 인근 국가들의 각국 각료는 발틱 지역이 유럽에서 새로운 성장지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러한 발전은 유럽에서 경제와 정치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⁹⁾

발틱해 국가위원회가 지역 간 정부협력체로 1992년에 출범한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예를 들어 ① 교역과 투자와 관련하여 지역 간 경제적 장애물 제거, ② 핵과 방사능 안전망 증진, ③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킴으로써 회원국 간 상호 신뢰도 구축, ④ 초국가적 협력 향상, ⑤ 유럽 교수단 프로그램(The Euro Faculty Programme) 방식을 도입하여 발틱 국가 내 주요 대학과 러시아 칼리닌 국립대학에서 커리큘럼과 교수방법의 획기적 개선, ⑥ 북유럽 지역협력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연계망(The EU's policy frameworks) 구축²⁰⁾ 등이다.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발틱해 국가위원회 창설 멤버의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지역협력체로서 발틱해 국가위원회에 대

19) "1992 CBSS 1st Ministerial Session—Copenhagen Declaration," <http://www.cbss.st>, (2006년 3월 6일 검색)

20) "The 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CBSS," <http://www.cbss.st>, (2006년 3월 6일 검색)

한 지원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전체 역량에 의존하며, 유럽연합의 예산은 개별 회원국 예산과 다르며, 따라서 비정부영역의 활동에 대해 독자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실상 기존 유럽연합이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협력하는 범주는 과대평가될 수 없다. 유럽연합의 각 부서별 사무국이 나름대로 비정부기구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EIDHR Compendium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럽 민주주의와 인권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법의 지배를 받는 다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존중을 도모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지원한다.”²¹⁾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민주주의와 인권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비정부기구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유럽 시민들 스스로 인정한 필요에 따라 인권이니셔티브는 주로 비정부기구를 통해 활동한다. 동시에 비정부기구들은 1999년 제출된 결의안(Regulations)뿐만 아니라 1998년 7월 집행위원회 편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제반 절차를 고려하면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한다.”²²⁾

유럽연합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홀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관계를 맺으며 활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1999년부터 총 7,530만 유로가 배정되고 있다.²³⁾

21) “CBSS Member States’ Policies on, and Assistance Schemes for, NGO Co-operation in the Baltic Sea Region,” 24 April 2001. http://www.cbss-ngo.de/2001/cbss/cbss+NGO_workgroup.pdf. (2003년 8월 11일 검색)

22) 위와 동일.

23) 보다 자세한 정보는 EIDHR Compendium 2000과 <http://www.ehrfoundation.org>를 참고할 것.

4. 흑해경제협력(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²⁴⁾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질서 하에서 흑해 지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각각 침예하게 대립하던 현상이었다. 그러나 1989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다양한 문명과 종교 그리고 정치질서가 각축을 벌이던 이 지역에는 다시 절대적 지배국가 또는 지배질서가 없는 공백지역으로 되었다. 냉전기간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가 이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지리적 근접성·공동역사·문화적 연대 그리고 국가경제의 공동발전과 같은 공통요소를 자산으로 삼아 상호 이익과 번영을 위해 인접국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흑해지역을 협력과 공동번영의 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양한 협력형태가 아래로부터 위로 또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국가들도 이러한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냉전기간 터키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위치한 까닭에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파트너십을 누렸고,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유럽 측 동맹국들은 터키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지위가 미국과 유럽 측 동맹국으로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²⁵⁾ 게다가

24) 이규영(2010), 앞의 책, 142~158쪽

25) Arkady Moshes(2003), "Littoral States and Region Building Around the Black Sea," Oleksandr Pavliuk and Ivanna Klymush-Tsintsadze (eds.), *The Black Sea Region: Cooperation and Security Building*, Armonk, N. Y.: M. E. Sharpe, p. 61

경제적 이유로 1990년 당시 터키 대통령 투르구트 외잘(Turgut Özal)이 경제적으로 흑해지역을 안정화시키고, 터키 기업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흑해경제협력의 창설을 제안하였다.²⁶⁾ 1990년부터 터키는 흑해지역에 대해 본격적이고도 적극적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흑해-카스피해-코카서스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연합체를 창설하여, 흑해와 주변지역을 통합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²⁷⁾ 무엇보다 탈냉전 이후 터키는 전통적인 군사적·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구소련을 계승한 공화국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동시에 당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역시 양국의 외교정책에서 전통적으로 흑해지역을 중시하는 입장이 터키의 외교정책과 맞아떨어졌다. 이에 따라 흑해지역에서 일종의 지역주의를 강화하려는 터키의 제안에 두 나라는 적극적으로 임하였다.²⁸⁾

이러한 배경하에서 흑해경제협력은 1990년 터키가 최초로 제안한 것을 토대로 조직되었고, 1992년 6월 25일 11개 국가(6개 흑해연안국인 불가리아, 그루지야, 터키,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및 몰도비아) 원수와 정부수반들이 터키 정부의 초청으로 이스탄불에 모여 '이스탄불 공동선언(The Istanbul Declaration)'을 발표하고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공동선언에서 우선 첫 단계로 흑해지역을 세계경제지역으로 통합시키고,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시키며, 흑해 해양지역을 평화, 안정과 번영의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보스포루스 선언(The Bosphorus Statement)'을

26) Sedat Laçiner(2003·2004), "Özalism (Neo-Ottomanism): An Alternative in Turkish Foreign Policy?"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 1, No. 1-2, <http://biibf.comu.edu.tr/sedatlanciermark.pdf>, (2008년 7월 28일 검색) 참조.

27) Arkady Moshes(2003), p. 66

28) Arkady Moshes(2003), p. 69

채택하여,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유럽안보협력기구 원칙을 준수하기로 선언하였다.

이 두 문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발전양상을 나타낸다. 첫째로 냉전종식 이후 보스포러스 선언은 유럽안보협력기구 원칙에 충실하려는 흑해지역 국가들의 최초 성명서다. 둘째로 2천만 제곱미터 면적을 포함하는 흑해협력지대 창설은 유럽, 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중동 사이에서 중추적 위치에 자리한다. 동시에 3억 5천만 명의 잠재시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지역일 뿐만 아니라 여러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능한 인적 자원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러한 협력행위는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이 흑해경제협력 회원국들은 ‘갈등보다 협력을 추구’하고,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유럽에서 또 다른 분열을 피한다’²⁹⁾는 서로 연관되는 동시에 상승작용을 추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로써 흑해경제협력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다국적 협력을 위한 지역기구로서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이 되었다. 동 기구는 설립 이후 1995년 5월 15일 조직적 틀을 마련하여 이스탄불에 사무국을 설치키로 하였다. 또 1998년 6월 5일 알타 정상회담에서 헌장을 결정하였다.³⁰⁾ 헌장 채택에 뒤이어 본부규정, 면책과 특권에 관련된 프로토콜, 직원규칙과 규정을 확정하여 조직에 필요한

29) Mustafa Aydin(2004), “Europe’s next shore: The Black Sea region after EU Enlargement,” Th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Occasional Paper*, No. 53 (June), <http://aei.pitt.edu/1907/01/cc53.pdf>. (2008년 7월 28일 검색)

30) “Charter of the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http://www.bsec.gov.tr/charter.htm>. (2008년 7월 28일 검색)

기초작업을 완성하였다.³¹⁾ 그리고 1999년 5월 1일자로 각국 의회로부터 비준절차를 거쳐 국제적으로 법적 정체성을 갖춘 '지역경제기구'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흑해경제협력은 흑해지역을 다원민주주의, 사회정의, 인권, 법의 지배, 기본적 자유, 자유시장 및 경제변영과 같은 공유된 가치에 기초하여 평화, 안정과 번영의 바다로 만들려고 한다.³²⁾ 흑해경제협력은 창설함으로써 흑해 전체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며, 이 지역에서 경제회복과 번영의 토대로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급속한 개혁을 주도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현재 코카서스 지역과 발칸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흑해경제협력 회원국들의 최우선적 목표는 회원국들 대부분이 상호 어려운 정치와 군사적 갈등시기를 거친 뒤에 흑해지역을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지역으로 바꾸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① 거시적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반 법적 토대의 확립과 통상 증진, ② 개별 국가의 안정과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지지 유도, ③ 자본시장의 증진으로 요약된다.³³⁾ 이 기구는 주요 경제협력의 경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전략(a project-base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2001년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미래 흑해경제협력 경제의제(The BSEC Economic Agenda for the Future)'에 따르면 합동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합동프

31) "Message by the New Chairman of BSEC Council of Ministers, H. E. Mr. Ismail Cem," <http://www.mfa.gov.tr/PrintPageE2.asp>. (2003년 8월 14일 검색)

32)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2003)," <http://www.mfa.gov.tr/grupa/afkeid.htm>. (2003년 8월 11일 검색)

33) "Message by the New Chairman of BSEC Council of Ministers, H. E. Mr. Ismail Cem," <http://www.mfa.gov.tr/PrintPageE2.asp>. (2003년 8월 14일 검색)

로젝트는 가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흑해지역의 국가경제에 대한 내적 개혁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흑해경제협력은 ① 흑해지역에서 경제개혁과 민주적 전환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초지역적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② 예측할 수 있는 시간 범주 내에 완성될 수 있는 행동, 프로그램과 합동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③ 실행가능성 연구에서 프로젝트 완성이로 이행을 촉진시킴으로써, ④ 국가 간 조정기제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협력분야에서 다른 조정기제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킴으로써, ⑤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두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목표를 두면서 관련 회원국들이 합의한 초국가적 협력을 장려하면서 흑해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³⁴⁾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거시경제적 개혁의 도입, 강력하고 탄력 있는 금융체제의 확립, 기존 경제기구들의 시장경제에 적응, 국가별 안정과 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장려, 생산과 서비스 시장의 규제철폐, 새로운 기술이용 독려 그리고 회원국 간 경제전문가 교환 장려 등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³⁵⁾

다른 한편으로 흑해경제협력은 일차적으로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공식적 입장으로 정치·안보문제에는 비중을 덜 두었다. 그러나 1992년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흑해지역 간 경제협력이 증진되는 것은 지역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로 간주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³⁶⁾ ‘흑해협력 및 번영지역(A Black Sea Cooperation and Prosperity Region)’을 창설하려는 사람들은 흑해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흑해지역을 평화, 안정과 번영의 안식처로 바꾸는 것’이었다.³⁷⁾

34) Mustafa Aydin(2004)

35) 위와 같음

36) “Charter of the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op. cit.*

37) Turkish Ambassador (retired) Sükrü Elekdag, “Karadeniz Isbirligi ve Raf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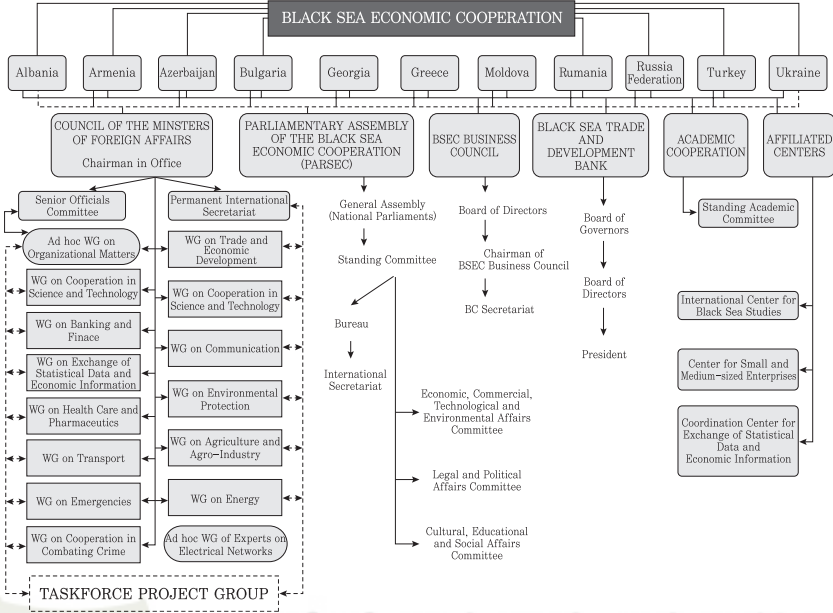


그림 5 흑해경제협력 주요 기구

대부분 회원국들은 이 기구가 발전하려면 안보문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2002년 6월 25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창설 10주년 정상 회담에서 각료이사회로 하여금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흑해경제기구의 기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수단을 강구하도록' 합의하였다. 이후 흑해경제협력은 안보협력문제를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흑해경제협력은 앞서 언급하였던 주요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① 정부 차원, ② 의회 차원, ③ 대기업 차원, ④ 은행과 금융 차원, ⑤ 학술과 과학 차원 등(표 7 참조).

Bolgesi,” *Cumburiyet*, 20 February 1990; and “Karadeniz Ekonomik Isbirliği,” in Sebahattin Sen (ed.), *Yeni Dunya Duzeni ve Turkiye* (Istanbul: Baglam, 1994), pp. 207~208. 본 논문의 원전 p. 23에서 재인용

그 밖에도 흑해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다각적 협력틀을 구축하고 있다. 즉 구체적 협력영역으로 통상과 경제발전, 은행과 금융,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수송, 농업과 농공업, 건강보호와 제약, 환경보호, 여행, 과학과 기술, 통계자료와 경제정보의 교환, 세관과 기타 국경기구 간 협력, 인적 접촉, 조직범죄소탕, 마약·무기와 핵물질의 불법거래금지 그리고 제반 테러 행위와 불법이주 방지 등이 해당된다.³⁸⁾ 동시에 이 기구는 기구의 발전과 다변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의 내적 역동성에 의존한다.

IV. 동아시아 지역협력 환경과 변화

1. 지역협력의 필요성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 협정체결로 가늠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하다시피 유럽의 지역주의 협정체결은 매우 활발하다. 동아시아의 경우 1992년 제4차 ASEAN 정상회담 결과로 체결된 AFTA가 유일한 지역주의 협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일부 국가를 연결하는 국지적 지역주의(sub-regionalism)화 양상을 보인다.³⁹⁾ 이러한 양상임에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세계화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하다. 박경선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⁴⁰⁾ 첫째로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이다.

38) "Charter of the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http://www.bsec.gov.tr/charter.htm>, (2008년 7월 28일 검색)

39) 박경선(1999), 「유럽경제통합에 비추어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과 전망」, 『EU학 연구』 제4권 제2호, 119쪽

40) 박경선(1999), 위의 논문, 126~128쪽 참조.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며, 기존 자유무역협정도 심화·확대되는 추세다. 다자주의를 인정하면서 다자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국가들의 전략적 통상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배타적 지역주의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지역주의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진 상황이다. 결국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세계무역 경쟁에서 살아남는 현실적 대처방안이다. 둘째로 역내교역의 활성화와 역내분업의 고도화다. 역내교역의 비중이 증대할 때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된다. 셋째로 공동이익의 추구다.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적 의존성 강화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쌍무적 방식보다 동아시아 다자적 입장에서 접근할 때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 외환위기는 역내 경제위기시 지역 내 정책협조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 넷째로 해외투자 촉진과 거점지역의 확보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자유화 조치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 조치도 포함한다. 따라서 역내 국가 간 투자활성화와 역외국가로부터 투자 유발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지역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형성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가 국제정치적 힘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주의 형성은 현실적으로 지역주의가 추구하려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역시 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정책목표의 수렴성,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등이 해당된다. 충분조건으로 기대이익의 존재,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각국 간 상품성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상대국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 기타 지원요인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⁴¹⁾

2. 지역협력의 장애요인

앞서 지적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역협력 사례와 달리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자체 내 어떠한 지역협력체도 구체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않다. 범세계적 지역주의 현상에 대응하고자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 구상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관련국들의 소극적 태도와 역외국의 압력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상당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ASEM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1997년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공동대처 메커니즘이 부재한 관계로 속수무책이었다. 현재까지도 동아시아 지역협력 내지 지역통합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단계까지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과 같은 사례를 연원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예를 들어 ASEAN처럼 1960년대부터 시도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환경은 유럽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고,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아에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 볼 때 - 후술하는 바와 같이 - 동아시아 지역이 보여주는 특유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지역협력과정에서 상호 보완적 기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지역주의 문제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역협력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맨스필드와 밀러

4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경선(1999), 위의 논문, 128~129쪽 참조.

(Mansfield & Milner)가 주장하는 「새로운 지역주의 물결」 논문은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⁴²⁾ 이 논문은 양 사례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환경의 상이성, 민주적 발전의 정도, 지역협력의 리더십, 정치적·역사적 특수성, 제도형성의 미비문제,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의 결여문제 등을 강조한다. ① 지리적 근접성은 지역협력의 제일조건으로 상정된다. 동아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화 현상과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오히려 정치·문화적 관계가 깊은 국가 간 경제협력 또는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들 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② 경제적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구조와 발전 정도는 훨씬 격차가 난다. 유럽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경제체제를 지닌다.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력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체제 자체도 상당히 다르다. ③ 민주적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우 대부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다원적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다각적 접촉이 가능했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내부적 정치적 무질서 그리고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 정치구조 때문에 외부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이 결여되어 있다. ④ 지역협력의 리더십 면에서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역내 영향력이 큰 국가들의 선택과 협상 주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우 이에 버금가는 국가가 마땅치 않다. 중국은 민주화되지 못한 강국이며 일본은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다. 한국은 실질적 리더십이 충분하지 못하나 많은 경우 중간자적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⑤ 정치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

42) Edward D. Mansfield & Helen V. Milner(1999),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Spring), pp. 589~627

럽 지역협력은 특수한 정치적·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었으나, 동아시아의 경
 우는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결여되어 있다. 아직도 상호
 긴장과 갈등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⑥ 제도형성의 미비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지역협력은 초기부터 기존 제도와 기구에 바탕을 두었다. 이
 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기구가 형성되고 제도화될 수 있었다. 반면 동아시아
 는 제도화 수준이 일천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초국가적 제도 형성에
 소극적이었다. 초국가적 기구보다 정부 간 협상에 더 의존했다. ⑦ 지역적 정
 체성을 기준으로 할 때, 유럽은 오래전부터 종교·언어·문화 면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상호 이질적 경향이 강하게 존재
 하였다.

이 기준을 두고 볼 때 지역협력은 공통의 위협이나 위기에 직면한 일련의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이 시도할 개연성이 가장 크며, 경제적 상호의존은
 지역협력에 필요조건이 되며, 높은 민주발전 수준과 제도화를 추진할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역내국가들 내부적으로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다. 즉 동아시아 역내
 무역 의존도는 50% 정도인데 이는 유럽연합의 6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50% 이하인 NAFTA보다 높다. 또한 경제력 집중 역시 일본의 경우 역내 경제
 력의 70%를 차지함으로써 NAFTA 내 미국의 85%보다 작으나 EU 내 독일의
 25%보다는 높기 때문에 지역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ASEAN+3 협력구도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지역협력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히 모색되지 않았다.⁴³⁾

43) 채재병(2006), 앞의 논문, 415쪽

2) 국가주권문제

지역협력의 증대와 강화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국가들의 주권문제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 주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지역협력은 일시적이고 낮은 수준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즉 주권문제의 해결 없이 지역협력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주권은 역사적으로 성립된 산물이며 규범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지닌다. 주권은 한 국가가 대내적으로 최고의 힘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주체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유럽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에서 주권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었으며, 국가별로 차별적 주권형태를 보인다.⁴⁴⁾

유럽의 경우 주권문제는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정형화되었다. 한 국가의 주권은 일정한 영토를 기준으로 배타적이고 중앙집권적 지배가 확립되면서 대내적 최고권(supremacy)이 부여되었고, 다른 지역의 조직들과 경쟁 및 협력을 통해 대외적 독립성(independence)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적 인식하에서 유럽에서 주권은 대내적 특성보다 유럽 국제사회에서 이념적으로 존재하던 산물이었다. 동시에 주권문제에 관한 한 주권의 강화, 약화 또는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가중심적 입장, 시장중심적 입장,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에 근거한다. 결국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로 국가가 자국경제의 보호에만 중점을 두는 전통적 역할에서 자국경제를 세계경제에 맞추어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⁴⁵⁾ 이러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축적되

44) Stephen D. Krasner(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P; Alexander Wendt(1995),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pp. 71~81 참조.

45) David Held et al.(1999), *Global Transformation: Politics, Economics and*

어 유럽의 공동운명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주권의 비배타적 성향을 배경으로 유럽연합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아시아의 주권이해 역시 역사적 산물이자 진화적 변화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오랜 기간 배타적이고 중앙집권적 지배의 내재적 과정을 거쳤으나, 동아시아의 경우 다수 국가들이 식민지 과정을 거쳐 이후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권력구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치기 힘들었다. 또 탈식민화 과정부터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대응방식이 상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동아시아 주권이 계속해서 배타적 성향을 띠게 되었으며 국가의 절대적 이익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냉전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양극질서 또는 독자노선 등 어느 입장에 처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주권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하고 풍부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자율적 주권 확립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적 환경에서 한층 자유로운 주권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배타적 주권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탈냉전 국제질서를 맞이했다. 결국 유럽의 비배타적 주권인식과 동아시아의 배타적 주권인식이 지역협력의 유연성을 좌우하는 기본적 배경이 되었으며, 양 지역의 차별성에 대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동아시아 지역에 다자적 접근방식이 적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은 유럽연합과 같은 다자적 협력체 대신 양자주의적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도 세력균형에 따른 안보대결구

Culture, Stanford: Stanford UP; Robert Keohane & Joseph S. Nye(2000), "Globalization: What's New? What's Not (And So What?)," *Foreign Policy*, No. 118 (Spring), pp. 104~119 참조.

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자주의 대신 크고 작은 양자주의가 두 개 존재한다. 작은 양자주의는 한미·한일·북중·북러 간 체결된 양자적 군사협력이다. 큰 양자주의란 대륙의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해양의 한국·일본·미국 간의 대결을 의미한다. 탈냉전시대 동북아 지역질서가 양자적 성격을 띠는 주된 배경으로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강대국의 적극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역면에서도 양자주의는 마찬가지다. 한·중·일 3국 간 교역은 매우 긴밀하지만, 이들 국가 간 다자적 경제통합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이들 간 교역과 투자는 날로 증가하지만, 자체적 경제교류를 저해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제거에는 주저하고 있다. 또 3국이 각각 역외국과 자유무역협력(FTA) 체결에는 적극적이나 상호 간 FTA 체결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3) 역내 다양성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과거 냉전이라는 정치적 요인으로 지지부진했다. 역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상호 대립하여 전체적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구도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에도 상당기간 담보상태였다. 이는 역내 다양성 때문이었다. 즉 역내국가들이 영토와 인구 규모, 경제발전 수준, 정치체제의 상이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점이 더욱 크게 부각되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과 동남아 지역 간 역사·문화·종교·인종적 간극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은 정부차원의 지역협력 기반이 매우 부실하지만, 동남아 지역은 ASEAN을 중심으로 30년 이상 지역협력 경험을 갖고 있다.

4) 정치적 신뢰 부재

동아시아는 정치·안보 면에서 지역협력에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일, 일·중 간 영토문제가 남아 있다. 과거사와 영토문제는 동북아 3국 간 지역협력을 어렵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또 동남아 국가들 간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에서 역사의식문제 역시 관련 국가들 간의 정치적 신뢰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는 현재까지 지역경제협력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 일본 총리가 정기적으로 전범이 안치된 신사를 방문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위와 중국의 경우 이데올로기의 종언에 따른 대안을 민족주의에서 찾는 듯하다. 한반도에서는 남북의 대치로 긴장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경우 일본인 강제납치문제로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간의 신뢰부재는 부정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과거사의 극복은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이고 필수적 조건이다.

5) 일·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

일본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고, 이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받는다. 양국은 지역패권경쟁에 몰입해 있고,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따른 공백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중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하려고 시도하며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려 한다. 반면 중국 역시 일본의 주도 노력에 유보적 태도를

취한다. 엔화경제권에 대항하여 중화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게다가 양국 모두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견인할 만큼 충분한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고, 중국은 경제적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6) 미국의 유보적 입장 또는 반대

미국의 유보적 입장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부진한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은 동아시아 자체의 지역협력에 부정적이고 유보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아시아인들만의 지역협력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초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결성 초기에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 구상을 반대하면서 무산시켰고, 심지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동참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또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일본이 제안했던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 구상에도 기존 IMF의 위상에 장애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유로화 출범 이후 달러화의 기축통화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동아시아 엔화 경제권 구축도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은 세계가 미국·유럽·동아시아 등 삼각체제로 정립되는 것에 매우 유보적이다. 표면적으로 삼각체제는 항상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공격하는 불안정한 체제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 아시아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노선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 일·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와 미국의 유보적 태도로 동아시아 국가 중심의 지역협력체 구성이 생각한 대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3. 지역협력의 긍정적 요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들은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경제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럽의 지역협력 내지 통합사례가 세계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자 역외국가에 대하여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에서 출발하였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세계화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최소한 다음 조건들을 공동으로 인식한다면 동아시아 지역협력도 긍정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지역협력은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관련 국가들이 지역협력만이 급변하는 외적 환경에 적응하고 어떤 형태로든 유리하다고 보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다.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잠재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1) 고도성장의 잠재력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경제규모 그리고 성장속도를 고려하면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총인구는 거의 17억 명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구규모는 미래의 광대한 잠재적 시장을 가능케 하는 수적이다. 1998년 현재 동아시아 경제규모는 6조 7천억 달러로서 세계 총생산의 23.2%며,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규모는 세계 총무역의 20%를 차지한다.⁴⁶⁾

이러한 규모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으나,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을 고려한다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중국은 10% 이상의 폭발적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960년 이후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것 이상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세계 경제권이 북미,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로 구분된다. 동아시아의 경제규모가 다른 지역과 규모 면에서 작으나, 경제발전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약 7%를 기록한 데 비하여, 유럽과 북미의 경우는 연평균 약 3%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⁴⁷⁾

2) 상호의존의 심화

동아시아 역내교역 현황을 보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율이 심화된다는 증거기도 하다. 1990년까지 30%에 머물렀던 역내교역 비중이 1995년도에 40%로 증가하고, 1997~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기간에도 이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유럽연합이 고도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고 역내교역 비중이 약 60%임을 감안한다면, 역내무역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없는 동아시아의 경우는 매우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2003년도 기준으로 동아시아 역내교역 의존도는 50%에 육박하였고, 이는 1970년의 유럽연합 12개국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46) Kyung-Tae Lee(1999, 10),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ast-Asian Region」,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1차회의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쪽; 배궁찬(2000),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보고서, 14~15쪽

47) Kyung-Tae Lee(1999, 10), 위의 논문; 배궁찬(2000), 위의 논문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성장의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제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협력의 틀이 마련된다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 잠재력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예상되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 패턴이 자연적 협력 차원이 아닌 공식적 지역협력 차원으로 전환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지역국가들에게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하였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이 지역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역내국가들은 이러한 중대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역금융감시체제와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환율공조, 협조융자기구, 채권시장 강화 그리고 특히 AMF의 구상 등 금융통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⁴⁸⁾

분명히 현 단계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국가들 간 상호 불신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 위기와 충격이 내부적 문제와 갈등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면, 유럽의 지역협력이나 통합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지역협력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게 된다. 어떤 형식이 되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48) 배궁찬(2000), 위의 논문, 18쪽

V. 맺음말

유럽 통합과정은 1950년대 시작된 이래 60여 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장기적 프로젝트다. 유럽통합은 냉전시기에 주로 서유럽대륙 위주로 진행되다가, 1990년 탈냉전기 이후 동유럽으로 확대되었다. 기존 서유럽 지역의 통합과 확대는 비교적 동질적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까닭에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동유럽대륙으로 통합과 확대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유럽통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통합 자체가 미래의 청사진을 갖추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하나의 행동주체로서 그리고 그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과 새로운 유형의 협력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럽대륙 내 지역협력이다. 유럽대륙 내 지역협력은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에서 논의된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 중부유럽이니셔티브, 발틱해 국가위원회, 흑해경제협력 이외에도 유럽·북극 바렌츠해 위원회(BEAC), 발틱자유무역협정(Baltic Free Trade Agreement: BFTA) 등 여러 가지 지역협력형태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형태는 경제적 차원에서 다원적 협력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유럽의 외교·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첫 번째로 유럽연합과 경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과정을 지지하고, 양 기구의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새로운 분리선이 수립되는 것을 억제한다. 두 번째로 안보에 중요한 지역에서 실질적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른바 연성안보(soft security)를 조성한다. 세 번째로 이 지역협력체들이 지역단위 행위자와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 협력기반을 확충하며, 이들의 정치적 수용가능성을 높여준다.

유럽 통합과정과 관련하여 지역협력의 의미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동중부 유럽과 남동부 유럽 지역의 경우 지역협력의 중

요성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세력에 따라 좌우되었다. 우선 자국의 기존 정치·경제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다수인 경우 지역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해당국 사회와 경제의 근대화를 결정짓는 요소는 지역협력이 아닌 유럽연합의 지원 또는 OECD 국가들과 정치적·경제적 협력이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지역협력이란 동중유럽 또는 남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의 통합구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본다. 반면 구체제하에서 지배엘리트였던 계층은 구체제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역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방 국가로부터 정치적·경제적 지원은 중·장기적으로도 결코 충족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두 상반적 입장을 유럽 통합과정에서 지역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건대, 전자의 입장이 더 설득력을 보인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유럽의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럽의 경우처럼 초기단계에서 외적 동인이든 내적 동인이든 불문하고 경제협력을 위주로 하되,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수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하며, 협력수준도 유럽연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양자주의적 구도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 구도가 자리하기 매우 어렵다.

한·중·일은 물론이거니와 아세안 국가들의 일차적인 최대 관심사는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지역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기보다 주권, 주도권, 균형, 경쟁 등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 중국은 다자주의에 대하여 양면적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냉전기 중국은 다자적 구도를 강대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보았고, 따라서 다자주의가 중국이 중시하는 주권원칙과 상충한다고 판단했다. 그

러나 1991년 APEC에 가입한 이후 기존 강대국의 무기로 간주되었던 다자주의가 중국이 추구하는 미국의 패권적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로 바뀌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다양한 다자기구에 참여하여 얻은 경험과 자신감의 결과였다.⁴⁹⁾ 즉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거나 자신이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다자적 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 역시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범주에 미국을 끊임없이 포함시키려 하며, 호주와 인도 등도 포함시키려는 등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아세안에게도 동일한 경우이다. 결국 중국이 ASEAN+3 라는 틀을 지지하고 일본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지지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다양한 틀과 제안이 혼재하고, 따라서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할 여지는 매우 적다. 결국 자발적 지역협력의 틀이 정립되기보다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이 불가피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력이 현 상태에서 단일적 초국가이지만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고,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 및 일본의 입장과 전략을 고려하여 이들을 연결시키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아세안과 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일원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 경우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다만 미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은

49) 김재철(2010. 7),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JPI 정책포럼, No. 2010-21, 3쪽

아시아·태평양 차원으로 확대될 여지가 높다. 셋째로 역내국가 중심의 지역 협력을 추구하고 역외국가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하면서 지역협력을 주도하는 전략이다.⁵⁰⁾

한국은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형식상으로 민간인 협의체 성격이나 실제로는 관련국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준공식적 지역협력체인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을 제안하였다. 이 그룹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단기적 가능성보다 중장기적 협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제반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일차적으로 유럽의 사례처럼 경제분야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특히 기존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 비전그룹을 기구화하면서 역외세력 또는 협력체에 대해 배타적 성격이나 고립적 특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는 유럽 지역협력이 시간적 차원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모델을 고려하여 ① 가장 포괄적 통합형태(The most integrated), ② 보다 제한된 형태의 경제통합체(A more confined form of economic unity and integration), ③ 지역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형태(An East Asian Economic Caucus), ④ ASEAN 모델 원용형태(using ASEAN as a model), ⑤ 역내국가들 간 미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동아시아 클럽형태(East Asia as a club)⁵¹⁾ 중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2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50) 김재철(2010. 7), 위의 논문, 11쪽 참조.

51) 배궁찬(2000), 앞의 논문, 35쪽

• 참고문헌

- 이규영(2010), 『유럽통합과정과 지역협력』, 집문당
- 김재철(2010. 7),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JPI 정책포럼, No. 2010-21
- 박경선(1999), 「유럽경제통합에 비추어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과 전망」, 『EU학 연구』 제4권 제2호
- 배궁찬(2000),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보고서
- 채재병(2006), 「동아시아의 주권의식과 지역협력: 문화적 정체성의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 Held, David et al.(1999), *Global Transform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Stanford: Stanford UP
- Krasner, Stephen D.(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P
- Aydin, Mustafa(2004), "Europe's next shore: the Black Sea region after EU Enlargement," Th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Occasional Paper*, No. 53(June), <http://aei.pitt.edu/1907/01/cc53.pdf>. (2008년 7월 28일 검색)
- Birkenbach, H.-M. & Wellmann, C.(2001), "Das Dilemma der EU-Osterweiterung", "Was ist der Ostseerat?" <http://www.infobalt.de/2001/cbss>.(2004년 12월 5일 검색)
- Dangerfield, Martin(2006), "Subregional Integration and EU Enlargement: Where Next for CEFT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44, No. 2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itiativ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EIDHR)(2001), *Compendium 2000* (European Commission)
- Hubel, H. & Gänzle, S.(2001), "Chancen," *Das Parlament*, Wochenzeitung (Juni)
- Keohane, Robert & Nye, Joseph S.(2000), "Globalization: What's New? What's Not (And So What?)," *Foreign Policy*, No. 118 (Spring)

- Kolankiewicz, George(1994), "Consensus and Competition in the Eastern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70, No. 3
- Laçiner, Sedat(2003 · 2004), "Özalizm (Neo-Ottomanism): An Alternative in Turkish Foreign Policy?"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 1, No. 1-2, <http://biibf.comu.edu.tr/sedatlanciermark.pdf>. (2008년 7월 28일 검색)
- Lechmanova, Natalie, "Central European Dilemma: EU or CEFTA Integration?" <http://www.fatemi.com/CONFERENCES/lechmanova.html>. (2003년 12월 31일 검색)
- Lee, Kyung-Tae(1999. 10),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ast-Asian Region」,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1차회의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Mansfield, Edward D. & Milner, Helen V.(1999),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Spring)
- Meier, Ch.(1995), "Neue Ansätze einer regionalen Zusammenarbeit in Mittel- und Osteuropa," Brunner, G. (Hrsg.), *Osteuropa zwischen Nationalstaat und Integration*, Schriftenreihe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Osteuropakunde, Band 33, Berlin: Berlin Verlag
- Meier, Ch.(1997), "Transformation der Außenwirtschaftspolitik: Zur Wechselbeziehung von EU-Integration und regionaler Kooperation der Staaten Ostmitteleuropas," *APuZ*, B 30-31
- Meier, Christian(2000), "Regionale Kooperation in Mittel- und Osteuropa: Bestimmungsfaktoren, Modelle, Perspektiven,"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7-2000
- Moshes, Arkady(2003), "Littoral States and Region Building Around the Black Sea," Pavliuk, Oleksandr and Klympush-Tsintsadze, Ivanna (eds.), *The Black Sea Region: Cooperation and Security Building*, Armonk, N. Y.: M. E. Sharpe
- Wendt, Alexander(1995),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Financial Times, May 10th, 1995

- “1992 CBSS 1st Ministerial Session – Copenhagen Declaration,” <http://www.cbss.st>. (2006년 3월 6일 검색)
-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2003),” <http://www.mfa.gov.tr/grupa/af/keid.htm>. (2003년 8월 11일 검색).
- “CBSS Member States’ Policies on, and Assistance Schemes for, NGO Co-operation in the Baltic Sea Region,” 24 April 2001. http://www.cbss-ngo.de/2001/cbss/cbss+NGO_workgroup.pdf. (2003년 8월 11일 검색)
- “Central European Initiative Guidelines and Rules of Procedure,” <http://old.nvf.cz/archiv/cei2001/cmp/introduction/guidelines.pdf>. (2006년 3월 6일 검색)
- “Charter of the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http://www.bsec.gov.tr/charter.htm>. (2008년 7월 28일 검색)
- “Facts about the CBSS: History,” <http://www.cbss.st/about/dbaFile663.htm?1=1&print=true>. (2004년 1월 3일 검색)
- “Message by the New Chairman of BSEC Council of Ministers, H.E. Mr. Ismail Cem,” <http://www.mfa.gov.tr/PrintPageE2.asp>. (2003년 8월 14일 검색)
- “Position Paper on Central European Free Trade(CEFTA) and Intra-Regional Free Trade,” <http://www.eucommittee.be/pop/pop1998/Tra/trade16.htm>. (2003년 1월 18일 검색)
- “The 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CBSS,” <http://www.cbss.st>. (2006년 3월 6일 검색)



초국경 협력에서의 녹색성장과 기업의 역할

중국 동북3성 지역을 중심으로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추원서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문제의 제기
- II. 초국경 협력과 동북3성의 위상
- III. 초국경 협력 토대로서의 한·중 경제협력
- IV. 초국경 협력 '어젠다'로서의 녹색성장
- V. 새 동북아 평화비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협력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추원서(秋園曙)

정치학(국제정치) 전공,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대표논저로는 『라진 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협력방안연구』(공저, 2010, 통일연구원) 등이 있다.

초국경 협력에서의 녹색성장과 기업의 역할

중국 동북3성 지역을 중심으로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후원서

I. 문제의 제기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역내 협력의 질적 수준은 EU나 북미지역은 물론 ASEAN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다.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에는 정치·경제·군사·역사·문화적 측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경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역내 협력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 동북3성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전개되는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선뜻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못하는 북한의 존재가 그 핵심에 자리한다. 이렇듯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시대적 추세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북한의 존재는 이 지역의 진정한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동북아 국

가 간의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 구상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동북3성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그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동부 연해지역 등에 비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 역시 북한에 의해 남쪽으로의 출로가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및 북미·북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 간 협력 수준을 보다 심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동북3성 지역에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점차 북한까지 포함하는 초국경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경 협력’은 주로 국경을 중심으로 한 변경지역에서 관련국들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 접경지역 경제협력 사례로서는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가 있으며, 인접한 두 나라나 또는 여러 나라 간에 국경지역에서 생태 및 환경 관리, 산불, 수해, 사막화, 질병, 기상재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협력이 있다.²⁾ 이러한 국가 간 초국경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상호신뢰

-
- 1) 이 글에서는 변경지역의 개념을 크게 해석하여 동북3성과 북한 북부지대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초국경 협력은 기존의 변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좀 더 확대한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간주코자 한다.
 - 2) 심의섭(2009), 「동북아 경제협력과 초국적 거버넌스의 구상」, 동북아역사재단·중국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제2차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9. 11. 26~27), 53쪽

의 기반 위에서 협력 대상사업을 통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국경 협력을 위한 아이템 발굴이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아이템의 하나가 바로 녹색산업과 녹색성장 부문에서의 초국경 협력이다.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성장 모멘텀을 갈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새로운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녹색성장은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발전방향으로, 이는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녹색성장은 농업위기, 에너지위기, 생태환경위기를 풀어나가는 주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 공동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투자와 교역을 주도하는 기업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교차점인 중국 동북3성과 북한 북부지역에서 녹색성장과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협력이 정부와 기업의 공동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관련 당사국들에게 큰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평화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서 당장은 구체적 접근방법을 논의하기에 시가상조라 할 수 있는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우선 동북3성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초국경 협력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동북아에서의 초국경 협력이라는 명제를 정의하고 그 중심지역이자 향후 동북아 국가 간 초국경 협력의 출발점이 될 동북3성의 지역적 개황과 협력여건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초국경 협력의 토대로서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초국경 협력 아젠다로서 녹

색성장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초국경 협력 아이템으로서 가능한 녹색산업 관련 업종을 예시하며, 새로운 동북아 평화 비전으로서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전략과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II. 초국경 협력과 동북3성의 위상

1. 동북아에서의 초국경 협력 현황과 비전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는 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 중 육지를 접하여 이웃 국가와 변경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인 관계로, 한국은 반도국가이긴 하지만 북한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장이어서 육지를 통한 변경협력은 불가능하다. 대신 남북분단으로 인해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왔다. 일본과는 동남해 연안에 위치한 지방정부들이 중심이 되어 규슈(九州)권 등 일본 서남해 연안의 지방정부들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초국경 협력의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부산과 후쿠오카 간의 협력과 같은 경우이다.

반면, 중국은 13억 명이 넘는 인구나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로 모두 19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경문제로 인해 인근국가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는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주변국가와 규모의 대소는 차이가 있지만 변경무역 등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서부 국경지역인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2001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역시 6개국 간 정부 간 기구로서 초국경 협력을 뒷받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논의되며 비중이 큰 초국경 협력 지역은 두 곳이다. 하나는 광서북부만 지역과 아세안 간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협력이며, 다른 하나는 동북3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러시아 등 인근국가들과의 변경협력이다. 전자는 이른바 ‘일축양익(一軸兩翼)’ 지역경제협력으로 중국 광시[廣西]장족자치구의 난닝[南寧]에서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북부만 경제구(해상협력)와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지대(육상협력)가 동서 양 날개가 되어 진행되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초국경 협력이다.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건설은 철도와 도로 간선을 운반체로 하여 이 회랑으로 연결되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7개국 간의 경제발전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범북부만 경제협력지대 구축은 해상에 위치한 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초국경 협력이다.³⁾ 후자는 동북3성 지역에서 주로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변경협력에 인근 국가들인 한국·몽골·일본 등이 가세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 동북3성 내의 교통과 물류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동북3성의 물동량이 중국 관내지역과 다롄[大連]·잉커우[營口] 등 랴오닝성 남부 항구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류교통망의 정비는 러시아 및 북한 등은 물론 한국·일본 등 다른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는 접경도시인 수퉁허[綏芬河], 통장[同

3) 古小松(2009), 「廣西北部灣經濟區與中國-東盟經濟合作」, 동북아역사재단·중국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제2차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 협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99~103쪽

江], 헤이허[黑河] 등을 중심으로 변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⁴⁾

북한과는 두만강 유역에 위치한 훈춘, 투먼 등과 랴오닝성의 단둥 등 접경 도시에서 변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형적인 초국경 협력방안의 하나로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 유역 개발'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사업' 추진과 북한의 나선 지역 연계개발 가능성으로 최근 들어 다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창·지·투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해안에 항만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사업들은 두만강 유역 내에서 자족적인 순환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차원의 물류와 연계되어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몽골·중국·러시아·북한 사이의 교통망 구축을 통해 국제무역 대통로를 만들어 이를 동해와 연결함으로써 남한, 일본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규모의 초국경 협력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⁵⁾ 따라서 지린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경 협력은 향후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북3성의 랴오닝 산업벨트는 단둥을 연결고리로 하여 북쪽의 몽골

4) 필자가 지난 11월 하순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으로 이들 지역에는 중러자유무역성[中俄自由貿易城] 등이 설치되어 있어 거래를 위해 찾아오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보였다. 또한 수퐁허 지역에서는 토요일 아침에 20피트짜리 대형 트럭이 통관을 위하여 장사진(약 100대)을 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으며 시내에는 기존의 종합보세구 외에 대규모 보세구가 건설 중에 있었다.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 3천여 km에 이르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무려 25개의 통상구[口岸]를 갖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변경협력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5) 이남주(2010),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반도 경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학술회의 자료집), 220쪽

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내몽고자치주를 거쳐 장차 북한 신의주-개성-한국의 서울-목포-중국 동부연안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경제권' 형성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초국경 협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3성 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을 축으로 환황해경제권 형성과 환동해경제권 형성이라는 두 날개를 구축함으로써 장차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한 걸음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초석을 닦는 일이 될 것이다. 협력의 이니셔티브는 일단 한·중 간의 협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동북3성 지역 개황과 초국경 협력여건

동북3성은 중국 동북지방에 위치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지칭하며 과거 만주로 불리던 곳이다. 면적은 약 79만 km², 인구는 약 1억 9백만 명으로 공히 중국 전체의 8.2%를 점한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를 띠며 사계절이 뚜렷한 대신 겨울이 길며 평균 강우량은 400~700mm로 적은 편이다.⁶⁾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이 패권을 다투가며 차지했던 지역이지만, 주로 만주족의 거점이었다.⁷⁾ 청나라는 이 지역을 용이 흥한 지역[龍興之地]이라 하여 봉급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19세기 중반까지는 인구가 적었다.⁸⁾ 한민족(韓民族)

-
- 6) 다만 최근에는 세계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강우량도 많으며 기후가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다.
 - 7) 청태조 누르하치는 1616년 금(후금)을 건국했고, 1625년 수도를 지금의 선양으로 천도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청태종은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하였다.
 - 8) 1850년경의 인구가 약 290만 명이었으나 봉급정책의 해제 후 1910년경에는 2,16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중 관내의 많은 한족들이 이주하였다.

과는 고구려·발해가 소재했던 곳으로, 또한 구한말과 일본의 한반도 강점시 대에는 광복을 위해, 또는 생계를 위해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한반도에서 건너 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인 조선족의 존재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 명의 조선족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중국에 터전을 잡게 된 한민족의 후대들이다. 그중 약 80만 명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중공업 기반 그리고 비옥한 땅을 갖추고 있음에도 개혁·개방 이후에는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¹⁰⁾ 2003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경제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3차산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적 기초는 다소 좋아졌다. 국유기업의 구조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민영경제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업률과 환경문제도 개선되었다. 산업집중도도 제고되어 기존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랴오닝성은 장비제조·야금·석유화학·농산물가공업에서, 지린성은 자동차제조·석유화학·식품가공업에서, 헤이룽장성은 에너지·석유화학·장비제조·식품가공업에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¹¹⁾

9) 이 수치는 호구를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로 보인다. 현재는 상당수가 한국이나 일본 등으로 취업을 위해 나가 있어 실제 거주 조선족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한편, 해방 직전 중국 전역에는 216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대다수가 만주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이 중 반가량이 귀국하고 만주에는 110만 명(1947년 기준)의 조선족이 남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석(2000),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46쪽

10) 중국의 국내 공업 총생산액 중 동북3성 비율이 1978년 16.5%에서 지난 2008년 9.7% 수준이다.

11) 2003년 10월 중국 정부는 ‘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을 정식으로 채택한 이래, 일련의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그러나 아직도 동북3성의 GDP 비중은 중국 전체의 약 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이 더디며 외자유치나 국제무역에서 연해지역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동북3성이 실제 외자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7%에 불과하여 광둥성이나 장수성[江蘇省]과 같은 동부연안의 1개성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무역액은 전국의 4.2%에 머물러 광둥성의 5분의 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총량 규모에

〈표 1〉 2009년 동북3성 주요 경제지표

구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면적(만 km ²)		14.8	18.7	45.4
		78.9(전국의 8.2%)		
인구(만 명)		4,315	2,734	3,825
		10,874(전국의 8.2%)		
GDP(억 원)		15,065	7,200	8,288
		30,553(전국의 9.1%)		
1인당 GDP(元)		34,913	26,335	21,668
공업총생산액(억 원) (2008년)		6,603.1	2,491.28	3,444.8
		12,539.18(전국의 9.7%)		
대외교역	수출(백만 불)	32,271	3,347	6,343
		41,961(전국의 3.5%)		
	수입(백만 불)	36,907	8,506	6,999
		52,412(전국의 4.3%)		
FDI(억 불)		120.2	30.8	26.6
		177.6(전국의 19.2%)		
특성		중화학공업 발달	주요 농산물 생산기지	석유, 목재 등 자원의 보고

자료: 중국 통계국

고자 노력해왔다. 丁曉燕(2010), 「東北, 在振興中崛起」, 戚本超·景體華 主編, 『區域藍皮書 中國經濟發展報告(2009~2010)』,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347~357쪽

훨씬 미달한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도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수입 비중이 4.3%에 불과하다. 다만 외자유치(FDI)는 근년 들어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08년의 경우 전국의 19.2%를 점하고 있어 투자가 다소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표 1) 참조).

한편,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북3성의 한국과의 협력 수준 역시 랴오닝성을 제외하면 매우 저조한 편이다.¹²⁾ 그러나 동북3성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양자 간 협력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포함된 3자 간 초국경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첫째는 지리적 이점이다. 동북3성 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교류하는 데 최적의 지역이다. 러시아 및 일본과도 교류하기에 편한 곳이다. 관건은 막혀 있는 북한과의 물류통로를 정상화하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우선은 실현가능한 부분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은 동북3성 지역이 북한 북부지역과 함께 향후 동북아시아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국제협력을 통한 물류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중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는 양측의 경제적 이해가 상당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산업발전 수준에서 앞서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先)개발전략이 상당한 성공을 거둬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던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특히 한국의 대중 투자 동기는 근년 들어 주로 현지시장의 개척 필요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필요로 하는 한국 기업과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동북3성의 보완적 협력가능성이 높

12) 한·중 간 경제협력은 다음 제3장에서 다루게 된다.

다. 특히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마중물이 되어 다른 나라 외자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동북3성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셋째는 중국 지역개발 전략의 특성에서 나온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성 등) 간의 협력이나 인근국가와의 협력에서 이른바 '일체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인접한 지역이나 국가 간에 사람과 물자가 쉽게 나다닐 수 있는 교통망의 구축을 바탕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통합성 제고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초국경 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가 교통인프라라고 볼 때, 현재 동북3성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5점1선 연해경제벨트',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그리고 '하·따·치(哈·大·齊, 하얼빈·따칭·치자하얼) 공업회랑' 계획 등은 모두 이 지역에서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초국경 협력의 기초를 닦는 일이 될 것이다.

넷째는 다양한 부분에서 존재하는 양국 간의 동질감과 조선족의 존재다. 이 지역은 중국 내 어느 지방보다 한국인들과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곳이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 산과 강의 형세가 비슷해 친근감을 준다.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존재는 한반도와 동북3성 간 초국경 협력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크나큰 이점이 있다. 동일한 언어와 정서를 공유하는 조선족의 존재, 특히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조선족들은 향후 한·중 간 초국경 협력사업에서 양질의 인력자원이 될 수 있다.

III. 초국경 협력 토대로서의 한·중 경제협력

1. 한·중 경제협력 개황

동북3성 지역은 한국과 인접해 있어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출 기업 수도 7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주로 '투자'와 '교역'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먼저 투자상황을 보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중에는 55억 불로 가장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내외 환경의 악화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중 투자가 전년 대비 45%가 감소한 21억 불에 그쳤다(〈그림 1〉 참고).

한국 기업은 지난 2009년 말 현재, 약 20,700개의 기업이 중국에 294억 불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지역은 산둥성·장쑤성·베이징·랴오닝·톈진·상하이·광둥성·저장성 등 8개 성시로, 전체 투자기업과 투자액의 약 90%가 분포되어 있다. 동북3성 가운데서는 랴오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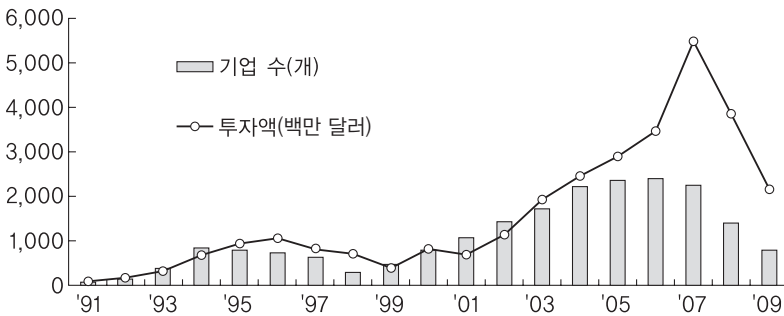


그림 1_ 한국의 연도별 대중 투자 추이

성[遼寧省]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랴오닝성에는 2009년 말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의 약 9%인 2,650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 동북3성 전체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반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386백만 달러, 314백만 달러로 각각 전체의 1.3%와 1.1%, 동북3성 내 비중은 각각 12%와 9%로 미미한 수준이다.

투자상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약 4분의 3을 상회하며 나머지는 금융보험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등의 순이다. 기업규모별 진출현황을 보면 진출기업체 수 중 대기업이 7%, 중소기업이 55%, 나머지를 개인기업과 개인이 차지한다. 대기업의 평균투자금액은 13백만 불이지만, 중소기업은 업체당 1백만 달러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 간 교역 역시 1992년 수교 이래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지난해(2009)에는 양국 간 무역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여 1,410억 불(한국 통계¹³⁾에 머물렀다(중국 통계 기준: 1,558억 달러). 특기할 사항은 이러한 감소세 가운데서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완제품 연계형' 수출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 무역상대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게 지난 2003년 이래 줄곧 최대 무역상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괄목할 만한 교역의 증가세 속에서도 동북3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무역 중 동북3성 전체가 차지하는 금액은 약 73억 달러로 그 비중이 전체의 4.7%

13) 이는 한국 전체 교역액의 20.5%로 미국(9.7%)과 일본(10.4%)을 합친 것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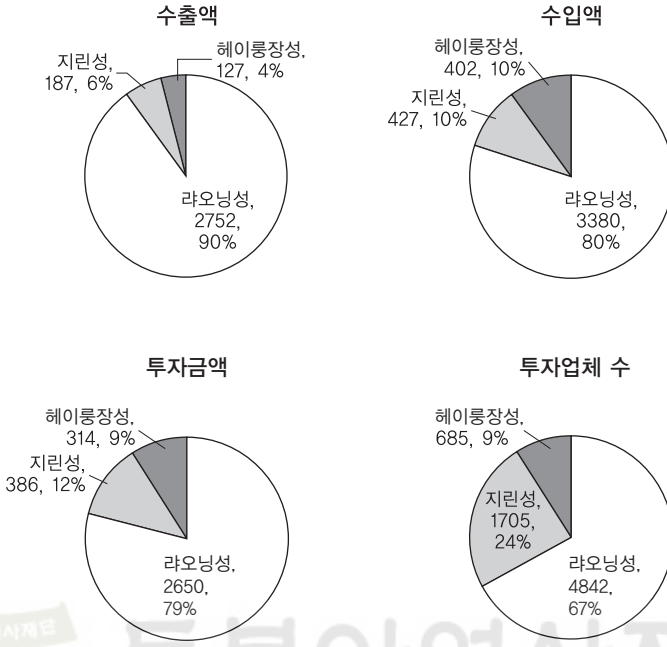


그림 2_ 한국 기업의 동북3성 교역 및 투자 현황(단위: 백만 달러)

밖에 되지 않고 있어 투자에 비해 비중이 훨씬 낮다. 그나마 동북3성 교역 중에는 라오닝성의 비중이 3성 전체 수출의 90%, 수입액의 80%를 차지하는 등 전체 무역액의 약 85%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라오닝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미미하다(〈그림 2〉 참조).

2. 동북3성 지역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수교 이래 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중경협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의 경우 과거 저렴한 토지구입비와 값싼 인건비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하여 제공하던 각종 세

제혜택 등에 기대어 투자를 모색했던 시기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적어도 동부연안 지역에서는 현지사정에 밝으며 능동적 대응체계를 갖춘 대기업이 아니고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선 투자의 양이 아닌 질을 중시하는 시기로 들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중국에서 사업을 했거나 사업을 검토했던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대상 지역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전환하거나 중국 동부연안이 아닌 지역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동북3성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북3성은 북한 문제만 풀리게 된다면 한·중경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그러나 우선은 해상물류가 가능한 랴오닝성과 내수시장 개척이 용이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가능한 제품은 이 지역에 진출하여 동북3성 시장과 함께 중·러 변경무역을 활용한 시장개척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중국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성장 관련 업종은 실력 있는 한국 기업이 나서기에 적합한 곳이면서 동시에 이 지역 지방정부와 기업들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는 협력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3성에서의 한·중경협은 아직 여러 면에서 미흡하며, 특히 교역의 경우는 투자에 비해 더욱 빈약한 규모이다. 그나마 투자는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재산성만 뒷받침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교역의 경우는 물류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역 이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계획’과 ‘북한 나선지역 개발’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투자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¹⁴⁾ 한·중협력을 중심

14) 한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 나선항 개발 등을 중심으로

으로 한 초국경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중 수교 이후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온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추진하면서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IV. 초국경 협력 ‘어젠다’로서의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의 의의와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배경

1) 녹색성장의 의미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동시에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001년 1월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에서 최초로 언급한 이래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표 2〉 녹색성장 신패러다임

구분	기존 패러다임		녹색성장 패러다임
성장방식	요소투입 위주	➔	기술혁신 생태효율
핵심가치	양적 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과 경제	상충관계		상호 보완관계
산업구조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저탄소 시스템

한 남북경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개척된 물류통로는 한국 기업의 동북3성 진출을 도우면서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증진에도 기여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역시 이와 비슷하다(표 2) 참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가 '녹색성장'을 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자원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 기술과 관련한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자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산업'의 개념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영위하는 산업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인 관련 산업으로는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CDM, 오폐수처리 등 환경분야가 있으며, 원자력분야는 화석원료를 이용하는 것은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 포함한다.

중국에서는 '재생에너지 11차 5개년 계획(2008. 3)'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발전분야'에서 수력·풍력·태양광·바이오발전을, '가스분야'에서 메탄가스 등을, '열분야'에선 태양열 열수기·지열 등을, '연료분야'에선 바이오 디젤·바이오 고체연료 등을 지칭하고 있어 한국과 범주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¹⁵⁾ 한편, 한국산업은행 산업분석단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표적인 녹색성장 업종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발전, 2차 전지, LED, 전기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 및 금융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15) 김주영·박세근·채화정(2009. 6), 『중국 녹색성장 전략에 대비한 진출확대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특별조사자료 2009-3, 19쪽

2)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배경

중국은 현재 어느 나라보다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절실한 국가다. 중국의 경이적 경제성장은 중국 내는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악화 폐해는 중국 내에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 이산화탄소·이산화황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토지 황폐화¹⁶⁾·사막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는 태풍, 홍수, 한해, 고온 등의 피해를 동반하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농작물 생산 분포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토질의 변화와 초지의 사막화, 화재의 빈발 등으로 목축업에도 큰 손실을 안긴다. 또한 기후변화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연해지역 도시들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해일과 홍수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연해지역에서는 25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해일과 홍수 등으로 직접적인 경제손실액만 192억여 위안에 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¹⁷⁾ 따라서 이를 방치했을 경우 국민건강은 물론 정치적 안정을 해치고 결국에는 경제의 지속성장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⁸⁾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도 계획경제와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크게 왜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¹⁹⁾ 농업부문에서 어

16) 에너지 다소비와 저효율의 생산방식에 더하여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환경오염이 악화되어 전 국토의 30%에 산성 강우가 내려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17) 董鎖成 等(2010), 「氣候變化對我國區域可持續發展的影向」, 戚本超·景體華 主編, 『區域藍皮書 中國經濟發展報告(2009~2010)』,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74~84쪽

18) 나다니엘 스탠카드(Nathaniel Stankard)(2007), 「중국의 성장과 환경은 양립 가능한가」, 이근·김병국 공편, 『2020 중국 리스크』, EAI(동아시아연구원), 269~278쪽

19) C. Fred Bergsten, Charles Freeman, Nicholas R. Lardy, and Derek J.

〈표 3〉 중국 해수면 변화

(단위: mm)

해 구	지난 30년 변화	향후 30년 예측	1978년 대비 향후 30년 변화치
발해	118	68 ~ 120	186 ~ 238
황해	87	89 ~ 130	176 ~ 217
동해	86	87 ~ 140	173 ~ 226
남해	72	73 ~ 130	145 ~ 202

주: 지난 30년 변화치는 1978년 해수면을 상대로 비교한 수치고, 향후 30년 예측 변화치는 2008년 해수면을 상대로 비교한 것임.

자료: 董錦成 等(2010), 앞의 논문, 77쪽

렵게 조성된 재원은 철강과 시멘트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으로 집중된 결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접했다. 개혁개방 이후 농업개혁과 여기에서 파생된 향촌기업의 탄생, 그리고 경공업 위주의 경제발전은 한때 국민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에너지 소비구조를 다소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30년의 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한 고속성장은 자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자원의 과소비, 막대한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²⁰⁾는 중국은 물

Mitchell(2008), *China's Rise—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p. 138

20) 중국은 세계의 13.5%를 차지하는 풍부한 석탄 매장량과 저렴한 발전원가로 인한 화력발전 수요 증가로 전체 발전 용량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 비중이 77.7%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6년 기준 1차 에너지원에서 석유 43.6%, 석탄 24.3%, 원자력 15.9%, LNG 13.7%, 신재생에너지 등 2.5%이다. 한편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 세계의 47%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의 소비증가세를 보여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 고갈을 우려해 향후 5년간(2011~2015) 연간 석탄 생산량을 36~38억 톤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2010. 11. 18)

론 세계의 에너지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²¹⁾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역시 큰 문제의 하나다. 국제 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20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2030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총 38억 TOE에 달해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수준의 약 4배가 될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²²⁾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훼손함은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도 경제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최근 중국과학원과 환경보호총국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GDP의 1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수치는 2005년에 발표된 ‘중국 녹색 국민경제 연구보고 2004’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18억 달러이고, 환경오염을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347억 달러로 이들은 합하면 중국 GDP의 5.8% 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²³⁾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심각성 외에 최근 G2로 부상하고

-
- 21) UN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906~2005년 100년 동안 지구표면 온도는 0.74℃ 올랐다. 최근 10년은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10년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온난화 추세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가기상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08~2007년의 100년간 중국 지표면의 평균온도는 1.1℃가 올랐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50년 북방지역에서 두드러져 어떤 지역에서는 4℃까지 오른 경우가 있다. 董鎮成 等(2010), 앞의 논문, 73~74쪽. 반면, 한국은 지난 100년간(1912~2008) 평균기온이 1.7℃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다.
- 22) IEA(2008) 및 금융투자협회(2010), 『녹색기술기업가치평가 I』, 59쪽
- 23) 김주영(2009. 5),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CDM 사업 추진 동향과 우리의 진출 전략」,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13~14쪽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중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이 '교토기후협약'²⁴⁾ 가입국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ET)를 이행하고 배출증가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은행이 도입한 청정개발체제(CDM)와 탄소펀드인 UCF(Umbrella Carbon Facility)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과 녹색산업의 현주소

1) 중국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과

중국은 2005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를 채택하여 자원절약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가운데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듬해 3월 전인대 제10기 4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2006~2010) 계획 요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11차 5개년 기간에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물 배출 총량과 에너지 소비를 축소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 우선 GDP 1만 위안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비율'을 2005년의 1,225석탄 환산톤(tons of coal equivalent, TCE)에서 2010년까지 매년 4% 포인트씩 총 20% 포인트 감소시키고, '오염물 배출총량'을 2005년 3,962만 톤에서 매년 2% 포인트씩 2010년까지 총 10%

24) 지구 온난화 규제 등을 위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명시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제협약.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공동이행제도(JI), CDM, ET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표 4〉 11차 5개년 기간 환경보호 관련 목표

	2005년 실적	2010년 계획		
		2006년 실적	계 획	비 고
GDP 증가율	10.4%	10.7%	연 7.5%	
*오염물 배출총량	3,962만 톤	4,025만 톤(1.6%)	10% 축소	연 2%p 감소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율	**1.225TCE	1.21 TCE (1.23% 감소)	20% 감소	연 4%p 감소
공업폐기물 이용비율	55.8%	-	60.0%	
도시오수처리 비율	52%	56%	70% 이상	

*이산화황(SO₂, 2,548만 톤)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414만 톤)임.

**석탄 환산톤으로 여기서는 1만 위안당 에너지 소비비율임.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요강' 등, 김주영 등 앞의 조사자료 재인용.

포인트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도시지역에서 오수 처리비율을 70%로, 생활쓰레기의 무독성 처리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며, 산업부문에서 이산화황 배출총량 억제제를 통한 대기오염 억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²⁵⁾(〈표 4〉 참조). 11·5 계획기간 중 50MW급 이하의 응축식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약 15,000 MW)와 노후 소형 화력발전소(약 7,000MW)를 폐쇄하거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기의 대형화를 추진한 것 등은 구체적 실천의 한 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7년 6월에 발표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방안', 동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동년 9월 APEC 회의에서 후진타오의 '저탄소경제발전, 저탄소에너지 연구개발, 탄소흡수기술 촉진 발전전략' 제시로 나타났으며, 2008년

25) 이를 위해 중대도시와 그 근교에 발전소, 철강, 제련 공장의 신축과 확장을 금지하는 한편, 환경오염 유발이 적은 풍력, 태양광, 지열, 원자력, 수력 등 청정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우리나라(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행동’ 백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11월에는 GDP 대비 자국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 중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으며, 12월의 코펜하겐 협상회의에서는 사실상 개도국의 대표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합의문 도출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⁶⁾

한편, 중국은 지난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하는데 관한 중공 중앙의 제안’을 통해 “자원절약 및 환경친화형 사회건설을 가속화하여 생태문명 수준을 제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산업·건설·교통운송 등 중점분야의 에너지 절약, 비화석 에너지 비중 제고, 탄소배출거래 시장의 점진적 형성 등이 담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²⁷⁾ 이러한 기초 위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제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신성장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등 7대 신성장산업²⁸⁾을 육성해 GDP 대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2015년까지 8%로 제고할 방침이며, 특히 신에너지 산업을 위해 2011~2020년 중 5조 위안을 투자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는 2020년 연 1,50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에너지 안보문제의 해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해소뿐만 아니라 지

26) 합의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7) 신화통신사(2010. 10. 27), <http://xinhuanet.com>

28) 지난 9월 국무원이 발표한 ‘신성장동력산업전략’에는 이 밖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소재산업이 포함된다.

〈표 5〉 주요국 녹색성장 전략비교

구분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비전	녹색성장 추진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저탄소사회 구현 (그린혁명)	그린 뉴딜정책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중점 육성	-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등) - CDM - 오페수처리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LED,ESCO)	- 탄소저감기술육성(신성장동력화) - 국제표준 제정 노력	- 수송, 자동차 - 태양광, 풍력 - 핵심기술개발 사업	- 풍력, 태양광, 바이오 - 민간투자지원 및 사용 확대
특징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변환 - 환경오염규제 강화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적극참여	- 정부의 핵심 정책(녹색성장위원회 출범-대통령 직속) -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경제발전 추진	- 정부의 대규모 투자(GDP 대비 0.1%, 선진국은 0.05%) -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 기업의 적극적 참여 - 자동차 산업 육성	- 정부의 기업 직접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증대 - 규제 통한 민간 사용 촉진

자료: 녹색성장정책과 지역의 발전전략 및 kdb 녹색성장 주요5선 리포트(2009) 참조.

역균형개발, 신성장동력 창출과 같은 다원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다.²⁹⁾

한편,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의 대강을 한국,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키워드(key-word)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 녹색산업 현황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국내 녹색산업 육성정책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주요

29)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6),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그린에너지 산업, 기술개발 전략 분석의 시사점』(연구자료 10-01), 53쪽

녹색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부문에서의 성과를 살펴 보면 우선 '풍력산업'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터빈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기계산업 기반의 국영기업들이 선진기업과의 협력과 국내부품 의무비율 제도 시행 등에 힘입어 기술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태양광산업'에서는 전 세계 태양전지의 43.2%를 공급하는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되었다. 결정계 태양전지 분야의 공정혁신을 기반으로 부품·소재(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및 완제품(태양전지 셀, 모듈) 등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산업'에서는 2008년 세계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2010년 양산체제에 진입했으며,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00억 위안의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³⁰⁾

이렇듯 정부의 지원과 방대한 시장규모에 힘입어 중국의 녹색산업은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생산 및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풍력발전 설비제조업체인 신풍과기사는 독일의 Vensys사를, 중국 최대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Suntech사가 일본의 MSK사의 인수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그 예이다.³¹⁾ 전통적인 화력발전 설비 제조, 풍력발전 설비, 태양전지 생산, 태양열 온수기 부문 등에서 중국 국내기업들은 이미 세계 10대 기업에 진입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부문에서도 BYD가 최초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실현하였다.³²⁾ 2008년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30) 이성호 등(2010), 「중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저력과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on』 제781호

31)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앞의 논문, 84~88쪽

32) BYD(比亞迪)그룹의 왕찬푸(王傳福) 회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생산시장에 뛰어들어 돌풍을 일으켜 하이브리드 자동차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BYD는 2015년에는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자동차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있

1,200만 KW로 2010년 풍력발전 총설비용량 목표인 1,000만 KW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풍과기(金風科技), 저장운달(浙江運達), 화예풍력발전(華銳風電), 상하이전기(上海電氣), 동방증기터빈(東方氣輪機) 등 5대 기업이 국내시장의 65%를 점할 정도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중국의 풍력발전량이 2배 증가함에 따라 10년 내에 원자력발전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태양광·태양열 부문에서도 2007년 말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설비용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태양열 설비용량 또한 세계최고를 점하게 되었다.³³⁾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부문에서는 국가 '863계획'과 화능집단의 지원 아래 시안 열공연구원유한공사(西安熱工研究院有限公司)가 2005년에 전환효율이 높고 설비용량이 낮으며 환경보호 기능이 뛰어나면서도 석탄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2단계 석탄분쇄 가압가스화 기술(Two Stage Pulverized Coal Pressure Gasification)'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의 Future Fuel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에너지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중국 최대 석탄기업인 선화기업은 GE와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이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비석유계 연료생산 부문에서는 국영 에너지회사인 CNPC와 Sinopec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 밖에도 중국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2007년 11월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국제과학기술 협력 계획'을 선포하여 태양에너지 발전과 태양에너지 건축 일원화, 바이오매스 연료와 바이오매스 발전,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가스 하이드레

다. 홍순도 외(2010), 『베이징 특파원 중국경제를 말한다』, 서교출판사, 29·110쪽
 33)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태양전지 부문의 Suntech사와 태양열 온수기 부문의 황명집단이 있다. 황명집단은 세계 최초로 자동화 태양열 집열관 생산라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라인을 통해 생산효율이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트(Gas Hydrate) 개발 등 5대 주요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산업투자 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플랜트 및 핵심설비 제조, 건설 및 경영,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등 선진기술의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EU·미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 에너지·환경 부문에서 양자 간 협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V. 새 동북아 평화비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협력 전략

1. 협력 아이템으로서의 녹색성장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경쟁력 있는 전략상품의 선정이다. 동북3성에서의 한·중 간 초국경 협력 아이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은 협력사업 자체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서 중국에도 도움을 줄 수 아이템의 선정이 중요하다.

지역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범용의 일반 제품들은 중국에서는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가격대비 품질경쟁력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³⁴⁾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 거의 대부분이 진출해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제전쟁터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심한 만큼 기회도 열려 있다고 볼

34) 김유진(2006), 『삼성과 중국』, 동양문고, 92~94쪽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경제정책의 질적 전환에 따라 급속히 커지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은 중국 사업의 최대 장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중국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나 업종이 아닌,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녹색성장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진출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녹색성장산업에서의 중국의 약진은 한국 기업이 당장 비집고 들어설 여지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의 녹색기술이 유럽·일본 등 녹색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미흡한 점도 녹색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데 애로요인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녹색성장산업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은 많은 시간과 투자를 요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그만큼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중 모두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야 한다.

아울러 초국경 협력의 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둔 성공적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동북3성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거나 자원 등이 풍부하여 사업환경이 양호한 분야로서 동북3성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이다. 다른 하나는 향후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양 날개인 환동해 경제공동체와 환황해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배치를 고려하여 협력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확대를 대비한 전략이기도 하다. 즉,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산업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 <그림 3>의 왼쪽 부분이다. 즉, 총론적으로는 물류, 산업, 에너지, 관광,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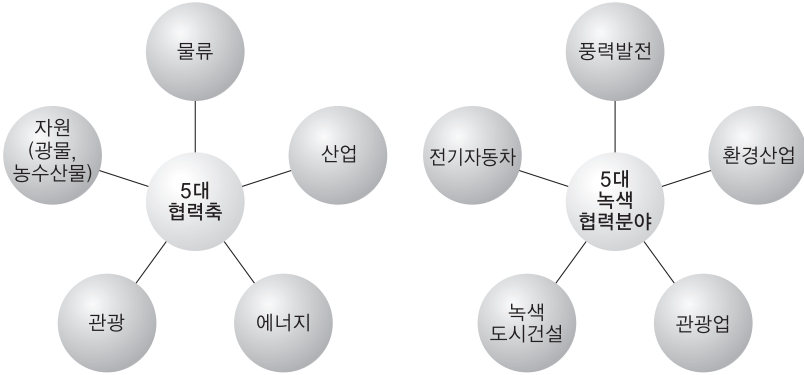


그림 3_ 한국·동북3성 간 5대 협력축

그러나 이러한 5대 부문에서의 협력은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필요하고 추진이 가능한 분야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선택과 집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협력분야를 찾아내어 양국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3성 지역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초국경 협력대상 산업으로 예시³⁵⁾할 수 있는 분야가 <그림 3>의 오른쪽 부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 '풍력발전', 산업분야에서 '전기자동차', '녹색도시 건설사업' 및 '오폐수처리 사업 등 환경산업' 그리고 '관광업' 등³⁶⁾ 5개 업종이다.

먼저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동북3성 지역에 적합한 협력사업

35) 필자가 '예시'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글이 정밀한 타당성 조사나 사업성 검토 끝에 나온 것이 아니고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한 피상적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정밀한 검토를 요한다는 뜻이다.

36) 관광업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하는 녹색산업은 아니지만,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초국경 협력의 유력한 분야로 녹색관광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으로 여겨진다. 풍력은 수력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발전단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광활한 지역과 풍력자원을 보유한 동북3성에 적합하다는 입지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 역시 전력의 무구매, 송전망 의무건설 등 지원정책과 세금·대출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다. 한국은 현재 단조부품 중심으로 일부업체가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과 자금력 등을 갖춘 대기업이 주도하여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관련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력방안을 생각해볼 만하다. 특히 조선이나 철강 등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우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CDM 사업과 관련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확보하게 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인 CERs를 확보한다는 견지와 향후 북한 북부지역의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전초기지로서도 사업의 의미가 크다.

‘전기자동차’는 각국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업체 간 기술선점과 표준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로서 경제성을 갖추기까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지린성의 대표산업이 자동차산업이란 측면에서 향후 기존의 기반 위에서 배터리 등 분야에서 앞서 있는 한국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전력은 풍력발전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린성 장춘은 신에너지차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도시 여섯 군데의 하나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고려해볼 만하다. 앞으로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이 지역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녹색도시 건설사업’은 동북3성에서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사업 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하여 친환경형 도시를 건설하는 협력사업이다. 특히 동북3성에는 과거 노후공업기지를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도시와 이른바 자원형 도시로 과거 광산물 등을 채취하고 이제는 자원고갈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 발전을 도모해야 할 도시들이 많다.³⁷⁾ 세계 최고의 건축기술을 지니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LED나 스마트그리드, 오염폐수처리 등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사업’ 역시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설비분야에서 진출이 가능하며, 대기오염과 관련한 탈황 및 집진 설비, 송풍기 등의 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폐수처리사업은 중국의 모든 도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의만 잘 진행된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비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³⁸⁾ 이 밖에 청정 석탄가스화 기술사업 등은 광의의 환경사업으로 간주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³⁹⁾ 동북3성 지역은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이 왕성한 곳이라는 점에서 석탄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다양한 노력은 그 자체가 매우 값지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지금까지 검토한 녹색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맑

37) 이러한 자원형 도시들로는 랴오닝성의 푸신[阜新]·판진[盤錦]·안산[鞍山]·푸순[撫順]·번시[本溪], 헤이룽장성의 다칭[大慶]·이춘[伊春]·지시[雞西], 지린성의 랴오위안[遼源]·바이산[白山] 등을 들 수 있다. 丁曉燕(2010), 앞의 논문, 352쪽

38) 김주영·박세근·채화정(2009), 앞의 특별조사자료, 169~188쪽

39) 예를 들어 SK에너지가 개발 중인 청정 석탄가스화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이산화탄소와 공해물질의 배출을 혁신적으로 낮추어 저급 석탄을 가스공정화 공정을 통해 합성가스로 제조하고 이를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기타 화학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미래 에너지 기술로 소개되고 있다. 《흑룡강신문》(2010. 11. 27)

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북3성에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유적지 등이 많이 있어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큰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레저관광산업 분야에서 앞서 있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가능하며 장차 이러한 협력을 토대로 북한, 한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연계 관광을 추진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백두산이나 고구려 등 유적지와 동북3성의 생태환경 관광구 등은 주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2. 추진전략

앞으로 중국이 내실 있는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웃하고 있는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한국 역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지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질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녹색성장'은 새로운 한·중협력시대의 대표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3성은 동부연안 지역과는 현재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다.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녹색성장시대의 한·중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자세와 추진전략을 한·중 양국 정부,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자세와 조치를 살펴본다. 무엇보다 한·

중 경제협력이야말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요체라는 인식의 기반 위에서 양측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단계적으로 확대·심화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3성은 경공업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취업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녹색성장산업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업 등 다른 경공업의 동반진출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환경 등 녹색성장 개념을 소홀히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금부터라도 이를 우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3성에서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물류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3성 자체의 운송능력 제고와 함께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을 활용할 수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후원하고 녹색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IT산업 등 첨단산업에 준한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녹색성장을 위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 주선하여야 한다.⁴⁰⁾ 특히 녹색성장산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지속적으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국제협력의 분위

40) 한국의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는 중국의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과 그리고 많은 시급 지방정부가 상호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 단계상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내실화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초국경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더욱 확산되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협력의 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동북3성에 진출했거나 투자나 교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은 경제협력의 첨병이다. 원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체로서 생산·판매 활동을 비롯한 각종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경제적 사고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경제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은 기술적·사회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는 급격한 기술변화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유기체로서 고객·종업원·지역사회 등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이해와 협동이 선행될 때에 경영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이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은 자신은 물론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녹색경영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북3성을 비롯한 중국에 진출코자 하는 기업들은 녹색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신경을 쓰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한 녹색성장 부문에서의 기회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옮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CDM 사업과 탄소시장 조성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세계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환경경영과 글로벌 경영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더 큰 이익을 내는 지름길이 될

41) 김영규(2009), 『경영학원론』(제2판), 박영사, 13~14쪽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이 동북3성 지역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앞에서 예시한 '5대 녹색성장 협력업종' 등을 중심으로 산업별 접근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자력 분야 등 기타 녹색산업 분야에서도 협력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접근전략에서는 우선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원자재 조달이 가능하고 생산 후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북한의 나진항이나 청진항, 그리고 러시아 항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물류통로의 개척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교역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조선족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한·중 간 경협이 부진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새로운 협력거점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훈춘 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한국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것도 초국경 협력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⁴²⁾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0년 12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42) 참고로 훈춘 수출가공공단의 대기업 수는 2005년 17개에서 현재 51개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수출총액이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변일보》(2010. 11. 23)

• 참고문헌

- 금융투자협회(2010), 『녹색기술기업가치평가 I』
- 김영규(2009), 『경영학원론』(제2판), 박영사
- 김유진(2006), 『삼성과 중국』, 동양문고
- 김주영·박세근·채화정(2009. 6), 『중국 녹색성장 전략에 대비한 진출확대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특별조사자료 2009-3
-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6),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및 그린에너지 산업, 기술개발 전략 분석의 시사점』(연구자료 10-01)
- 이근·김병국 공편(2007), 『2020 중국 리스크』, EAI(동아시아연구원)
- 이종석(2000),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2010), 『2010~2011 차이나 트렌드』, 중앙북스(주)
- 한국산업은행 선양사무소(2009. 12), 『중국 동북3성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 사례』
- 홍순도 외(2010), 『베이징 특파원 중국경제를 말한다』, 서교출판사
- 戚本超·景體華 主編(2010), 『區域藍皮書 中國經濟發展報告(2009~2010)』,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코노모토 신고[此本臣吾] 편저·이상덕 옮김(2010), 『2015 중국 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 김주영(2009. 5),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CDM 사업 추진 동향과 우리의 진출 전략」,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 박장배(2009), 「중국 변강이론의 진화와 ‘공동이익 변강’ 개념의 발전」, 동북아역사재단·중국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제2차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심의섭(2009), 「동북아 경제협력과 초국적 거버넌스의 구상」, 동북아역사재단·중국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제2차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이남주(2010),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반도 경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학술회의 자료집)

이성호 등(2010), 「중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저력과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on』 제781호

古小松(2009), 「廣西北部灣經濟區與中國-東盟經濟合作」, 동북아역사재단·중국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제2차 동아시아 평화와 변경협력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Bergsten, C. Fred, Freeman, Charles, Lardy, Nicholas R., and Derek J. Mitchell(2008), *China's Rise—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매일경제신문》,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신화통신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동의 기억, 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국 동북지역 답사 프로그램 설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주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 II.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독립운동
- III. 각 지역별 사적지 현황
- IV. 지역별 답사 설계와 기억의 공유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주용(金周溶)

한국근대사 전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역사를 따라 걷다-가슴뛰는 국외독립운동 답사기』 1(2013, 선인), 『이민과 개발』(공저, 2010,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2008, 선인) 등이 있다.

공동의 기억, 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국 동북지역 답사 프로그램 설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주용

I. 머리말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한국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다.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은 세계인류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국 독립운동의 지역적 광범위성은 한국 독립운동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국 독립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역사로서, 그것이 사적지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도 있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형체도 없이 사라진 곳도 있다. 국외에 산재한 한국 독립운동사적지는 대략 800여 개 정도다. 그 가운데 중국에만 400개 이상의 사적지가 존재한다. 그만큼 중국과 한국 독립운동은 그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명확한 역사적 현장들이 현재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동북(만주)¹⁾으로의 한인이주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만주로의 한인이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1910년

이전에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즉 1910년 이전 만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고단한 삶을 벗어나 조금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1910년대 이후에는 그 이주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한인이주는 정치적인 망명과 생활 이주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만주 지역 한인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주한인들은 서로에 기대어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형성과정이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만주의 경우 일제의 침략 첩병인 영사관 영사, 경찰 및 중국 지방정권의 하수인들의 탄압과 감시는 그 도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한인사회를 이용하여 한인들로 하여금 한인사회를 통제하려는 정책도 서슴지 않고 내놓았다. 일제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한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독립운동의 메카로 주목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주 지역에는 선주자들이 형성한 한인사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항일독립운동 기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서간도 지역의 경학사·신흥무관학교, 북간도 지역의 태평 동림학교(나자구사관학교) 등이 설립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30년대 일제가 '만주국'을 설립한 이후 폭압적인 치안숙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한인들의 항일독립운동의 열기는 꺾이지 않았다. 이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열정과 한인사회의 지원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흑룡강성과 내몽골 등에 산재한 '조선족' 마을들은 대부분

1)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은 일제강점기 한인들에게는 만주로 인식되고 불렸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자 한다.

이때 형성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 동북지방으로의 한인이주와 독립운동의 현장²⁾을 연동해서 파악함으로써 한인이주의 특징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또 세계적 보편성을 펼치기 위해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독립운동사적지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것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 활용(관광자원)을 통해 한중 양국 간의 소통의 상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다. ‘항일’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미래의 동반자적인 역할도 검토해보는 것이 현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독립운동

한국 독립운동사의 특징으로 세계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다. 세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만주 지역은 한국 독립운동의 메카였다. 적어도 1930년대 말까지 독립운동의 추동력은 한인사회의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서북간도 지역에 이주한 한인사회를 바탕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신흥무

2) 지금까지 중국 동북지역 한국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답사기는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박환(『박환 교수의 만주지역 한인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2009)을 비롯해 중국 관내지역보다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만이 투영된 것이지 현지 사회와의 교감이라는 측면은 배제된 것 또한 없지 않다.

관학교로 상징되는 국외 독립운동기지의 건설로 나타났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쟁탈전이 가속화되던 19세기 말, 한반도의 정치·경제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함경도와 평안도 주민들의 만주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 물결에 몸을 맡겼던 한인들은 척박한 토지를 개간하고 수전농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경제상황을 연출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만주로의 한인이주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지역적으로 서간도(남만)·북간도(동만)와 북만에 시차를 두면서 이주 한인사회가 형성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1910년대부터 치열한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서간도·북간도는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며 많은 한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독립운동의 인적·물적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탄압과 중국의 무관심 내지 일제와의 탄압공조를 통한 독립운동 와해 작업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만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북만주 하얼빈에서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대륙 침략과 한반도 침략의 거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살하였으며, 1920년 10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산리대첩 역시 북간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만주 지역의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선도하고 그 인적 자원을 끊임없이 배출해낼 수 있었던 신홍무관학교의 기상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만주 지역은 서간도의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북로군정서를 필두로 무장투쟁론에 입각하여 격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한 곳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만주 지역은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보고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인 연길을 통하여 오는데 이 지역은 초기 이주 한인사회가 형성된 곳으로 용정(龍井)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던 곳이다. 특히 명동춘을 비롯한 연변 지역은 항일민

족교육을 실시하여 식민지 조선의 멍에를 거두어내기 위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선열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또는 무디어진 세월 속에 항일독립운동의 열기를 느끼기 위하여 이곳을 찾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백두산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 길림성에서는 유일한 자치주로서 식민지기 이주한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다. 연길(延吉), 화룡(和龍), 용정(龍井), 도문(圖們), 안도(安圖), 돈화(敦化), 훈춘(琿春)으로 이루어진 연변은 해란강과 부르하통하, 가야하, 훈춘하와 평강평야, 세전평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이곳 옥토는 한인들의 손으로 빚어낸 창작물이다. 한인들은 이곳에 서전서숙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항일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인자치기구를 설립하여 이주한인의 정착을 돕는데 진력하였다.

한인사회의 항일투쟁 역량이 제고되면서 연변 지역에는 크고 작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9년 3·13 항일시위운동은 1910년대 한인사회가 축적했던 항일열기를 한꺼번에 분출시킨 일대 사건이었으며 나아가 이후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데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20년 일제의 간도 출병으로 독립투쟁의 열기가 위축되어갈 때 이러한 정세를 한번에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청산리대첩이 그것이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5일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청산리대첩은 제국주의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정도였다. 이렇듯 연변 지역의 항일투쟁은 이주 초기부터 축적해온 항일역량의 결과물이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한편 서간도라고 불린, 길림성 서남부와 요령성 동부지역은 신흥무관학교

로 대표되는 독립운동 인재배출의 요람이었다. 특히 삼원포는 그 중심지역이었다. 경학사, 부민회, 한족회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서로군정서가 활동한 곳이기도 하다. 일제가 만주국 성립 이후 이곳에 안전농촌을 설치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차단하고자 했을 정도로 항일독립운동의 열기가 뜨거운 곳이었다. 또한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등이 순국한 여순감옥이 위치한 여순 대련지역은 1905년 러일전쟁 후 일제가 조차한 곳이다. 관동주라고 했던 이곳은 일본제국주의의 만주 침략에 필요한 핵심기관이 모여 있는 교두보였다.³⁾

다음으로 한국인에게는 하얼빈으로 대표되는 흑룡강성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흑룡강성은 동북으로는 러시아와 접해 있으며, 서로는 내몽고자치구, 남으로는 길림성과 맞닿아 있다. 면적은 45만 km²로 한반도의 약 2배이며, 인구는 4천만 정도다. 흑룡강성은 청대까지 봉금령으로 인해 한족의 이주가 금지되었지만 1860년대 이후 한족에 대한 만주의 봉금령이 풀리면서 한족들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여 이미 20세기 초반에는 한족 인구가 주가 되었다. 성도인 하얼빈을 비롯하여 치치하얼, 가목사 등 공업도시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대경(大慶)과 같이 대규모 유전도시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흥안령과 소흥안령 사이의 만주평원이 펼쳐져 있어 대규모 농장으로서의 위용도 갖추고 있다.

일제시기 흑룡강성으로의 한인이주는 1900년대 이미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이주는 192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1930년대에는 만주국의 설립과 함께 대규모의 집단적 이주가 진행되었다. 가목사시 탕원현과 용강현은 1930년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2), 『국외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 138쪽

대 한인들의 집단이주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한인이주는 항일독립운동의 추동력으로 작용되었다.

흑룡강성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발자취는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흑룡강성 북부지역인 치치하얼과 가목사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치치하얼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주변에 펼쳐져 있는 평원을 이용한 수전농법이 가능하였으며, 한인이주 역시 이에 따라 진행되었다.

1919년 봄 김필순은 이광범과 함께 현재 용강현 지방에 이상촌을 건설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치치하얼 일본 영사관에서는 김필순 등 독립운동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인사회에 대한 동정 파악에 주력하였다. 가목사는 송화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전농업을 하기에 유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성단과 같은 단체들이 조직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혈성단은 북만에서 활동하다가 1920년 12월 대한독립군단에 편입되었다. 1921년 6월 채영, 신우여의 노력 하에 130명으로 4개 소대를 편성하여 백파군과 싸웠다. 그 후 강국모가 대오를 인솔하고 동녕, 밀산에서 활동하다가 장작림 군벌에게 무장해제를 당했다. 흑룡강 북부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이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것에 비하여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밀산 지역은 흑룡강성 가운데 한국 독립운동기지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은 곳이다. 밀산은 삼강평원 제2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부는 호림현과 이어져 있으며, 북부는 흥개호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독립운동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09년 이승희(李承熙)는 이상설(李相勳) 등의 부탁을 받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밀산으로 들어와 봉밀산 부근에 토지를 구입하여 100호 규모의 한인촌을 건립하고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다.⁴⁾ 또한 김성무는 안창호의 추천을

받아 십리외에 들어와 토지를 구입하여 농장을 설립하였다. 대체로 밀산현의 십리와, 백포자, 봉밀산, 한흥동, 당벽진 등지에 한인들이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III. 각 지역별 사적지 현황

1. 길림성 지역

길림성 지역은 한국 독립운동의 흔적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로 크게 3권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편의상 사적지의 의미와 현재 잘 보존된 것을 위주로 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 용정중학 역사전람관(옛 대성중학)

· 주소: 용정시 민성가(民聲街) 789호 용정중학 내

1921년 강훈이 설립한 대성중학교는 창립 초기 7명의 교사와 160명의 학생이 있었다. 1939년 만주국에서 동흥중학교와 합병시킬 때까지 수많은 애국 지사를 배출한 대성중학교는 현재 용정중학 내 옛 교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교정에는 운동주 시비와 은진·영신·동흥·대성 중학, 광명여자중학, 명신여자중학 등 용정 내 6개 중학의 역사, 그리고 운동주의 생애와 그 주변인물 등 역사적 사건 및 인물 중심으로 전시한 기념관과 '별'잡지사가 있어 국내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8),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8, 256쪽

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1994년 새롭게 단장한 용정중학 역사전람관은 총 6명의 관리인원(관장 1명, 안내사 5명)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연변대학의 지원으로 이상설기념관과 연결하여 관람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2) 명동교회(명동역사전시관), 윤동주 생가

• 주소: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

명동교회는 1909년 설립된 이후 이주한인에게 민족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책원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민족의 얼이 서려 있던 명동교회는 해방 이후 잊혀진 존재였다가 1990년대 한중 수교 이후 국내의 뜻있는 인사들의 관심으로 보수·관리되고 있다.

특히 저항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인접해 있어 규암 김약연이 설립한 명동교회와 함께 중요한 사적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명동교회를 수리하여 만든 역사전시관이 있으며 이 전시관에는 이주 한인사회의 모습과 독립운동의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201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60주년 기념으로 윤동주 생가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3) 청산리 항일대첩기념비

• 주소: 화룡시 청산리

1920년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청산리대첩을 기리기 위해 2001년 8월 31일 건립되었다. 대지 5,000m², 비의 넓이 25m², 높이 17.60m로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 수건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다. 현재 화룡시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기념비의 뒷면 벽에 건립 취지문과 건립 경위를 밝힌 글이 석판에 새겨져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내외를 진감한 청산리 항일대첩은 항일투쟁사상 천고에 빛날 역사적 전역이어늘 1920년 10월 21~26일 김좌진, 홍범도가 통솔하는 항일연합 부대는 화룡시 2-3도구에서 연변 각 민족 주민의 대폭적인 지원 하에 협동작전으로 백운평 와록구 어랑촌 874고지 고동하반 전투 등 대소 수차 격전을 거쳐 천으로 헤아리는 일본 침략군을 섬멸하였거늘 소수로 다수를 타승한 이 전과는 연변 내지 동북 지역 반일무장 투쟁 사상 새로운 시편을 엮음은 물론,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독립운동을 주동한 역사로서 청사에 새겨졌어라. (하략)

현재 화룡을 경유하는 백두산 관광길이 개통됨으로써 청산리 전역지와 대첩비를 방문하기가 용이하며 또한 대중교 삼중사 묘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이다. 2008년 훼손된 비를 보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⁵⁾

4) 3·13반일의사릉

• 주소: 용정시 광신향 합성리

1918년 제1차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기운이 도래하자 김약연을 비롯한 북간도 지역 민족지도자들은 독립선언을 계획하고 마침내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대규모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북간도 3·13 항일독립운동은 1910년대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민족교육기관에서 배출한 학생들의 참여는 이 독립운동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13 항일독립운동 시위 중 48명이 부상하고 94명이 체포되었으며 19명이 희생되었다. 3월 17일 교민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독교식 합동장례식이 거행되었다. 3·13반일의사릉은 북간도 3·13 독립시위운동 중 희생된 열사 가운데 14명을 안장한 곳이다. 묘소의 범위는 동서로

5) 화룡시가 주체가 되어 청산리 역사전시관도 건립하였다. 2009년 10월 말 완공.

10m, 남북으로 15m이다. 현재 용정시 문화재(문물보호단위)로 등록되어 있다.

5) 삼중사 묘역

• 주소: 화룡시 용성향 청호(龍城鄉 淸湖)

대종교의 중심인물인 나철(羅喆), 김교헌(金敎獻), 서일(徐一)의 묘소로서 이들은 항일투쟁과 교육운동을 통해 이주한인들에게 독립운동정신을 고취시켰다. 나철은 1909년 단군교를 창시하였으며, 1910년 교명을 대종교로 개칭하였다. 한일병탄 후 만주 지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6년 구월산에서 자결하였다. 그해 10월 청호로 안장하였으며, 김교헌은 1923년 영안현 총본사에서 병사한 후 1924년 이장하였고, 서일은 1921년 밀산에서 자결한 후 1927년 청호로 이장하였다. 이 묘역은 현재 화룡시 문물보호단위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6) 봉오동 전적비

• 주소: 왕청현(汪淸縣) 춘화향(春華鄉) 봉오동(鳳梧洞)

함경북도 나남에 본부를 두고 있던 일본군 제19사단은 왕청현 봉오동까지 독립군을 추격하였다. 1920년 6월 홍범도는 북로도독부의 전 독립군에게 일본군 본대가 독립군의 포위망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매복해 있다가 사령부장의 발포신호에 따라 일제히 총공격을 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독립군은 이후 청산리대첩에서도 연합부대를 형성하여 한국 독립운동사의 금자탑을 이루었다. 1995년 도문시 문화국에서 봉오동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으며, 현재 연변자치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도문시에서는 2013년 말까지 새로운 봉오동기념비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7) 태평구 전투기념비

- 주소: 왕청현 나자구 태평구

1935년 6월 20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일부 병력이 태평구의 항일무장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들어온 만주국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 전투에서 동북인민혁명군은 처음으로 노획한 박격포를 이용하여 도강하는 적들을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5년 8월 연변대학 민족역사연구소와 왕청현 문물관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태평구 전투기념비는 왕청현 중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태평구에서 동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8) 대황구 13열사기념비(大荒溝 13烈士紀念碑)

- 주소: 훈춘시(琿春市) 영안진 대황구임장(英安鎮 大荒溝林場)

1933년 9월 훈춘 항일유격대 30여 명이 동녕현성전투가 끝난 후 대황구에 돌아와 조선식 초가집에서 휴식하던 중 적의 습격을 받고 반격하다가 오빈, 박지운 등 13명의 대원들이 희생당하였다. 당시 휴식하던 조선식 초가집은 남북 길이가 12m, 동서 너비가 5m 정도였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13열사를 안장한 묘소는 이 집자리에서 서쪽 30m 되는 곳에 있다. 1960년대 훈춘현 인민정부가 대황구 13열사기념비를 세웠으나 오랜 기간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었던 것을 2005년 7월 훈춘시 조직부 당사연구실에서 파손된 13열사기념비를 화강암으로 새로 세우고 주변을 포장벽돌로 장식하여 홍색 관광코스 개발하고 있다. 훈춘시가 대황구 항일유격근거지 성역화를 위해 항일유적지에 대한 표지석과 기념비를 보완하고 훈춘시혁명기념관을 설치하는 한편 훈춘시 공무원과 당원에 대한 교육기지로 삼고 있으나, 영안진에서 대황구임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비포장이라 교통이 아직까지 불편한 편이다.

9) 삼원포 추가가(三源浦 鄒家街) 유적지

- 주소: 길림성 유하현 삼원포진 추가가

남만주 지역 최초의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와 신홍강습소의 구지가 남아 있다. 1910년대 서간도에 만들어진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홍강습소는 1911년 여름 추가가에 세워졌다. 무관학교 설립을 위해 서간도 지역으로 망명한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등 신민회 회원들은 1911년 4월 삼원포 추가가에 민단 성격을 띤 자치기관으로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경학사는 내무, 농무, 재무, 교무 등 4개 부서로 이루어졌으며 초대 사장에는 이상룡이 선임되었다. 경학사는 이주한인들의 강력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경학사를 중심으로 뭉친 한인들은 척박한 만주 땅을 개간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애국적 정신을 가진 동포들을 불러들이며 한인사회를 일구어나갔다.

아울러 무관 양성을 위해 신홍강습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중국 현지인들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학교 명칭도 평범하게 강습소라고 칭하였다. 신홍강습소의 교원으로는 이동녕·이상룡 등이 활동하였고, 김창환과 같이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다수 있었다. 신홍강습소는 당초 양기탁 등의 모금과 이석영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국내 모금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석영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이석영의 재산이 고갈되면서 신홍강습소는 서간도 동포들의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신홍강습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1912년 가을 유하현 합니하(哈泥河)로 이전하였다. 합니하로 이전한 신홍강습소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1913년 5월 교사 낙성식을 갖고 학교 명칭도 신홍중학으로 개칭하였다.

10) 신흥무관학교 옛터

• 주소: 통화현 광화진 7대

1915년 5월 3일 개교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으며 이 학교 출신들은 서로 군정서, 북로군정서, 의열단, 광복군 등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3·1운동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지청천과 기병 중위 김정천, 신평군 등이 국내에서 탈출해 만주 지역으로 망명하여 학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신흥무관학교는 기본적으로 무관학교였기 때문에 군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민족정신 함양에도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진 인재 양성이 일제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근대적인 인간교육의 목표하에 일반학과 수업도 병행하였으며 근대지향적 인간 덕성교육과 경제교육, 과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던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의 토벌과 마적의 습격 등 크고 작은 문제로 결국 1920년 8월에 폐교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배출된 3,000여 명 학생들은 만주와 중국 본토의 여러 독립운동단체에서 각각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앞서 언급한 사적지 외에도 연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민회 본부(구 연길도운 공서), 연길감옥 항일투쟁기념비, 창동학교 사은비 등이 현재도 잘 보존되고 있다.

2. 요령성 지역

요령성 지역의 한인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는 한중 양국의 공동 항일투쟁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윤희순 항일기념비와 양세봉 장군 흉상 등이 그러하다.

1) 윤희순 항일기념비

- 주소: 해성시 묘관둔 복산

윤희순(1860~1935)은 춘천의병장 유홍석의 장남 유제원과 결혼한 이래 시아버지인 춘천의병장 유홍석, 시재당숙인 의병장 유인석 등의 영향을 받아 여성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남장을 하면서까지 의병에 참가했으며, 나라가 망하자 1911년 일가와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처음 신빈현으로 망명했던 그는 환인현으로 자리를 옮긴 뒤 동창학교 분교인 노학당을 세우고 5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현모양처의 전형으로서,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망명 동안 중국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지금도 현지에서는 윤희순의 공덕이 전해지고 있다. 1994년 윤희순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온 뒤, 그 자리에 윤희순과 생전에 친분이 두터웠던 현지 중국인들이 윤희순 묘소를 세웠다. 현재 중국인 친구 갈복순의 후손들이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

2) 양세봉 흉상

- 주소: 신빈현 왕청문 강남조선족촌

양세봉은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광복군총영에서 활동하였다. 1923년 참의부가 조직되자 소대장으로 활동하였고, 1931년 조선혁명군 총사령이 되어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신빈현 왕청문 조선족진정부와 신빈현 조선족문화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왕청문 조선족소학교 내에 양세봉 흉상을 건립했으나 2007년 조선족소학교가 매각되면서 2009년 9월 왕청문 강남촌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건립되었다.

3) 노학당 기념비

- 주소: 환인현 보락보진 남괴마자

여성 항일독립운동가 윤희순의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2002년 8월 노학당 유지비를 건립하였다. 노학당은 대중교 계열의 동창학교 분교로서 많은 항일투사를 배출하였다.

4) 이진룡 의열비, 우씨부인 열녀비

- 주소: 관전현 청산구 구대구촌(靑山溝 口袋口村)

황해도 평산이 고향인 이진룡은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의 문인으로 국내에서 활동하였다. 한일병탄 후 1911년 서간도 지역으로 망명한 그는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17년 일제에 체포된 후 1919년 평양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인 우씨는 집 앞에 있는 소나무에 목을 매 순절하였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9년 3월 현지에 기념비를 세웠다. 2008년 독립기념관의 지원으로 주변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곳은 해마다 서간도 지역 의병투쟁지를 답사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5) 유인석 말년의 자정처(自靜處) 기념원

- 주소: 관전현 보달원향(步達元鄉) 소고령지

의병장 유인석이 말년에 거주했던 곳으로, 그는 1915년 이곳에서 순국하였다. 1994년 5월 유인석이 이곳에 은거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관전현 민족사무위원회에서 건립하였다. 유인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의암기비(毅菴記碑)에는 “저명 의병장 유인석이 만년에 이곳에서 은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6) 여순 일아감옥 구지

- 주소: 요령성 대련시 여순구구 향양가(大連市 旅順口區 向陽街) 139호

여순감옥은 1902~1907년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현재 여순 일아감옥 구지 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909년 11월 1일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곳으로 압송되었다. 옥중에서 5개월간의 투쟁을 통해 동양평화를 호소하였다. 특히 이곳은 안중근뿐만 아니라 단재 신채호, 우당 이회영 등이 순국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대련 근대사연구소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

2013년 일아감옥 구지 진열관과 독립기념관의 전시 패널에 한국어 표기를 추가하였다.

3. 흑룡강성 지역

1) 안중근 의사 의거지

- 주소: 하얼빈시 하얼빈역 구내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한국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곳이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포살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한국 의병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전지역 내에 들어온 적장을 공격한 것으로, 동양평화의 파괴자에 대하여 인간의 자유를 지키려는 정의의 응징이었다. 특히 안중근 의거는 이토 히로부미 포살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한국 침략을 획책하고 동양평화를 파괴하는 일제의 침략을 폭로하고 규탄함으로써 민족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한국인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안중근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을 본격화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바닥에 세모(안의사), 네모(이토 히로부미) 표지가 있다.

2) 안중근 의사 기념관

• 주소: 하얼빈시 도리구 안승가 85호

• 내용: 1909년 10월 23~26일까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그려냈다. 전시내용은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사실과 이를 언론들이 세계에 알리는 내용, 각국의 지도자들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한 높은 평가 및 안중근과 단지동맹, 안중근 의거의 진행과정 및 역사적 의의 등을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 면적은 약 160여 평이며, 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6년 하얼빈 조선족문화예술관 내에 건립되었으며, 관람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2013년 독립기념관의 지원으로 새로운 전시기법을 선보였으며, 20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새롭게 제작 전시하고 있다.

3) 한중우의공원

• 주소: 해림시 철남가(鐵南街) 해랑로

한중우의공원은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의 활동과 한인 이주역사, 일제의 침략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독립의지를 일깨우고 독립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2002년 6월 15일 시공되었다. 대지면적 17,000m², 건축면적 4,500m²로 역사관, 백야관, 경비실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관은 지상 1·2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1,095평(1층 365평, 2층 365평, 지하 365평)이다. 1층 기획전시장(62평)은 개인과 단체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자료실과 전산실(40평)에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재중동포와 한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실(30평)은 역사와 문화 동영상 제

작·방영하고 있다. 접견실(11평)은 국내외 귀빈 방문시 접견과 대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층에는 270평의 상설전시장이 있으며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 항일독립운동사, 한중수교, 한류열풍 등 전시품과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지층은 연수원 및 숙소(290평)로 쓰며 한국의 경제인 또는 일반인을 위한 어학연수, 유스호스텔 개념의 시설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일반 여행객, 기업체와 단체 방문시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5월 인근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한중 양국 간의 우호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4) 김좌진 장군 순국장소

- 주소: 해림시 산시진 도남촌(山市鎮 道南村)

신민부가 군정파와 민정파로 나뉘면서 김좌진은 1929년 7월 21일 새로운 독립운동단체인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였다. 본부를 산시역 부근에 둔 한족총연합회는 무정부주의자를 받아들였으며 동포들의 교육, 사상계몽, 생활개선 등의 지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들은 재만동포들이 경제적·문화적 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들의 자치조직으로서 이들을 조직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한족총연합회는 농촌자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정미소를 운영하였으며, 교육활동과 무장투쟁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한족총연합회의 지도자 김좌진 역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한인 자치와 무장투쟁에 주력하다가 1930년 1월 24일 공산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했다. 그 장소에 1999년 11월 16일 흙담 초가집 5개동(팔로회의실, 자택, 정미소, 화장실, 경비실)을 건립하였다. 현재 무료관람이며 관람객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5) 팔녀투강기념상

• 주소: 목단강시 목단강변

동북항일연군 여대원들이 일본군과 대치하다가 목단강에 투신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상이다. 8명 가운데 조선인 두 명이 있으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기념상에 대한 제자(題字)는 주은래 총리의 부인 등 영초가 직접 쓴 것이다.

IV. 지역별 답사 설계와 기억의 공유

중국 동북지역은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국외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한국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모두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 사적지들을 타국에서 정성스럽게 보존, 복원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라져가는 사적지를 보존하거나 현존하는 사적지를 관리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계다.

20세기 초부터 중국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활동상은 중국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컨대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손문과 주은래 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과 경의를 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의 항일운동에 대한 인식의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내에 안중근 기념관이 설치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동북지역은 한국 독립운동사 사적지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도 많

이 산재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 여행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 한국 독립 운동사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연변·해림·하얼빈·대련 지역으로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다. 대개 4박 5일 코스로 개발된 사적지 탐방은 13~15개 정도의 사적지를 소화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5곳 정도를 탐방하는 것으로 사적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주마간산’식 탐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변 역사 관련 사적지를 추가로 배정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 동북지방 유적지 탐방 ◆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여행 일정	식사
제 1 일	인천 장춘 길림 연길	전용 버스	07:30	인천 국제공항	중: 현지식 석: 한식
			09:40 ~ 10:55	인천 출발-장춘 도착(시차: -1시간, 비행시간: 2시간 15분 소요) 가이드 미팅 후 길림시 이동(약 1시간 소요) ▶ 육문중학교 답사 연길 이동(약 4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휴식	
				HTL: 백산호텔 또는 동급	
제 2 일	연길 용정 도문 훈춘 연길	전용 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용정 이동 ▶ 일송정, 해란강, 대성중학교, 이상설기념관, 용정 우물, 윤동주 시비, 윤동주 생가, 명동교회 중식 후 도문 이동(1시간 소요) ▶ 중조국경지대, 두만강 훈춘 이동(1시간 소요) ▶ 훈춘 권하춘(안중근 의사 의거 전진기지) 연길 이동(2시간 소요) ▶ 연길감옥 항일투쟁 기념비 석식 후 호텔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제 3 일	연길 왕청 경박호 목단강			호텔 조식 후 왕청현 이동(1시간 소요) ▶ 북로군정서 옛터, 대한민국회 옛터(추정) 경박호 이동(2시간 소요) ▶ 영안현 대중교 본사 목단강 이동(1시간 30분 소요) 석식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TL : 목단강호텔 또는 동급	
제 4 일	목단강 해림 하얼빈			호텔 조식 후 ▶ 산시, 한중우의공원 중식 후 하얼빈 이동(4시간 소요) ▶ 안중근 의사 기념전시관 석식 후 호텔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TL : 하얼빈국제호텔 또는 동급	
제 5 일	하얼빈 인천	전용 버스	14:30 ~ 18:00	호텔 조식 후 ▶ 하얼빈역, 731부대 중식 후 공항 이동 하얼빈 출발-인천 도착	조:호텔식 중:현지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인여행사 제공(2013. 9)

한국 여행사를 비롯한 답사팀들의 답사일정은 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인들에게 한국사 관련 사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북지역 답사는 '위인 탐방기'의 성격이 짙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 가슴에 한국 독립운동의 열정을 각인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적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투쟁은 우리의 역사이면서도 중국인들에게도 1932년 이후에는 공통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킬 때 보다 나은 한·중우호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정도의 답사루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변 지역, 둘째, 여순·대련 등을 포함한 요령성 지역, 셋째, 상지·해림·목단강 등 흑룡강성 동남부지역, 넷째 경안현·치치하얼·하얼빈·내몽골 일부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답사코스

코스	지역	세부지역	사적지명	일정	비고
제1안	연변 지역	연길, 용정, 도문, 화룡, 훈춘, 왕청	용정중학 역사전람관-명동교회-청산리 항일대첩기념비-3·13반일의사릉-삼총사 묘역-봉오동 전적비-훈춘 안중근 거주지-대흥구 13열사기념비-태평구 전투기념비-간민회본부-연길감옥 항일투쟁비	4박 5일	중국 항일 투쟁 관련 사적지 답사 포함
제2안	요령성 및 길림성 일부	여순, 대련, 해성, 신빈, 환인, 관진, 유하, 통화	여순 일야감옥 구지-해성 윤희순 항일기념비-무순 전범관리소박물관-양세봉 흉상-노학당 기념비-이진룡 의열비-유인석 자정처-삼원포 추가가-신흥무관학교-육문중학	6박 7일	단동 경유시 일정 변경 가능
제3안	흑룡강성 동남부	상지, 해림, 목단강, 밀산	노은 김규식 피살지(하동농장)-조일만기념관(안중근 유목전시)-한중우의공원-김좌진순국지-8녀투강지-밀산당벽진-홍량촌 4열사묘비	7박 8일	중국 측 제작 기념비 포함
제4안	흑룡강성 서북부 및 내몽골 일부	하얼빈, 치치하얼, 경안현, 아룽치, 자라툰	안중근 의거지-안중근 전람관-조린공원-정율성 기념관-경안현 허형식 기념비-김필순 거주지-김필순 경영 농장-아룽치 조선중학교-자라타치 조선중학교	6박 7일	중국 측 제작 기념비 포함

제1안부터 제4안까지 답사코스의 특징은 한중 양국 공동 항일투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제1안에는 그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연변 항일투쟁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훈춘 대흥구 지역과 왕청현 나자구, 태평구 지역의 기념물을 답사코스에 포함시켰다. 물론 접근성 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

제별 답사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한 사적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표에는 기입하지 못했지만 왕청현 문화재로 등록된 신선동굴 태극 문양을 보는 것도 답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된다.⁶⁾ 제2안에 포함된 해성의 윤희순 항일기념비와 무순 전범관리소, 양세봉 흉상 등은 한중 양국이 모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윤희순 항일 기념비는 현재도 중국인 친구 갈복순(葛福順)의 손자가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는 “조부의 유언으로 지금까지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은 유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⁷⁾ 이처럼 윤희순은 70여 년 전에도 중국인들과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한중 양국 우호증진의 표상으로 남아 있다. 양세봉 흉상 역시 윤희순 기념비와 같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항일투쟁한 기념비적 상징물이다. 제3안의 특징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설립된 주하현(현 상지시)에 소재한 조일만 기념관과 밀산의 주덕해의 항일투쟁과 관련있는 홍량춘 4열사 기념비를 답사하는 것이다. 기존 답사코스에 한중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공동 투쟁했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사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역사의 공통분모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밀산의 경우는 러시아와 접경지역이므로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제4안은 평화의 도시를 꿈꾸고 있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답사코스이다. 침략의 상징물인 731부대 기념관이 있으며, 인류평화를 지향했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중일전쟁 이후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견지했던 정을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7),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7, 78~81쪽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년 9월 8일 탐방 녹취

성 기념관⁸⁾이 바로 하얼빈시에 있다. 특히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정율성 기념관은 항일투쟁을 전개한 시기는 다를지라도 한국과 중국인들에게 남긴 자산을 감동적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이면서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이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한국 독립운동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보듬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기도 하다.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밝은 미래를 담보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2013년 6월 한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이 공동항일투쟁사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적지는 우리의 보이지 않은 중요한 자산이자 한중 양국이 서로 공존하는 데 필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사적지는 우리 선혈들의 미래에 대한 과거의 외침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점을 더욱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8) 정율성 기념관은 2009년 7월 25일 음악도시 하얼빈시 우의로에 마련되었다.

• 참고문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2), 『국외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8), 『국외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11), 『국외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1
박환(2009), 『박환 교수의 만주지역 한인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윤병석(1994),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탐방기』, 지식산업사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변화, 협력을 위한 중국의 역할

베이징대학 김경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 II. 북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
- III. 중국 역할론의 의미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경일(金景一)

한중관계 및 한반도문제 전공, 베이징대학 교수

대표논저로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기원』(2005, 논형), 『한류와 한풍의 상호작용 연구』(2010, 민족출판사) 등이 있다.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변화, 협력을 위한 중국의 역할

베이징대학 김경일

이 글에서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한데 묶어 논함은 동북아 평화에서 북한이 가지는 의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양자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밝히는 것은 동북아 역학구도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온 중국이 동북아 국제정치의 핵심인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관계를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북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다루고, 그에 따른 중국의 역할을 밝혀보려 한다.

I.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을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로 나눈 안드레 올스너(Andrea Oelsner)는 '소극적 평화'를 취약한 평화, 불안정한 평화, 차가운 평화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적극적인 평화'란 무력과 전쟁을 배제한 신뢰로 구축된 상태를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¹⁾ 그가 말한 '적극적인 평화'는 유동적인 '소극적인 평화'와 달리 무력과 전쟁을 배제하고 신뢰에 기반한 체제가 구축되고 이 체제가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북아 평화란 '적극적인 평화', 즉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논하고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말하는 것은 바로 동북아에 일련의 원칙, 규범, 룰과 정책결정 과정으로 다져진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근대사 이후의 동북아시아는 국제전만도 갑오중일전쟁(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한국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열전을 겪으면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한국전쟁이 종식된 후 반세기에 가까이 지속된 냉전은 '소극적인 평화'에서 말하는 '차가운 평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문에서 논하는 '평화'의 정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대사 이후의 역사를 보면 동북아시아의 열전은 모두 한반도를 진원지로 하고 있으며 냉전 역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전초선으로 하고 있다. 결국 한 세기 가깝게 동북아시아에는 '적극적인 평화'가 정착하지 못하였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한반도를 진원지로 하는 열전을 겪거나 한반도를 전초선으로 냉전을 겪은 것은 모두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질서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근대사 이후 첫 번째 열전이었던 갑오중일전쟁은 동북아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다.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

1) 韓獻棟(2008), 「朝鮮半島和平机制的构建：國際政治和國際法的視角」, 『當代亞太』 2008年 第3期, 87쪽

본의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분할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이기도 하였지만 세계적 범위의 국제정치의 굴절이기도 했다. 일본의 배후에는 영·일동맹이 있었고 러시아의 배후에는 러시아·프랑스 동맹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일전쟁을 제1차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를 진원지로 하는 전쟁이었지만 그 국제정치학의 의미는 세계사적인 것이다. 이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나서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일본은 자국 중심의 '대동아공영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 도처에 전쟁의 불길을 지폈다.

17세기 제주도를 다녀갔던 네덜란드인 하멜이 목격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 한국은 근대사를 거치면서 지정학적 의의가 부각되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조용하지 않은', '은둔이 아닌'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들의 진원지로 되어왔던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새로운 질서구축기에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사적 사건의 진원지가 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전쟁은 전후 동서냉전이라는 질서를 최종적으로 고착시킨 사건이었다. 38선과 휴전선은 남북분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미소 냉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결국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역사의 전환기 때마다 예외없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지정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루돌프 헬렌에 따르면 지정학이란 국가를 지리적 유기체 또는 하나의 공간현상으로 인식하는 과학이다. 즉 그는 지정학을 공간에서 펼쳐지는 국제정치 주체들 간 힘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²⁾ 여기에서 말하는 '힘의 관계'란 어느 한 지리적 유기체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2) (美)詹姆斯·多爾蒂 等(1987), 『爭論中的國際關係理論』, 世界知識出版, 76쪽

전략이 상호 갈등과 마찰을 빚어 충돌을 일으키는 관계를 이르는 것이다.

근대사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의가 부각된 것은 그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이 한반도를 무대로 펼쳐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구한말의 한반도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것은 러시아의 남하전략과 일본의 북진전략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전통적 지위 고수라는 전략이 한반도에서 충돌했기 때문이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정상화의 전제는 바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였다. 중국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의가 약화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미국이나 일본에게 한반도는 여전히 매우 큰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문제에 접근하면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유지할 명분을 만들어가야 했다. MD(Missile Defense)와 같은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할 명분도 만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또는 한반도가 더 이상 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이 갈등과 충돌을 빚는 지역으로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국들의 상호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패권정책을 추구한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중국 또한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협력의 전략을 펼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의는 약화되

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변화, 협력을 위한 중국의 작용을 논할 때 큰 틀에서 주변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다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냉전시기의 소련과 미국처럼 대결구도로 나간다면 한반도문제는 지정학적 명예를 벗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국들의 관계를 우선으로 강조한다고 하여 한반도의 운명이 수명적으로 근대사 이후의 비극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의가 부각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가 대국들이 지정학적 전략을 펼칠 무대와 공간을 제공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에 있어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분단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대국들이 한반도를 무대로 지정학적 전략을 펼칠 공간이 좁아지거나 소실된다면 한반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운명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가 여전히 동북아 국제정치의 핵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분단구도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냉전구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한반도문제에 투사된 여러 강대국의 이익관계, 갈등관계, 협력관계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한다는 것은 동북아 평화구축의 전제가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핵심문제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결국 근대사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왔던 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동북아에 평화를 체제와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II. 북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

동북아는 세계화와 지역경제 블록화라는 시대적 추세 속에서 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축, 6자회담을 통한 다자안보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논하면서 새로운 협력 질서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거창한 글로벌시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세계 유일의 냉전구도가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여느 국가와 달리 국제체제에서 사실상 유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동북아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며, 여기에 북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것은 북한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직결된 문제이자 동북아 평화체제구축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상 냉전이 종식된 후의 1차 북핵위기 때부터 특히 최근 몇 년간 북핵문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는 늘 화제의 초점으로 되어왔다. 북한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핵을 포기하는 변화,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는 변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변화를 보여주며 동북아 경제협력에 합류하면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된다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지역공동체 건설, 다자안보체

제 구축 등이 모두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역으로 북한이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북핵문제에 작금의 동북아 국제정치가 집약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라고 일컫는 북한에 의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개혁개방은 어느 만큼 가능한 것일까?

북핵문제의 발단은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과 북한의 생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이 상호 갈등을 빚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 잔존해 있는 냉전구도이다. 즉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도를 둘러싸고 하나는 그것을 유지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탈피하려 하면서 북핵을 매개로 대치하여 왔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냉전구도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갈등은 설혹 북핵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 유발되고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다. 카드로서의 핵개발설, 핵보유가 목적이라는 핵보유설 등등이 있었지만 북한이 3차핵실험을 하고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후에는 핵보유가 목적이라는 설이 정설화되고 있는 듯하다.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다는 일본의 보도도 나온 바 요컨대 핵보유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설이다.

북핵문제가 불거져나온 것은 냉전이 종식되면서였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남한과의 균형이 깨진 북한 앞에는 세 가지 선택이 가로놓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앞세우고 일본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어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한

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었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일 것이다. 세 번째 선택은 개혁개방을 통한 국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첫 번째를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내세우면서 두 번째 선택도 포기하지 않았다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 일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진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발빠른 행보로 보여주었다. 일찍이 냉전 종식에 앞서 “대치상태에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미국과의 화해공존”³⁾을 제기하였던 북한은 냉전의 종식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북미고위급회의, 북일 국교정상화 담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남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전략은 명확한 것이었고 대세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었다. 북한 대 미·일·한의 냉전구도를 탈피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깨뜨리는 것이었다.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북한에 통보할 때도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가 미묘한 시기에 처해 있기에 중국이 중한관계와 북미관계를 조화하여 고려해줄 것을 희망하였다.⁴⁾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희망하였던 것이다.

만약 이 시기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남한과의 관계 역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진전을 보았다면 북한의 핵개발은 맹아상태에서 멈추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미국, 일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이루고

3) 《人民日報》(1984. 9. 21)

4) 錢其琛(2003), 『外交十記』, 世界出版社, 154쪽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된 후에도 핵개발을 추진하였다면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탈퇴와 자멸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러한 지정학적 전략과 생존전략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과 상충되는 것이었다. 북한이 한반도 냉전구도를 탈피 하려는데 반해 미국은 한반도 냉전구도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북한에 두 번째 선택을 내세우게 하였다.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선택으로 첫 번째 선택을 실현하려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핵으로 미국의 주의력을 환기시키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루려 한 것이다.

이 외중에 북한의 두 번째 선택이 부각되면서 결국 북핵문제는 위기와 반전을 거듭하면서 3차 핵실험에까지 이르렀다. “결국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무엇이 힘의 합력(合力)에 따라 나타난 것”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수차례 강행하면서 가장 이루려 하였던 첫 번째 선택이 요원해지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어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지금과 노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⁶⁾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북핵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북한이 과연 핵포기라는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제재와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5) 「恩格斯布洛」, 『克思恩格集』 4卷, 人民出版社, 1976, 478쪽

6)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type=rozak&no=482#pos>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북한의 상대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제3의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종합경제력 12위의 한국이다. 거기에 비하면 북한은 절대빈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북한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북한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핵이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북한이 살얼음 위가 아닌 땅 위를 걷게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북한의 다른 하나의 변화, 즉 냉전이 종식되면서 줄곧 거론되어왔던 ‘개혁과 개방’의 변화는 사실상 위의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이 핵의 외부에서 오는 위협을 막아주고 안보를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 거부 이면에는 정권수호, 체제수호라는 대내적 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안보와 정권수호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사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켜보면서 북한은 중국식 개혁도 실험해보면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의 변화시도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중국의 천안문사태, 루마니아를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소련의 해체였다. 북한이 1990년대 초 정책의 중점을 대내의 변화가 아닌 대외관계 개선에 돌린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북한의 변화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여건에서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중국 역할론의 의미

북한이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세계의 이목은 오히려 중국에 쏠렸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공공

연히 바랐고 심지어 북핵문제 해결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설도 심심찮게 나왔다. 결국 북핵문제가 해결을 보느냐 마느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의 일각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고리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미 기간 중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이 지역에 전진배치된 미사일방어태세를 유지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 북핵문제에 발벗고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⁷⁾

핵실험은 북한이 했는데 왜 중국일까? 전제는 역시 북핵문제는 이제 제재와 압력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제재와 압력이 중국의 동참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그 압력에는 정치적인 압력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압력도 있다. 정치적 압력이란 이른바 '전통적인 관계를 끊는 것'일 것이고 경제적 압력이란 두말할 것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경제적 교류를 끊으라는 것일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전과 달리 다양하게 나타났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중국 환구망(环球网)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71%의 네티즌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으며 66%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지

7) 《연합뉴스》(2013. 5. 8)

지를 표명하였다.⁸⁾

한반도문제와 국제문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예전과 다른 강경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대표적 견해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의 해결도 어렵다”⁹⁾는 견해,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회의적인”¹⁰⁾ 견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중국 국가이익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잘못 다루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¹¹⁾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중국의 여론은 더더욱 들끓었다. 시진핑 정부가 갖 출범한 마당에 그것도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 것이다. 중국 내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한 면으로는 중국이 다원화 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외교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다른 한 면으로는 중국 내에서도 기존 대북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에 찬성을 표시하고 사실상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 중국은 북핵이 이미 중국의 국가이익에 해가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핵문제는 이미 역내 국제정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아시아

8) “朝鮮不應得罪中國民間”, 《環球時報》(2009. 6. 3)

9) 朱峰, “中國必須維護六方會談尊”, 《環球時報》(2009. 6. 4)

10) 張鏈瑰, “克林頓只是朝鮮的一顆棋”, 《環球時報》(2009. 8. 31)

11) 曹世功, “對朝政策該變調時就得變調”, 《環球時報》(2009. 7. 1)

회귀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발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당연히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냉전이 종식된 후의 중북관계를 되돌아켜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냉전시기에 비해 이미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할 수 있다. 그것은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정책 전환과 냉전의 종식이라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개혁개방은 중국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켜왔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계획경제체제 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 대 계획경제체제 관계로 전환되었다. 양국관계는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 것이다. 1990년대 초 중국과 북한의 물물교환이 경화결재로 바뀐 것 등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런 와중에 중국과 한국이 관계정상화를 이루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는 상당한 기간 냉각기를 겪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30%대에 머문 것이 그 반증이다. 이 냉각기는 사실상 지난 시기의 비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탈피하여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바로 근대사 이후 중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각되어 왔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다. 어찌 보면 냉전시기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 역시 이 지정학적 요소가 만들어 준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 요소로 인하여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른 강대국들과 갈등과 충돌을 빚었고 그것은 결국 갑오중일전쟁, 러

일전쟁, 중일전쟁,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들 모두 중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밝혔듯이 다른 강대국들이 지난 시기처럼 중국을 겨냥해 한반도를 무대로 지정학적 전략을 펼친다면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접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은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지정학적 접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전략을 고수하며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의 근간인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할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1차 북핵위기 때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던 것은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 전면 대결로 나간다면 그것은 중국과 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금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결일변도가 아닌 협력과 갈등을 동반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설혹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패권을 추구한다 해도 중국의 부상으로 이미 역학구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미국 단독의 패권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많은 면에서 이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9·11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은 국제테러라는 새로운 적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중국과 더더욱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기의 중미관계를 두 번째 밀월관계라고 묘사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가까워졌다. 중국의 주도하에 6자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은 역내 국제정치의 가장 큰 이슈를 다루는 무대에서 대중국관계를 새롭게 정

립해나가려 했던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가 “6자회담이 있었기에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가 있게 되었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G2로 표현되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보여왔고, 그 변화는 한반도문제에 굴절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에서 어떠한 행보가 중국에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일각의 주장이나 한·미·일 등 국제사회 일각의 희망대로 대북정책의 기초를 바꾸고 북한이 변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북핵문제 해결과 중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일까? 중국은 일관되게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 방미 중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과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이행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여 양국의 입장차이를 보였다.¹²⁾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력이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또는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해결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듯이 북핵문제의 발단을 놓고 보면 북핵의 핵심 당사

12) 《연합뉴스》(2013. 6. 11)

국은 미국과 북한이고, 결정적인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역할은 6자회담을 추진시키는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서 이미 뚜렷이 드러났다 할 수 있다.

결국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중국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북핵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구체적 설득일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이러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북한의 다른 한 변화라고 하면 그것은 '개혁과 개방'의 가능성이다. 중국의 역할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북한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북한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여러 면에서 파격적 행보를 보여주면서 많은 학자들은 심지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북한은 두 차례의 '인공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세간의 기대를 저버렸다.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을 북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평화적 이행(和平演變)'으로 보고 계획경제와 집단주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계획경제와 집단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체제수호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동원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데 있다. 이 양자는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정권수호를 위한 북한의 통제력은 바로 이 계획경제와 집단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며, 응집력과 결속력은 동원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개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역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국은 각 나라는 사정이 다르기에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다른 나라에 자기의 경험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선택한 길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자기의 경험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경제건설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 중국의 대북정책 초점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 경제의 활성화에 맞추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인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개발원조가 강조되어 왔다. 그것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강조해온 목린(湄麟), 안린(安麟), 부린(富麟)이라는 외교의 신사고(新思考)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웃이 잘살게 도와준다는 뜻으로서 상호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북관계에서 경제협력과 공동발전이 그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동북의 창지투[長吉圖] 개발선도구역이 두만강 삼각지로 확대되고, 두만강지역부터 압록강하류까지 이어지는 동변철도가 신압록강대교에 이어진다면 중국이 국가중점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동북의 진흥은 북한의 경제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중·일·한 삼국의 자유무역구 건설이 박차를 가하고 동북아의 경제공동체가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북한이 역내개발과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이러한 접근은 지난 시기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정치관계를 우선 순위에 두었던 종래의 지정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턴의 지정학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지정학적 접근이 갈등과 마찰, 대결을 불러왔다면 새로운 시각의 지정학적 접근

근은 대화와 협력, 모두가 이기는 윈윈의 접근인 것이다.

최근의 나진선봉, 황금평, 위화도 등의 공동개발은 예전의 양국 협력과 차원이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예전에 수혈식의 원조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의 접근방식은 북한의 조혈기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경학적 접근이란 한마디로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요소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경학적 접근에 따른 협력방식은 북한 기업의 시장경제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 기업과 협력하려면 시장원리에 기반한 운영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북한경제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 회생과 발전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북한이다. 지경학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다. 경제가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경학적 요소가 짙어지고 시장경제요소가 확장되는 길이 바로 북한이 변화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동북진흥이라는 중국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북한 경제의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임이 틀림없다. 대외개방도가 뒤져 경제적 낙후 상황을 면치 못해왔던 중국의 동북지역으로서는 북한의 개방과 개발이 어찌 보면 동북진흥의 성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예정대로 추진시켜 나가면 중국과 북한 간에는 국제경제자유무역시장도 설치될 전망이며 국경무역, 관광, 수출입가공,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의 합작도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중국의 남방기업들이 가세하고 도로, 항만,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다.

북한은 올해 5월 29일에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을 반포하였다. 북한 각 도에 새롭게 경제개발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중북 경제협력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복 경제협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국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조만간 중국의 '동북4성'으로 편입될 것이며 '경제식민지'로 전락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전통적인 지정학적 시각의 접근법으로서 그 바탕에는 대립과 갈등, 마찰과 대결의 힘의 논리가 깔려 있다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 추세에 걸맞지 않는 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강화는 제반 동북아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두만강지역이나 환동해경제권은 잠재력이 풍부한 미개발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동북아를 세계경제무역의 하나의 중심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지역의 개발 그 자체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개발구상이라 해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주변국기들의 경제발전에 탄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북한 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작금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동북아 각국은 전례없이 같은 시공간에 리더십 교체를 이룩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나가고 있다. 중·일·한 삼국은 자유무역 구축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비록 한일

관계와 중일관계가 깊은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삼국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 평화와 발전의 추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북한의 역내문제 참여도 그렇고 이제는 따로 떼어놓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제반 추세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접근이 벌어지고 지경학적 접근이 두터워질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핵문제를 핵으로 한 작금의 한반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북한 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역시 일방적인 역할이 아닌 바로 이러한 동북아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 맥락 속의 역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09년 11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김경일 저, 홍면기 번역(2005),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기원』, 논형
詹姆斯等(1987), 『爭論中的國際關係理論』, 世界知識出版社
錢其琛(2003), 『外交十年』, 世界知識出版社
黃枝連(1994), 『東亞的禮儀世界－中國封建王朝與韓半島關係形態論』,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金景一·金强一(2008. 8), 「韓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研究」, 『中國外交』
韓銀安(2004. 3), 「淺析地緣經濟學」, 『外交學院學報』第75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과 조선족의 역할

길림대학 이바오중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계획요강의 주요 내용과 의의
- II. 조선족이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
- III. 두만강 개발에서 조선족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 IV. 두만강 개발계획과 조선족 역할에 대한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바오중[衣保中]

역사학 전공, 길림대학 교수

대표논저로는 『중국 동북농업사연구』(1990, 길림문사출판사), 『조선이민과 동북지역수전개발』(1999, 장춘출판사), 『청대동북지역경제사』(공저, 1990, 흑룡강인민출판사) 등이 있다.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과 조선족의 역할

길림대학 이바오중

2009년 8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두만강[圖們江]지역협력개발계획요강-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선도구 지정’(이하 ‘계획요강’)을 정식 비준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 1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SCIO)은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건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계획요강’을 공식 발표했다. ‘계획요강’의 비준은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의 건설계획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두만강 개발의 핵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족이 두만강 개발에서 어떻게 핵심역할을 발휘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I. ‘계획요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약 15,000자에 달하는 ‘계획요강’은 주요 의의, 총체적 요구사항,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건설의 가속화, 창지투와 국내지역 연대의 적극 촉진, 두만강

국제지역협력의 전면 추진, 계획시행에 관한 보호책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창지투에서 창(長)은 지린성[吉林省]의 창춘시[長春市]를 말하고, 지(吉)는 지린시[吉林省] 일부 지역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일컫는다. '투(圖)'는 연변주가 위치한 두만강 지역을 말한다. 본 개발계획의 해당 면적은 7만 3200km²로 지린성 총면적의 39.1%를 차지하며, 해당 인구는 1,097만 명으로 지린성 총인구의 40.7%를 차지한다. 이 중 2개가 특대도시이며, 9개가 중소도시, 179개가 향·진(鄉·鎮)으로 도시화율이 57%에 달한다. 경제 총량은 전체 성(省)의 60%를 차지하고, 자동차·석유화학·농산물 가공이라는 지린성 3대 지주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대기업이 모두 해당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지린성 90% 이상의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이 밀집하여 있고, 금융, R&D, 인적 자원 등 생산 요소가 대거 집중되어 있다. 산림 면적과 수자원은 각각 지린성의 55%, 5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전체 성의 60% 달하는 주요 금속·비금속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는 지린성 최대의 경제성장 우위와 최대 잠재력의 개방 우위, 생태자원 우위를 하나로 융합하여 지린성 경제발전과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을 추진하는 성장극(growth pole)을 형성하였다. '계획요강'은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의 4대 전략적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였다. 즉, 중국 변경의 개방과 개발을 위한 중요 지역, 동북아로 향한 개방의 중요 요충지, 동북아 경제·기술 협력의 중요 플랫폼,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중요 성장극으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였다.

'계획요강'의 발전목표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2012년까지 '차항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함)' 목표를 힘써 실현하여, 창지투 지역의 경제 총량을 2배 확대하고, 산림 면적을 60% 이상 유지하며, 수출입 무역액을 대폭 확대하여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자리잡는 것이다. 2단계는 2020년까지 중국 두만강 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

고, 특색산업 시스템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혁신력을 국내 선진지역 수준까지 도달하게 만들고, 창지투 지역의 경제 총량을 4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에 신형 공업기지, 현대 농업의 시범기지, 현대 물류기지,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기지를 구축하여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 성장극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다.

앞서 제시한 전략적 포지셔닝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요강'은 세 가지 방면의 중요 임무를 확정하였다. 첫째,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둘째, 창지투와 국내 지역의 연대를 적극 촉진한다. 셋째, 두만강 국제지역 협력을 대폭 추진한다. 이 계획은 두만강 협력개발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1) 두만강 지역의 투자와 기본 건설을 적극 촉진한다.

이 계획은 훈춘(琿春)이 개방의 창구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훈춘에게 더욱 유연한 변경무역 정책을 제공하고, 러시아, 일본, 한국, 홍콩의 공업단지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러시아,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인프라 협력 건설을 추진하고, '차항출해'를 실현해야 한다. 개방에 있어 엔룽투(延龍圖, 연길·용정·도문)의 최전방 기능을 높이고, 엔룽투를 두만강 지역의 중요한 물류 연결점과 국제산업의 협력 서비스기지로 건설해야 한다.

2) 두만강 지역의 국제 협력을 적극 촉진한다.

이 계획은 원활한 국제 대통로를 건설하자고 제의했다. 적극적으로 훈춘항을 국제상품거래 센터로 건설하고, 육해 연동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통관효율과 화물통과 능력을 높이고, 중국과 몽골의 국제 대통로 협력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을 적극 추진

하고, 주변국과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산업협력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식·문화·여행 등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3) 두만강 협력개발을 위한 내륙지역의 지지대 역할을 강화한다.

이 계획은 두만강 개발과 지린성 중부 경제의 중심도시 발전과 연계했다. 변경지역과 내륙지역이 출신수범으로 상호 보완하고 연동하여,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이 더욱 높은 차원에서 심층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창춘, 지린, 두만강 지역을 연결하는 빠른 통로와 무역항구를 건설하여 훈춘은 창문역할을 수행하고, 지린·룽징[龍井]·투먼[圖門]을 최전방으로 삼고, 창춘·지린을 엔진으로 삼고, 동북 내륙 지역을 지지대로 삼는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지린성에서 동북지역을 아우르는 개방의 새로운 전방위적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2009년 이래 창지투 선도구 건설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교통 기초시설 건설이 급속도로 추진되었고, 국제 대통로가 원활하게 발전하였으며 창지투 일체화, 옌룽투 일체화 효과도 뚜렷하다. 중국의 19번째, 지린성 최초의 국가급 종합보세구역인 장춘 흥룡종합보세구역(興隆綜合保稅區)이 2011년 12월 비준되었다. 장춘 흥룡종합보세구역은 창춘시 경개구(經開區) 흥룡산진(興隆山鎮)에 위치하며 계획면적은 4.89km²이다. 현재 1기 기초시설 건설과 항목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관이 요구한 감독시설건설 및 각종 검수업무는 준비 완료되었고, 2012년 5월 17일 연합사전검사를 통과하였다. 기업유치 프로젝트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화상무물류원, 중외운물류, 기업유치국물류기지 등 대형 중앙기업 프로젝트는 이미 건설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은 2012년 4월 13일 중국 도문강구역(훈춘)국제협력시범구의 설립을 비준하였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의 계획면적은 90km²이고 국제산업협력구역, 변경무역 협력구역, 중·조 훈춘경제협력구와 중·러 훈춘경제협력구역 등의 기능구역을 포함한다. 현재 시범구역의 총체적인 발전계획은 다 짜여졌으며 투자가 확정된 기업 수는 모두 206개이며 총 투자액은 414억 원이다. 자금광업다금속 종합회수가공, 한국의 포항물류단지 등의 중요한 몇몇 투자 프로젝트는 이미 건설에 착수했다.

중·조의 나선지역 공동개발과 관리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 5월 당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전 주석 후진타오와 북한의 나선경제무역구의 중·조 공동개발과 공동관리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다. 중·조 나선경제무역구는 북한의 동북부와 지린성 옌벤 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총 면적은 470km²이고, 원자재, 장비제조, 하이테크기술, 경공업, 의류업, 현대 고효율농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2010년 이래 중·조 양국 정부의 높은 관심과 대대적인 추진 하에, 지린성과 나선시 지방당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건설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지린성과 북한 나선시 당정의 주요 지도자가 앞장 서서 지방연합 사업 기구를 만들었고, 성(省) 정부는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협조기구를 만들었다. 둘째로 중·조 양측은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지린성이 현재 유일하게 경외(境外)지역에 세운 중국 위주의 관리위원회이다.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는 2010년 10월 26일 나선시에서 정식으로 현판을 달고 중·조 양측 인사들이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셋째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의 총체적인 발전계획과 핵심구역 발전계획의 편제를 마쳤다. 관련 입법업무는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넷째로 중대한 협력 프로젝트들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아태기업(亞泰集團)은 백만 톤의 레미콘 프로젝트를 이미 사업 시작 전에 완료하였고, 나선과 협력하여 심은 8,800묘

의 버 프로젝트는 풍작을 이루었다. 그 외에 나선에 대한 송전·지역기초시설·나진항·철도·여행 및 건축자재 공업원 등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들이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II. 조선족이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

1) 조선족은 두만강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두만강 지역은 중국의 변경이자 소수민족 지역으로 변경 및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민족의 단결과 사회 안정이라는 기초가 필요하다. 중국의 변경지역을 살펴보면 동북변경과 북부변경의 형세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발전도 가장 좋은 편이다.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는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성급(省級) 지역이며, 옌벤자치주는 경제발전 추세가 가장 양호한 변경지역이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주 중에서 옌벤주 지역의 총 생산량은 450억 위안으로 5위를 차지했다. 재정 수입은 72억 위안으로 4위를 차지하였고, 고정자산 투자는 568억 위안으로 1위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217억 위안으로 1위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저축규모는 481억 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¹⁾ 옌벤주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국민이 부유하고 이 때문에 국무원에 의해 '민족단결과 진보의 모범자치주'로 네 차례 선정되었다.

옌벤주의 안정과 발전은 자치주의 주체인 조선족의 공헌과 밀접한 연관이

1) 옌벤주통계국(2010), 『순위로 보는 옌벤』, 2~27쪽

있다. 조선 이민자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중국 조선족을 형성하였다. 조선족은 중국의 각 민족과 함께 동북변경을 개발하고 지켜왔다. 그들은 일본 침략에 대항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끈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투쟁 과정에서 중화민족과 단결력을 발휘했다. 특히 국공내전에서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 편에서 전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조선족은 근면한 땀과 반제국·반봉건을 위해 흘린 피로 동북변경 개발, 중국 혁명의 승리, 신중국 수립에 훌륭한 공헌을 하였고, 이는 공산당과 신중국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정식으로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 그와 동시에 조선족은 혁명투쟁에서 중국 공산당 및 신중국과 혈육관계를 맺어 건국 후 동북 조선족 주민구의 민족 화목과 변경 안정을 위해 건설한 기초를 마련했다. 연변주의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은 두만강 개발계획의 전제조건이자 필수불가결한 안전장치다.

2) 조선족은 두만강 개발의 주요 원동력이다.

1990년 초,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 개발사업' 프로그램을 발표하자 연변주 정부는 두만강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두만강 협력개발을 자치주의 핵심사업으로 삼았다. 자치주 정부는 항구 개방을 적극 요청했을 뿐 아니라 훈춘 국경협력지구, 훈춘 수출가공단지, 중리 호시(互市)무역시장을 구축하였다. 중앙정부에 각종 우대 정책을 요구하여 연변자치주는 변경 개방, 소수민족 무역, 국경의 부흥과 국민 부유, 노후공업기지의 진흥, 서부대개발 등 각종 사업의 우대정책을 공유하였다. 2006년부터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였다. 연변주는 이 기회를 빌려 두만강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적극 모색하였다. 2006년 6월 연변주는 대외개방사업회의를 개최하여 '개발개방사업의 추

진을 위한 특별 지도급 위원회'를 설립했다. 옌벤자치주 당서기 덩카이(鄧凱)와 옌벤자치주 주장 김진길(金振吉)이 위원장을 맡아 두만강 개발개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2007년 1월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린성을 시찰할 때 이런 말을 했다.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을 추진할 때 지린성은 먼저 조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좀 더 빨리 발전시켜도 될 것 같다. 개혁개방, 과학기술 혁명에 먼저 나서서 전체 성(省)의 발전을 꾀하여도 된다.” 자치주 정부는 이 기회를 빌려 두만강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격상하는 연구와 홍보작업을 시작했다.

2007년 5월 9일, 옌벤주는 창춘에서 ‘두만강 지역의 국제협력개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십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가 두만강 개발과 개방을 위해 고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회의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바라보는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을 발표하였다. 그 후 옌벤주는 중국 두만강 지역협력개발계획의 편성작업에 돌입했다. 2009년 8월 본 계획은 드디어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했다. 본 계획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옌벤주의 각급 정부가 조선족 자치기관으로서 민족자치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는 두만강 개발 개방의 주요 원동력이다. 물론 자치주 정부의 사업은 옌벤주의 조선족과 한족 등 각 민족이 간절히 바라는 경제발전과 부유한 생활을 반영한다. 조선족은 두만강 개발개방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를 국가전략으로 격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조선족은 동북아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다.

두만강 유역은 초국경 민족인 조선족의 주거지이다. 조선족은 옌벤주 민족 자치의 주체이자 국경 맞은편에 위치한 한반도 민족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다.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데 조선족의 중요한 역할은 주로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치 면에서 조선족은 동북아 협력의 조율자이다. 현재 동북아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남북 교류는 단절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조선족은 한국과 북한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남북교류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들어 중국 동북, 특히 연변 지역에서 조선족 학자들이 주관하여 학술회의를 열어 남북의 대표를 모두 초청하였다. 이는 남북 민간의 접촉과 교류를 위해 기회와 대화의 장을 제공했다. 둘째, 경제 면에서 조선족은 동북아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다. 조선족은 국제화의 민족이다. 그들은 혈연관계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의식과 진취적 용기가 강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 기업가의 영향은 동북아 여러 나라에 미치고 있다. 투자·무역·관광·인적 자원 등 각 영역을 아우르는 국제협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북중·한중·중일·중러 경제무역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면에서 조선족은 동북아 각국의 교류를 이끄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차이를 존중하는 민족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이 자민족의 문화전통을 잘 보존할 수 있었다. 한국 강재식(姜栽植)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은 언어·음식·의복·명절·제사·혼인 등 전통문화와 풍속을 해외 한반도 민족 중에서 가장 잘 보존하였다고 한다.²⁾ 게다가 조선족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과 우호적 교류를 유지하여 개방적인 마음가짐과 강한 포용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선족은 자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개방정신을 가진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2) 姜栽植(2007),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 베이징: 민족출판사, 225~229쪽

국가 관계는 긴장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문화 교류는 융화제 역할을 할 것이며, 여기서 조선족은 동북아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연결 고리가 될 것이다.

III. 두만강 개발에서 조선족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1) 동북아 냉전이 남긴 문제가 동북아 협력을 제약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대국 이익과 그 모순이 얽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학적 관계가 복잡하여 이 지역의 경제 행위는 광범위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역사 논쟁과 냉전이 남긴 문제, 영토 마찰 및 이데올로기 차이 등 문제 때문에 이 지역은 정치적 신뢰가 부족하다. 전쟁 후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전쟁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존재했다. 교과서 왜곡, 신사 참배 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관련 국가의 정치·사회에서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역사문제가 야기한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협력에 필요한 신뢰가 부족하여 심리적인 기초가 열악하다.³⁾ 미국은 한일 양국과 군사동맹을 유지·강화하여 중국과 북한의 전략을 저지하려고 한다. 이는 이 지역의 마찰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게 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심지어 아시아 각국 관계를 이간질하기도 하여 긴장 국면을 조성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다. 더욱이

3) 자오팡[趙放](2009), 「낙관할 수 없는 동북아 지역 협력 추세에 대한 분석-지린성 대외경제무역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사고」, 『동북아포럼』 제5호, 101~107쪽

일본 아베 정권은 적극적으로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동북아의 긴장국면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므로 냉전이 끝난 지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동북아 정세는 여전히 긴장국면에 놓여 있고 지역협력도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은 비록 동북아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긴장국면의 동북아 국제정세 때문에 조선족도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많은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투자 경영 활동을 벌였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 제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영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다.

2) 두만강 지역 개발이 부진하여 조선족이 유출되어 인구가 줄고 있다.

앞서 말한 동북아의 긴장된 국제정세 때문에 두만강 개발과 개방은 심화되지 못하였다. 두만강 지역의 관련 국가는 모든 힘을 지정학적 정치안보에 쏟아 부었고, 북한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 개혁개방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러시아는 영토 안보문제 때문에 극동 개발 및 개방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변주는 대외개방의 통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는 연변 지역의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지린성 내륙지역과 비교했을 때 연변은 여전히 지린성에서 경제력이 낙후한 지역이다. 지역생산량, 재정수입, 산업경쟁력 등이 전체 성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연변주의 지역 내 총 생산(GRDP)은 지린성 9개 도시 중에서 6위를 차지했고, 일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8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9위를 차지했다.⁴⁾ 연변은 사업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산업구조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구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대량의 조선족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위해 유출되었고, 연변 조선족 인구는 점차 줄

4) 연변주통계국(2010), 앞의 책, 31~47쪽

어들어 1993~2007년 총 79,568명이 유출되었다.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대거 유출되어 조선족 출생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1990~2008년 동안 연변 조선족의 연평균 출생 인구는 12,183명에서 3,816명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들어서면서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를 초과하였다.⁵⁾ 조선족 인구가 연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 63%에서 21세 초에 들어서면서 약 37%로 하락하였다.⁶⁾ 2009년 연변에 호적을 등록한 조선족 인구는 80만 명으로 인구의 36.7%만 차지했을 뿐이다. 조선족 인구 규모의 축소는 두만강 협력개발을 위해 조선족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3) 전통적인 변경관리체제가 민족 자치지방의 도시화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은 헌법으로 규정한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 법률이다. 본 법의 제1조항은 “민족 자치 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했다. 제14조항은 “민족 자치 지방은 일단 건립되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철회 혹은 합병이 불가하다. 민족 자치 지방의 구역 경계선은 일단 확정되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변동이 불가하다.”라고 규정했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 지방은 대부분 변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은 일부 도시화가 빠른 민족 자치 지방에서 다소 적합하지 않다. 현재 중국은 ‘민족 자치시’의 개념이 없다. 한 지역의 도시 인구 수가 해당 지역의 도시 규모, 소비 수준, 노동력 공급능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전체 지역의 경제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2009년 연지[延吉]시의 인구는 50만 3,800명(농촌 지역 포함)으로 전국 중등 도시의 기준인 50만

5) 朴美蘭(2010), 「1990년대부터 연변 조선족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에 관한 분석」, 『동강(東疆) 학술지』 제1호, 55~63쪽

6) 李成律(2008), 『동북아시아의 조선족 사회』, 베이징: 세계지식출판사, 172~173쪽

명을 겨우 넘었다. 그리고 민족지역 자치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엔지시는 자치주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급 도시에 머무르고 구(區)급 도시로 승격할 수 없다. 엔벤주는 최근 몇 년간 '엔룽투'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메커니즘에 관한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만약 엔벤주 도시화가 제약을 받으면 두만강 지역은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없으며 두만강 지역 협력 개발계획의 시행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을 것이다. 또한 최근 지린성이 '확권강현' (擴權強縣, 현급 정부의 자주권을 강화하여 그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전략을 시행하였다. 다른 현급 지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엔벤주는 민족 지역의 자치체가 주는 제약 때문에 경제발전도 영향을 받았다.

IV. 두만강 개발계획과 조선족 역할에 대한 전망

1) 두만강 개발계획의 시행은 동북아 협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동북아 정세가 냉전으로 인한 대립에서 평화발전으로 전환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조선족은 냉전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역협력의 다리이자 연결 고리로 거듭날 것이다.

중국 두만강 지역협력개발 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안보문제를 둘러싼 대립에서 지역발전문제를 위한 협력으로 주의를 전환시킬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심지어 동북아 공동체를 추진하게 하는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 두만강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승격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2009년 9월 23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뉴욕에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동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정식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러

시아 극동 및 동 시베리아 협력계획요강'을 비준했다. 이로써 양국은 상호 인접한 지역의 교통상황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기로 표명하였다. 2010년 1월 20일 러시아 푸틴 총리는 '2025년 극동과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전략'을 비준하였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새로운 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조선중앙통신사의 소식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 나선시를 북한 중앙 직할의 특별시로 정식 승격하여, 평양, 개성 이후 세 번째 특별시가 탄생하였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선 경제무역법' 등과 같은 일련의 특수한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여 야심찬 개발 건설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두만강 개발을 중심으로 나선·청진 지역을 중국·러시아·북한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및 무역 중심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중국의 두만강 지역협력개발은 전방위 개방의 모델을 채택했다. 훈춘시는 중·일·한 순환경제 시범기지, 한경보 호설비제조기지, 러·일·한·홍콩 공업 단지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창춘 중러 국가급 과학기술연합연구센터, 중국·싱가포르 지린 식품단지, 지린(평만, 豊滿)한국공업단지, 연지(延吉)한국공업단지 등 국제산업협력단지 및 상하이, 저장(浙江), 광둥(廣東), 선전(深圳), 타이완 등 성급 산업협력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이런 단지는 일본, 한국, 유럽, 미국, 홍콩, 대만 및 중국 내륙의 자본을 두만강 지역으로 유치할 것이며, 국제자본이 더욱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북아 지역협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면서, 동북아 지역에 분포한 조선족은 초국경 민족으로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두만강 개발계획은 연변자치주를 변경지역에서 초국경 협력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조선족이 돌아오도록 촉진할 것이다.

두만강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지역 내 교통 운수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그리고 원활한 대외 통로와 성급 통로의 건설을 주안점으로 두고, 남북을 중횡하고, 동서를 관통하는 합리적인 구조, 막힘 없이 상호 연결하는 고효율을 모두 달성하는 입체적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두만강 개발계획은 북한과 러시아의 긍정적인 호응에 힘입어 러시아,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고속도로, 철도, 항구 등 인프라의 협력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중이다. 또한 동북경제구를 관통하고, 몽골에서 동해로 통하는 국제운수 대통로가 빠른 시일에 개통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중러·중북 초국경 경제협력구 계획의 추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변주는 두만강 협력개발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연변주의 지역적 조건을 전환하고, 연변이 다소 폐쇄적인 변경지역에서 동북아 협력의 핵심지역과 최전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연변주는 중국 동남연해지역과 같이 개방에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획득할 것이다. 두만강 개발의 전면적인 전개에 따라 연변으로 투자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지로 유출되었던 조선족 인구들이 다시 돌아와 두만강 개발과 동북아 협력의 견인차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조선족은 두만강 개발을 이끄는 견인차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변경의식’과 ‘변두리 문화’의 제약을 초월하여 최전방 정신과 현대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소위 ‘변경의식’은 변경지역의 소수민족이 변두리라는 지역적 지위에 대해

가진 인식 및 그로 인해 형성된 자아의식을 말한다. 이는 변경지역의 자연적 조건, 경제적 특징, 사회·문화 배경 등 방면에서 객관적으로 반영되며, 역사적으로 '그곳에 태어나면, 그곳에서 자란다'라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변경의식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개혁에 대한 혁신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변경이라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따라서 사무를 처리할 때 항상 신중한 태도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고 과감한 변혁은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할 때 정치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변경의식으로 인해 경제활동도 정책에 의존하는 발전 모델을 추구하게 된다. 그동안 변경지역은 경제발전 계획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세울 때 항상 변경의 특수성과 전략적 지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변경의 특수성과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중앙정부에게 해당 지역에 유리한 우대정책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중국 변경지역은 국가의 각종 우대정책이 중첩되어 있는 지역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국가 변경 개방, 소수민족지역, 변경의 부흥으로 국민의 부 축진, 노후공업기지의 진흥, 서부대개발 등 각종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경의식은 지방문화의 향토성, 민족성, 변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과 세계를 좌표로 삼는 주류 의식과 인문 정신이 부족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변경의식은 국민이 국가 변경지역에 안주하게 만들고 변두리 문화를 형성한다. 이는 조선족이 두만강 개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변경의식'을 초월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변경의 지리적 위치를 바라봐야 한다. 경제가 폐쇄적이고 국가가 대립하는 시기에는 변경의 경제개발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주류가 된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통합이 새로운 추세가 되었다. 이런 추세에서 변경은 국제협력과 발전을 추진하는 최전

방과 창문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적 조건은 이미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동북아 지역은 비록 냉전이 남긴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만 지역 협력과 발전은 이미 주류가 되었다. 두만강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몇 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마주 하고 있으며, 서쪽은 몽골과 연결되어 있고, 북쪽은 서시베리아, 남쪽은 중국 중원과 통하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동북아는 다민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이었다. 조선족은 서로 융합하는 데 능하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민족정신을 갖고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두만강의 지역적 지위가 변화하면서 조선족은 변두리 문화의 열세를 복합문화의 우세로 전환하여 주체성과 개방성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현대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화 협력의 조류를 이끌어 개방, 포용, 협력, 평화, 진보 등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데 공헌할 것이다.

(2010년 12월 발표, 2013년 11월 수정)



• 참고문헌

- 姜栽植(2007),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 베이징: 민족출판사
- 李成律(2008): 『동북아시아의 조선족 사회』, 베이징: 세계지식출판사
- 옌벤주통계국(2010), 『순위로 보는 옌벤』
- 朴美蘭(2010), 「1990년대부터 옌벤 조선족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에 관한 분석」, 『동강(東疆) 학술지』 제1호
- 자오팡[趙放](2009), 「낙관할 수 없는 동북아 지역 협력 추세에 대한 분석 - 지린성 대외경제무역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사고」, 『동북아포럼』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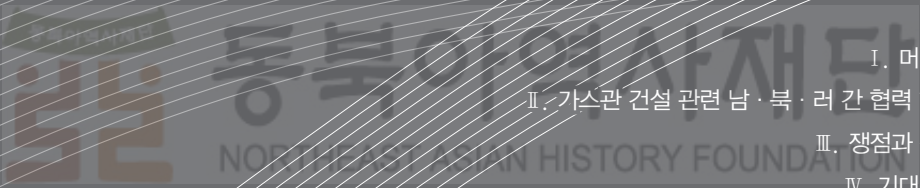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한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 I. 머리말
- II. 가스관 건설 관련 남·북·러 간 협력 현황
- III. 쟁점과 전망
- IV. 기대효과
- V. 가스관 인프라 건설과 북한 개발협력
- VI. 결론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을출(林乙出)

북한개발협력 · 남북경협 전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

대표논저로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방안』(2012, 통일연구원),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공저, 2012, 한울아카데미),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례와 시사점』(공저, 2011, 통일연구원) 등이 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북한 개발협력: 전망과 과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I. 머리말

정권과 당파를 초월해 모두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해 한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대선 여야 후보들은 가스관 연결사업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을 위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¹⁾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방경제시대를 개막하겠다고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1) 박근혜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 전문, 2012. 11. 5 발표

러시아와 북한은 2012년 9월 17일 북한의 대러 채무 110억 달러 가운데 러시아가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는 향후 북한이 양국 간 합작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 경제협력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라선항 이용,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과 중국 견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등을 위해 대북 및 남·북·러 삼각협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적·군사적·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초대형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남북한 모두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남한의 새 정부 임기 내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2013년에는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 정부 간의 3자 간 혹은 양자 간 한반도 지정학과 동북아에서의 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과료 등 각종 가격과 수입조건에 대해 당사국 간에 결정된 것이 아직 없고, 북한의 가스관 차단 시 대책마련 등 협상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장기 프로젝트인 가스관 연결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남·북·러 3국뿐 아니라 남·북, 남·러 간 합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만큼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이 글은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한 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 간 논의의 진전사항을 토대로 핵심 쟁점을 검토한 뒤 향후 사업전망을 해 볼 것이다. 그리고 가스관 연결사업이 북한에 주는 다양한 기대효과들을 분석한 뒤 특히 인프라 부문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빈곤경감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가스관 연결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II. 가스관 건설 관련 남·북·러 간 협력 현황

여기서는 우선 간략하게 주요 당사국 간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한국·러시아 간 협력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가스관 사업이 주는 막대한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양국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이르면 2015년부터 연간 최소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가스관 사업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등을 위한 남·북·러 간 3각협력을 먼저 제안했다. 그 뒤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관 프로젝트에 관한 교섭을 진행해 2011년 9월 사업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에 서명했다. 가스프롬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러·한 협상에서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각별한 주목이 이뤄졌다”며 “가스프롬 사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이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고 실무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가스프롬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한국으로의 가스 수출에 이용될 극동지역 가스관인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라인(그림 참조)이 1차 가동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가스를 세계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²⁾

이어 ‘가스프롬’의 니콜라이 두빅 법무실 실장이 2011년 11월 1일 개최된

‘한·러 대화(KRD)’ 포럼에서 지난 9월 가스프롬과²⁾한국가스공사가 합의한 서명서를 소개하면서 양국은 2013년 공사에 착수해 2017년 1월부터 가스공급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한·러 양측은 2012년 1월까지 가스공급 기본조건에 대한 상업적 협상을 마치고, 2012년 1~4월 사이 가스공급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가스관 노선 설계(2012. 3~2013. 9), 가스관 건설 착수(2013. 9), 공사완료(2016. 12), 가스공급시작(2017. 1) 등의 로드맵이 담겨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약 1,100km의 가스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 가스관을 통해 매년 100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자료: 윤성화(2011), 「한반도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2011년 민화협포럼 자료집(2011. 11. 15), 53쪽

그림 1_ 러시아 가스관 예상 노선도

2) 《데일리엔케이》(2011. 9. 16)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일 수요가 있으면 이 수송능력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도입방식별 기술·경제적 주요사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해왔으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우 PNG 방식의 수송을 위한 투자비가 약 34억 달러가 소요된다. 하지만 향후 북한 통과노선 및 통과비용 산정, 러시아와의 협상결과 등에 따라 투자비는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측은 관리와 비용의 이점을 고려하여 북한 육상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삼척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³⁾

2. 북한·러시아 간 협력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논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어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2011년 8월 가스·에너지·철도 분야에서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3국 협조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보낸 광복 66주년 축전에서 “우리는 가스·에너지(에너지)·철도 건설 분야에서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며 동북아 정세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3) 《연합뉴스》(2009. 4. 29)

뫁뫁였다.⁴⁾ 또한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2012년 3월 1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안드레이 테니소프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⁵⁾ 러시아 외교부는 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양국 차관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외교부 차관은 또 북·러 양자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외교부 측은 밝혔다. 북·러 간의 실무적인 협상은 주로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과 김희영 북한 원유공업상 간에 진행되어왔고, 이 프로젝트의 실현에 대한 합의는 2011년 8월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테에서 열린 북·러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이뤄졌다.⁶⁾ 양측은 이 프로젝트의 실현과 다른 유망한 협력방향들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했고, 정부 간 협정 준비 및 체결을 비롯한 양국 정부 차원의 전면적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왔다. 북·러도 실무협약에서는 가스관 통과와 통과료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공급물량, 공급조건 등의 상업적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⁷⁾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도 아버지의 유훈을 수용해 러시아와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관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북한 새 지도부가 이 프로젝트를 계

4) 《조선중앙통신》(2011. 8. 15)

5) 《연합뉴스》(2012. 3. 15)

6) 《데일리엔케이》(2011. 9. 16)

7)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 기자간담회, 2012. 2. 27

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가장 핵심적 과제는 가스 가격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⁸⁾ 김정일은 2011년 8월 시베리아 도시 올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북·러 관계와 관련, “지금 조(북)·러 사이에는 가스관 부설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양국 친선의 역사를 심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⁹⁾ 러시아 측 전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일 러시아와 남한이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협정에 서명하면 북한은 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해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은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한 컨소시엄에는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가스 통과와 영토 임대에 따른 수익만을 챙기려 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¹⁰⁾ 북·러 간 가스관 건설 관련 논의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는 북한이 구소련에 진 빚 110억 달러(12조 1,990억 원) 중 90%를 탕감해줄 것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10%의 채무는 북한 내에서 이뤄질 북·러 공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북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간 채무상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올해 말까지 양국이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¹¹⁾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한 데는 북한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 현재까지도 러시아가 북한에 식

8) 세르게이 슈마르크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012년 1월 25일 취임 인사차 에너지부를 방문한 러시아 주재 위성락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9)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과 가진 서면인터뷰 내용, 《조선중앙통신》(2011. 10. 19)

10) 《연합뉴스》(2011. 8. 27)

11) 《데일리엔케이》(2012. 9. 15)

량과 연료 등을 무상지원하고 있다는 점, 가스관 사업·시베리아 횡단철도·한반도 종단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북한 채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3. 남북 간 협의

가스관 연결사업을 놓고 남북 간에 협의한 적은 아직 없다.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 남·북·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은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성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남북 간 협의는 불가피할 것이다.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수송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며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남한을 포함한 3자 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¹²⁾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언제든지 남한과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4. 남·북·러 삼각협력

남북한·러시아 모두 가스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3자 간 협력논의는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러시아 측은 이미

12) 《연합뉴스》(2011. 8. 24)

가스관은 북한 접경지대까지 진출해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 비무장지대를 거쳐 통과하는 것과 관련된 남·북·러 삼자 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러시아 측은 가스관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사업을 비롯한 다른 남·북·러 공동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남·북·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고 한반도 정세안정과 남북대화 정상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¹³⁾

한편 러시아 측은 가스관 건설시기와 관련해 “지금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러 간 논의 규모인 연간 약 100억m³의 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할린 섬의 ‘사할린-3’ 가스전과 야쿠트공화국의 가스전과 같은 새로운 가스전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령 남·북·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가스전 개발속도에 따라 가스관 건설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III. 쟁점과 전망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관련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북한 통과 리스크와 가스 도입가격의 협상문제로 압축된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가스관 차단시 대책과 관련한 쟁점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비핵화 진전 등의 사업추진 전제조건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와 관련이 있다.

13)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러시아 대사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포럼의 기조 연설, 2011. 11. 15

1. 북한 통과 리스크와 가스 도입가격의 협상문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가스관 차단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스 공급계약에서 가스공급에 대한 이행 책임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 경우, 차단되는 양만큼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해상 수송로를 통해 들어오도록 러시아와 계약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¹⁴⁾ 즉 일부 견해는 북한이 유사시에 가스관을 차단하는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 통과 구간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 책임으로, 러시아 소유로 건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북한의 가스관 차단 시 해상 수송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지로 하고, 강원도 동해를 도착지로 하는 것으로서 삼척에 액화가스 저장기지를 이미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¹⁵⁾ 러시아도 한국 내 반대여론을 의식해 "모든 리스크는 러시아가 책임지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¹⁶⁾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가스관과 관련한 모든 안전문제를 러시아가 책임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떠안을 리스크 비용이 우리 측 가스 비용에 고스란히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북한 통과 리스크를 러시아 측에 부담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을 러시아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부담이 가스 도입가격에 반영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¹⁷⁾ 가스관 사업

14)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2011. 9. 15

15) 위 발언 참조.

16) 2011년 11월 초 한·러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러시아 대사가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러시아가 모두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엔케이》(2011. 11. 15)

17)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장은 2011년 11월 15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완료 후 리스크가 반영된 가스 도입가격은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하는 LNG 도입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며, 세계 천연가스 수급상황과 시장구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 시점은 PNG 도입가격 협상의 호기로 판단되지만 북한 변수를 고려할 때 한국이 유리한 가격협상을 이끌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리스크가 최대 복병인 셈이다.

한편 러시아 측은 현재 한국에는 러시아 액화가스가 들어오고 있지만 가스관을 통해 한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한다면 그 비용을 20~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⁸⁾ 이 외에 북한의 '가스관 차단'이라는 돌발적인 요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배관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스배관 운영·감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가스배관감시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스프롬·우크라이나 정부·나프토가스·EU집행위원회·유럽가스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독자활동을 보장받고 있는데, 남·북·러 배관감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북한의 가스 무단인출, 공급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전망: 가스관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들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여건이 호전되고, 당사국들 사이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러 3자 간 논의가 가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18)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러시아 대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 2011. 11. 15

능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조건이 남북관계 개선이다. 북·리가 가스관 관련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남한을 설득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한 입장에서도 기존 수입 루트를 대체하는 가스관 수송은 운송비를 대폭 줄이는 경제적 이득이 있지만,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에도 사업 진전이 어려웠던 점 역시 남북관계 경색이 원인이었다. 또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결된 뒤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안보위협이 해결되기 전에 급히 추진하지는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에너지 공급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위협 제거가 선행조건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된다.¹⁹⁾ 이런 조건들을 보면 결국 가스관 연결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러시아 국영 에너지업체 가스프롬은 남북한의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이는 정치적 문제가 에너지 협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러시아 정부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가스프롬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스프롬 측은 “2008년 그루지야와 러시아가 전쟁에 돌입했

19)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발언, 2011.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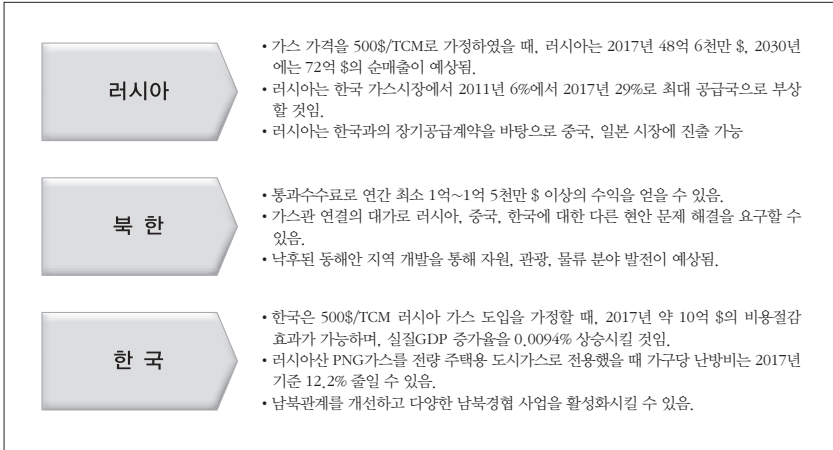
20) 러시아 국영 에너지업체 가스프롬 대변인, 2009. 4. 29

을 때도 그루지야를 통하는 가스관으로 아르메니아에 가스 공급을 계속했고 지금도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결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지만 그루지야를 통해 남오세티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스가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인식에 불과하고, 실제 정치적 문제가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V. 기대효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러 세 당사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 공동체적 번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장에서는 북한에 주는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북한이 가스관 연결사업에 관심을 갖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적 이익이다. 여기에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3대 세습을 위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동안 중국에 편향되었던 정책을 재조정하여 중·러 양국에서 정치·경제·외교적 실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가스관 연결사업에 따른 기대수익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북한이 얼마나 협력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매우 다양하다. 당장 통과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스관 연결사업에 수반되는 낙후된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통과수수료로 연간 최소 1억~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파이프



자료: 윤성학, 앞의 글, 54쪽

그림 2_ 남·북·러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라인 건설에 북한 근로자를 대규모 참여시키면서 막대한 인건비를 벌 수 있다. 5만3천 명이 넘는 근로자를 파견해 연간 5~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개성공단과 비교했을 때도 가스관 건설 합의에 따른 외화 수입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가스관이 통과하는 인근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물류 인프라 건설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가스관을 통해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내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 하도록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스관 통과료를 자체 시설 가스관으로 지불해 북한으로 하여금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²¹⁾

또한 북한은 가스관 연결의 대가로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에 다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구소련 채무탕감, 전력공급 등의 추가

21) 김남일(2011),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2011년 민화협포럼 자료집, 62~63쪽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경협사업 추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²⁾ 한국과 러시아 정상은 2011년 11월 2일 가스관 안전문제 등이 해결될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잉여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공급하는 사업도 검토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 한·러 간에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외에 역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송전선을 건설해 러시아의 잉여전력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²³⁾

결국 북한이 안보위협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경제 재건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 가스관 인프라 건설과 북한 개발협력

북한은 가스관 연결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장의 현금 수입은 물론 다양한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 효과들을 선순환적으로 결합해서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주민 생활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가스관 연결사업은 개발협력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경협사업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의 생활향

22) 김남일(2011), 위의 글, 62~63쪽

23) 《연합뉴스》(2011, 8. 9)

상을 겨냥한 지원이나 경험의 추진은 '빈곤경감을 위한 개발지원'이 최근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의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방향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특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남북 주민 간 접촉 및 교류확대를 위한 대북지원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 가스관 건설을 통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기대효과 가운데 인프라 부문 개선을 통한 빈곤경감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얼마 전부터 국제사회는 절대빈곤의 극복으로 대표되는 유엔 천년개발 목표(MDG)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경감에 주목해왔다.²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 절대빈곤의 퇴치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이와 함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민간부문의 투자,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빈곤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국제원조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도국이 지속적인 빈곤경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래 지속되는 높은 성장(growth)의 확보가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DAC산하 빈곤네트워크 작업반을 통해 '빈곤경감을 위한 인프라 지원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²⁵⁾

또한 영국(DFID), 독일(BMZ), 프랑스(AFD),²⁶⁾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원조 공여국 및 국제원조기구도 10여 년간의 개도국의 빈곤경감 사례에 대한 공

24) 이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2006), 「Pro-Poor Growth와 인프라 투자」, 『수은 북한 경제』, 겨울호, 68~81쪽을 참조해서 재구성함.

25) OECD DAC POVNET(2006), Guiding Principles on Using Infrastructure to Reduce Poverty

26) DFID(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MZ(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FD(프랑스개발기구, French Development Agency)

동연구를 통해 '성장은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성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완화하는 투자,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성장과 인프라 투자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시 한번 최우선 논의 의제로 상정되고 있다. 인프라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²⁷⁾에 따르면 GDP의 1%를 교통과 통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을 0.6% 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북한의 정부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인프라 투자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면 가스관 통과 주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스관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도로, 철도, 전력공급 등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 물류 인프라 개선, 주변 공장들의 가동률 제고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영향들은 직간접으로 북한 주민들의 임금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빈곤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7) William Easterly and Rebelo(199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 pp. 417~458; James Miller and Christopher Tsoukis(2001), "On the optimality of public capital for long-run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Panel data," *Applied Economics* 33, July, pp. 1117~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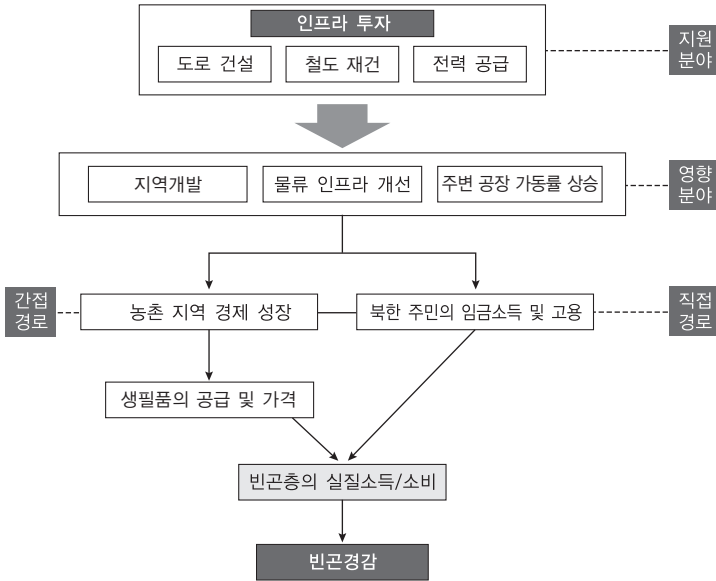


그림 3 가스관 인프라 투자와 빈곤경감과의 관계도(예시)

VI. 결론과 과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한·러 간, 그리고 북·러 간에도 합의돼 미래 어느 시점에서 남북 간의 협력만 이뤄진다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무엇보다 북한 경제의 돌파구 마련에 이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가치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스관 연결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사업이 순항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적지 않다. 특히 북한 변수가 가장 핵심 관건인데, 핵문제 등 북한이 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안보위

협 요소들뿐 아니라 가스관 사업이 북한 내부 사회 전반에 미칠 내부적 안보 위협 요인도 커다란 장애물이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초대형 경협 프로젝트로서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북한 방문이 이뤄질 것이고, 각종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운송장비 등 물류량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른바 3통(통행, 통신, 통관)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이고, 외부 문물이 가스관이 통과하는 북한의 내륙 지방 깊숙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스관 연결사업은 북한에게 기회이자 도전인 것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북한은 가스관 연결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장의 현금 수입은 물론 다양한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글은 북한이 가스관 건설을 통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기대효과 가운데 인프라 부문 개선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를 다루었다. 북한이 가스관 건설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면 가스관 통과 주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가스관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도로, 철도, 전력공급 등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경우 지역개발, 물류 인프라 개선, 주변 공장들의 가동률 제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영향들은 직간접으로 북한 주민들의 임금소득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빈곤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 간, 또는 남·북·러 간 가스관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북한 주민의 빈곤경감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투자 방안 등도 동시에 비중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본 원고는 북한 주민들의 빈곤경감에 기여하는 가스관 건설 효과에 대한 초보적 논의에 머물러 있지만 이 글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과 북한 주민 생활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남일(2011), 「가스관 연결사업의 쟁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2011년 민화협포럼 자료집

윤성학(2011), 「한반도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 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2011년 민화협포럼 자료집

한국수출입은행(2006), 「Pro-Poor Growth와 인프라 투자」, 『수은 북한경제』, 겨울호

Easterly, William and Rebelo(199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

Miller, James and Tsoukis, Christopher(2001), "On the optimality of public capital for long-run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Panel data," *Applied Economics* 33, July

OECD DAC POVNET(2006), Guiding Principles on Using Infrastructure to Reduce Poverty

《데일리엔케이》(2011. 9. 16)

《조선중앙통신》(2011. 10. 19)

《연합뉴스》(2009. 4. 29)

류우의 통일부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발언, 2011. 10. 21

박근혜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 전문, 2012. 11. 5 발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러시아 대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포럼의 기조 연설, 2011. 11. 15

• 찾아보기

<ㄱ>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384
 가스관 사업 379
 가스관 차단 387
 가스 도입가격 386
 간도 출병 309
 간민회 본부 318
 강상중 140
 거란도 151, 153
 경제개발구법 350
 경제적 이해 274
 경제협력 프로젝트 377
 경편철도(經便鐵道) 170
 경학사 306, 310, 317
 경화결재 345
 계통론 78
 공동의 집 129, 138
 공동이익 개념 109
 공동화폐 209
 공유지의 비극 105
 과경민족(跨境民族) 34, 36, 140
 과학적 발전관 199
 관광산업 295

교역 276
 교토기후협약 285
 구성주의 59
 국경 35
 국무원 동북진흥전략 영도소조[國務院振興東北等老工業基地領導小組] 199
 국제 대통령 359, 360
 국제자유경제지대 266
 근대국가 210
 기후변화 대응방안 287
 길림조선상민무역지방장정(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 168
 김경천 318
 김교헌 315
 김좌진 323
 김필순 311
 김한규 34

<ㄴ>

나선경제무역구 361
 나진선봉 350
 나철 315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377, 385, 387

남·북·러 공동프로젝트 385

남·북·러 삼자회담 385

남순강화(南巡講話) 190

노학당 기념비 320

녹색도시 건설사업 295

녹색산업 281

녹색성장 267, 280, 281

<ㄷ>

다연(多沿)개방전략 184

다자안보체제 338

다자안보협력 250

담비의 길 157

대동아공영권 128

대베콩강 소지역 협력(Greater Mekong

Subregion: GMS) 193

대성중학교 312

대황구 13열사기념비 316

독도 68

동림학교 306

동변도철도 174

동변철도 349

동북3성 267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책 145

동북아 경제공동체 351

동북아시아 268

동북아시아 공동체 130, 135, 136

동북아 정세 안정 381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 352

동북진흥 183, 350

동북진흥정책 272

동아시아 공동체 117, 129, 130, 133, 135

동아시아 비전 그룹 130

동아시아 질서 61

동아협동체 128

두만강 개발계획 362, 363, 369~371, 373

두만강경제협력[圖們江三角帶經濟合作區]

196

두만강 구역 국제합작시범구 146

두만강 삼각지 349

두만강 유역 개발 270

등영초 324

디아스포라 129, 138

<ㄹ>

랴오닝 산업벨트 270

러시아산 천연가스 381, 382

루마니아 238

<ㄴ>

말갈도 151, 156

메콩강 성장 사각지대 194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193

- 명동교회 313
 무순 전범관리소 328
 미일동맹 336, 346
 민생단사건(民生團事件) 40
 민족자치시 368
 민족주의 70, 71
 〈ㄴ〉
 발탁해 국가위원회 231
 배관감시위원회 387
 변강학 109
 변경무역 270
 변경의식 371, 372
 변경이론 109
 변경협력 269
 변계효응(邊界效應) 77
 변두리 문화 371~373
 변연문화이론 79
 보스포러스 선언(the Bosphorus Statement)
 238
 봉오동 전적비 315
 부민회 310
 북간도 308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14
 북·러 간 채무상환 협상 383
 북·러 공동 프로젝트 383
 북·러 접경지역 145
 북로군정서 308
 북한 나선지역 개발 279
 북한 통과 리스크 386
 북핵문제 265, 333, 337~339, 341, 343,
 344, 347~349, 352
 분단체제 32
 불가리아 238
 블라디보스토크 168, 169, 173
 〈ㄷ〉
 사회주의 시장경제 345
 삼국 정상회담 352
 3·13반일의사릉 314
 3·13항일시위운동 309
 삼중사 묘역 315
 상경성 161
 상하이협력기구(SCO) 189
 상호의존 211
 새로운 중세론 2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68
 서간도 308
 서로군정서 308, 310
 서일 315
 성장 제일주의 283
 세계화 209
 소강사회(小康社會) 187
 소지역 경제협력권 184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379
신라도 151, 155
신민부 323
신압록강대교 349
신우여 311
신채호 310, 321
신팔균 318
신흥강습소 317
신흥무관학교 306, 308, 309, 318

<ㅇ>

아세안 133
아세안+3 130, 134
안중근 308, 310, 321
안중근 의사 기념관 322, 329
양국 간의 동질감 275
양기탁 317
양세봉 318
양세봉 흉상 319, 328
에너지 소비비율 285
여순감옥 310
여순 일아감옥 구지 321
연길감옥항일투쟁기념비 318
연변조선족자치주 141
염주(鹽州) 155, 160, 162, 163
영고탑 165
영국학파(English School) 25

영주도 151, 152
엔벤조선족자치주 357, 358, 372
5대 녹색성장 협력업종 299
오염물 배출총량 285
오페수처리설비 등 환경사업 295
왈리스타인 33
요령성 발해연안 개발대 146
요코다 메구미 141
용정중화 역사전람관 312, 313
용현현상 87
우씨부인 열녀비 320
월경적 협력 39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234
유럽연합 57, 58
유럽통합 56, 57
유인석 말년 자정처 320
유지(You Ji) 31
6자회담 131~133, 338, 346~348, 388
윤동주 312
윤동주 생가 313
윤희순 318
윤희순 항일기념비 319, 328
의의돌현점(意義突現點) 81, 94
이광범 311
이동녕 317
이삼성 41
이상룡 317

- 이상설기념관 313
- 이석영 317
- 이스탄불 공동선언(the Istanbul Declaration)
238
- 이익변강 36
- 이종원 140
- 이진룡 의열비 320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308
- 이호재(李昊宰) 23
- 이회영 310, 321
- 일본도 151, 154
- 『일본서기』 150
- 일축양익(一軸兩翼, one axis two wings)
193, 269
- 〈ㅈ〉
- 자연적 경제지대 184
- 자유주의 59
- 재균형 전략 69, 70
- 재균형 정책 69
- 재일조선인 140
- 전기자동차 294
- 접경지역 35
- 정대세 140
- 정부 간 협력(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234
- 정율성 기념관 329
- 정치대화 230
- 조공도 151
- 조공체제 54, 55
- 조선연장론(朝鮮延長論) 40
- 조선족 139, 362, 366, 369
- 조선족문화예술관 322
- 조선족의 존재 275
- 조어도 52
- 조화사회 199
- 조화세계 61, 67
- 주권문제 248
- 주권인식 249
- 주덕해 328
- 주은래 324
- 중개계통 94
- 중국 역할론 342
- 중국 위협론 62, 64
- 중러변경 81
- 중·러 변경무역 279
- 중몽 변계지역 82
- 중부유럽이니셔티브 226
-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219
- 중북 경제협력 350, 351
- 중북관계 343, 345, 349
- 중심·변연의 역동관계 91
- 중조변경지역 78
- 중화문명론 118

중화질서 54
 지경학적 접근 349, 350, 352
 지구 온난화 267
 지리적 이점 274
 지역개발 전략 275
 지역경제협력 269
 지역협력 209
 지역협력기구 216
 지정학적 접근 337, 346, 349, 352
 지청천 318
 집합적 주권 57
 집행위원회 235
 <ㄷ>
 창동학교 사은비 318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357~359
 창지투 개발개방책 146
 창지투 개발선도구역 349
 창지투 계획 279
 채영 311
 청산리대첩 309, 315
 청산리 항일대첩기념비 313
 체제전환 215
 초국경 협력 266, 371
 <ㅋ>
 카플란(M. Kaplan) 24

코펜하겐 기준 217
 크라스키노 168, 169, 173
 <ㅌ>
 탈북자 141
 태평구 전투기념비 316
 투자 276
 투 트랙(two track, 二軌道) 31
 <ㅍ>
 팔녀투강기념상 324
 팔련성(八連城) 161
 평화를 위한 기획 34
 풍력발전 293
 풍력산업 289
 <ㅎ>
 한미동맹 336, 346
 한민족 138
 한반도 냉전구도 339, 341
 한반도 비핵화 381, 382
 한족총연합회 323
 한족회 310
 한·중 경제협력 267
 한중우의공원 322
 해동성국 159, 161
 핵보유 339

현실주의	58, 59	황염배(黃炎培)	40
혈성단	311	황화론(黃禍論)	110
협력(co-operation)	228	훈춘총관	168, 170
협의(consultation)	228	훈춘 항일유격대	316
홍광춘 4열사기념비	328	흑해경제협력	237
화이체제	54	흔들리는 분단체제	29
환동해 경제권	270	흡인자(吸引子) 구역	96
환동해 경제협력	128	흥한지역[龍興之地]	271
환황발해경제협력[環黃渤海經濟圈]	19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8

동아시아 평화와 초국경 협력
남북한, 중·러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1일

지은이 홍면기 · 판성우 · 김강일 · 박장배 · 와다 하루키 · 김석주
이동률 · 이규영 · 추원서 · 김주용 · 김경일 · 이바오중 · 임을출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18-5 93910

- *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00621)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